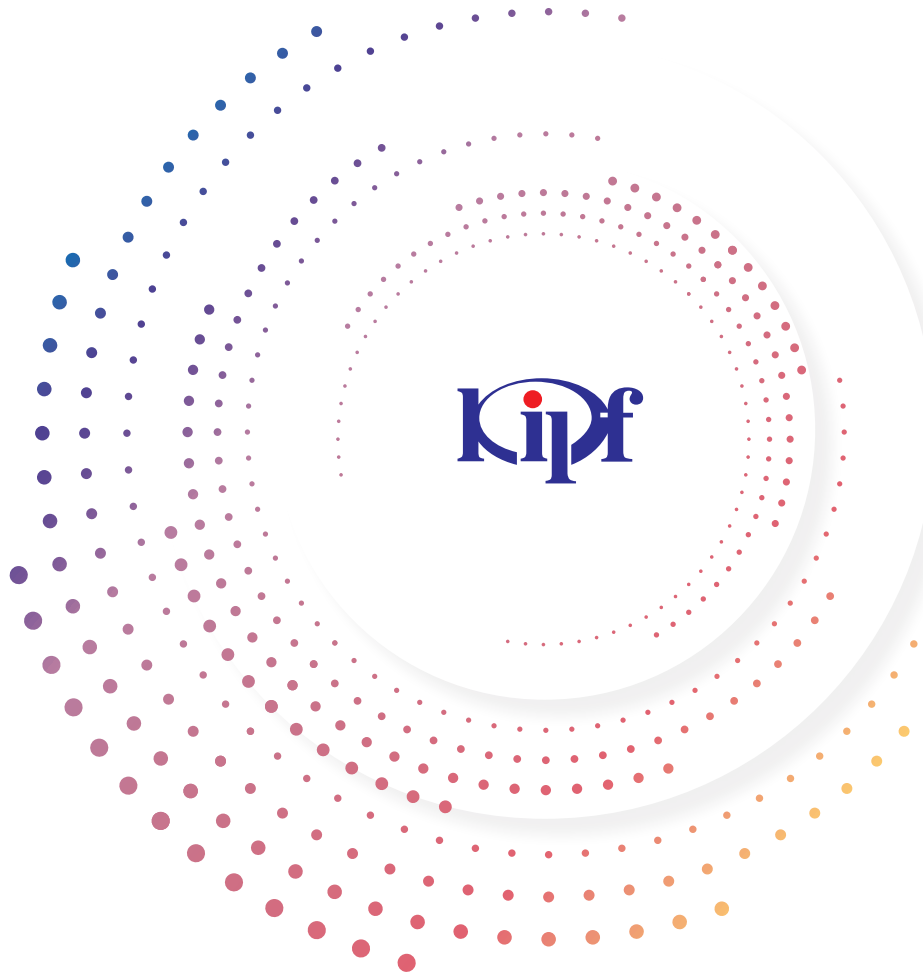


2023. 7

재정 동향

2023 | 상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진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 센터장

배진수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제도분석팀장

박정흠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구윤모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미국)

김은숙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김정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OECD)

김진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대한민국)

염보라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IMF)

이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미국)

이정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일본)

이정인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프랑스)

한혜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독일)

황보경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EU)

2023. 7

재정 동향

2023 | 상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
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Contents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I. 국내 재정동향	2
------------------	---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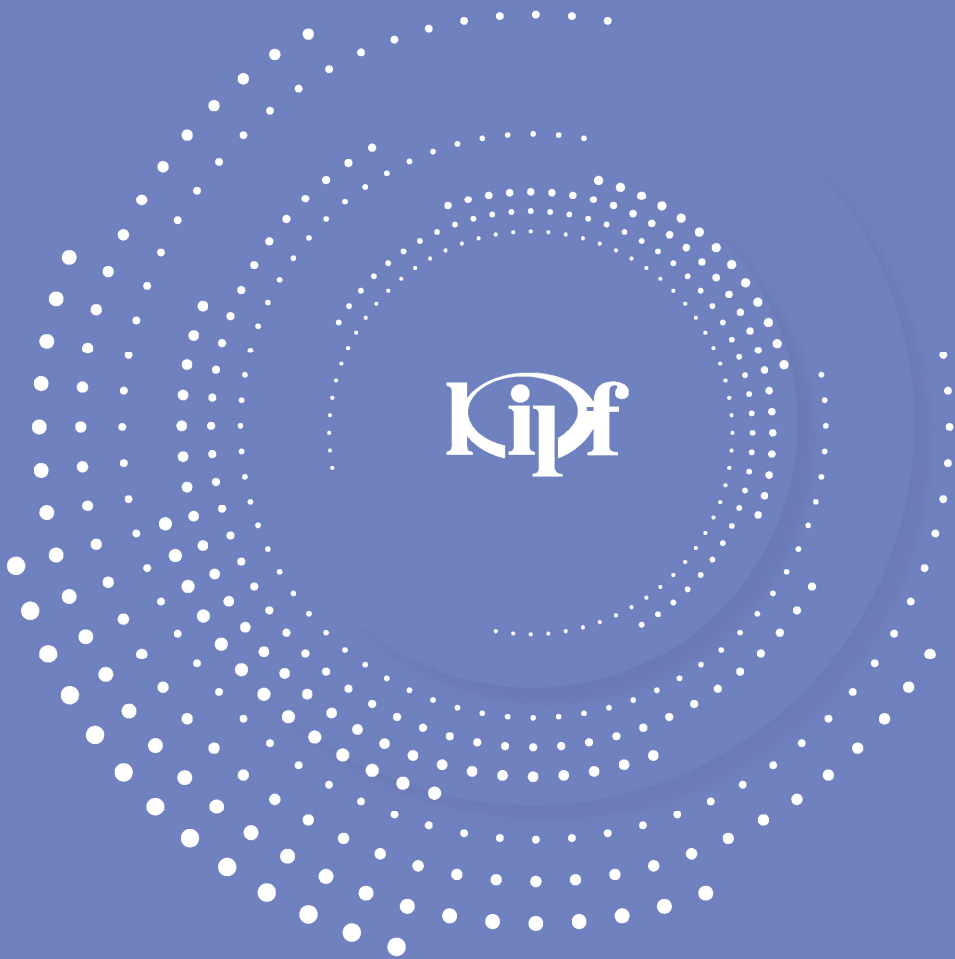
국제기구 재정동향

I. 유럽연합(EU)	8
II. 국제통화기금(IMF)	47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4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I. 미국	94
II. 일본	150
III. 독일	175
IV. 프랑스	207
V. 영국	236
[주요 자료 출처]	270



2023년 상반기 재정동향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I.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01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2023. 2. 10.)

- 2월 10일 정부는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및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 총세입 573.9조원, 총세출 559.7조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2조원이며, 이월액 5.1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3.1조원) 기록

표 1-I-1 2022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예산 (추경 기준)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잉여금 (C = A - B)	이월 (D)	세계잉여금 (E = C - D)	
합계	2022(a)	573.5	573.9	559.7	14.2	5.1	9.1
	2021(b)	506.7	524.2	496.9	27.3	4.0	23.3
	(a - b)	66.8	49.8	62.8	△13.1	1.1	△14.2
일반 회계	2022(a)	495.2	493.9	485.0	8.8	2.8	6.0
	2021(b)	424.4	438.4	417.7	20.6	2.6	18.0
	(a - b)	70.8	55.5	67.3	△11.8	0.2	△12.0
특별 회계	2022(a)	78.3	80.1	74.7	5.4	2.3	3.1
	2021(b)	82.3	85.8	79.1	6.7	1.3	5.3
	(a - b)	△4.0	△5.7	△4.4	△1.3	1.0	△2.2

주: 구성항목별 계산 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보도자료, 2023. 2. 10.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아 선임연구원(jina@kipf.re.kr)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보도·발표·게재자료 등을 발췌·정리하여 작성

02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2023. 3. 28.)

- 정부는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
-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원, 국세감면율은 13.1% 추정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 2022~2023년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국세 감면 한도를 하회할 전망

표 1-I-2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단위: 조원, %)

	2021년(실적)	2022년(추정)	2023년(전망)
국세감면액(A) ¹⁾	57.0	63.5	69.3
국세수입 총액(B) ²⁾	363.9	421.2	428.6
국세감면율[A / (A + B)]	13.5	13.1	13.9
국세감면 한도 ³⁾	14.3	14.6	14.3

주: 1) 국세감면액: (2021년) 실적치, (2022~2023년)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전망치

2) 국세수입총액: (2021~2022년) 실적치, (2023년) 국회 확정 세입예산

3) 국세감면 한도(「국가재정법」 제88조)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3. 3. 28.;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3. 3.

03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3. 28.)

- 정부는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 반면,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2024년 예산은 ① 민간 경제활력 제고, ②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③ 경제체질·구조 혁신, ④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
 - (민간 경제활력 제고)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추진
 - (약자복지)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경제체질·구조 혁신) 3개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적극 지원
 - (국가 기본기능 강화)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 강화
- 또한 정부는 ① 지출구조 혁신, ② 재정사업 관리 강화, ③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
-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0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2023. 4. 4.)

- 정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 (총세입) 2021년 결산 대비 49.8조원 증가(+9.5%)한 573.9조원
 - 국세수입: 세입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
 - 세외수입: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감소한 178.0조원
 - (총세출) 2021년 결산 대비 62.8조원 증가(+12.6%)한 559.7조원
 -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집행 증가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 617.8조원(전년 대비 47.2조원 증가), 총지출 682.4조원(전년 대비 81.3조원 증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6조원 적자(GDP 대비 △3.0%)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2.5조원 흑자, GDP 대비 2.4%
 - (관리재정수지) 117.0조원 적자, GDP 대비 △5.4%

표 1-I-3 2022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결산	예산 (2차 추경)	결산	2021년 결산 대비	2022년 예산 대비
총수입(A)	570.5	609.1	617.8	47.2	8.7
총지출(B)	601.0	679.5	682.4	81.3	2.9
통합재정수지(C = A - B) (GDP 대비, %)	△30.5 (△1.5)	△70.4 (△3.3)	△64.6 (△3.0)	△34.1 (△1.5%p)	5.8 (0.3%p)
사회보장성기금수지(D)	60.1	40.4	52.5	△7.6	12.1
관리재정수지(E = C - D) (GDP 대비, %)	△90.6 (△4.4)	△110.8 (△5.1)	△117.0 (△5.4)	△26.4 (△1.1%p)	△6.2 (△0.3%p)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보도자료, 2023. 4. 4.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보도자료 별첨, 2023. 4. 4.

05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2023. 7. 4.)

- 정부는 7월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
 - 올해 성장률은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 전망
 -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 3.3% 기록 전망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① 경제활력 제고, ② 민생경제 안정, ③ 경제체질 개선, ④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경제활력 제고) 거시·금융관리 강화,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 (민생경제 안정)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공정·상생 촉진
 -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제2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 I. 유럽연합(EU)
- II. 국제통화기금(IMF)
-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 유럽연합(EU)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1 EU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1. 18.	EU 집행위원회, 2023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17억유로 규모로 확대
2023. 2. 3.	EU-우크라이나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계획 등 논의
2023. 2. 13.	EU 집행위원회, 2023년 겨울 전망 발표
2023. 2. 25.	EU 집행위원회, 러시아 10차 제재 패키지 발표
2023. 3. 8.	EU 집행위원회, 2024 재정정책 지침 발표
2023. 3. 14.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 합의
2023. 3. 14.	EU 재무장관회의, 2024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
2023. 3. 14.	EU 집행위원회,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 발표
2023. 3. 16.	EU 집행위원회, 기후중립산업 법안(Net-Zero Industry Act) 발표
2023. 3. 28.	EU 이사회, 신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정 승인
2023. 3. 28.	EU 이사회, 회원국들이 자발적 가스 수요 15% 감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
2023. 3. 30.	EU 이사회 및 의회,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잠정 합의
2023. 4. 14.	EU 집행위원회, 「2022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2)」 발표
2023. 5. 10.	EU 의회, 차입비용 상승이 내년도 EU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결의안 채택
2023. 5. 15.	EU 집행위원회, 2023년 봄 경제 전망 발표
2023. 5. 24.	EU 집행위원회, 재정정책 권고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 발표
2023. 6. 7.	EU 집행위원회, 2024년 EU 예산안 발표
2023. 6. 13.	EU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초안 발표
2023. 2. 2., 3. 16., 6. 15.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
2023. 6. 20.	EU 집행위원회,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수정안 발표
2023. 6. 23.	EU 집행위원회, 러시아 11차 제재 패키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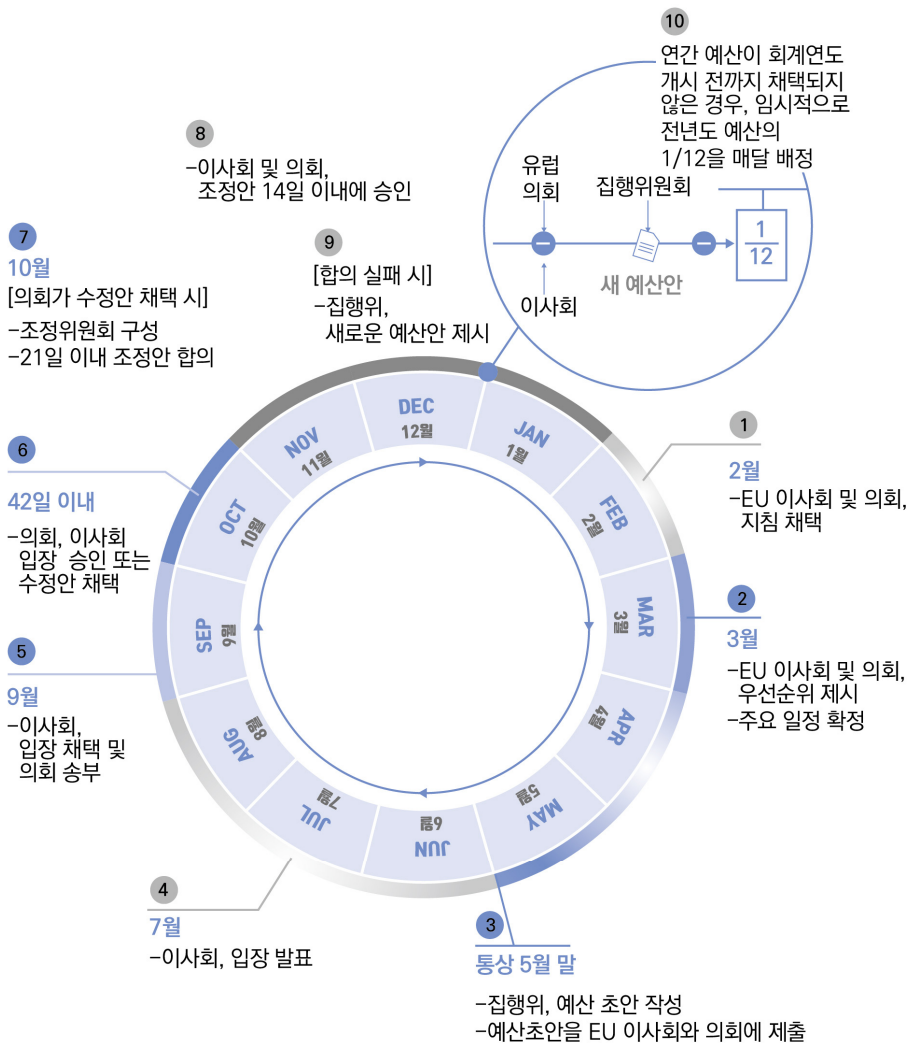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01 유럽연합(EU) 예산

※ EU 연간 예산은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편성, 이사회 입장 채택, 의회 입장 채택, 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사회와 의회 입장이 다를 경우 개시되며 합의 실패 시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그림 2-1-1] 참조)

그림 2-I-1 EU 연간 예산 일정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 - EU budget timing," 2023. 1. 4.,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3. 3. 28.

- EU 집행위원회, 2023년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을 위한 예산을 17억유로 규모로 확대 계획(2023. 1. 18.)³⁾
 - (배경) EU는 1992년부터 110개국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에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응하여 글로벌 인도주의적 영향을 강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다음과 같이 할당 계획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2억 780만유로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지역 분쟁, 강제 이주, 기후 충격 피해 지원에 1억 8,150만유로
 - 콩고민주공화국의 장기 분쟁 피해와 수단, 남수단, 우간다,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등에서 기후변화와 무력충돌로 인한 이주민 지원에 3억 3,070만유로
 - 중동, 북아프리카의 지역 위기와 사라위 난민 해결을 위해 3억 8,220만유로
 - 아시아(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라틴아메리카의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에 2억 3,700만유로
 - 연중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억 4,150만유로, 예상치 못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1억 2,200만유로, 혁신 프로젝트 및 정책 조치에 1억 830만유로
- EU 재무장관회의, 2024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2023. 3. 14.)⁴⁾
 - 이사회는 2024년 예산이 EU가 합의한 장기 목표와 정치적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인 연대를 보여주면서 관련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3) EU 집행위원회, "Humanitarian Aid: EU increases funding to €1.7 billion for 2023," 2023 1. 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53, 검색일자: 2023. 1. 19.

4) EU 이사회, "Budget 2024: Council agrees on its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next year's next year's EU budget," 2023. 3. 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14/budget-2024-council-agrees-its-guidelines-for-the-establishment-of-next-year-s-eu-budget/>, 검색일자: 2023. 3. 16.

- (지침 내용) 모든 EU 기관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체계와 관련 재정 규정들의 예산 원칙⁵⁾을 준수해야 하며, 대체로 지난해 예산 편성 지침 내용과 유사⁶⁾
 - ① 실제 필요에 따라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을 보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년도 재정체계 한도 내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함
 - ② EU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고 현재 및 지난 다년도 재정체계에 따라 이뤄진 약속이 적시에 지불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함
 - ③ EU 모든 수준에서 예산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필요한 지출 항목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④ 모든 EU 기관이 직원 수를 안정화하고 행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이고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
 - ⑤ 회원국의 EU 예산 기여분과 EU 예산의 회원국 지급분에 관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
 - ⑥ 경제회복기금의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투명성과 채무 및 기타 모든 부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⑦ 회원국 국회와 이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기 위해 2024년 예산 초안을 늦어도 22주(5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권장

■ EU 의회, 차입비용 상승이 내년도 EU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결의안 채택(2023. 5. 10.)⁷⁾

- 유럽의회(MEP)는 유럽회복수단(European Union Recovery Instrument)⁸⁾의 증가하는 차입비용으로 인해 EU의 우선순위 및 정책을 지원하고 새로운 요구에 대

5) 예산단일의 원칙(unity), 단년도 예산주의(annuality), 건전 재정의 원칙(sound financial management), 투명성(transparency) 준수의 원칙 등

6) 2023년 EU 예산 편성 지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을 참조 바람

7) EU 의회, “Repaying the recovery plan: 2024 EU budget under pressure,” 2023. 5. 10.,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505IPR85006/repaying-the-recovery-plan-2024-eu-budget-under-pressure>, 검색일자: 2023. 5. 24.

8)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EU 예산안과 유럽 경제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7,500만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인 ‘NextGenerationEU’를 조성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

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는 유럽회복수단(EURI)의 차입비용 증당 예산을 129억유로(2018년 기준)로 책정
 - 금리가 2021년 0.55%에서 2027년 1.15%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으나 현재 금리는 이미 3%대로 상승함
 -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년 교육투자 프로그램(Erasmus+), 통합 보건 프로그램(EU4Health), 시민권, 평등, 문화 및 창조 분야 지원 등 주요 우선순위 프로그램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의 여러 위기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원이 이미 고갈되었으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EU 예산의 실질 가치는 하락
 -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유럽회복수단(EURI) 상환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긴급하고 야심찬 MFF 개정을 촉구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추가 수입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체 재원을 요구
 - MFF 개정은 2024년 1월 1일까지 시행할 필요
 - 결의안은 찬성 434표, 반대 99표, 기권 89표로 채택됨
 - (향후 계획) EU 집행위원회는 5월 말에 2024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6월에 MFF 검토 또는 수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2023년 내에 신규 재원에 대해서도 제안할 계획
- EU 집행위원회, 2024년 EU 예산안 발표(2023. 6. 7.)⁹⁾
- (방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촉진하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일자리 창출 및 보호 등 유럽연합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투자
 - 경제회복기금(NGEU)¹⁰⁾으로 유럽연합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

9) EU 집행위원회, "EU budget 2024: Enabling Europe to address its priorities," 2023. 6. 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062, 검색일자: 2023. 6. 8.

EU 집행위원회, "Draft general budget 2024," 2023. 6. 7.,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annual-eu-budget/all-annual-budgets/2024_en, 검색일자: 2023. 6. 8.

10) 경제회복기금(NextGenerationEU)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 (규모¹¹⁾) 2024년 EU 예산안은 승인기준 1,893억유로, 지급기준 1,430억유로 편성
 - EU 27개국 GNI 대비 각각 1.07%, 0.81%에 해당하는 규모임
 - 경제회복기금(NGEU) 보조금(지급기준) 지원에 1,129억유로가 편성되어 2024년 총지원 규모(예산안 + 경제회복기금)는 2,559억유로 규모
- (주요 내용) 연구 및 혁신 136억유로, 경제, 사회, 지리적 통합과 친환경 인프라에 479억유로, 공동 농업 정책에 538억유로 등을 편성
 - (Heading 1- 연구 및 혁신) EU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¹²⁾ 128억유로 등 연구 및 혁신에 136억유로 편성
 - (Heading 1- 유럽 전략적 투자) 유럽 연결 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¹³⁾에 27억유로,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¹⁴⁾ 13억유로, InvestEU¹⁵⁾ 3억 4,800만 유로 등 유럽 전략적 투자에 총 46억유로 편성
 - (Heading 1- 단일시장)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6억 200만유로, 과세 및 관세 분야 지원에 2억유로 등 단일시장 기능 보장을 위해 9억 4,700만유로 편성
 - (Heading 1- 우주) 유럽우주프로그램 등 우주부문에 21억유로 편성, 보안 위성 연결을 위한 유럽연합 연결성 확보 프로그램(Union Secure Connectivity Programme)에 2억 1,300만유로
 - (Heading 2.a- 지역개발, 통합) 경제, 사회, 지리적 통합과 친환경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479억유로
 - (Heading 2.b- 사람, 사회적 결속 및 가치) 경제회복기금 차입비용 증가에 39억 6,000만유로, 교육 이동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Erasmus+¹⁶⁾에 3억 3,200만 유로, 정의, 권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2억 1,500만유로 등 사람, 사회적 결속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를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 지원

- 11)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하고,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함
- 12)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EU의 경쟁력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암, 해양과 강 복원,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토양 회복 등 5개 부문 연구를 지원
- 13) EU 회원국 간의 교통, 에너지, 디지털 등 세 부문의 유럽 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투자
- 14)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디지털 기술 강화,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지원
- 15) 연구 및 혁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보건 분야, 전략 기술 관련 프로그램
- 16)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의 인력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가치에 총 103억유로 편성

- (Heading 2.b- 회복 및 복구) 통합보건시스템인 EU4Health에 7억 5,400만 유로, 유럽연합의 시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RescEU에 2억 3,000만유로 편성
- (Heading 3- 천연자원 및 환경) 공동 농업 정책에 538억유로, 유럽해양양식기금에 11억유로 편성, LIFE 프로그램에 7억 4,500만유로,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전환기금(JFT)에 15억유로 등 환경 및 기후행동에 총 24억유로 편성
- (Heading 4- 이주 및 국경 관리) 통합국경관리기금(IBMf)에 11억유로,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Frontex)에 8억 7,400만유로 등 국경 보호를 위해 22억유로 편성,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지원 등 이주 관련 지출에 17억유로 편성
- (Heading 5- 국방) 유럽방위기금(EDF) 연구지원에 6억 3,800만유로, 군사 이동 지원에 2억 4,100만유로, 공동방위구매촉진기금(EDIRPA)에 2억 6,000만 유로, 탄약 생산에 3억 4,300만유로 등 국방 과제 해결에 16억유로 편성
- (Heading 5- 안보) 테러, 인종차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내부안보기금(ISF)에 3억 1,500만유로 등을 포함하여 안보에 7억 2,600만유로 편성
- (Heading 6- 파트너 및 세계) 인근국 지원, 개발원조 및 국제 협력(NDICI)에 114억유로, IPA에 21억유로, 인도적 지원(HUMA) 17억유로 등 대외 정책에 총 158억유로 편성
- (향후 일정)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 채택 (7월), 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을)가 이뤄지며,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10월 24일~11월 13일, 21일간 열릴 예정

■ EU 집행위원회,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수정안 발표(2023. 6. 20.)¹⁷⁾

- (배경) 지난 5월 유럽의회는 유럽회복수단(EURI)의 증가하는 차입비용으로 재정

17) EU 집행위원회, "EU budget: Commission proposes to reinforce long-term EU budget to face most urgent challenges," 2023. 6. 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345, 검색일자: 2023. 6. 21.

EU 집행위원회, "EU budget: Commission puts forward an adjusted package for the next generation of own resources," 2023. 6. 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328, 검색일자: 2023. 6. 21.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긴급한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개정을 촉구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추가 수입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체 재원을 요구함

표 2-1-2 2024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4년		2023년		전년 대비 변화율(%)		2024년 경제회복 기금(NGEU) ¹⁾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31	20,916	21,595	20,898	-0.8	0.1	2,797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4,979	34,186	70,587	58,059	6.2	-41.1	107,007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4,665	24,156	62,927	50,875	2.8	-52.5	10,691
2.b. 회복력 및 가치	10,314	10,030	7,660	7,184	34.6	39.6	96,316
3. 천연자원 및 환경	57,389	54,233	57,263	57,457	0.2	-5.6	3,050
4. 이주 및 국경관리	3,897	3,258	3,727	3,038	4.5	7.2	-
5. 안보 및 국방	2,304	2,028	2,117	1,208	8.9	67.9	-
6. 파트너 및 세계	15,830	15,111	17,212	13,995	-8.0	8.0	-
7. 유럽 공공 행정	11,950	11,950	11,313	11,313	5.6	5.6	-
기타 특수 기금 ²⁾	1,561	1,371	2,855	2,680	-45.3	-48.8	-
합계 (EU 27개국 GNI 대비 %)	189,341 (1.07%)	143,053 (0.81%)	186,669 (1.10%)	168,649 (1.00%)	1.4	-15.2	112,854

주: 1) 경제회복기금(NextGenerationEU) 중 대출 제외한 보조금 규모(지급기준)

2) 기타 특수 기금은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세계화조정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브렉시트조정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을 포함

자료: EU 집행위원회,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4, 2023.*

- (주요 내용)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가 EU의 우선순위 및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EU 장기 예산을 강화하고 신규 자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2024~2027년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니즈(needs), 재건, 현대화를 위해 대출, 보조금 및 보증 형태로 500억유로를 추가 지원
 - 대출 지원은 금융시장에서 차입하여 조달하고 보조금 및 보증은 EU 연간 예산

을 통해 자금 조달 예정이며, 매년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이주 및 국경 관리) 이민 관리와 주요 제3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150억 유로 지원
 - 新이민 협정(New Pact on Migration) 이행을 위해 20억유로 지원, 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heading 6. 파트너 및 세계’ 부문 예산에 105억유로 추가 지원,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EAR)을 25억유로 증액
- (STEP을 통한 경쟁력 증진) 전략적 기술 유럽 플랫폼(STEP)¹⁸⁾을 창설하여 잠재적으로 최대 1,600억유로의 신규 투자 창출을 기대
 - 전략적 기술 유럽 플랫폼(STEP)은 기존의 EU 기금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고, 디지털, 딥테크, 클린테크, 생명공학, 가치사슬 개발과 제조에 대한 투자를 촉진 계획
 - * InvestEU에 30억유로 지원 → 750억유로 투자 창출
 - *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 50억유로 지원 → 200억유로 투자 창출
 - * Horizon Europe에 5억유로 지원 → 130억유로 투자 창출
 - * 유럽방위기금(EDF)에 15억유로 지원 → 20억유로 투자 창출
 - * 전략적 기술 유럽 플랫폼(STEP) 우선순위 재프로그래밍으로 약 189억유로, 공정전환 기금(JTF)에서 60억유로, 회복·복구기금(RRF) 한도 증가를 통해 300억유로의 추가 유연성 확보
- (신규 자원 마련¹⁹⁾) 차세대 자체 재원으로 ①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입, ② 탄소 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징수금액, ③ 다국적 기업의 잔여이익 배분²⁰⁾, ④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자원(the statistical own resource on company profit)을 제안
 - 톤당 80유로의 탄소가격(2022년 기준) 가정하에 배출권거래제(ETS) 수입의

18) InvestEU, Innovation Fund, Horizon Europe, European Defence Fund,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EU4Health, Digital Europe and Cohesion Funds 등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핵심기술 투자를 통해 EU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

19) 현재 EU 자체 수입원은 관세, 부가가치세(VAT), 국민총소득(GNI) 기반 기여금(EU 수입의 70% 이상 차지)으로 구성

20) OECD와 G20 Pillar One 협정을 기반으로 다국적 기업의 잔여이익을 EU 회원국에 재할당

- 30%로 2024~2027년 연간 약 70억유로, 2028년부터는 연간 약 190억유로의 예산 마련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징수금액의 75%로 2028년까지 연간 15억유로의 예산 마련
 -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재원은 국가 계정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 및 비금융 기업의 총영업이익의 0.5%를 부과하여 연간 약 160억유로의 수입을 제공
 - 이는 임시적 조치로 회원국이 지불하는 국가 기부금 형태로 부과될 예정이며, 향후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에 유럽통합법인세(BEFIT)²¹⁾로 대체

02 European Semester

※ European Semester는 회원국들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한 연간 순환과정임

- EU 집행위원회, 2024 재정정책 지침 발표(2023. 3. 8.)²²⁾
 - EU 회원국에 내년도 재정정책 수행 및 조정에 대한 예비적 재정정책 지침을 제시했으며, ‘중기 부채 지속가능성 및 포용적 성장 촉진’이 주요 골자
 - (경제 전망) 2023년 겨울 전망에 따르면 올해 유로지역 및 EU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가을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나 경제성장에 대한 위협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 거버넌스 검토) 경제 거버넌스 체계²³⁾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로

21) BEFIT(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는 기업의 탈세 방지 및 공정과세를 위해 기업의 회원국별 수익을 통합한 후 각 회원국에 과세 대상 수익을 분배하는 역내 통합 법인세제

22) EU 집행위원회, “Fiscal policy guidance for 2024: Promoting debt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23. 3.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410, 검색일자: 2023. 3. 13.

EU 집행위원회, “Communication on fiscal policy guidance for 2024,” 2023. 3. 8.,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3/COM_2023_141_1_EN_ACT_part1_v4.pdf, 검색일자: 2023. 3. 16.

23) EU의 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안정성장협약(SGP), European Semester, 국가재정체계 요건, 거시경제불균형 절차(MIP),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경제 안정,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

인한 안정성장협약 면책조항²⁴⁾이 2023년 말에 종료되고 국가별 재정정책 권고가 재개될 예정

-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혁 및 투자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노력
- (EDP 시행) 초과적자시정절차(EDP)의 한시적 유보는 2024년 봄에 재검토 후 종료 예정
- (향후 계획) 회원국들은 예비적 재정정책 지침을 반영하여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²⁵⁾을 준비하고, 봄패키지(5월)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재정권고안(CSR)이 발표될 예정

■ EU 집행위원회, 재정정책 권고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 발표(2023. 5. 24.)²⁶⁾

- (재정정책 지침) 코로나19로 인한 일반면책조항 적용을 해제하고, 정량화되고 차별화된 국가별 권장사항을 제시
 - 2023년 봄 전망에 기초하여 중기재정목표(MTO)를 달성한 회원국은 2024년에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²⁷⁾의 증가를 제한하여 신중한 재정정책을 보장해야 함
 - 2024년 재정 지침은 회원국별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GDP 대비 약 0.3%~0.7% 수준의 재정 조정을 요구
 -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유지하고,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²⁸⁾ 및 EU 기금 보조금 지원의 효과적인

24)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은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준수 의무로부터 예외적인 이탈을 용인하는 EU 규정임. 2020년 3월 23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유로지역 혹은 EU 전체의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이라고 보아 EU 재정프레임워크의 면책 조항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에서 EU 재정준칙 준수 의무의 일시적인 중단에 합의

25) 매년 4월 EU 회원국은 향후 3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유로 국가들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비유로 국가들은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에서 재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26) EU 집행위원회, "Policy Guidance under the European Semester." 2023. 5. 2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872, 검색일자: 2023. 5. 26.

27) 순기초지출 = 총지출 - 이자지출 - 주기적 실업수당 - 일회성 지출 -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

28) NextGeneration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6,725억유로(2018년 불변 가격) 규모의 자금을 회원국에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지원.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자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흡수(absorption)를 보장해야 함

- 모든 회원국은 2023년 말까지 에너지 지원 조치를 완화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취약가구 및 기업에 집중하고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함
-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기 재정전략과 투자 및 개혁을 추구해야 함
- (재정준칙) EU 회원국의 적자 및 부채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결과 16개 회원국이 적자 또는 부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4년 봄에 초과적자시정절차(EDP)를 개시할 예정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적자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가 부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거시경제 불균형²⁹⁾) 2023 「2022 경고체계보고서」³⁰⁾에서 지적된 17개국을 심층 검토
 - 사이프러스, 헝가리,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등 9개국은 불균형(imbalance), 그리스, 이탈리아 2개국은 과도한 불균형(excessive imbalance) 상태
 - 불균형 국가 중 루마니아는 시급한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향후 과도한 불균형 상태가 될 우려가 있음
 -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은 현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리스, 이탈리아는 과도한 불균형 상태로 평가되나, 정책 조치의 진전으로 취약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6개국은

29)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를 기초로 평가

30)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를 통해 1차 검토를 수행 후 →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대상 국가를 선별하며 →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과불균형절차(EIP)를 시행할 수 있음. 초과불균형절차가 시행되면 대상 회원국은 수정된 재정구조계획을 제시해야 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 참조

현재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

- (「사후 프로그램 감시 보고서」³¹⁾)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등 5개국이 부채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
 - 아일랜드는 물가상승률 완화와 실질 가치분소득의 증가가 가계 지출을 뒷받침 하면서 경제활동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리스는 2022년 견고한 성장 이후 2023~2024년에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지원 조치로 인한 재정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로 흑자를 기록
 - 스페인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혼란에도 2022년에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자산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익성이 눈에 띄게 증가
 - 사이프러스는 관광업의 추가 반등과 ICT 기업의 유입을 통해 내수와 서비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포르투갈은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글로벌 공급망 중단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의 강력한 회복이 반영되어, 2023~2024년에 유로지역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03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인플레이션 대응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0.5%p 인상(2023. 2. 2.)³²⁾
 - (배경) 2022년 7월 이후 5차례 정책금리를 인상을 발표
 - ECB 정책위원회는 2023년 2월 8일부터 3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3.0%, 3.25%, 2.5%로 모두 0.5%p씩 인상하기로 결정
 - 정책금리를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2%)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3월에 개최 예정

31)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회원국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경제, 재정 상황을 평가

32)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2. 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202-08a972ac76.en.html>, 검색일자: 2023. 2. 7.

인 통화정책 회의에서 0.5%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2023년 1월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상승률(HICP)³³⁾은 8.5%로 전월(9.2%)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³⁴⁾은 전월과 동일한 5.2%로 집계

- 정책금리 조정 외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APP)³⁵⁾의 규모는 2023년 3월부터 월평균 150억유로씩 점차 감축하여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채권 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투자할 계획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0.5%p 인상(2023. 3. 16.)³⁶⁾

- ECB 정책위원회는 3월에 개최한 통화정책회의에서 0.5%p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3월 22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3.5%, 3.75%, 3.0%로 인상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5.3%, 2024년 2.9%, 2025년 2.1%로 전망되며,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3년 2.5%, 2024년 2.2%, 2025년 2.2%로 전망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0.25%p 인상(2023. 5. 4.)³⁷⁾

- ECB 정책위원회는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0.25%p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5월 10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3.75%, 4.00% 및 3.25%로 인상
 -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간 금리 인상에 비해 인상 폭이 0.25%p로 축소됨
 - 한편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금리 인상이 유로지역

33)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로지역 HICP는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들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임

34)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기준

35)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36)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3. 1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316~aad5249f30.en.html>, 검색일자: 2023. 3. 22.

37)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3. 1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504~cdfd11a697.en.html>, 검색일자: 2023. 5. 11.

금융통화 여건에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으나 실물경제로의 파급 시차 및 강도에 불확실성이 존재

- 자산 매입 프로그램(APP)의 규모는 6월까지 월평균 150억유로씩 점차 감축 후 7월부터 만기도래분의 재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채권 원금은 2024년 말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재투자할 계획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0.25%p 인상(2023. 6. 15.)³⁸⁾

- ECB 정책위원회는 적기에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2.0%)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월 금리 인상에 연이어 0.25%p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6월 21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4.00%, 4.25% 및 3.5%로 인상
-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률 전망, 근원물가 상승 압력, 통화정책 전달 강도 등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
 - 6월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 5.4%, 2024년 3.0%, 2025년 2.2%로 전망되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3년 5.1%, 2024년 3.0%, 2025년 2.3%로 전망
- 7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APP) 만기도래분의 재투자를 중단할 예정이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채권 원금은 2024년 말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재투자할 계획

표 2-1-3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2022년					2023년			
	6월	7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기준금리	0.00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한계대출금리	0.25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수신금리	-0.50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변동 폭(%p)	-	+0.5	+0.75	+0.75	+0.5	+0.5	+0.5	+0.25	+0.25

자료: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8)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6. 15.,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615~d34cddb4c6.en.html>, 검색일자: 2023. 6. 16.

나.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 EU-우크라이나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계획 등 논의(2023. 2. 3.)³⁹⁾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와 우크라이나 간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
 - (주요 논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절차, 러시아에 대한 EU의 대응, 평화협상, 재건 및 구호 문제, 세계 식량안보 등의 의제를 논의함
 - (EU 가입절차) 우크라이나가 반부패 사법개혁 등 유럽위원회가 명시한 조건⁴⁰⁾ 충족 시 EU 회원국 신청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봄에 우크라이나의 조건 이행 상황을 보고
 - 현재 우크라이나는 2022년 6월부터 EU 후보국 지위에 있음
 - (러시아 대응)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국제센터(ICPA)를 헤이그에 설치하고, 10차 추가 제재 채택을 추진 계획
 - (평화협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협상에 대한 지지와 10대 평화 계획⁴¹⁾ 이행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
 - (군사지원) 유럽평화기금을 통해 36억유로를 지원하고, 3만명의 군인을 훈련 시키기 위해 EU 군사를 지원하는 등 약 120억유로 규모의 군사적 지원
 - (재정지원) 현재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약속된 재정 및 인도적 지원, 긴급 예산 등은 약 500억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40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임시 보호지침⁴²⁾으로 보호받고 있음

39) EU 정상회의, "EU-Ukraine summit, 3 February 2023," 2023. 2. 3.,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23/02/03/>, 검색일자: 2023. 2. 16., EU 집행위원회, "Standing together with the people of Ukraine", 2023. 2. 2., https://eu-solidarity-ukraine.ec.europa.eu/eu-ukraine-standing-together_en, 검색일자: 2023. 2. 16.

40) 1993년 코펜하겐과 1995년 마드리드에서 유럽이사회가 정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으로 회원국은 i)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 달성, ii) 시장경제 기능과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 압력 및 시장 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iii) 정치적, 경제적, 통화적 연합 목표 준수를 포함하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어야 함. 특히 시장경제의 발전, 행정구조의 조정 및 안정적인 경제 및 통화 환경 조성을 통해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통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자료: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Opinion on Ukraine's application for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2022. 6.,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ystem/files/2022-06/Ukraine%20Opinion%20and%20Annex.pdf>).

41)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단,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모든 수감자와 추방자 석방, UN헌장 이행, 정의 회복, 환경 파괴 대처, 긴장구조 예방, 종전 공고화 등

42) EU는 2022년 3월 4일부터 임시보호 지침을 활성화하여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EU 전역에 체류 자격을 부여

- 2022년에 72억유로의 거시금융지원(MFA)을 시행했고, 2023년에는 180억 유로의 거시금융지원을 시행 예정⁴³⁾
 -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높이고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간 지원에 3억 500만유로, 인도적 지원에 1억 4,500만유로를 추가 지원 예정
 - (재건 및 구호)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시민보호 지원에 관해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 학교 재건, 에너지 발전기 및 LED 전구 등 중요 인프라 복원을 위한 현물 지원을 약속
 - (세계 식량 안보) 러시아가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화함에 따라 식량 및 비료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농업 생산, 공급망, 무역의 전 세계적 혼란이 촉발되었음을 상기하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연대 협력 필요성 강조
 - EU 연대를 통해 2022년 5~12월까지 2,300만톤 이상의 우크라이나 농작물이 수출됨
- EU 집행위원회, 러시아 10차 제재 패키지 발표(2023. 2. 25.)⁴⁴⁾⁴⁵⁾
-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되는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 10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
 - (주요 내용) 114억유로 규모의 추가 수출 금지와 무역 및 금융 제재 등을 포함
 - 자산동결 대상자 명단에 87명의 개인과 34개의 단체를 추가하고, 금융 제재 대상에 3개 러시아 은행을 추가
 - 러시아 무기시스템(드론, 미사일, 헬리콥터, 기타 차량)에 사용되는 전자부품과 특정 희토류, 군사용 열화상 카메라 등 러시아의 군사 능력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 대형 트럭(및 부품), 세미 트레일러, 설상차 등의 특수차량, 발전기, 레이더, 건설자재, 전자제품, 기계 부품, 펌프, 금속 가공기계, 터보제트 등 러시아 산업

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 참조

44) EU 집행위원회, "EU agrees 10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3. 2. 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185, 검색일자: 2023. 2. 28.

45) 지난 1~9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개인 1,386명 및 171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325억유로 규모의 수출을 금지.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12. 참조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수출 제한 품목에 추가

- 아스팔트에 사용하는 역청, 합성고무 및 카본블랙⁴⁶⁾ 등 13억유로 규모의 수입 제재 확대
- 그 외 동결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 EU-러시아 간 개인항공편 사전 통보 의무,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민군 겸용 물품 및 총기 운송 금지 등

■ EU 집행위원회, 러시아 11차 제재 패키지 발표(2023. 6. 23.)⁴⁷⁾

- (주요 내용) EU 제재 우회를 방지하는 무역 및 운송조치 등을 포함
 - 특정 제재 상품 및 기술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우회 방지 도구(New anti-circumvention tool)를 제안
 - 새로운 우회 방지 도구는 EU의 개별 조치 및 지원이 우회를 방지하기 불충분한 경우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함
 - EU에서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품목(예: 첨단기술, 항공 관련 부품)의 운송 금지를 연장
 - 러시아 군사 및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단체 목록에 87개 단체를 추가하고, 민군 겸용(dual-use) 및 첨단기술품목 수출을 엄격히 제한
 -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추가 15개의 기술 품목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
 - 철강 제품 수입 제한을 강화하고, 특정 엔진 크기(1,900cm³)를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 수출 금지
 - 러시아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가 장착된 트럭이 EU로의 물품 운송을 완전히 금지
 - 독일과 폴란드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 자산동결 대상자 명단에 71명의 개인과 33개 단체를 추가 등

46) 미세한 탄소 분말로, 주로 자동차 타이어, 다른 고무 제품의 강화제, 인쇄용 잉크, 페인트, 먹지 등에 사용

47) EU 집행위원회, "EU adopts 11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for its continued illegal war against Ukraine," 2023. 6. 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429, 검색일자: 2023. 6. 27.

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

- EU 집행위원회,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 발표(2023. 3. 14.)⁴⁸⁾
 - (배경)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 EU 가계 및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소비자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
 - (주요 내용) 고정가격, 장기계약을 확대하여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 소비자가 가격 변동성을 피해 장기적인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계약 전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취약가구 보호를 강화
 - 에너지 비용의 예측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⁴⁹⁾ 같은 장기계약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및 비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양방향 차액결제거래(CfDs)⁵⁰⁾를 확대하여 회원국이 차액(초과수익)을 소비자에게 보전하도록 함
 - 에너지시장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ACER)의 권한 강화

- EU 집행위원회, 기후중립산업 법안(Net-Zero Industry Act) 발표(2023. 3. 16.)⁵¹⁾
 - EU 집행위원회는 그린딜 산업 계획⁵²⁾의 일환으로 기후중립산업 법안을 발표했으며, 기후중립 기술 및 제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48)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proposes reform of the EU electricity market design to boost renewables, better protect consumers and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2023. 3.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591, 검색일자: 2023. 3. 16.

49)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방식(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보도 참고자료, 2023. 6. 14.)

50) Two-way CfDs(Contracts for Difference)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시장가격이 합의된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51) EU 집행위원회, "Net-Zero Industry Act: Making the EU the home of clean technologies manufacturing and green jobs," 2023. 3.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665, 검색일자: 2023. 3. 24.

52) 청정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전략으로, 2023년 1월 폰테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처음 제안함. 그린딜 산업 계획은 EU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로드맵인 '유럽 그린딜' 정책(2019년 12월 발표)의 일환임. 1) 규제환경 개선, 2) 자금조달 원활화, 3) 숙련 인력 강화, 4) 교역 활성화의 네 가지 수단에 기반함

- (목표) 2030년까지 EU 역내 기후중립 기술 및 제조역량이 EU 전체 수요의 최소 40% 이상을 충족
- (행정절차 간소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후중립 기술 투자조건을 개선
- (탄소 포집 가속화) 2030년까지 역내에 탄소 포집 저장소를 구축하고 연간 최소 5천만톤의 배출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확보
- (시장접근 강화) 기후중립 기술의 공급 다양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 조달 또는 경매에서 기술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을 고려
- (기술인력 양성) 기후중립 산업 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기후중립 기술 생산을 지원하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
- (혁신 촉진) 회원국이 유연한 규제 조건 하에서 혁신적인 기후중립 기술을 시험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 박스를 설정
- (유럽 기후중립 플랫폼) 유럽 기후중립 플랫폼을 구축하여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 조치를 조정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EU 전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소요, 병목현상, 모범사례를 식별하여 투자 지원

■ EU 이사회, 신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정 승인(2023. 3. 28.)⁵³⁾

- (목표) 교통부문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로교통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며, 자동차업체가 배출량 제로를 지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을 보장하는 추진력을 제공
- 2030~2034년 EU에서 판매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를 감축
-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
- 예외적으로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 허용

■ EU 이사회, 회원국들이 자발적 가스 수요 15% 감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2023. 3. 28.)⁵⁴⁾

53) “Fit for 55”: Council adopts regulation on CO₂ emissions for new cars and vans,” 2023. 3. 2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28/fit-for-55-council-adopts-regulation-on-co2-emissions-for-new-cars-and-vans/>, 검색일자: 2023. 3. 29.

54) EU 이사회, “Member states agree to extend voluntary 15% gas demand reduction target,” 2023. 3.

- 비상사태에 대비해 EU의 「기능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22조에 따라 상정된 제안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천연가스 소비를 15%⁵⁵⁾ 감소시키는 자발적인 목표 설정
-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채택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적어도 2개월마다 달성한 감축량을 보고서로 제출할 계획

■ EU 이사회 및 의회, 재생에너지 지침⁵⁶⁾ 개정안에 잠정 합의(2023. 3. 30.)⁵⁷⁾

- (배경) 2022년 5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환경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침 목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개월에 걸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
 - 현재 EU 재생에너지 비중은 21.8%(2021년 기준)이며, 재생에너지 지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2.5%로 상향하고, 부문별 세부 목표에 잠정적으로 동의
 -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4.5%로 감축하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29%로 확대
 -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6%씩 높이고,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수소 중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⁵⁸⁾로 생산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60%로 확대

2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28/member-states-agree-to-extend-voluntary-15-gas-demand-reduction-target/>, 검색일자: 2023. 3. 29.

55)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평균소비량 대비

56) 「재생에너지 지침」(2018/2001/EU)은 EU 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EU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이후 2018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가짐.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운송부문과 냉난방뿐만 아니라 일반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57) EU 이사회,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deal on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23. 3. 3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30/council-and-parliament-reach-provisional-deal-on-renewable-energy-directive/>, 검색일자: 2023. 4. 12.

58) RFNBO(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는 ①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와 물에서 파생한 열 또는 전기 형태의 순수한 수소 또는 ② 화석연료, 직접공기포집(DAC) 기술, 기타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에서 나온 탄소와 수소가 결합해 파생한 액체 및 기체 연료 또는 ③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포획한 질소로 만든 수소에서 파생한 액체 및 기체 연료를 일컫음

- 이 합의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 비중을 2030년까지 23% 이하, 2035년까지 20%로 낮춘다는 조건하에 회원국의 RFNBO 의무 할당량을 20%로 낮출 수 있도록 함
 - 2030년까지 건물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49%로 확대하고,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회원국별로 2026년까지 연간 0.8%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1%씩 점진적 확대
 -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허가 절차 신속화
- EU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⁵⁹⁾ 이행규정 초안 발표(2023. 6. 13.)⁶⁰⁾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 동안 회원국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 계획
 - 이행 규정 도입 첫해에는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단계적 이행단계를 거쳐 2026년까지 CBAM의 최종 형태를 확정
 - 탄소배출량 계산은 ① 새로운 방법론(EU 자체 산정방식)⁶¹⁾, ② 제3국 국가 시스템에 기초한 방식, ③ 참조값에 기초한 방식 등 세 가지 방식 중 택일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의 산정방식만 허용
 - (향후 계획) 이행규정은 CBAM 위원회 투표를 거쳐 올 여름 말 공식 채택될 예정

라. 기타

-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 합의(2023. 3. 14.)⁶²⁾
- (배경) EU의 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국가 경제 약화 또는 국가 간 파급 효과를 통한

59) 탄소 집약적이고 탄소배출량이 가장 큰 6개 수입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

60) EU 집행위원회,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starts applying in its transitional phase as of 1 October: Commission consults on reporting obligations," 2023. 6. 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243, 검색일자: 2023. 6. 14.

61) EU-ETS의 기준을 차용하여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계산 후 사업장의 총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 6. 14.)

62) EU 이사회,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Council agrees its orientations for a reform," 2023. 3. 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14/economic-governance-framework-council-agrees-its-orientations-for-a-reform/> 검색일자: 2023. 3. 16.

경제적 불균형을 감지 및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부채 수준과 새로운 투자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2020년 2월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을 시작

- (주요 내용) 국가 중기재정구조계획 도입, 단일 운용 재정지표, 국가 책임감(ownership) 강화 등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수지준칙(GDP 대비 3% 한도)과 채무준칙(GDP 대비 60% 한도)의 기준값은 유지
 - 모든 회원국은 재정정책, 개혁 및 투자에 대한 통합 목표를 반영한 국가별 4개년 중기재정구조계획(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을 제출해야 함
 - 현재의 안정성장 프로그램과 국가개혁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국가별 중기재정구조계획으로 운용
 -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을 단일 운용지표로 활용하여 국가 재정경로를 설정
 - 제출 일정은 회원국의 선거 주기에 맞춰 조정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부 수립 시 업데이트될 수 있음
 - 중기재정구조계획은 공통의 방법론(common methodology)에 기반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개혁 및 공공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향후 10년에 대한 재정경로를 설정
 - ①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 이상일 경우, 향후 10년 재정경로는 중기계획 기간(4년)이 지나기 전부터 i)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ii)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미만이어야 함
 - ②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 미만이지만 공공부채에 문제가 있을 경우⁶³⁾, 향후 10년 재정경로는 i) 중기계획 이후 최대 3년(최대 7년)이 지나기 전부터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ii) 중기계획 기간(4년)이 지나기 전부터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미만이어야 함

63) 단기 및 장기 이자율, 명목 GDP 성장률, 기초재정수지, 명목 환율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충격(common shock)을 시뮬레이션하여 판단

- ③ 공공부채가 낮은 회원국의 향후 10년 재정경로는 중기계획 이후 최대 3년(최대 7년)이 지나기 전부터 재정적자가 기준값 이하여야 함
- 중기재정구조계획은 집행위원회의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다자 간 맥락에서 논의 후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중기재정구조계획의 기간은 회원국이 적절한 개혁 및 투자를 약속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GDP 대비 3%의 재정적자 기준 위반에 따른 초과적자시정절차(EDP)는 유지되며, 국가별 면책조항을 통하여 재정조정 경로에서 일시적 이탈을 허용
-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는 국가 예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EU 차원의 연간 재정 감독은 단일 운용지표(순기초지출)를 사용하여 수행
- 거시경제불균형절차(MIP)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불균형을 조기에 감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

0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동향·전망

※ EU는 연 4회 경제 전망(겨울 전망, 봄 전망, 여름 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를 업데이트함

- EU 집행위원회, 2023년 겨울 전망 발표(2023. 2. 13.)⁶⁴⁾
 - (경제) 유로지역과 EU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0.8%로 지난 가을 전망(유로지역과 EU 모두 0.3%)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유로지역과 EU 각각 1.5%, 1.6%로 전망
 - 가스 공급원의 다변화와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가스 저장고 수준이 높아지고 가스 도매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노동시장 역시 2022년

64) EU 집행위원회, "Winter 2023 Economic Forecast: EU economy set to avoid recession, but headwinds persist," 2023. 2. 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707, 검색일자: 2023. 2. 14.

12월 실업률이 6.1%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임

- 가계와 기업의 회복력에 힘입어 경제 전망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과 통화긴축은 가계구매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물가)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지난 가을 전망보다 하향 조정되어 2023년 5.6%에서 2024년 2.5%로 하락할 전망이며, EU 물가상승률도 같은 기간 6.4%에서 2.8%로 하락 전망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에 도달한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어 2023년 1월 8.5%로 점차 완화되었으나, 근원 물가상승률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음
 - HICP 핵심 품목 중 90% 이상이 평균 이상의 가격 인상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가 지속
- (위험)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나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은 대체로 균형
 - 최근 도매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강하게 전이되어 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상황으로 인한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재개방 이후 대외 수요가 강건해질 수 있으나 이는 세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음
 - 물가 상승 위험은 주로 에너지시장 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예상보다 가격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고 확고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위험이 우세

표 2-I-4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2월 겨울 전망		2022년 11월 가을 전망		2023년 2월 겨울 전망		2022년 11월 가을 전망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벨기에	0.8	1.6	0.2	1.5	4.3	2.7	6.2	3.3
독일	0.2	1.3	-0.6	1.4	6.3	2.4	7.5	2.9
에스토니아	0.1	2.8	0.7	2.1	6.2	2.2	6.6	2.6
아일랜드	4.9	4.1	3.2	3.1	4.4	2.1	6.0	2.8
그리스	1.2	2.2	1.0	2.0	4.5	2.4	6.0	2.4
스페인	1.4	2.0	1.0	2.0	4.4	2.3	4.8	2.3
프랑스	0.6	1.4	0.4	1.5	5.2	2.5	4.4	2.2
크로아티아	1.2	1.9	1.0	1.7	6.5	1.6	6.5	2.3
이탈리아	0.8	1.0	0.3	1.1	6.1	2.6	6.6	2.3
사이프러스	1.6	2.1	1.0	1.9	4.0	2.5	4.2	2.5
라트비아	0.1	2.7	-0.3	2.6	7.9	1.5	8.3	1.3
리투아니아	0.3	2.5	0.5	2.4	8.7	2.1	9.1	2.1
룩셈부르크	1.7	2.4	1.0	2.4	3.1	2.7	3.8	3.1
몰타	3.1	3.7	2.8	3.7	4.3	2.4	4.0	2.4
네덜란드	0.9	1.3	0.6	1.3	4.5	2.7	4.2	3.9
오스트리아	0.5	1.4	0.3	1.1	6.6	3.6	6.7	3.3
포르투갈	1.0	1.8	0.7	1.7	5.4	2.6	5.8	2.3
슬로베니아	1.0	2.0	0.8	1.7	6.1	3.5	6.5	3.5
슬로바키아	1.5	2.0	0.5	1.9	9.7	5.3	13.9	3.6
핀란드	0.2	1.4	0.2	1.4	4.2	2.0	4.3	1.9
유로지역	0.9	1.5	0.3	1.5	5.6	2.5	6.1	2.6
불가리아	1.4	2.5	1.1	2.4	7.8	4.0	7.4	3.2
체코	0.1	1.9	0.1	1.8	9.3	3.5	9.5	3.5
덴마크	0.1	1.6	0.0	1.8	4.4	2.5	3.7	2.0
헝가리	0.6	2.6	0.1	2.6	16.4	4.0	15.7	3.9
폴란드	0.4	2.5	0.7	2.6	11.7	4.4	13.8	4.9
루마니아	2.5	3.0	1.8	2.2	9.7	5.5	10.2	6.8
스웨덴	-0.8	1.2	-0.6	0.8	6.3	1.8	6.6	1.8
EU 27개국	0.8	1.6	0.3	1.6	6.4	2.8	7.0	3.0

자료: EU 집행위원회(2023. 2.),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3," Institutional Paper 194, p. 44
(Table 1); p. 45 (Table 3)

■ EU 통계청,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3. 3. 8.)⁶⁵⁾

- (전체) 2022년 4분기 유로지역 20개국과 EU 27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0.0%, -0.1%로 집계되어 3분기 성장률(두 지역 모두 0.4%)보다 하락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1.9%, EU 1.7%를 기록해 두 지역 모두 3분기 성장률(각각 2.5%, 2.6%)보다 하락
 - 2022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과 EU 모두 3.5%를 기록해, 2021년 경제 성장률(각각 5.3%, 5.4%)보다 하락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정부 최종소비지출이 0.2%p, 재고증감이 0.1%p, 대외수지가 0.9%p(수출이 0.0%p, 수입이 0.9%p) 기여한 반면, 총고정자본 형성이 -0.8%p,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0.4%p 기여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그리스(1.4%), 몰타(1.2%), 사이프러스(1.1%) 순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폴란드(-2.4%), 에스토니아(-1.6%), 핀란드(0.6%) 순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GDP는 각각 2.4%와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65)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2," 2023. 3. 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249744/2-08032023-AP-EN.pdf/30b3811c-f085-b7aa-c533-4733b1457ab9>, 검색일자: 2023. 3. 13.

표 2-I-5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 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				2022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6	0.5	0.2	0.1	5.3	4.1	1.9	1.4
독일	0.8	0.1	0.5	-0.4	4.7	3.5	1.5	0.2
에스토니아	-0.4	-1.2	-1.3	-1.6	3.3	-0.6	-2.4	-4.4
아일랜드	7.2	2.3	2.8	0.3	11.9	12.3	11.3	13.1
그리스	2.2	1.1	0.4	1.4	7.5	7.3	4.4	5.2
스페인	0.0	2.2	0.2	0.2	6.9	7.8	4.8	2.7
프랑스	-0.2	0.5	0.2	0.1	4.8	4.2	1.0	0.5
크로아티아	2.4	1.3	-0.5	0.9	7.5	8.4	5.4	4.2
이탈리아	0.1	1.0	0.4	-0.1	6.5	5.1	2.5	1.4
사이프러스	1.9	-0.2	1.6	1.1	6.7	6.1	5.3	4.5
라트비아	1.9	-0.3	-1.0	0.0	5.0	2.4	0.3	0.5
리투아니아	0.2	-0.7	0.7	-0.5	4.5	2.2	1.4	-0.4
룩셈부르크	0.7	-0.5	1.1	N/A	2.8	1.7	3.0	N/A
몰타	1.0	1.1	1.4	1.2	8.2	9.4	5.3	4.7
네덜란드	0.4	2.5	-0.2	0.6	6.6	5.1	3.1	3.4
오스트리아	0.8	2.1	0.1	0.0	8.6	6.5	2.2	3.0
포르투갈	2.3	0.2	0.3	0.3	11.9	7.4	4.8	3.2
슬로베니아	1.0	0.8	-1.3	0.8	9.6	8.3	3.9	1.3
슬로바키아	0.3	0.3	0.3	0.3	2.9	1.3	1.3	1.2
핀란드	0.2	0.6	-0.1	-0.6	3.7	2.8	1.6	0.0
유로지역	0.6	0.9	0.4	0.0	5.5	4.4	2.5	1.9
불가리아	0.4	0.7	0.6	0.6	5.1	4.6	3.2	2.3
체코	0.6	0.3	-0.3	-0.4	4.7	3.5	1.5	0.2
덴마크	-0.7	1.3	0.0	0.9	5.1	4.4	3.7	1.5
헝가리	1.4	0.6	-0.7	-0.4	7.9	6.1	3.7	0.8
폴란드	4.3	-2.3	1.0	-2.4	10.5	5.6	4.5	0.4
루마니아	1.3	1.2	1.2	1.0	4.6	4.0	4.4	4.9
스웨덴	-0.2	0.2	0.3	-0.5	4.6	4.0	2.5	-0.1
EU 27개국	0.7	0.7	0.4	-0.1	5.7	4.4	2.6	1.7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2," 2023. 3. 8.

■ EU 집행위원회, 2023년 봄 경제 전망 발표(2023. 5. 15.)⁶⁶⁾

- (경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 전망 상향
 - EU 경제성장률은 2022년 3.5%, 2023년 1.0%, 2024년 1.7%로 전망되며, 지난 겨울 전망(2022년 3.5%, 2023년 0.8%, 2024년 1.6%)⁶⁷⁾보다 상향 조정됨
 -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영향을 억제하고 에너지 공급 다각화 및 가스 소비 감소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했으며, 눈에 띄게 하락한 에너지 가격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자금 조달 여건이 경색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금융부문의 난기류가 투자(특히 주거부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
- (물가) 2023~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이 약 0.25%p 상향 조정되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3년 1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전망
 - EU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정점(9.2%)을 찍은 후 2023년에 6.7%, 2024년에 3.1%로 감소 전망이며, 겨울 전망(2023년 6.4%, 2024년 2.8%) 대비 상향 조정됨
 - 기업의 이윤(profit margin)*이 임금 상승 압력을 흡수하고, 통화 긴축으로 수요가 냉각되면서 EU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3년 6.9%, 2024년 3.6%로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임금 상승의 완충(buffer) 역할
- (노동) 2023년 이후 경기확장 둔화에도 노동시장은 회복력 유지
 - 2023년 3월 EU 실업률은 6.0%로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연간 실업률은 2022년 6.2%, 2023년 6.2%, 2024년 6.1%로 전망
 - EU의 연간 고용증가율은 2022년 2.0%, 2023년 0.5%, 2024년 0.4%로 전망되며, 특히 팬데믹 관련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문의 고용 증가가 강세를 보임

66)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3," Institutional Paper 200, 2023. 5.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pring-2023_en, 검색일자: 2023. 5. 16.

67)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재정동향」 2023년 2월호를 참조 바람

-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나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의 압박으로 인해 추가적 임금 상승이 예상됨
 - 임금상승률은 2022년 5.0%, 2023년 5.9%, 2024년 4.6%로 전망
- (재정) 에너지 대응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재정적자가 2024년에 크게 개선될 전망
 - (재정수지) 강력한 명목 성장률과 팬데믹 관련 지원 완화로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2년 3.4%로 개선되었으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정부의 에너지 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23년 3.1%, 2024년 2.4%로 더욱 개선될 전망
 - (국가채무) EU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0년 92%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4년에 83%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79%)보다 높음
 - (재정기조) 2022년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2023년 다소 긴축적 재정기조로 전환 예정
- (위험)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
 -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가계 구매력을 억제하고 더 강력한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될 수 있음
 - 미국에서 촉발된 은행부문의 혼란으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가 급증하면 예측보다 대출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으며, 정책 일관성이 보다 중요해짐
 - 2023~2024년 겨울의 에너지 공급 부족 위험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에너지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표 2-I-6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벨기에	3.2	1.2	1.4	10.3	3.4	3.5	5.6	5.8	5.7	-3.9	-5.0	-4.7
독일	1.8	0.2	1.4	8.7	6.8	2.7	3.1	3.2	3.1	-2.6	-2.3	-1.2
에스토니아	-1.3	-0.4	3.1	19.4	9.2	2.8	5.6	6.2	6.1	-0.9	-3.1	-2.7
아일랜드	12.0	5.5	5.0	8.1	4.6	2.6	4.5	4.3	4.3	1.6	1.7	2.2
그리스	5.9	2.4	1.9	9.3	4.2	2.4	12.5	12.2	11.8	-2.3	-1.3	-0.6
스페인	5.5	1.9	2.0	8.3	4.0	2.7	12.9	12.7	12.4	-4.8	-4.1	-3.3
프랑스	2.6	0.7	1.4	5.9	5.5	2.5	7.3	7.4	7.5	-4.7	-4.7	-4.3
크로아티아	6.2	1.6	2.3	10.7	6.9	2.2	7.0	6.6	6.1	0.4	-0.5	-1.3
이탈리아	3.7	1.2	1.1	8.7	6.1	2.9	8.1	7.8	7.7	-0.8	-4.5	-3.7
사이프러스	5.6	2.3	2.7	8.1	3.8	2.5	6.8	6.9	6.4	2.1	1.8	2.1
라트비아	2.8	1.4	2.8	17.2	9.3	1.7	6.9	6.8	6.5	-4.4	-3.8	-2.7
리투아니아	1.9	0.5	2.7	18.9	9.2	2.2	6.0	6.6	6.5	-0.6	-1.7	-1.4
룩셈부르크	1.5	1.6	2.4	8.2	3.2	2.6	4.6	4.8	5.0	0.2	-1.7	-1.5
몰타	6.9	3.9	4.1	6.1	5.4	2.8	2.9	2.9	2.9	-5.8	-5.1	-4.5
네덜란드	4.5	1.8	1.2	11.6	4.9	3.3	3.5	3.8	3.9	0.0	-2.1	-1.7
오스트리아	5.0	0.4	1.6	8.6	7.1	3.8	4.8	4.9	5.0	-3.2	-2.4	-1.3
포르투갈	6.7	2.4	1.8	8.1	5.1	2.7	6.0	6.5	6.3	-0.4	-0.1	-0.1
슬로베니아	5.4	1.2	2.2	9.3	7.0	3.8	4.0	3.9	3.8	-3.0	-3.7	-2.9
슬로바키아	1.7	1.7	2.1	12.1	10.9	5.7	6.1	5.8	5.4	-2.0	-6.1	-4.8
핀란드	2.1	0.2	1.4	7.2	4.8	2.1	6.8	7.1	6.8	-0.9	-2.6	-2.6
유로지역	3.5	1.1	1.6	8.4	5.8	2.8	6.8	6.8	6.7	-3.6	-3.2	-2.4
불가리아	3.4	1.5	2.4	13.0	9.4	4.2	4.3	4.3	4.0	-2.8	4.8	-4.8
체코	2.5	0.2	2.6	14.8	11.9	3.4	2.2	2.8	2.6	-3.6	-3.6	-3.0
덴마크	3.8	0.3	1.5	8.5	4.3	2.5	4.5	5.0	5.1	3.3	2.3	1.3
헝가리	4.6	0.5	2.8	15.3	16.4	4.0	3.6	4.2	4.0	-6.2	-4.0	-4.4
폴란드	5.1	0.7	2.7	13.2	11.7	6.0	2.9	3.3	3.2	-3.7	-5.0	-3.7
루마니아	4.7	3.2	3.5	12.0	9.7	4.6	5.6	5.4	5.1	-6.2	-4.7	-4.4
스웨덴	2.6	-0.5	1.1	8.1	6.0	1.9	7.5	7.7	8.2	0.7	-0.9	-0.5
EU 27개국	3.5	1.0	1.7	9.2	6.7	3.1	6.2	6.2	6.1	-3.4	-3.1	-2.4
영국	4.1	-0.2	1.0	7.9	6.7	2.4	3.7	4.3	4.6	-5.2	-3.2	-2.4
중국	3.0	5.5	4.7	-	-	-	-	-	-	-	-	-
일본	1.0	1.1	1.0	2.5	3.2	1.8	2.6	2.5	2.4	-8.0	-6.5	-4.4
미국	2.1	1.4	1.0	8.0	4.3	2.6	3.5	4.1	4.8	-4.0	-5.0	-5.5
세계	3.3	2.8	3.1	-	-	-	-	-	-	-	-	-

주: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3," Institutional Paper 200, 2023. 5. 15., p. 1
(Table 1) 일부 발췌

■ EU 통계청,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3. 6. 8.)⁶⁸⁾

- (전체) 2023년 1분기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0.1%, 0.1%로 집계되어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각각 -0.1%, -0.2%)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및 EU 모두 1.0%로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각각 1.8%, 1.7%)보다 하락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0.1%p, 정부 최종소비 지출은 -0.3%p, 총고정자본형성은 0.1%p, 대외수지는 0.7%p(수출 0.0%p, 수입 0.7%p), 재고증감이 -0.4%p 기여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폴란드(3.8%), 룩셈부르크(2.0%), 포르투갈(1.6%) 순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아일랜드(-4.6%), 리투아니아(-2.1%), 네덜란드(-0.7%) 순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코로나19 이전(2019년 4분기)과 비교해 유로지역과 EU의 GDP 규모는 각각 2.2%, 2.9% 증가

68)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3," 2023. 6. 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921720/2-08062023-AP-EN.pdf/70e6937f-93ad-2936-ed03-5dbc9fd762f6>, 검색일자: 2023. 6. 12.

표 2-I-7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계절 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			2023	2022			2023
	Q2	Q3	Q4	Q1	Q2	Q3	Q4	Q1
벨기에	0.5	0.3	0.1	0.5	4.1	2.1	1.5	1.4
독일	-0.1	0.5	-0.5	-0.3	1.7	1.4	0.8	-0.5
에스토니아	-1.1	-1.1	-1.0	-0.6	-0.6	-2.4	-3.9	-3.7
아일랜드	2.1	2.5	-0.1	-4.6	12.4	11.3	12.8	-0.3
그리스	0.9	0.2	1.1	-0.1	7.3	4.2	4.8	2.1
스페인	2.5	0.4	0.4	0.5	7.7	4.8	2.9	3.8
프랑스	0.5	0.2	0.0	0.2	4.0	1.1	0.6	0.9
크로아티아	1.3	-0.6	0.5	1.4	8.4	5.5	3.7	2.6
이탈리아	1.0	0.4	-0.1	0.6	5.0	2.5	1.5	1.9
사이프러스	-0.2	1.9	0.9	0.8	6.4	5.5	4.4	3.4
라트비아	-0.2	-1.2	1.2	0.6	3.3	0.8	1.2	0.4
리투아니아	-0.7	0.7	-0.5	-2.1	2.2	1.4	-0.4	-2.7
룩셈부르크	-0.1	1.5	-3.7	2.0	2.2	3.8	-2.2	-0.4
몰타	1.1	1.4	1.1	-0.5	9.6	5.6	5.1	3.2
네덜란드	2.6	-0.2	0.4	-0.7	5.2	3.4	3.5	1.8
오스트리아	1.7	0.0	-0.1	0.1	6.3	2.1	2.9	1.8
포르투갈	0.2	0.3	0.3	1.6	7.4	4.8	3.2	2.5
슬로베니아	0.7	-1.3	0.7	0.6	8.3	3.9	1.3	0.7
슬로바키아	0.2	0.3	0.3	0.3	1.5	1.2	1.0	1.0
핀란드	0.6	-0.4	-0.6	0.2	3.2	1.6	0.1	-0.4
유로지역	0.8	0.4	-0.1	-0.1	4.3	2.5	1.8	1.0
불가리아	0.7	0.5	0.6	0.5	4.6	3.2	2.2	2.3
체코	0.3	-0.3	-0.4	0.0	3.5	1.5	0.3	-0.4
덴마크	1.3	0.3	0.5	0.2	4.5	4.0	1.6	2.4
헝가리	0.6	-0.8	-0.6	-0.3	6.2	3.7	0.7	-1.1
폴란드	-2.5	1.0	-2.3	3.8	5.9	4.7	0.6	0.0
루마니아	0.7	1.0	1.0	0.1	3.8	3.9	4.3	2.8
스웨덴	0.3	0.2	0.0	0.3	2.5	1.0	0.7	0.7
EU 27개국	0.7	0.4	-0.2	0.1	4.4	2.6	1.7	1.0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3," 2023. 6. 8.

나. 재정 동향·전망

- EU 통계청, 2022년 3분기 재정통계 발표(2023. 1. 23.)⁶⁹⁾
 - (재정수지) 유로지역⁷⁰⁾과 EU 27개국의 2022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절 조정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GDP의 3.3%와 3.2%로,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악화
 - 재정수지 악화는 주로 총지출의 상당한 증가에 기인하며,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응 조치가 2022년 3분기부터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회원국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
 - 총수입과 총지출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 분기에 비해 그 영향은 감소
 - (정부부채⁷¹⁾) 유로지역과 EU의 2022년 3분기 말 일반정부 부채는 각각 GDP의 93.0%와 85.1%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2%p, 1.3%p 하락
 - GDP 규모 증가분이 부채 증가분보다 큼에 따라 GDP 대비 부채 비중이 하락
 -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78.2%), 이탈리아(147.3%), 포르투갈(120.1%)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5.8%) 불가리아(23.1%), 룩셈부르크(24.6%) 순으로 집계됨
 - 전 분기 대비 불가리아(1.9%p), 체코(1.7%p), 프랑스(0.3%p), 스웨덴(0.2%p) 등 4개국은 부채 비중이 증가한 반면, 그리스(-5.3%p), 사이프러스(-3.8%p), 포르투갈(-3.3%p), 이탈리아(-3.0%p) 등 23개국은 하락

69)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2% of GDP in the EU,"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bp>, 검색일자: 2023. 1. 25.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3.0% of GDP in euro area Down to 85.1% of GDP in EU,"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ap>, 검색일자: 2023. 1. 25.

70)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71) ESA 2010에 정의된 통화 및 예금(AF.2), 부채 증권(AF.3) 및 대출(AF.4) 등을 포함하며 명목가치로 표기

표 2-I-8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7개국의 2022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2021 Q3	2022 Q2(잠정치)	2022 Q3(잠정치)
유로지역 19개국			
재정수지	-4.1	-2.0	-3.3
정부수입	47.0	47.5	47.2
정부지출	51.1	49.5	50.5
정부부채	97.3	94.2	93.0
EU 27개국			
재정수지	-3.6	-1.8	-3.2
정부수입	46.7	46.8	46.4
정부지출	50.3	48.6	49.6
정부부채	89.7	86.4	85.1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 조정된 수치임

자료: 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2% of GDP in the EU,"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bp>, 검색일자: 2023. 1. 25.

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3.0% of GDP in euro area," 2023. 1. 23.,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3012023-ap>, 검색일자: 2023. 1. 25.

■ EU 통계청, 2022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3. 4. 21.)⁷²⁾

- (재정수지) 유로지역⁷³⁾과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 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4.7%, -4.5%로,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악화
 - 유로지역 및 EU의 재정수지 악화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2022년 3분기 및 4분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침

72)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7% of GDP in the euro area and 4.5% of GDP in the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62/2-21042023-CP-EN.pdf/6eb53445-39b1-cd7a-0ab2-4cb14f298a5b>, 검색일자: 2023. 4. 24.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1.6% of GDP in euro area Down to 84.0% of GDP in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59/2-21042023-BP-EN.pdf/282de4e3-e6f2-0571-a5da-6eb8391788f5> 검색일자: 2023. 4. 24.

73)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을 포함하며, 2023년 1분기 통계부터는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0개국의 통계를 발표

- (정부부채)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각각 91.6%, 84.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4%p, 1.1%p 하락
 - 유로지역 및 EU의 GDP 규모 증가분이 부채 증가분보다 큼에 따라 GDP 대비 부채 비중이 하락
 -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71.3%), 이탈리아(144.4%), 포르투갈(113.9%)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8.4%), 불가리아(22.9%), 룩셈부르크(24.6%) 순으로 집계됨
 - 전 분기 대비 에스토니아(2.5%p), 네덜란드(2.0%p), 리투아니아(1.1%p), 핀란드(1.1%p) 등 7개국은 부채비율이 상승한 반면, 룩셈부르크는 유지, 포르투갈(-5.9%p), 사이프러스(-4.8%p), 그리스(-4.5%p), 아일랜드(-4.4%p), 오스트리아(-3.0%p) 등 19개국은 하락

표 2-I-9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Q4	2022 Q3	2022 Q4
유로지역 19개국			
재정수지	-3.3	-4.6	-4.7
정부수입	48.3	47.1	46.9
정부지출	51.6	51.7	51.6
정부부채	95.5	93.0	91.6
EU 27개국			
재정수지	-3.1	-4.2	-4.5
정부수입	47.6	46.4	46.3
정부지출	50.7	50.6	50.7
정부부채	99.0	85.1	84.0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 조정된 수치임

자료: 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7% of GDP in the euro area and 4.5% of GDP in the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62/2-21042023-CP-EN.pdf/6eb53445-39b1-cd7a-0ab2-4cb14f298a5b>, 검색일자: 2023. 4. 24.

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1.6% of GDP in euro area Down to 84.0% of GDP in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59/2-21042023-BP-EN.pdf/282de4e3-e6f2-0571-a5da-6eb8391788f5>, 검색일자: 2023. 4. 24.

다. 주요 보고서

- EU 집행위원회, 「2022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2)」⁷⁴⁾ 발표(2023. 4. 14.)⁷⁵⁾
 - (부채 전망) EU 및 유로지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22년에 각각 86.0%, 93.6%에서 2033년에 87.6%, 95.9%로 증가 전망⁷⁶⁾
 - (단기 지속가능성⁷⁷⁾) EU 27개국의 전반적인 단기 재정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나,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성이 있음
 - 6개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단기 ‘총자금조달필요(gross financing needs)⁷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높아진 국채 금리와 부채 만기 연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기 지속가능성⁷⁹⁾) 9개국이 고위험, 10개국이 중위험, 8개국이 저위험 국가로 평가
 -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이미 부채비율이 높았거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들이 고위험 국가에 해당
 - (장기 지속가능성⁸⁰⁾) 7개국이 고위험, 12개국이 중위험, 8개국이 저위험 국가로

74) 3년마다 발간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EU 회원국의 단·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의 매년 중간 업데이트 보고서

75) EU 집행위원회,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2,” 2023. 4. 14.,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2_en, 검색일자: 2023. 4. 20.

76)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2033년까지 2024년 수준을 유지하고 금리와 성장률 차이($r - g$)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가정하며, 고령화지출 영향은 배제함

77)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지표인 S0 지표는 12개의 재정변수(재정수지, 총부채, 부채 변화율, 총자금조달필요 등)와 13개의 금융 관련 변수(순국채투자 지위, 민간부문 부채, 단기 가계부채, 단위당 명목 노동비용, 실질 GDP 성장률 등)로 구성되며, 세부 지표들을 통해 단기 재정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행이 필요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

78) 기초재정수지 적자액 + 이자 지급 + 채무상환금 + 채무수지 조정(SFA: stock-flow adjustment)

79) 중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1 지표로 파악하며, S1 지표는 중기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 규모를 측정함.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비용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포함하여 15년 내에 GDP 대비 부채비율 60%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5년 누적)의 조정 규모임

80) 장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2 지표로 파악하고,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달성과 관련이 있음. 예산제약은 장기(무한 기간)적으로 미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부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이 조건에서 정부부채가 장기적으로(2070년까지) 안정화되어야 함. S2 지표는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의 주요 요소로 정부 예산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 평가되며, 특히 고령화 지출의 증가 전망이 큰 위험 요소로 작용
- 2070년까지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연금 지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위험 국가로 분류
 - 지난 2021년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SR)」⁸¹⁾와 비교하면 단기 위험이 개선되었으나, 중장기 위험은 대체로 유지
 - 2022년 성장세에 힘입어 대부분 회원국의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이 감소
 - 중기적으로 폴란드(저위험 → 중위험)와 헝가리(중위험 → 고위험)는 악화된 거시 금융 전망을 반영하여 중기 재정위험이 상승한 반면, 4개 회원국(불가리아, 몰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은 개선
 -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는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고위험 국가로 재분류된 반면, 6개 회원국(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포르투갈)은 개선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조정 규모를 측정

81) 2022년 4월 발표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을 참조

표 2-I-10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표

국가	단기 리스크	중기 리스크	장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벨기에	저	고	고
불가리아	저	저(중)	중
체코	저	중	중(고)
덴마크	저	저	저
독일	저	중	중
에스토니아	저	저	저
아일랜드	저	저	중
그리스	저(고)	고	저(중)
스페인	저	고	중(고)
프랑스	저	고	중
크로아티아	저	고	중
이탈리아	저	고	중(고)
사이프러스	저(고)	중	저
라트비아	저	저	저
리투아니아	저	저	저
룩셈부르크	저	저	고
헝가리	저	고(중)	고
몰타	저	중(고)	고
네덜란드	저	중	고(중)
오스트리아	저	중	중
폴란드	저	중(저)	중
포르투갈	저	고	저(중)
루마니아	저	중(고)	중(중)
슬로베니아	저	중(고)	고
슬로바키아	저	고	고
핀란드	저	중	중
스웨덴	저	저	저

주: 1. 괄호 안은 2021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SR)」 분류 결과(이번 보고서에서 달라진 경우)

2. 단기 분석은 S0 지표, 중기 분석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1 지표, 장기 분석은 DSA 분석과 S2 지표로 판단

자료: EU 집행위원회,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2," Institutional Paper 199, 2023. 4., p. 16 (Table 1)

II 국제통화기금(IMF)⁸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I-1 IMF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1. 31.	IMF,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023. 2. 8.	IMF, 식량 및 영양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2023. 3. 6.	IMF 집행위원회, 자금 대출에 대한 연간 및 누적한도 임시 확대
2023. 3. 21.	IMF, 우크라이나와 156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에 대한 직원 수준 합의
2023. 4. 11.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Rocky Recovery)』 발표
2023. 4. 12.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 On the Path to Policy Normalization)』 발표
2023. 4. 13.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보고서 발표
2023. 5. 16.	IMF 집행위원회, 미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3. 5. 25.	IMF, 공동 보조금 플랫폼 출범 공동성명 발표
2023. 5. 31.	IMF 집행위원회, 2024~26회계연도 중기예산 승인
2023. 6. 7.	IMF 집행위원회, 스위스와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3. 6. 16.	IMF 집행위원회, 2023 및 2024회계연도 기금 수익 검토 완료
2023. 6. 22.	IMF,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⁸³⁾ 와 기후 개혁 및 기후행동을 위한 협력 강화

자료: 저자 작성

8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염보라 연구원(ybr119@kipf.re.kr)

83)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 및 제도 발전을 위해 1959년 설립한 금융기관

01 경제 전망 및 평가

- IMF,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3. 1. 31.)⁸⁴⁾
 - (동향) 미국, 유로지역 등 많은 국가의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세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민간소비 및 투자, 재정지원이 주요 요인
 - 억눌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복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에너지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
 - 하지만 2022년 4분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
 - 미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의 고빈도 경제활동 지표들은 대부분 둔화
 -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부동산 투자 위축은 중국의 경제둔화를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성장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 긴축 통화정책이 수요와 인플레이션의 진정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2024년 까지 완전한 물가안정 실현 가능성은 낮음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3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연료 및 비연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감소
 -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가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임금상승률 등 과거 비용 충격의 2차 파급효과 지속
 - 2022년 유럽은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에서 2023년 2.9%로 감소한 후 2024년

8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3. 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01/31/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3>, 검색일자: 2023. 1. 31.

3.1%로 다시 상승할 전망

- 지난 10월 전망 대비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0.2%p 상향 조정
- 2023년 경제성장률 하락은 고물가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요인
- 다만, 2023년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주로 선진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등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2%, 2024년 1.4% 전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9%, 2023년 4.0%, 2024년 4.2% 전망
- (미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0%에서 2023년 1.4%, 2024년 1.0%로 하락하지만 2024년 하반기에 반등할 전망
 - 2022년 내수 회복의 이월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0.4%p 상향 조정
 - 2024년은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0.2%p 하향 조정
- (유로지역) 2023년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한 후 2024년 1.6%로 반등할 전망
 - 2023년 전망치는 유럽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과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한 효과가 2022년 반등의 이월효과, 에너지 가격 인하, 구매력 회복을 위한 현금 지원 등으로 상쇄되어 0.2%p 상향 조정
- (영국) 2023년 경제성장률은 -0.6%로, 높은 에너지 소매가격과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0.9%p 하향 조정
- (일본) 지속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지원 등으로 2023년 1.8% 성장하지만 2024년에는 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9%로 하락할 전망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0%에서 2023년 5.2%로 상승한 뒤 2024년에는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낮는데, 이는 지난 40여년간 최초

- 기업의 역동성 감소와 더디게 진행되는 구조개혁에 따라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세계 물가상승률은 2022년 8.8%에서 2023년 6.6%, 2024년 4.3%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팬데믹 이전(2017~2029년)의 3.5%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 2023년에 유가는 약 16%, 비연료 원자재 가격은 6.3%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세계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여전히 더 크지만, 지난 10월 전망 이후 부정적인 위험은 다소 완화
 - 상방위험으로는 ① 억눌린 수요의 증가와 ② 급격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음
 - 팬데믹 동안 재정지원으로 축적된 과도한 민간 저축은 보복 소비를 부추길 수 있음
 - 다만, 보복 소비는 근원물가지수 상승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어져 추후 더 큰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일부 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 압력 완화는 임금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은 상품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켜 물가 상승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음
 - 세계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하방위험으로는 ① 중국의 회복 지연, ②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③ 부채 부실화, ④ 고물가 지속, ⑤ 갑작스런 금융시장 가격 조정, ⑥ 지정학적 분열 등이 있음
 - 낮은 면적 인구, 불충분한 병원의 수용력, 부동산 시장 위기 심화 및 금융부문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요 감소와 공급망 문제를 통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화는 식량가격 및 식량 불안정으로 유럽 및 저소득 국가들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다음 동절기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 저소득 국가의 약 15%가 부채 부실화(debt distress)⁸⁵⁾ 상태이며, 저소득 국

85)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DSA)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금융 수요와 상환 능력에 따라 개도국의 부채위험성(Risk of debt distress)을 낮음(low), 보통(moderate), 높음

가의 약 45%와 신흥국의 약 25%는 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상태임

-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은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가, 가스, 식품 가격의 상승과 중국의 경제 회복은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시킬 수 있음
 - 물가안정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 여건의 선부른 완화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통화긴축을 야기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초기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킴
- (정책 권고)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달성이 우선순위이며, 금융 및 부채 안정성을 위해 거시건전성 도구 배치 및 부채 구조조정 프레임워크 강화
-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유지) 국가 대부분이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안정 달성이며, 물가 불안정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실질 정책금리를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긴축은 수요를 진정시켜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코로나19 재유행 방지)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대비 조치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 및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 (금융 안정성 보장) 거시건전성 도구를 사용하여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도입된 은행 금융부문과 위험이 축적된 비은행 금융부문과의 데이터 및 관리감독의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상화폐에 관한 공통 기준 도입과 감독 강화가 시급
 - (부채의 지속가능성 회복) 저성장과 고금리로 인해 몇몇 경제에서 공공부채 비율이 증가했는데, 부채 구조조정 및 리프로파일링(reprofiling)⁸⁶⁾을 조기 시행하면 추후 과도한 조정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취약계층 지원) 소득, 인구 통계, 과거 에너지 사용기록 등을 기반으로 적격

(high), 위험(in debt distress)의 4단계로 구분

86) 국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과 같은 약한 강도의 채무조정(soft restructuring)

가구를 선별하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등으로 생계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할 필요

- 생계비 위기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 정부의 지원은 성장에 대한 완충 효과와 에너지 가격 및 근원물가지수 상승 제한에 기여하였지만, 보편적 지원에 대한 비용은 증가
 - 또한 에너지 가격을 통한 에너지 수요 억제 효과를 유지할 필요
 - 보조금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소득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일회성 연대세(solidarity taxes)를 부과하여 지출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함
- (공급 강화) 공급정책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을 높이며, 병목현상과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
- 녹색에너지 기술의 공급망에 대한 투자 장려는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고 녹색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자간 협력 강화) 지정학적 분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통 관심분야의 협력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함
- (팬데믹 억제) 백신과 치료제 유통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백신 기술 개발과 미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설계를 위한 지원도 필수적임
 - (부채 부실화 해결) G20 공동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에 따라 부채 처리를 요청한 국가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며, 공동 프레임워크 자격이 없는 중소득 국가 등 더 많은 경제의 부채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함
 - (국제무역 강화)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면 무역의 분절화 위험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시스템을 복원하여 달성할 수 있음
 - (국제 금융안전망 활용) 글로벌 경제 충격에서 IMF의 선제적인 금융 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 충격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금융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적절함
 - (녹색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구

축하하려면 탄소세 국제 조정 등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취약 국가 지원을 포함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

■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Rocky Recovery)』 발표(2023. 4. 11.)⁸⁷⁾

- (동향)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은 2023년 2.8%, 2024년 3.0%로 안정화되는 것이었으나 최근 금융부문의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잠정적 신호가 희미해짐
 -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감소하였지만 노동시장이 긴축적(tight)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물가 압력은 지속되고 금융 상황은 심리변화에 따라 변동함
 - 은행부문의 취약성 증대 등 정책금리의 빠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해짐에 따라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함
- (전망) 최근에 발생한 금융부문의 불안(stress)이 억제되었다는 가정에서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에서 2023년 2.8%로 감소한 후 천천히 회복하여 5년 후 3.0%에 도달할 것
 - 한국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5%, 2024년 2.4%까지 성장할 전망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3%로 둔화 예상
 - 하지만, 금융부문에 추가적인 불안(stress)이 발생한다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5%, 선진국은 1% 미만으로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22년 8.7%에서 2023년 7.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지수는 하락 속도가 더딜 것
 - 2025년 이전까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으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
- (위험) 2022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 주요 위험 요인들은 강도에 차이는 있으나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응 능력은 이전보

8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Rocky Recovery*, 2023. 4. 1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04/11/world-economic-outlook-april-2023>, 검색일자: 2023. 4. 13.

다 제한적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지정학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방위험은 계속되고 있음
 - 근원물가 상승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긴축이 필요할 수 있음
- 금융부문의 불안(stress)은 심화되고 확산될 수 있으며, 실물경제를 약화시키고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를 조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음
- (정책권고) 국가는 재정의 완충 역할을 재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국제사회는 다가올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력해야 함
 - 국가는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부채 취약성을 줄여 미래의 충격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위험 기반 재정 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함
 - 중장기적 성장,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기후변화 비용 감축 등 보다 탄력적인 세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임
 - 경제가 취약한 국가를 위한 부채 해결 및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 금융 지원이 시급하며 부채 탕감 등 국가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표 2-II-2 2023년 4월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세계 경제	3.4	2.8	3.0	-0.1	-0.1	0.1	-0.2
선진국	2.7	1.3	1.4	0.1	0.0	0.2	-0.2
미국	2.1	1.6	1.1	0.2	0.1	0.6	-0.1
유로지역	3.5	0.8	1.4	0.1	-0.2	0.3	-0.4
독일	1.8	-0.1	1.1	-0.1	-0.3	0.2	-0.4
프랑스	2.6	0.7	1.3	0.0	-0.3	0.0	-0.3
이탈리아	3.7	0.7	0.8	0.1	-0.1	0.9	-0.5
스페인	5.5	1.5	2.0	0.4	-0.4	0.3	-0.6
일본	1.1	1.3	1.0	-0.5	0.1	-0.3	-0.3

표 2-II-2 의 계속

(단위: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영국	4.0	-0.3	1.0	0.3	0.1	-0.6	0.4
캐나다	3.4	1.5	1.5	0.0	0.0	0.0	-0.1
기타선진국 ²⁾	2.3	1.8	2.2	-0.2	-0.2	-0.5	-0.4
한국	2.6	1.5	2.4	-0.2	-0.2	-0.5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0	3.9	4.2	-0.1	0.0	0.2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4.4	5.3	5.1	0.0	-0.1	0.4	-0.1
중국	3.0	5.2	4.5	0.0	0.0	0.8	0.0
인도 ³⁾	6.8	5.9	6.3	-0.2	-0.5	-0.2	-0.5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0.8	1.2	2.5	-0.3	-0.1	0.6	0.0
러시아	-2.1	0.7	1.3	0.4	-0.8	3.0	-0.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4.0	1.6	2.2	-0.2	0.1	-0.1	-0.2
유럽연합	3.7	0.7	1.6	0.0	-0.2	0.0	-0.5
아세안 ⁴⁾	5.5	4.5	4.6	0.2	-0.1	0.0	-0.3
저소득 개도국	5.0	4.7	5.4	-0.2	-0.2	-0.2	-0.1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5.1	2.4	3.5	0.0	0.1	-0.1	-0.2
수입							
선진국	6.6	1.8	25.7	-0.1	0.2	-0.2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5	3.3	5.1	0.2	0.7	0.3	0.4
수출							
선진국	5.2	3.0	3.1	0.4	0.2	0.5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1	1.6	4.3	-0.6	-0.4	-1.3	-0.2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⁵⁾	39.2	-24.1	-5.8	-7.9	1.3	-11.2	0.4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7.4	-2.8	-1.0	3.5	-0.6	3.4	-0.3
소비자물가⁶⁾							
선진국	7.3	4.7	2.6	0.1	0.0	0.3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9.8	8.6	6.5	0.5	1.0	0.5	1.2

주: 1) 2023년 1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OE) 업데이트 및 2022년 10월 WEO 예측에서 반올림한 수치에 기초한 차이

2) G7과 유로지역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 영국 브렌트(Brent)유, 두바이(Dubai)유, 미국 WTI유(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Western Texas 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 평균가격은 96.36달러

6) 2023년과 2024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존 5.3%, 2.9%, 일본 2.7%, 2.2%, 미국 4.5%, 2.3%

1. 실질실효환율은 2023. 2. 15.~2023. 3. 15.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 규모 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 조정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Rocky Recovery*, 2023. 4. 11., 한국 수치는 p. 143 (Table A2)를 참조하여 작성

■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 On the Path to Policy Normalization)』 발표 (2023. 4. 12.)⁸⁸⁾

- (동향) 현재 대부분의 재정정책이 정상화되고 가계와 경제의 회복력으로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계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금융 불안정 등의 위험에 직면
 - 2020년 시작된 팬데믹 관련 특별 지원 조치가 2022년 만료되었으며, 물가 상승과 맞물려 거의 3/4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모두 긴축으로 전환
 - 경제 및 사회구조는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견뎠으나 복합적인 충격들로 인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근절에 대한 글로벌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짐⁸⁹⁾
 - 개발도상국의 재정여력 부족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식량가격은 일부 국가의 환율 하락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부채) 공공재정은 전례없는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축과 막대한 정부 지원 투입으로 변동적
 - 정부의 예외적인 지원 조치로 2020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약 100%까지 급증한 후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재정적자가 점차 감소
 - 2021~2022년 명목 GDP 성장률이 증가하여 2022년 말 공공부채는 GDP의 약 92%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대비 약 8%p 높은 수준
 - 부채와 재정적자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변화와 물가 상승에서 기인하며, 2022년 선진국은 GDP의 3.1%,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2.5%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음
 - 초기 부채 수준이 높았던 국가는 명목 GDP가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1년에 10%p 이상 감소하였으나, 통화가치 하락, 금리 상승, 물가 상승으로 외화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서 부채동학(debt dynamic)이 악화됨

88) IMF, *Fiscal Monitor: On the Path to Policy Normalization*, 2023. 4. 1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3/04/03/fiscal-monitor-april-2023>, 검색일자: 2023. 4. 17.

89)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1은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종식(By 2030, eradicate extreme poverty for all people everywhere)이며 IMF는 세계은행의 전문지식과 조언을 기반으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빈곤감축·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을 조성하여 운영

- 점진적이고 온건한 재정 긴축은 공공부채 비율 상승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은 이미 위기 수준에 도달함
 - 조세개혁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입은 선진국에 비해 GDP의 13.5%p 더 낮은 수준이며, 세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됨
- (재정적자) 중기 재정적자는 향후 몇 년간 팬데믹 이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밀접한 연계 필요
 - 2023년에는 물가를 따라잡기 위한 임금 및 연금 등의 공공지출 증가 압력으로 세계 재정적자가 평균 GDP의 5%가량 증가할 전망
- (정책권고) 정부는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부채 취약성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도전과제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과 금리 인상 완화를 위해 통화 당국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물가 상승이 고착화한다면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물가가 통제되고 재정에 여력이 생기는 경우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도록 허용해야 함
 - 취약한 경제를 위한 부채 해결 및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 금융지원이 시급하며, 탄소세 및 보조금을 포함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

표 2-II-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 정 수 지							
세계 경제	-4.7	-5.0	-4.6	-4.5	-4.3	-4.2	-4.2
선진국	-4.3	-4.4	-4.2	-4.1	-3.9	-3.8	-3.9
캐나다	-0.7	-0.4	-0.4	0.3	-0.2	-0.1	0.0
유로지역	-3.8	-3.7	-2.8	-2.3	-2.1	-2.0	-1.9
프랑스	-4.9	-5.3	-4.8	-4.5	-4.1	-3.9	-4.0
독일	-2.6	-3.7	-1.9	-0.9	-0.7	-0.5	-0.5
이탈리아	-8.0	-3.7	-3.3	-2.3	-1.8	-1.3	-0.7
스페인 ¹⁾	-4.5	-4.5	-3.5	-3.8	-4.0	-4.0	-4.0
일본	-7.8	-6.4	-4.0	-2.9	-3.1	-3.4	-3.7

표 2-II-3 의 계속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영국	-6.3	-5.8	-4.4	-4.2	-3.9	-3.9	-3.7
미국 ²⁾	-5.5	-6.3	-6.8	-7.1	-6.9	-6.6	-6.8
기타선진국	0.2	0.7	0.7	0.7	0.7	0.6	0.6
한국	-0.9	0.0	-0.2	-0.1	-0.1	-0.1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5.2	-5.8	-5.3	-5.0	-4.8	-4.7	-4.7
국 가 채 무							
세계 경제 ³⁾	92.1	93.3	94.6	96.1	97.3	98.4	99.6
선진국	112.5	112.4	113.6	115.0	115.9	116.7	117.8
캐나다 ⁴⁾	106.6	105.1	102.2	99.2	96.2	93.6	91.1
유로지역	90.9	89.8	89.0	87.9	86.9	86.2	85.4
프랑스	111.1	111.4	112.4	112.8	113.3	114.2	115.0
독일	66.5	67.2	66.5	64.4	62.3	60.9	59.6
이탈리아	144.7	140.3	140.0	138.5	136.9	134.8	131.9
스페인	112.0	110.5	108.3	107.9	108.3	108.7	109.3
일본	261.3	258.2	256.3	257.6	259.2	261.5	264.0
영국	102.6	106.3	109.7	112.8	112.7	113.0	113.1
미국 ⁴⁾	121.7	122.2	125.8	129.1	131.8	134.0	136.2
한국	54.3	55.3	55.9	56.6	57.2	57.8	58.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4.6	67.5	39.8	72.2	74.3	76.3	78.1

주: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지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부채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 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한 국민 계정 시스템(S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부채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부채 불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부채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부채를 제외하도록 조정

1. 모든 국가의 평균은 미국달러로 환산한 명목 GDP. 많은 국가의 2022년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IMF, *Fiscal Monitor: On the Path to Policy Normalization*, 2023. 4. 12.

■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보고서 발표(2023. 4. 13.)⁹⁰⁾

-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2023년 세계 경제성장의 70%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

90) IMF, "Asia Likely to See Dynamic Economic Growth, but With Policy Challenges," 2023. 4. 13.,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4/13/asia-likely-to-see-dynamic-economic-growth-but-with-policy-challenges>, 검색일자: 2023. 4. 21.

-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압박으로 세계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국내 수요는 통화 긴축에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4.6% 성장할 전망
 -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기술주기(technology cycle) 침체와 2022년 4분기 실적 부진에 기인함
 - 중국의 경제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 2023년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 상대국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아시아 경제성장률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 일본의 경제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3년 1.3%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위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고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 금융 불안, 부채 및 재정위험, 중기적인 성장 둔화의 위험 요소 상존
 - 세계 원자재 가격과 식량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높음
 - 현재까지 금융 사태에 따른 불안은 아시아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부문의 높은 레버리지 및 취약성에 대한 경계 필요
 - 아시아의 은행은 선진국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및 자산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손실가능성과 갑작스런 예금 인출 및 외부자금 조달라인의 축소로 유동성 압박에 직면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레버리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기업부채는 파산 위험이 있는 기업과 부동산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음
 - 공공부채는 팬데믹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화
 - 중국의 성장이 중기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기적인 성장률은 감소할 전망
- (정책권고) 정책 입안자들은 금융 불안(stress) 요인을 면밀히 주시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를 분리하여 시행해야 함
 - 물가가 목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정책과 정책금리는 긴축상태로 유지하고,

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 필요

- 성장 지원, 취약계층 보호, 부채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또한, 디지털화, 녹색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식량안보 보장 등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이니셔티브 중점 추진

표 2-II-4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실적	추정	전망		2022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1	2022	2023	2024	2023	2024
세계 경제	6.2	3.4	2.9	3.1	0.2	-0.1
선진국	5.4	2.7	1.2	1.4	0.1	-0.2
미국	5.9	2.0	1.4	1.0	0.4	-0.2
유로지역	5.3	3.5	0.7	1.6	0.2	-0.2
독일	2.6	1.9	0.1	1.4	0.4	-0.1
프랑스	6.8	2.6	0.7	1.6	0.0	0.0
이탈리아	6.7	3.9	0.6	0.9	0.8	-0.4
스페인	5.5	5.2	1.1	2.4	-0.1	-0.2
일본	2.1	1.4	1.8	0.9	0.2	-0.4
영국	7.6	4.1	-0.6	0.9	-0.9	0.3
캐나다	5.0	3.5	1.5	1.5	0.0	-0.1
그 외 선진국 ²⁾	5.3	2.8	2.0	2.4	-0.3	-0.2
한국	4.1	2.6	1.7	2.6	-0.3	-0.1
신흥개도국	6.7	3.9	4.0	4.2	0.3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7.4	4.3	5.3	5.2	0.4	0.0
중국	8.4	3.0	5.2	4.5	0.8	0.0
인도 ³⁾	8.7	6.8	6.1	6.8	0.0	0.0
유럽 신흥개도국	6.9	0.7	1.5	2.6	0.9	0.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7.0	3.9	1.8	2.1	0.1	-0.3
중동 및 중앙 아시아	4.5	5.3	3.2	3.7	-0.4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3.8	3.8	4.1	0.1	0.0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⁴⁾	10.4	5.4	2.4	3.4	-0.1	-0.3
선진국	9.4	6.6	2.3	2.7	0.0	-0.4
신흥개도국	12.1	3.4	2.6	4.6	-0.3	0.0
원자재 가격(미국달러)						
오일 ⁵⁾	65.8	39.8	-16.2	-7.1	-3.3	-0.9
비연료	26.4	7.0	-6.3	-0.4	-0.1	0.3
세계 소비자물가⁶⁾	4.7	8.8	6.6	4.3	0.1	0.2
선진국 ⁷⁾	3.1	7.3	4.6	2.6	0.2	0.2
신흥개도국	5.9	9.9	8.1	5.5	0.0	0.2

- 주: 1) 현재 및 2022년 10월 WEO 전망에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2년 10월 WEO 전망 관련 업데이트를 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22~23회계연도는 2022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2023년 5.4%, 2024년 6.8%
 4) 수출 및 수입량(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장률의 단순 평균치
 5) 브렌트유, 두바이유, 서부텍사스 중질유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이며, 2022년 11월 29일 현재 선물시장에 근거하여 가정한 미국달러 기준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23년 81.13달러, 2024년 75.36달러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지역 2023년 5.7%, 2024년 3.3%, 일본 2023년 2.8%, 2024년 2.0%, 미국 2023년 4.0%, 2024년 2.2%
 1. 실질실효환율은 2022. 10. 26.~2022. 11. 23.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2.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3. 1., p. 6 (Table 1), 한국 경제성장률은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uary2023update.ashx>의 Real GDP Growth 항목 참조, 검색일자: 2023. 2. 2.

■ IMF 집행위원회, 2024~26회계연도 중기예산 승인(2023. 5. 31.)⁹¹⁾

- IMF의 2024회계연도(2023. 5.~2024. 4.) 행정예산은 13억 2,800만달러(현재 가격으로 14억 1,100만달러), 자본예산은 1억 800만달러를 승인⁹²⁾
 - 2024년 행정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미사용 예산의 최대한도를 7%에서 6%로 줄여 일시적인 팬데믹 관련 자원 조달을 점진적으로 해제
 - 2024년 자본예산에는 작업 공간 및 현장 현대화, 정보 기술 투자, 클라우드 이용 비용 증가 등이 반영됨
 - 승인된 2025 및 2026회계연도 행정예산은 13억 4,800만달러, 자본예산은 각각 1억 900만달러, 1억 300만달러
- IMF 중기예산의 초점은 글로벌 경제 도전에 적응하고 재정지원을 제공하며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4년 승인 예산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정 규율과 IMF 목표 달성을 지원

91)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FY2024-FY2026 Medium-Term Budget," Press Release, May 31,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5/31/pr23184-imf-executive-board-approves-fy2024-fy2026-medium-term-budget>, 검색일자: 2023. 6. 13.

92) 행정예산은 기관운영의 일상적인 비용으로 직원 급여, 복리후생, 여행 경비, 사무실 임대료, IT 인프라, 통신비용 및 기타 관리 간접비와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자본예산은 건물, 장비 및 기술 인프라와 같은 장기 자산의 취득 및 개선과 관련한 지출을 의미함

- 2024회계연도 예산의 우선순위는 ① 기후변화 관련 긴급 요구사항 1,100만달러, ② 가상화폐 분석 및 성장 480만달러, ③ 거시금융 감독 250만달러, ④ 분쟁 및 취약 국가(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FCS) 지원 780만달러, ⑤ 포용 및 젠더 이슈 지원 50만달러
- IMF는 2024~26회계연도 예산에서 예비잔액 목표(precautionary balance target)를 250억SDR(330억달러)로 설정하였으며, 2029회계연도까지 운영수익이 지출비용보다 높아 중기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⁹³⁾⁹⁴⁾
 - SDR의 이자율 상향 이동과 지속적인 준비금 축적으로 예비잔액 250억SDR 목표는 2024년 말~2025년 초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
- IMF 집행위원회, 2023 및 2024회계연도 기금 수익 검토 완료(2023. 6. 16.)⁹⁵⁾
 - IMF의 수익 연례 검토에 따른 운영수익은 2023회계연도 약 20억SDR(27억달러), 2024회계연도 29억SDR(39억달러)로 예상되며, 기금 지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기금 투자의 손실을 제외한 2023회계연도 순이익은 18억SDR(2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3회계연도 연말 예비잔액은 226억SDR(3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수익은 29억SDR(39억달러)로 예상되나 신규 대출 규모,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압력 등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따라 영향을 받아 조정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2024회계연도에 IMF 대출의 이자율 100bp를 유지하기로 합의

93) 2023회계연도 연말 예비잔액은 226억SDR(300억달러)

94)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105 Million Food Shock Window to Haiti," Press Release, January 23,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1/24/imf-executive-board-approves-us-105-million-food-shock-window-to-haiti>, 검색일자: 2023. 1. 25.

95) IMF,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Review of the Fund's Income Position for FY 2023 and FY 2024," Press Release, June 16,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6/15/pr23216-imf-executive-board-completes-review-of-the-funds-income-position-for-fy-2023-and-fy-2024>, 검색일자: 2023. 6. 26.

02 연례협의

■ IMF 집행위원회, 미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5. 26.)⁹⁶⁾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 및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미국 경제는 2022년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회복력을 입증
 - 실질 가처분소득 및 소비자 수요 증가,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2023년 약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말까지 완만하게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 빠른 고용 증가, 전염병 관련 대처로 2021년 빈곤 감소에 기여
 - 근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를 계속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물가 상승을 목표치까지 완화하려면 2024년까지 연방 금리를 5.25~5.5%로 유지하는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
 -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과거보다 금리 민감도가 낮아져 물가 상승 연 2% 달성을 위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위험을 가짐
 - 공공부채 및 하방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상당한 재정 긴축이 필요하나 사회적·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예상
 - 연간 소득 40만달러 미만에 대한 과세 인상이나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조정 없이 재정 긴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광범위한 소비세 및 탄소세 적용, 지출 축소 등 다양한 세입관리가 필요
 - IMF는 미국이 세계 무역 및 투자 시스템 유지를 위해 모든 주요 무역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연쇄적인 은행 실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형은행 역

96) IMF, "United States of America: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3 Article IV Mission," 2023. 5. 2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5/26/united-states-of-america-staff-concluding-statement-of-the-2023-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3. 5. 30.

시 대형은행과 같은 건전성 요건의 엄격한 적용 필요

- 보호주의 조항은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국제 공급망을 분열시켜 무역 파트너의 보복 조치를 촉발하므로 인센티브 등 차별적 도구가 아닌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를 사용하면서 다자주의와 개방무역의 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공급 측면의 제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에 채택하고, 기후 위기 대응 과제에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자녀 세액 공제,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 저소득 가정 교육보조금 지원, 글로벌 최저한세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여 공급 측면 개혁의 긴급투자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와 탈탄소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

표 2-II-5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2.1	1.7	1.0
실업률(Q4 평균)	3.6	3.8	4.4
물가상승률(CPI inflation, Q4/Q4)	4.8	4.1	2.8
재정수지(Federal fiscal balance, GDP 대비 %)	-5.5	-5.6	-5.7
채무(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GDP 대비 %)	97.0	96.6	98.4
10년물 국채 수익률	3.8	4.0	3.7
경상수지(GDP 대비 %)	-3.7	-2.8	-2.5

자료: IMF, "United States of America: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3 Article IV Mission," 2023. 5. 26.

■ IMF 집행위원회, 스위스와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6. 7.)⁹⁷⁾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 및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2023년 스위스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기 침체, 긴축 통화정책, 낮은 수요 등으로 인

97)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Switzerland," Press Release, June 7,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6/06/pr23200-switzerland-imf-executive-board-concludes-2023-article-iv-consultation-with-switzerland>, 검색일자: 2023. 6. 21.

해 둔화하겠지만, 2024년부터 중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타이트한 노동시장, 임금 상승 압력, 높은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으로 인해 2023년 스위스의 물가는 스위스국립은행의 물가안정범위 기준인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UBS-CS 합병⁹⁸)은 일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22년 중개무역 및 서비스무역수지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2023년부터 중기적인 평균치로 회귀 예상
- 스위스는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표적 지원을 실시하고 일반 예산 및 재정준칙의 허용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지출 요구 사항 해결 필요
- 물가 상승과 함께 세계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지리경제적 분열, 기후문제 등이 스위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구조개혁, 노동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 조치 등 신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효과가 지속될 시 긴축기조 유지를 권고

표 2-II-6 스위스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2.1	0.8	1.8
실업률(Q4 평균)	2.2	2.3	2.4
물가상승률(CPI inflation, Q4/Q4)	2.8	2.5	1.9
재정수지(Fiscal balance, GDP 대비 %)	1.0	0.1	0.2
채무(Public debt, GDP 대비 %)	41.5	39.9	38.3
경상수지(GDP 대비 %)	10.1	7.8	8.0

주: 2023, 2024는 추정치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Switzerland," 2023. 6. 7.

98) 스위스 및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하에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은행이 파산 위기의 CS(Credit Suisse)를 인수합병하였으며, 스위스 정부가 154조 3천억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인수 자산에서의 잠재적 손실 중 12조 7천억원에 대한 보증 제공

03 금융지원

- IMF 집행이사회, 몰도바 공화국에 대한 확장차관제도(ECF) 및 확대신용제도(EFF)에 대한 2차 검토 완료(2023. 1. 9.)⁹⁹⁾
 - IMF 집행이사회는 몰도바 공화국에 대한 40개월 확장차관제도(ECF¹⁰⁰⁾) 및 확대 신용제도(EFF¹⁰¹⁾) 약정에 따른 2차 검토를 완료하여 즉각적인 지출을 허용¹⁰²⁾
 - 혼합 ECF/EFF 약정에 따라 몰도바의 즉시 지출 가능 총액은 기존 1억 8,595만 SDR(약 2억 4,200만 달러)에서 2억 660만 SDR(약 2억 7,500만 달러)로 확대됨
 - 몰도바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금리를 적시에 증기 인플레이션 목표(2%)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

- IMF 집행이사회, 우간다에 대한 확장차관제도(ECF)에 따른 2차 및 3차 검토 완료 (2023. 1. 17.)¹⁰³⁾
 - IMF 집행이사회는 우간다에 ECF 약정에 따른 2·3차 검토를 통해 1억 8,050만 SDR(약 2억 4,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출가능하도록 허용¹⁰⁴⁾

99)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Second Reviews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and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s for the Republic of Moldova," Press Release, January 9,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1/09/pr2301-imf-executive-board-concludes-second-reviews-under-ecf-and-eff-for-moldova>, 검색일자: 2023. 1. 20.

100) Extended Credit Facility(ECF): 소득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장기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양허성 용자제도 중 하나로, 국제수지 문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소득국가에 유연한 조건의 중기 용자를 제공

101) Extended Fund Facility(EFF):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중기적 국제수지 악화에 직면한 가맹국에 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쿼터의 연간 145%로 제한되며(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쿼터의 245%로 일시적 증가) EFF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4~10년에 걸쳐 반년마다 균등분할 상환

102) 약정은 2021년 12월에 승인되었으며, 총 5억 9,426만SDR에 대한 총지출을 늘리기 위해 확대

103)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Reviews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Arrangement for Uganda," Press Release, January 17,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1/17/pr2304-uganda-imf-executive-board-concludes-combined-second-and-third-reviews-under-ecf-arrangement>, 검색일자: 2023. 1. 20.

104) 2021년 6월 28일 이사회는 쿼터(IMF 회원국의 출자금)의 200% 수준인 총 7억 2200만SDR(약 10억 미국달러)

- 2차 및 3차 통합 검토 완료로 1억 8,050만SDR(약 2억 4,000만달러)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지출이 가능해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4억 6300만SDR(약 6억 2,500만달러)로 확대됨
 - 우간다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보다 포괄적인 민간 주도의 장기 성장을 촉진하여 거시경제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함
 - 우간다의 경제는 2022~2023회계연도에 5.3% 성장하겠지만 물가 역시 8.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예정
- IMF 집행이사회, 아이티에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¹⁰⁵⁾ 지급 승인(2023. 1. 23.)
- IMF 집행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위기와 영양실조가 더욱 가중화된 아이티에 식량위기 대응 채널(Food Shock Window)을 통한 8,190만SDR(1억 500만달러)의 지급을 승인
 -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아이티는 인플레이션과 식량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식량위기 대응 채널의 긴급지원을 통해 식량지원, 현금 및 현물이전, 학비 면제 및 기타조치를 취할 예정
 -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예산은 식량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할 예정
 - 스태프모니터링프로그램(SMP)¹⁰⁶⁾에 따라 통화 및 금융시스템 등 필요한 거시경제 및 구조적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안전장치를 마련
 - 당국은 비상대응과 관련한 지출을 신중하게 사용, 추적, 기록 및 게시해야 하며, 재정감사관을 통해 제공된 비상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내부 지출 감사를 수행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중앙은행은 금융부문에 적절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변동성을 완화

규모 ECF 약정을 승인

105) 특별인출권(SDR)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국제 준비자산이자 통화로,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이루어짐

106) Staff Monitored Program(SMP): IMF 회원국과 회원국의 경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역량 부족, 높은 국내 불안정 및 자금 조달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IMF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사용

하기 위해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

- IMF, 우크라이나와 156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에 대한 직원 수준 합의(2023. 3. 21.)¹⁰⁷⁾
 - IMF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새로운 48개월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 약정과 이에 수반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해 직원 수준의 합의에 도달¹⁰⁸⁾
 - 쿼터의 577%인 116억 SDR(약 156억미국달러) 규모의 EFF 약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가격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에서는 12~18개월 동안 PMB(Program Monitoring with Board Involvement)를 기반으로 ① 세입 강화 ② 통화자금 조달 ③ 은행부문의 건전성 평가를 통해 장기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 거버넌스 및 반부패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해 개혁을 실시
 - 2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목표를 포함해 거시경제 안정화, 공공재정 관리 강화 및 공공투자 관리개혁 도입, 회복 및 조기재건 지원으로 환율 및 물가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 이전 정책 프레임워크로 회복 예상(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은 -3~1% 사이로 예측)

107) "IMF and Ukrainian Authorities Reach Staff Level Agreement on a US\$15.6 Billion Extended Fund Facility(EFF) Arrangement," 2023. 3. 2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21/pr2388-ukraine-imf-and-authorities-reach-staff-level-agreement-eff-arrangement>, 검색일자: 2023. 3. 24.

108) 회원국과 IMF 직원 수준의 합의(staff level agreement) 이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04 기타

- IMF, 식량 및 영양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2023. 2. 8.)¹⁰⁹⁾
 - IMF 사무총장은 FAO(식량농업기구), WB(세계은행), WFP(세계식량계획),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전 세계적인 식량 및 영양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 2022~23년도 전 세계 식량 공급은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료경제성¹¹⁰⁾ 역시 2007~08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식량위기는 더욱 악화
 - 코로나19, 기후변화, 금융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식품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9개국 3억 4,900만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처해있음
 - 식량 및 영양 안보 위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① 분쟁지역 기아구제, ② 무역 촉진, 시장 기능 개선 및 민간부문 역할 강화, ③ 신중한 타깃팅과 효율성을 통한 유해 보조금 개편(repurpose) 및 개혁(reform) 제시
 - 국제기구들은 분쟁지역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공유 및 위기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
 - IMF는 빈곤감축·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양허성 금융을 제공하고, 식량위기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아이티, 기니 등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9개국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
 - 2022년 WFP는 140억달러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1억 4천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72개국에 30억달러의 현금지원, 80개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
 - FAO는 10억달러를 투자하여 53개국의 농촌지역 5천만명 이상을 지원하고,

109) WB, "Joint Statement by the Head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Group, World Food Programme,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on the Global Food Security Crisis," 2023. 2. 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2/08/pr2335-joint-statement-by-the-fad-imf-wbg-wfp-and-wto-on-food-and-nutrition-security-crisis>, 검색일자: 2023. 2. 13.

110) 비료경제성은 비료 투입 가격에 대한 식량 산출의 비율

WB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300억달러 규모의 식품 및 영양 안보 패키지를 제공

- 국가는 공공재 공급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는 저소득 국가의 식품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식량 및 비료 가용성 개선을 위한 무역을 원활화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의 무역금융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함
 - 국가는 농업생산성을 지속 향상할 수 있게 공공재 공급을 강화하고 스마트한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FAO의 국제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함
- 효율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행정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개혁하고, 형평성,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보조금의 형태이며 그 중 절반은 대상의 별도 지정이 없어 비효율적이고 비용 부담이 가중됨

■ IMF 집행위원회, 자금 대출에 대한 연간 및 누적한도 임시 확대(2023. 3. 6.)¹¹¹⁾

- IMF 집행위원회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원국 지원을 위해 일반재원계정(General Resources Account: GRA)의 연간 및 누적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
 - IMF 대출 프로그램은 GRA의 연간 및 누적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승인으로 향후 12개월간 GRA의 연간한도는 쿼터의 145 → 200%, 누적한도는 쿼터의 435 → 600%로 증가
 -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 아래 회원국들의 긴급한 자금 조달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도 인상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2개월 이후까지 임시 승인이 연장될 수 있음

111) IMF, "IMF Executive Board Makes Temporary Modifications to the Annual and Cumulative Access Limits for Fund Lending," Press Release, March 6,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07/imf-executive-board-modifications-to-the-annual-and-cumulative-access-limits-fund-lending>, 검색일자: 2023. 3. 15.

- 빈곤감축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한도 인상을 논의 중임

■ IMF 집행위원회, 기금재정보증 정책에 대한 변경 승인(2023. 3. 17.)¹¹²⁾

-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충격 및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위 크레딧 트랑슈(Upper Credit Tranche: UCT)¹¹³⁾ 협정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기금재정보증 정책을 변경
 - 기존에는 특별용자제도인 신속지원금융(Rapid Credit Facility: RCF) 및 신속 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를 통해 지원하였으나, 기금재정보증 정책의 변경 승인으로 일반용자제도인 UCT 협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짐
 - 첫 번째 변경사항은 조건부 2단계 요소(초기 보증과 불확실성 완화 시 제공하는 선불보증)로 부채 탕감에 대한 사전 보증을 허용하는 것이며,
 - 두 번째는 공식 양자 채권자/기부자의 상환능력보증(capacity to repay assurances)을 기존 긴급자금 조달에서 UCT 협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대출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특정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IMF가 회원국의 기업위험 및 UCT 협정의 수반 위험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조기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함
 - IMF 집행위원회 이사들은 예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여부에 관한 평가는 회원 전체에 걸쳐 균일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IMF 블로그, “Asia Must Monitor Rising Corporate Debt Amid Higher Interest Rates” 기사(2023. 5. 24.)¹¹⁴⁾

112)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Changes to the Fund’s Financing Assurances Policy in the Context of Fund Upper Credit Tranche Financing Under Exceptionally High Uncertainty,” Press Release, March 17,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17/pr2378-imf-executive-board-concludes-changes-to-the-funds-financing-assurances-policy>, 검색일자: 2023. 3. 22.

113) 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회원국의 대출 자금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시스템인 크레딧 트랑슈(Credit Tranche)를 통해 신용을 인출할 수 있음. 쿼터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인출을 통상적으로 상위 크레딧 트랑슈(Upper Credit Tranche: UCT)라고 지칭하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일정 조건 아래 추가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제도

114) IMF, “Asia Must Monitor Rising Corporate Debt Amid Higher Interest Rates,” 2023. 5. 24.,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5/24/asia-must-monitor-rising-corporate-debt-amid-hig>

-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함에 따라 차입비용 상승으로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이 가중
 - 수십 년간 증가한 차입비용은 금리 상승과 시장변동성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특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급격히 증가시킨 산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차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기업수익을 초과하여 기업의 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금융긴축이 장기화하면 채무불이행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짐
 - 아시아 지역의 기업부채는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ICR)이 낮은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¹¹⁵⁾
 - 중국, 인도, 태국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기업채가 집중되어 있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채 비율: 세계 16.8%, 아시아 13.95%, 한국 22.1%, 일본 15.8%, 중국 25.8%, 인도 31.1%, 태국 28.03%
-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높은 불확실성 및 부채 부담, 부채 상환 비용 증가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은 금융안정과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 대처를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
 - 기업 부분의 취약성 해결을 위해 관련 거시건전성 도구의 재조정 필요하며,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과 유동성 공급 및 대출 등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됨

■ IMF, 공동 보조금 플랫폼 출범 공동성명 발표(2023. 5. 25.)¹¹⁶⁾

- IMF는 OECD, WB, WTO와 함께 보조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보조금 플랫폼(Joint Subsidy Platform: JSP)¹¹⁷⁾의 출범을 발표

her-interest-rates, 검색일자: 2023. 5. 26.

115) 기업채 이자보상배율에 따른 국가별 취약기업 비중으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1~4, 4 이상 등 총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1 미만 또는 1에 가까울수록 기업수익이 부채의 이자 상환액 총당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116) IM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unch Platform to Promote Access to Subsidy Information," 2023. 5. 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5/25/PR23179-Trade-Joint-Subsidy-Platform>, 검색일자: 2023. 5. 26.

- 플랫폼은 농어업, 산업, 화석연료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보조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위 국제기구에서 각각 관리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위함임
 - 공동성명에서 보조금은 투명하고 국가 간 약속을 존중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고, 향후 플랫폼을 지속 개발 및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국제 비상사태와 기후 위기로 증가한 보조금은 일시적이라도 적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공동 보조금 플랫폼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및 설계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IMF,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와 기후개혁 및 기후행동을 위한 협력 강화(2023. 6. 22.)¹¹⁸⁾
- IMF는 IDB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해 2050년까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LAC)에서 탈탄소화 경제 구축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
 - IMF는 IDB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LAC 지역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수준의 기후 금융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
 - 2022년 10월부터 국가의 거시적 위험을 줄이고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IMF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도(Resiliency and Sustainability Facility: RSF)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
 - IMF와 IDB는 정책개혁, 역량 개발, 녹색기금 구성 등을 위한 설계를 포함하여 혼합 금융상품, 녹색채권과 같은 맞춤형 자금 조달 방식 평가 등을 통해 기후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
 - RSF가 지원하는 개혁과 IDB 기금 및 보증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탐색하고, 민간 기후자금 동원 및 조달 확장 등 민간부문의 자원 이용을 촉진

117) Joint Subsidy Platform 홈페이지: <https://www.subsidydata.org/en/subsidydata/home>

118) IMF, "IDB and IMF to Deepen Ties to Catalyze Climate Reforms and Private Sector Resources for Climate Action," Press Release, June 22, 20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6/21/pr23226-idb-imf-deepen-ties-catalyze-climate-reforms-private-sector-resources-climate-action>, 검색일자: 2023. 6. 27.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¹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Ⅲ-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1. 10.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3. 1. 19.	2022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3. 2. 8.	2022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3. 2. 22.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3. 3. 17.	2023년 중간 경제 전망 발표
2023. 4. 13.	2022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3. 5. 11.	2022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3. 5. 22.	『2023년 OECD 차입 전망 보고서』(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2023. 5. 23.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3. 6. 7.	세계 경제 전망 2023년 6월 발표

1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은 선임연구원(jekim@kipf.re.kr)

0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 2023년 중간 경제 전망 발표(2023. 3. 17.)¹²⁰⁾

- (경제성장률 현황)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연초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3.2%로 나타남
- (경제성장률 전망) 2023년에는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식량 및 에너지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재개방(reopening)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추세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과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2.9%로, 추세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통화긴축에 따른 수요 압력 완화로 2023년 1.5%, 2024년 0.9%로 둔화될 전망
 - 유로지역은 고유가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023년 0.8%에서 2024년에는 1.5%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재개방의 영향으로 2023년 5.3%, 2024년에는 4.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물가 현황 및 전망)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 인상, 금융시장 부문 불안,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물가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4년 하반기까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8.1%에서 2024년 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G20 국가 중 선진국의 평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3년에는 4.0%, 2024년에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취약(fragile)하며 상·하방 위험 간의 균형은 다소 개선

120) OECD(2023),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3: A Fragile Recovery*,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2/issue-2_d14d49eb-en, 검색일자: 2023. 3. 20.

되었지만 여전히 하방위험이 우세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식량안보 및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높은 부채와 가파른 금리 인상, 금융기관 불안,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위험 요인이 큼
- 국제 가격 상승 압력도 다시 높아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정책 권고) 통화긴축, 취약계층을 선별한 재정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을 권고
 - (통화정책)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과 유로지역 등 대다수 국가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재정정책) 높은 에너지 및 식량 가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정책 권고
 - 점진적으로 보편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물가 시기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과 공급제약 완화를 위해 기업 역동성 제고, 교역장벽 완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를 권고
- (국제 협력)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극복, 저소득 국가의 부채 상환 지원,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배출 제로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필요

표 2-III-2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 조정)

(단위: %)

	2022	2023		2024	
		중간 경제 전망	11월 전망과 차	중간 경제 전망	11월 전망과 차
세계	3.2	2.6	0.4	2.9	0.2
G20 ¹⁾	3.1	2.6	0.4	2.9	0.2
호주	3.6	1.8	-0.1	1.5	-0.1
캐나다	3.4	1.1	0.1	1.4	0.1
유로존	3.5	0.8	0.3	1.5	0.1
독일	1.9	0.3	0.6	1.7	0.2
프랑스	2.6	0.7	0.1	1.3	0.1
이탈리아	3.8	0.6	0.4	1.0	0
스페인	5.5	1.7	0.4	1.7	0
일본	1.0	1.4	-0.4	1.1	0.2
한국	2.6	1.6	-0.2	2.3	0.4
멕시코	3.0	1.8	0.2	2.1	0
튀르키예	5.6	2.8	-0.2	3.8	0.4
영국	4.0	-0.2	0.2	0.9	0.7
미국	2.1	1.5	1.0	0.9	-0.1
아르헨티나	5.6	0.1	-0.4	1.8	0
브라질	3.0	1.0	-0.2	1.1	-0.3
중국	3.0	5.3	0.7	4.9	0.8
인도 ²⁾	6.9	5.9	0.2	7.1	0.2
인도네시아	5.3	4.7	0	5.1	0
러시아	-2.1	-2.5	3.1	-0.5	-0.3
사우디아라비아	8.7	2.6	-2.4	3.7	0.2
남아프리카공화국	2.0	0.6	-0.5	0.9	-0.7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OECD(2023),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3: A Fragile Recovery*, p. 4 (Table 1)

■ 세계 경제 전망 2023년 6월 발표(2023. 6. 7.)¹²¹⁾¹²²⁾

- (동향) 세계 경제는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있음
 -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둔화, 기업 및 소비자 심리 회복과 함께 중국의 재개방 등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음
 -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높은 금리가 부동산 및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총수요 회복을 늦추는 등 개선 흐름이 여전히 취약(fragile)함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3%에서 2023년 2.7%로 둔화 후 2024년에는 2.9%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초반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중국 전망의 개선에 힘입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부문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재 수요가 부진한 상태임
 - (미국)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내수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주택 및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둔화 예상
 - (유로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가격 상승, 긴축정책 등으로 2023년에는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일본) 통화정책 완화,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한국) 고금리 및 높은 부채로 인해 내수 성장이 억제되어 2022년 2.6%에서 2023년 1.5%로 둔화한 후 2024년 2.1%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중국) 2023년에는 코로나19 봉쇄조치 종료 효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겠으나 이후 봉쇄 관련 반등 요소가 사라지며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 무역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지정학적 긴장,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2022년 5%로 상대적으로 견고하였으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위축(2023년 1.6%)했다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2024년 3.8%)

121) OECD, "Global economic outlook improving, albeit to a low growth recovery," <https://www.oecd.org/newsroom/global-economic-outlook-improving-albeit-to-a-low-growth-recovery.htm>, 검색일자: 2023. 6. 7.

122) OECD(2023),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1*,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조 바람

- (위험) 경제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긴축 통화정책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통화 긴축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에 스트레스 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
 - 긴축으로 타이트해진 금융 여건 속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만기 리스크, 채무상환 부담에 따른 신용손실, 신흥시장국의 경우 국채 스프레드 확대, 해외 자본 조달 축소, 자본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 에너지 위기 역시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며 중국의 재개방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정책권고) 통화 긴축기조 유지, 재정건전성 확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양성평등 정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혁 권고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고령화, 기후변화 및 디지털화 등 향후 재정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재정지원 권고
 -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역동성 제고, 교역장벽 완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육아휴직 장려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책 및 양성평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 및 생산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표 2-III-3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 조정)

(단위: %)

	2013-2019 평균	2021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Q4	Q4	Q4
실질 GDP 성장률								
세계	3.4	6.1	3.3	2.7	2.9	2.3	2.9	3.1
G20	3.5	6.5	3.1	2.8	2.9	2.1	3.0	3.0
OECD	2.2	5.7	3.0	1.4	1.4	1.4	1.3	1.6
미국	2.4	5.9	2.1	1.6	1.0	0.9	1.0	1.3
유로존	1.9	5.2	3.5	0.9	1.5	1.8	1.1	1.5
일본	0.8	2.2	1.0	1.3	1.1	0.4	1.7	0.8
한국	0.9	4.1	2.6	1.5	2.1			
비 OECD	4.4	6.5	3.7	3.9	4.1	3.1	4.3	4.3
중국	6.8	8.4	3.0	5.4	5.1	3.5	6.2	4.6
인도 ¹⁾	6.8	9.1	7.2	6.0	7.0			
브라질	-0.4	5.3	3.0	1.7	1.2			
OECD 실업률	6.5	6.2	5.0	5.0	5.2	4.9	5.2	5.2
물가상승률								
G20	3.0	3.8	7.8	6.1	4.7	7.8	5.2	4.0
OECD	1.6	3.8	9.3	6.9	4.3	9.5	5.5	3.8
미국	1.4	4.0	6.2	3.9	2.6	5.7	3.2	2.3
유로존 ²⁾	0.9	2.6	8.4	5.8	3.2	10.0	3.5	2.9
일본 ³⁾	0.9	-0.2	2.5	2.8	2.0	3.9	2.0	1.9
한국 ⁴⁾	1.2	2.5	5.1	3.4	2.6	5.3	2.9	2.3
OECD 재정수지 ⁵⁾	-3.2	-7.5	-3.6	-3.6	-3.1			
세계 무역성장률	3.4	10.4	5.0	1.6	3.8	0.7	3.4	3.9

주: 1) 회계연도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2) 조화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3)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4) OECD,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와 "OECD Economic Outlook No 113 (Edition 2023/1)"을 사용하여 계산

5) GDP 대비 비중

자료: 1. OECD(2023),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1*, p. 14 (Table 1.1)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13(Edition 2023/1)," 검색일자: 2023. 6. 28.

02 주요 경제지표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3. 1. 10.)¹²³⁾

-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OECD 회원국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10.3%로 2022년 10월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2022년 8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
- OECD 회원국 평균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 28.1%에 이어 11월에 23.9%로 하락하여,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
 -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감소했으며 체코,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만 증가
 - 하지만 38개 OECD 회원국 중 34개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10%를 넘어서고, 14개국은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 2022년 11월 OECD 회원국 평균 식품 가격 상승률은 16.1% 수준을 유지한 반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7.5%로 소폭 하락
 - G7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0월의 7.8%에서 11월에는 7.4%로 하락
 - G7 국가 중 독일, 영국, 미국만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였고, 나머지 국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유로지역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 상승률이 2022년 10월 10.6%에서 11월 10.1%로,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 G20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10월 9.5%에서 11월 9.0%로 하락

123) OECD, "OECD inflation declines to 10.3% in November 2022 as energy prices slow in most countries," Statistics News Release, 2023. 1. 10., <https://www.oecd.org/newsroom/consumer-prices-oecd-updated-10-january-2023.htm>, 검색일자: 2023. 1. 11.

표 2-III-4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2020	2021	2021	2022					
	평균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 품목									
OECD 전체	1.4	4.0	5.9	10.3	10.2	10.3	10.5	10.7	10.3
G7	0.9	3.5	5.4	7.9	7.6	7.5	7.7	7.8	7.4
유럽연합(HIPC)	0.7	2.9	5.2	9.6	9.8	10.1	10.9	11.5	11.1
유로지역(HIPC)	0.3	2.6	4.9	8.6	8.9	9.1	9.9	10.6	10.1
G20	2.7	4.3	5.9	9.2	9.2	9.2	9.5	9.5	9.0
캐나다	0.7	3.4	4.7	8.1	7.6	7.0	6.9	6.9	6.8
프랑스	0.5	1.6	2.8	5.8	6.1	5.9	5.6	6.2	6.2
독일	0.5	3.1	5.2	7.6	7.5	7.9	10.0	10.4	10.0
이탈리아	-0.1	1.9	3.7	8.0	7.9	8.4	8.9	11.8	11.8
일본	0.0	-0.3	0.6	2.4	2.6	3.0	3.0	3.7	3.8
영국	1.0	2.5	4.6	8.2	8.8	8.6	8.8	9.6	9.3
미국	1.2	4.7	6.8	9.1	8.5	8.3	8.2	7.7	7.1
식량									
OECD 전체	3.4	3.5	6.7	13.3	14.5	15.0	15.3	16.1	16.1
G7	2.7	2.5	5.3	10.6	11.7	12.2	12.3	12.7	12.6
유럽연합(HIPC)	2.5	1.6	4.3	11.6	12.8	14.0	15.4	17.3	17.9
유로지역(HIPC)	2.0	1.3	3.5	10.4	11.5	12.4	13.8	15.5	16.0
에너지									
OECD 전체	-6.3	15.5	25.7	40.8	35.2	30.1	28.9	28.1	23.9
G7	-7.4	16.3	25.7	39.5	33.1	26.8	24.5	25.3	21.6
유럽연합(HIPC)	-6.1	12.6	24.6	41.1	38.3	37.5	39.4	38.7	33.3
유로지역(HIPC)	-6.8	13.0	25.9	42.0	39.6	38.6	40.7	41.5	34.9
식량 및 에너지 제외									
OECD 전체	1.7	2.9	4.6	6.5	6.8	7.2	7.6	7.6	7.5
G7	1.3	2.6	3.9	4.7	4.8	5.1	5.4	5.3	5.1
유럽연합(HIPC)	1.1	1.8	3.0	4.6	4.9	5.2	5.7	6.0	6.0
유로지역(HIPC)	0.7	1.5	2.6	3.7	4.0	4.3	4.8	5.0	5.0

자료: OECD(2023), "OECD inflation declines to 10.3% in November 2022 as energy prices slow in most countries," p. 4 <Table 1> 재구성

■ 2022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3. 1. 19.)¹²⁴⁾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3분기에 각각 69.4%와

124)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third quarter of 2022," Statistics News Release, 2023. 1. 19., <https://www.oecd.org/newsroom/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january-2023.htm>, 검색일자: 2023. 1. 20.

73.2%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를 집계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2022년 3분기 OECD 회원국 고용률은 여성이 62.4%로 소폭 상승한 반면, 남성의 경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76.6%로 감소
- OECD 회원국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우 최고 수준인 65.9%, 남성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2년 11월에 4.9%를 유지했는데, 이는 다섯 달 연속 같은 수준이며 데이터를 집계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여성 실업률은 5.1%로 소폭 감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4.7%로 안정세를 보임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2022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6.0%와 6.5%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표 2-III-5 OECD 회원국의 고용률¹⁾(15~64세, 계절 조정)

(단위: %)

	2019		2020	2021	2021			2022		
		Q4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68.8	68.9	66.0	67.7	67.4	68.1	68.6	69.0	69.4	69.4
G7	72.1	72.2	69.6	71.1	70.7	71.4	71.9	72.2	72.5	72.6
유럽연합	68.1	68.0	67.1	68.4	68.2	68.8	69.2	69.7	70.1	..
유로지역	67.9	67.9	66.7	68.0	67.7	68.5	68.9	69.3	69.7	69.5
호주	74.3	74.4	72.7	74.4	75.2	74.8	75.3	76.6	77.2	77.5
캐나다	74.2	74.1	70.0	73.2	72.5	73.8	74.7	75.1	75.4	75.0
프랑스	66.4	66.5	66.1	67.3	67.1	67.6	67.7	67.9	68.1	68.4
독일 ²⁾	75.7	75.8	76.2	75.8	75.3	67.6	67.7	67.9	68.1	68.4
이탈리아	59.1	59.0	57.5	58.3	57.9	58.8	59.4	59.5	60.2	60.1
일본	78.1	78.0	77.7	77.9	77.8	78.0	78.0	78.1	78.5	78.6
한국	66.8	67.0	65.9	66.5	66.4	66.8	67.2	68.0	68.5	68.7
스페인	63.3	63.3	61.0	62.7	62.5	63.4	63.9	64.1	64.7	64.7
영국	76.2	76.5	75.4	75.1	75.0	75.3	75.5	75.6	75.5	75.5
미국	71.4	71.7	67.1	69.4	68.9	69.8	70.5	71.0	71.3	71.4

주: 1)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64세 인구 수}} \times 100$

2) 독일의 경우 LFS를 포함한 새로운 독일 통합 가구조사 시스템 도입 문제로 2020년 1~4분기 데이터는 LFS micro-data가 아닌 추가 기타 통합 가구 조사 데이터임

자료: OECD(2023),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third quarter of 2022," p. 4 <Table 1> 재구성

표 2-III-6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 조정)

(단위: %)

	2019		2020	2021	2021			2022		
	Q4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72.8	72.9	71.2	72.3	72.2	72.5	72.7	72.9	73.2	73.2
G7	75.3	75.5	74.4	75.1	75.0	75.3	75.4	75.5	75.7	75.7
유럽연합	73.2	73.0	72.3	73.6	73.7	73.9	74.2	74.4	74.7	..
유로지역	73.6	73.4	72.5	73.7	73.7	74.2	74.2	74.4	74.8	74.6
호주	78.5	78.6	77.8	79.1	79.4	78.6	79.2	79.9	80.3	80.4
캐나다	78.7	78.7	77.4	79.1	78.8	79.5	79.6	79.5	79.4	79.2
프랑스	72.6	72.5	72.0	73.0	73.1	73.3	73.2	73.3	73.7	73.7
독일 ¹⁾	78.1	78.2	77.3	78.7	78.3	79.1	79.4	79.5	79.8	79.8
이탈리아	65.7	65.4	63.6	64.5	64.4	65.1	65.3	65.0	65.7	65.6
일본	79.7	80.0	79.7	80.3	80.3	80.3	80.3	80.4	80.7	80.8
한국	69.5	69.6	68.6	69.0	69.1	69.1	69.5	70.1	70.6	70.7
스페인	73.8	73.8	72.2	73.7	73.9	74.3	73.9	74.0	74.2	74.1
영국	79.3	79.5	79.1	78.7	78.8	78.8	78.7	78.6	78.6	78.4
미국	74.1	74.4	73.0	73.4	73.3	73.5	73.7	73.9	74.0	74.1

주: 독일의 경우 LFS를 포함한 새로운 독일 통합 가구조사시스템 도입 문제로 2020년 1~4분기 데이터는 LFS micro-data가 아닌 추가 기타 통합 가구 조사 데이터임

자료: OECD(2023),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third quarter of 2022," p. 5 <Table 2> 재구성

표 2-III-7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 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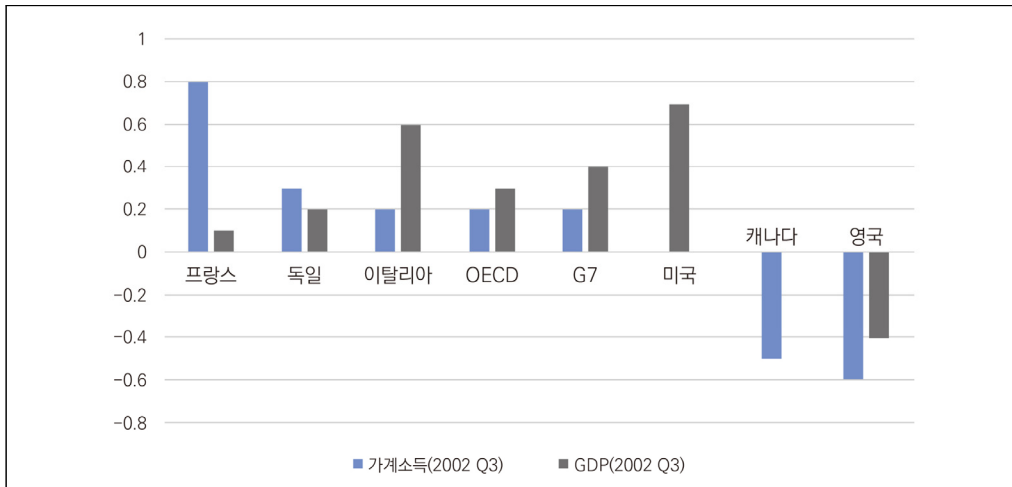
	2020	2021	2021			2022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7.2	6.2	5.2	5.0	4.9	4.9	4.9	4.9
G7	6.5	5.2	4.2	4.1	4.0	4.0	4.0	4.0
유럽연합	7.2	7.1	6.2	6.1	6.1	6.1	6.0	6.0
유로지역	8.0	7.7	6.9	6.7	6.6	6.6	6.5	6.5
호주	6.5	5.1	4.0	3.8	3.5	3.6	3.4	3.4
캐나다	9.6	7.5	5.8	5.1	5.2	5.2	5.2	5.1
프랑스	8.0	7.9	7.3	7.6	7.2	7.1	7.1	7.0
독일	3.6	3.6	3.1	3.0	3.0	3.0	3.0	3.0
이탈리아	9.3	9.6	8.5	8.1	8.0	7.9	7.9	7.8
일본	2.8	2.8	2.7	2.6	2.6	2.6	2.6	2.5
한국	3.9	3.7	3.0	2.8	2.7	2.8	2.8	2.9
스페인	15.5	14.8	13.3	12.7	12.7	12.7	12.5	12.4
영국	4.6	4.5	3.7	3.8	3.6	3.7
미국	8.1	5.4	3.8	3.6	3.6	3.5	3.7	3.6

자료: OECD(2023),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third quarter of 2022," p. 6 <Table 3> 재구성

■ 2022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3. 2. 8.)¹²⁵⁾

- 2022년 3분기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0.2%로 나타남
-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21개 국가 중 9개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12개국은 감소
 - 오스트리아는 정부의 환경세 개혁과 생활비 지원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율(10.1%)을 기록
 - G7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0.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캐나다와 영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감소했고, 미국에서는 포함세를 나타냄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영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명목 기준 9.0% 증가하였으나 높은 소비자물가가 가계소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감소

그림 2-III-1 1인당 실질 가계소득 및 1인당 실질 GDP(전년 동기 대비, 계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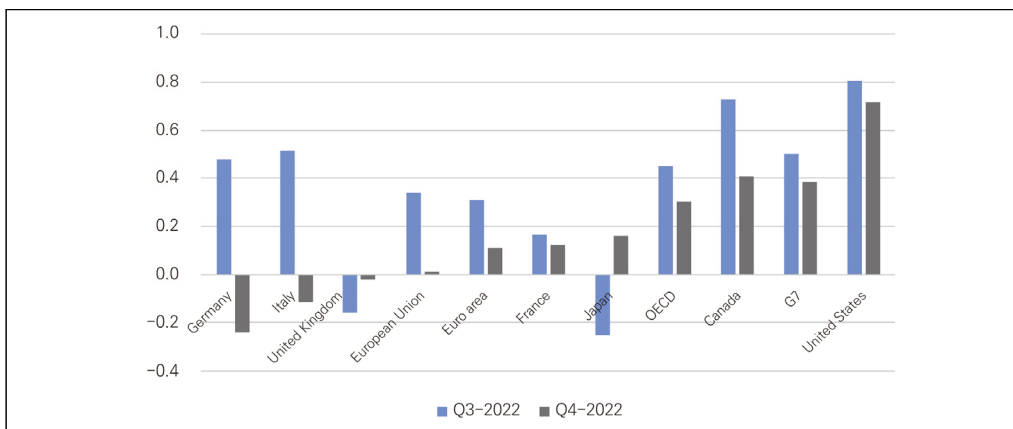
주: 미국의 가계소득과 캐나다의 GDP는 2022년 3분기에 0.0%의 성장을 기록하며 변동이 없었음
 자료: OECD.Stat, "Household Dashboard(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다운로드 일자: 2023. 2. 17.

125)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Third quarter 2022, OECD," 2023. 2. 8., <https://www.oecd.org/newsroom/growth-and-economic-well-being-third-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3. 2. 9.

■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3. 2. 22.)¹²⁶⁾

- 2022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잠정)은 0.3%로 여전히 부진
 -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2년 내내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약세를 보임
 - G7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도 2022년 4분기 0.4%를 기록하며 2022년 3분기의 0.5%에 비해 소폭 둔화
 - 한국, 독일,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역성장으로 돌아섰고(각각 -0.4%, -0.2%, -0.1%), 캐나다 0.4%, 프랑스 0.1%, 미국 0.7%로 둔화됨
 - 반면, 일본은 2022년 3분기 -0.3%로 역성장했지만, 4분기에는 0.2% 성장했으며, 영국은 전 분기 -0.2% 역성장한 데 이어 포함세를 보임
- 2022년 OECD 회원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9%로 팬데믹의 영향에서 경제가 회복 중이던 2021년(5.7%)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함
 - G7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2022년에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4.0%)을 기록했고, 이탈리아(3.8%)와 캐나다(3.6%)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은 성장률(1.1%)을 기록

그림 2-III-2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계절 조정)



주: 2022년 4분기 영국과 유럽연합 성장률은 0.0%

자료: OECD.Stat, "Quarterly National Account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QNA>, 다운로드 일자: 2023.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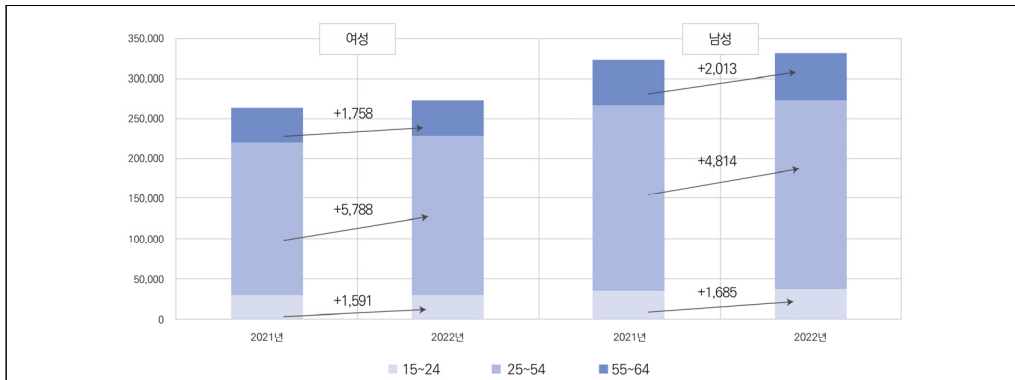
126) OECD, "GDP Growth - Fourth quarter of 2022, OECD,"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fourth-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3. 2. 22.

■ 2022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3. 4. 13.)¹²⁷⁾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4분기에 각각 69.6%와 73.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를 집계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절반에 이르는 OECD 회원국이 두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2년 4분기 고용률은 유로지역과 유럽연합(EU)에서 70%에 가까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는 1.0%p 이상 감소
 - 2022년 고용자 수는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그림 2-III-3 참조) 청장년 근로자(25~54세)와 고령 근로자(55~64세)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2년 4분기 OECD 회원국 여성의 고용률은 6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성의 고용률은 76.7%로 최고 수준에서 3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임
 -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여성의 경우 최고 수준인 66%에 달했고, 남성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2023년 2월 실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 4.8%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
 -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은 최저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OECD 회원국가의 70% 이상이 안정적이거나 감소추세를 보임

그림 2-III-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고용 변화

(단위: 천명)



자료: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OECD - Updated: April 2023," 2023. 4. 13., p. 2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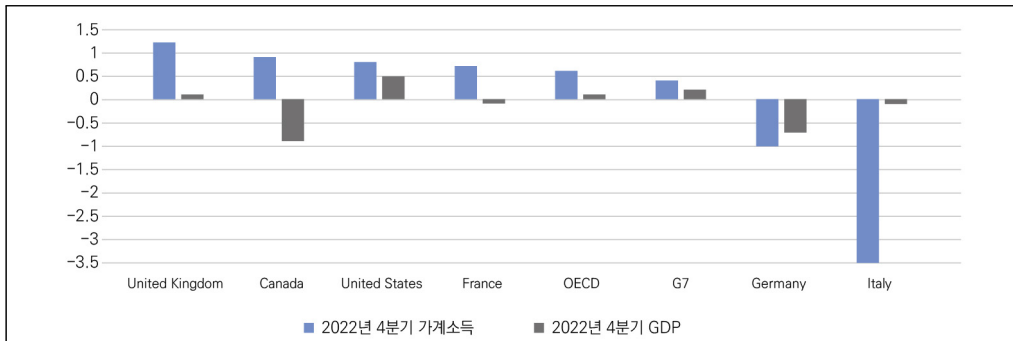
127)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OECD - Updated: April 2023," <https://www.oecd.org/newsroom/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april-2023.htm>, 검색일자: 2023. 4. 24.

■ 2022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3. 5. 11.)¹²⁸⁾

- OECD 회원국의 2022년 4분기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인 0.1%를 상회한 0.6%로 나타남
 - 21개국 중 8개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13개국은 감소
 -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G7 국가¹²⁹⁾ 중 영국이 임금 인상과 정부의 에너지 소비 지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1.2%)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높은 물가상승률로 이어지며 감소함
- 2022년 연간 기준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3분기와 4분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3.8% 감소하여 데이터 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임
 - G7 국가의 연간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3.9%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국가는 미국(-6.0%)으로, 2021년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이 원인
 - 기타 OECD 회원국 중 칠레의 2022년 1인당 가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15.1%)했는데, 이는 2021년에 허용된 코로나19 관련 연금 조기 인출 중단이 원인
 - 팬데믹 관련 지원 프로그램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2년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그림 2-III-4 2022년 4분기 G7 국가 실질 가계소득 및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 분기 대비 %)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일본의 경우 2022년 분기별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G7 국가에서 제외됨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2, OECD," 2023. 5. 10., p. 1 [Figure 1]

128)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2, OECD," 2023. 5. 10., <https://www.oecd.org/newsroom/growth-and-economic-well-being-fourth-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3.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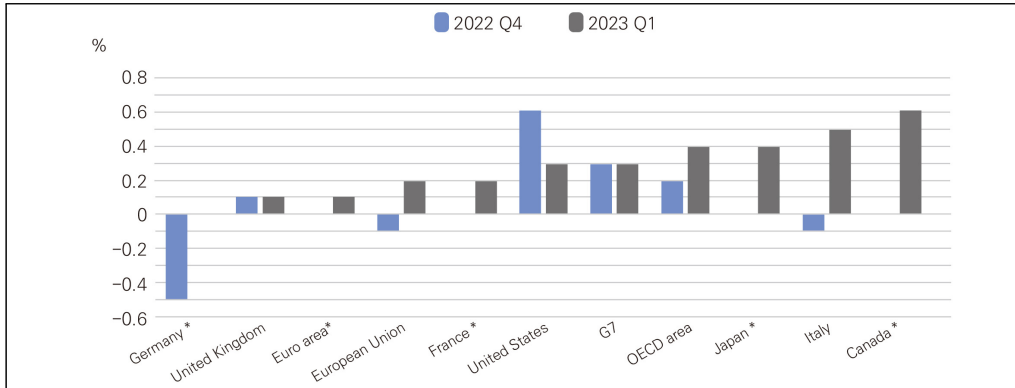
129) 분기별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으로 비교

■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2. 5. 23.)¹³⁰⁾

- 2023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잠정) 전 분기 대비 0.4% 증가
 - 전 분기 0.2% 성장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 1분기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음
- G7 국가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0.3%를 유지
 - 캐나다, 일본 및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6%, 0.4%, 0.2%로 전 분기 모두 0% 성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회복
 -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도 2022년 4분기 0.1% 감소에 이어 0.5%로 증가했고, 독일은 2022년 4분기 0.5% 감소에 이어 0.0%를 기록
 -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6%에서 0.3%로 둔화되었고, 영국은 0.1%로 변동이 없었음
- 2023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2019년 4분기) 수준보다 4.5% 증가
 - G7 국가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3.2% 초과했으나 영국과 독일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기타 회원국 중에서는 스페인과 체코를 제외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 2023년 1분기 실질 GDP가 2019년 4분기 수준을 상회

그림 2-III-5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계절 조정)

(단위: 전 분기 대비 %)



주: 2023년 1분기 독일 성장률 및 2022년 4분기 캐나다, 프랑스, 일본, 유로지역 성장률은 0.0%

자료: OECD.Stat, "Quarterly National Account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QNA>, 다운로드 일자: 2023. 5. 24.

130) OECD, "GDP Growth - First quarter of 2023, OECD,"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first-quarter-2023-oecd.htm>, 검색일자: 2023. 5. 24.

03 재정 및 기타 이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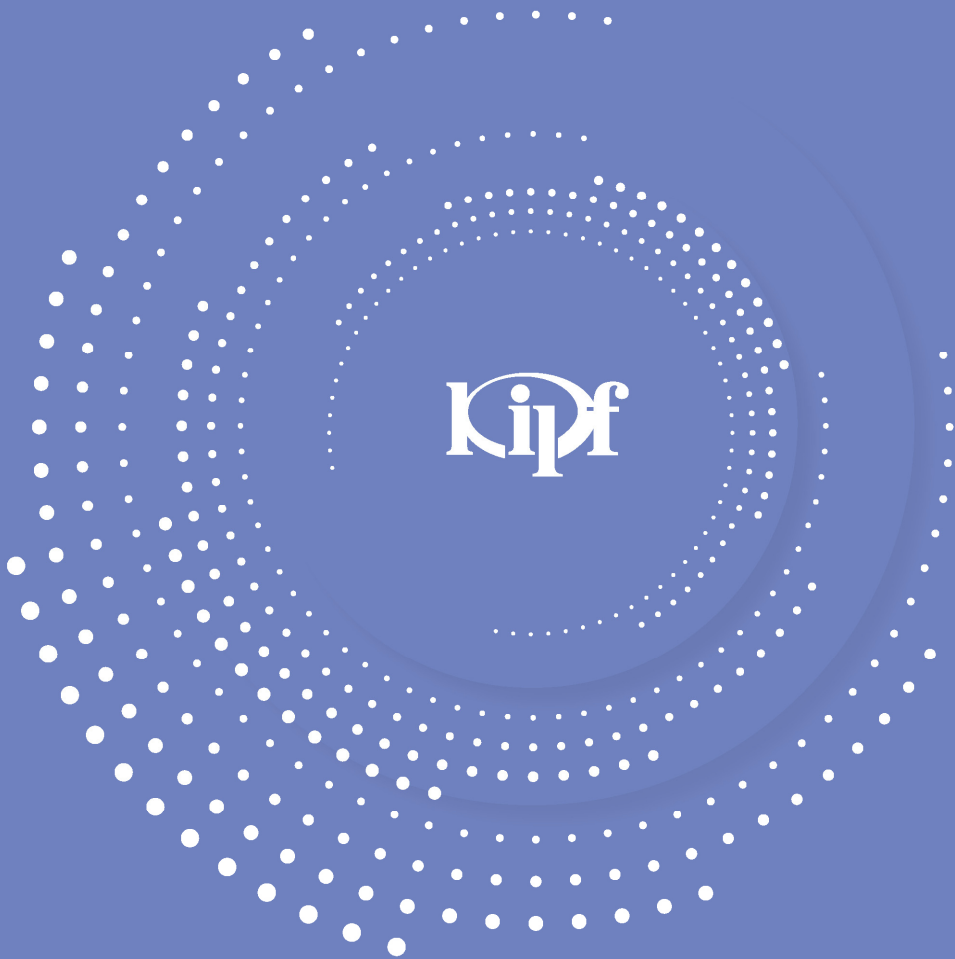
- 『2023년 OECD 차입 전망 보고서(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발표 (2023. 5. 22.)¹³¹⁾¹³²⁾
 - (현황) OECD 회원국의 국가 차입 수요 및 부채 수준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팬데믹에 대한 재정 대응으로 인해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 발행이 이루어져, OECD 회원국의 총 국가 차입 수요는 15조 4,00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총차입 수준은 2021년과 2022년에 약간 완화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6% 증가한 12조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순차입 필요액은 2020년 7조 4,000억달러에서 2022년 2조달러로 팬데믹 당시 최고치에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2조 3,000억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의 시장성 부채는 명목상 증가세를 이어가 2023년 약 52조달러로 2019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위험) 국채시장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통화정책의 변화, 지정학적 위험,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OECD 국가가 높은 부채 수준과 재융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존하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정책금리는 꾸준한 속도로 크게 올랐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일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에는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¹³³⁾

131) OECD,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2023. 5. 22., <https://www.oecd.org/finance/oecd-sovereign-borrowing-outlook.htm>, 검색일자: 2023. 5. 23.

132) OECD(2023),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중 'Executive summary'를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본 보고서를 참조 바람

133) 신규 차입비용은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21년 평균 1.4%에서 2022년 3.3%로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대비 2022년에 부채의 47%를 조건부로 차환할 경우 이자지급액이 GDP의 0.9%에서 1.6%로 80% 증가할 것으로 계산됨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긴축 통화정책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신용상태 악화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권고) 채무관리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국채 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발행자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ESG 라벨이 부착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 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개발하고 발행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구축해야 함
 - 시장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상품, 관련 분류체계 및 영향 보고를 표준화하여 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채시장의 잠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채무관리당국(Debt Management Office)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중앙은행과의 효과적인 소통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권장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I. 미국

II. 일본

III. 독일

IV. 프랑스

V. 영국

I 미국¹³⁴⁾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회계연도: 2022년 10월 1일~ 2023년 9월 30일

표 3-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 12. 16.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2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장기 재정 전망 발표
2023. 1. 10.	미국 교육부, 학자금 대출 탕감 및 상환 완화 정책안 현황 발표
2023. 1. 13.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Janet L. Yellen), 국가채무 상한선 도달에 디폴트 우려 및 의회에 대책 촉구
2023. 1. 1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2022년 12월) 발표
2023. 1. 26.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2년 4분기 GDP(속보) 발표
2023. 1.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2 페이고(PAYGO) 최종 보고서 발표
2023. 1. 30.	미국 백악관, 보건 관련 장소에서의 백신 의무화 철회 법안(H.R. 497; Freedom for Health Care Workers Act)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표
2023. 1. 31.	미국 의회 하원, 팬데믹 종료 법안(H.R. 382; Pandemic is Over Act) 가결
2023. 2. 1.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2023. 2. 3.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1월 고용통계 발표
2023. 2. 14.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3. 2. 15.	의회예산처(CBO), 2023~2033 예산·경제 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보고서 발표
2023. 2. 16.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2022회계연도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발표
2023. 3. 9.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4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2023. 3. 8.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베이지북(2023. 1. 9.~2023. 2. 26.) 발표
2023. 3. 12.	미국 재무부 포함 기관 합동,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 파산에 대한 대책 공동 발표
2023. 3. 22.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1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ymgoo@kipf.re.kr)·이재원 연구원(jaiwon@kipf.re.kr) 작성

표 3-I-1 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23. 3. 31.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이사회, 2023년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및 공적건강보험(medicare) 연간보고서 발표
2023. 4. 10.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회계연도 상반기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3. 4. 12.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3. 4. 19.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베이지북(2023. 2. 27.~2023. 4. 10.) 발표
2023. 4. 27.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도 1분기 GDP(속보) 발표
2023. 5. 3.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2023. 5. 12.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2033 예산 수정 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3 to 2033) 보고서 발표
2023. 5. 31.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2023. 4. 11.~2023. 5. 22.) 발표
2023. 6. 3.	미국 의회,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 가결: 채무 한도 유예 적용
2023. 6. 14.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5~5.25% 유지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2024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4회계연도¹³⁵⁾ 대통령 예산안 발표(2023. 3. 9.)¹³⁶⁾, ¹³⁷⁾, ¹³⁸⁾

- (예산 목표 및 주요 정책) 크게 6개로 구분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 (가계비용 절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감면, 적정가격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확대 등

135) 2023년 10월~2024년 9월

136)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4," Press Release, March 9, 2023,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4/>, 검색일자: 2023. 3. 27.

137)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Cuts the Deficit by Nearly \$3 Trillion Over 10 Years," 2023. 3. 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cuts-the-deficit-by-nearly-3-trillion-over-10-years/>, 검색일자: 2023. 3. 27.

1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주요국 예산안 - 미국 FY2024 대통령 예산안」, 2023. 3.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

-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ARP))」(2021년 3월 11일 입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아동수당(CTC¹³⁹) 재확대
-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메디케이드를 통한 자택 및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 서비스 개선
-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입 개선 방안 마련 계획 등
 - 메디케어의 경우,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고 메디케어 제도(medicare drug) 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는 등 기금 수입 강화
 - 사회보장 수입 개선을 위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고, 사회보장국의 인력 및 정보기술에 예산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근로자의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¹⁴⁰)에 3억 7,500만달러를 배정하여 제조 관련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연구기관 발족
 -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주 가족 및 유급 병가 도입
-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창출 및 지구 온난화 대응 등
 - 전국적인 청정에너지 분야 인력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저소득 가구 주거지의 단열재 보강 등)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2005년 기준) 50~52% 감축 목표를 제시¹⁴¹)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보호국(EPA)에 6,440만달러를 배정하여 온실효과 기체에 대한 단계적 중단 작업을 지속 지원하고, 에너지부(DOE)에 12억달러를 배정하여 탈탄소화 작업 등 진행
- (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국내 범죄 예방, 중국 대응 및 인도·태평양 지역 역지 전략 등

139) Child Tax Credit

140) NIST: 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41)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Biden's Budget Lowers Energy Costs, Combats the Climate Crisis, and Advances Environmental Justice," Press Release, March 9, 2023,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president-bidens-budget-lowers-energy-costs-combats-the-climate-crisis-and-advances-environmental-justice/>, 검색일자: 2023. 3. 28.

- 총기 폭력 및 기타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연방 법 집행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 178억달러 배정
- 미국의 유일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도전 과제 대응
- 20억달러 규모 예산으로 국제적인 물적 기반시설 자금을 확보하고, 2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위협 세력 대응 강화
- (재정건전화) 향후 10년 동안 대형 법인(제약 회사, 정유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감축 및 고소득층의 세금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절감 목표
 - 대형 법인(제약·정유사 등)에 대한 보조금 폐지
 - 상위 0.01%의 고소득층(billionaires)을 대상으로 25%의 최저한세 적용
 -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
- (경제 전망) 2023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전망 기간 동안 가장 낮은 0.6%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1.5%로 반등하며, 2025년 이후에는 2%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2023년 실업률은 4.3%로 전년 대비 0.6%p 상승, 2024년에는 4.6%로 고점에 이른 후 2025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물가) 2021년에 4.7%를 기록한 물가지수(CPI-U)는 2022년에 8.1%까지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4.3%, 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전망

표 3-1-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3
	실적	전망					
GDP(명목)	23,315	25,409	26,544	27,523	28,750	...	40,157
경제성장률 ¹⁾	5.9	1.8	0.6	1.5	2.3	...	2.2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 ¹⁾	4.7	8.1	4.3	2.4	2.3	...	2.3
실업률 ²⁾	5.4	3.7	4.3	4.6	4.4	...	3.8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연평균

자료: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2023. 3. 9., p. 167 <Table S-9>

- (재정 전망)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조 8,460억 달러(GDP 대비 6.8%)로 전망
 - (수입)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9%(2,340억달러) 증가한 5조 360억달러(GDP 대비 18.5%)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입은 3년 만인 2025회계연도에 재차 19%를 넘어서며, 이후 남은 전망 기간(2026회계연도~) 동안 19%대를 유지하다가 2032회계연도에 20%에 도달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주요 수입 항목의 GDP 비중 순위는 개인소득세(8.8%), 사회보험세 등(6.4%), 법인세(2.4%), 관세(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0%(5,110억달러)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2024회계연도의 총 재량지출 예산권한(Budget Authority)¹⁴²⁾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조 6,955억달러(GDP 대비 7.0%)로 계획
 - 2024회계연도의 의무지출(순이자지출* 7,890억달러 제외)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4조 1,940억달러(GDP 대비 15.4%)로 전망
 - * 순이자지출은 향후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7.2%)
 - GDP 대비 재정지출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1회계연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회계연도에 반등한 후 다시 감소세 전망
 - 2024회계연도 예산 기능별(총 20개 기능)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 지출, 소득보장(income security), 국방, 보건(의료), 메디케어, 순이자 순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 2024회계연도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7,83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GDP 대비 수치도 증가)
 -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정책을 바탕으로 연방채무는 2023년에 기준선(OMB baseline) 대비 7%p 하락한 110% 전망

142) base funding 기준

표 3-I-3 미국 재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2	2033	2024~2033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3,421	4,047	4,897	4,802	5,036	5,419	5,773	...	7,601	7,991	58,264
지출	6,550	6,822	6,273	6,372	6,883	7,091	7,294	...	9,472	10,026	82,242
재정적자	3,129	2,775	1,376	1,569	1,846	1,671	1,521	...	1,871	2,035	17,054
연방채무 ¹⁾	21,017	22,284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	41,553	43,619	-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6.3	18.1	19.6	18.2	18.5	19.1	19.5	...	20.0	20.1	19.6
지출	31.2	30.5	25.1	24.2	25.3	24.9	24.6	...	24.9	25.2	24.8
재정적자	14.9	12.4	5.5	6.0	6.8	5.9	5.1	...	4.9	5.1	5.2
연방채무 ¹⁾	100.1	99.6	97.0	98.4	102.0	104.1	105.2	...	109.1	109.8	-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2023. 3. 9., p. 135 <Table S-1>

2) 예산·경제 전망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2033 예산·경제 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보고서¹⁴³⁾ 발표(2023. 2. 15.)¹⁴⁴⁾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5%(350억달러) 증가한 약 1.4조 달러(GDP 대비 5.4%) 전망¹⁴⁵⁾
 - GDP 대비 재정적자는 향후 2년간(2024~2025년) 증가한 후 2027년까지 감소 양상을 보이며, 이후 남은 전망 기간(~203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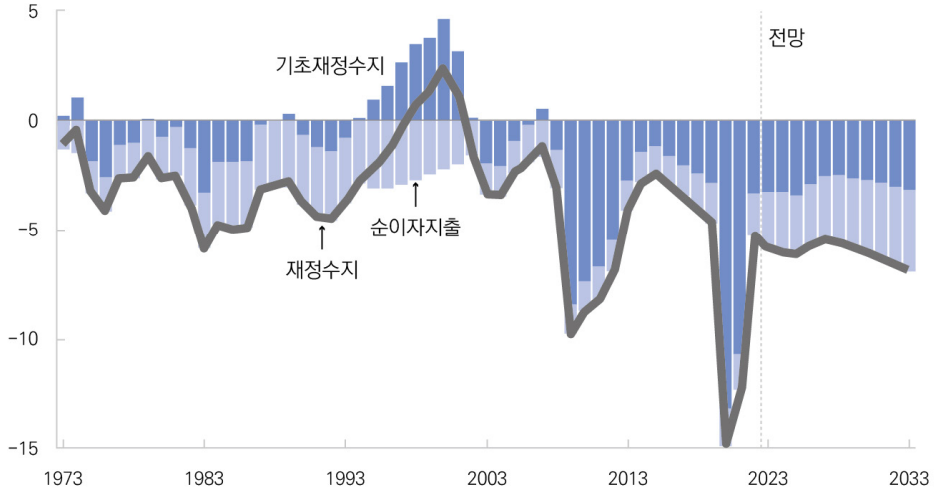
143)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1974년에 제정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P.L. 93-344)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3. 1. 9.까지 입법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제 전망은 2022. 12. 6.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144)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https://www.cbo.gov/publication/58848>, 검색일자: 2023. 2. 17.

145) 향후 10년(2024~2033)간 GDP 대비 연평균 누적 재정적자는 6.1%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3.6%)

그림 3-I-1 미국 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순이자지출

(단위: %, 회계연도)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p. 8 [Figure 1-1]

- (수입) 2023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대비 1.7%(840억달러) 감소한 4.8조달러 (GDP 대비 18.3%) 전망¹⁴⁶⁾
 - 수입 규모는 올해는 감소하지만,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GDP 대비 수치는 감소(~2025년) → 증가(2026~2029년) 변화를 보이다가 남은 전망 기간 동안 18.1% 유지 전망
 - 2025년 이후의 연방수입의 증가세는 「2017 세금감면법」(P.L. 115-97)의 많은 조항들이 2025년에 만료되면서 기존체계로 복귀함에 따른 증가가 주요 요인
- (지출) 2023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0.8%(510억달러) 감소한 6.2조 달러 전망(GDP 대비 23.7%)¹⁴⁷⁾
 - 연방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발발 이래 2개 연도(2022년, 2023년) 감소를 제외 하고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146)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수입 연평균은 약 18.0%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17.4%)

147)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지출 연평균은 약 24.1%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21.0%)

- GDP 대비를 기준으로 한 지출 수치는 2021년을 기점으로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25년부터는 다시 지속 증가(2029년 제외)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
- 올해(2023년) 의무지출은 일시적으로 확대된 아동수당(CTC¹⁴⁸) 만료(2021년)로 인한 예산 감소와 함께 주·지방정부의 재정지원자금¹⁴⁹ 및 고등교육 예산 감소¹⁵⁰ 등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대비 7.1% 감소한 3.8조달러(GDP 대비 14.6%) 전망
- (채무)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¹⁵¹ 수치는 2020년에 100% 도달 이후 2021년부터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2023년) 반등 전망
 - 연방채무는 2023년에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2024년에는 다시 100% 재진입 전망

148) Child Tax Credit

149) Coronavirus Relief Fund 예산: ('22) 1,060억달러 → ('23) 60억달러

150) 고등교육 예산(Higher Education)은 ('22) 4,900억달러 → ('23) 380억달러로 크게 감소할 전망. 2022회계연도 학자금 대출 관련 지출은 2022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안)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증가

151)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표 3-I-4 CBO 미국 예산 전망 비교(2023년 2월 vs 2022년 5월)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월	3,421	4,047	4,896	4,812	4,838	4,966	5,310	5,655	...	6,838	7,098	
	5월				4,836	4,890	4,924	4,982	5,280	...	6,402	6,662	
지출	2월	6,550	6,822	6,272	6,221	6,415	6,719	7,026	7,361	...	9,317	9,948	
	5월				5,872	5,874	5,980	6,300	6,643	...	8,469	8,915	
재정 적자	2월	3,129	2,775	1,375	1,410	1,576	1,752	1,716	1,706	...	2,480	2,851	
	5월				1,036	984	1,056	1,318	1,364	...	2,067	2,253	
연방채무 ¹⁾	2월	21,017	22,284	24,257	25,716	27,370	29,214	30,927	32,645	...	43,482	46,445	
	5월				24,173	25,193	26,217	27,561	28,925	...	37,949	40,213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2월	16.3	18.1	19.6	18.3	17.7	17.4	17.7	18.1	...	18.1	18.1	
	5월				19.6	18.6	18.0	17.6	18.0	...	18.1	18.2	
지출	2월	31.2	30.5	25.1	23.7	23.5	23.5	23.5	23.6	...	24.6	25.3	
	5월				23.8	22.4	21.9	22.3	22.7	...	24.0	24.3	
재정 적자	2월	14.9	12.4	5.5	5.4	5.8	6.1	5.7	5.5	...	6.5	7.3	
	5월				4.2	3.8	3.9	4.7	4.7	...	5.9	6.1	
연방채무 ¹⁾	2월	100.1	99.6	97.0	98.0	100.4	102.1	103.3	104.5	...	114.8	118.2	
	5월				97.9	96.0	96.1	97.5	98.8	...	107.5	109.6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p. 6 (Table 1-1)

- (경제) 2023년 실질성장률은 2022년 2.1%에서 1.8%p 하락한 0.3%로 경기 정체(stagnate)와 함께 실업률 증가 및 물가상승률 하락 전망
 - (물가) 2022년 물가상승률(CPI)은 8.0%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준의 장기적 목표(2%)를 상회하다가 2026년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물가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식품·에너지 물가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인난(tight labor market) 및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반영되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
 - (노동시장) 2023년의 고용시장은 실질 생산량의 둔화가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고용인구(payload employment) 정체 및 실업률의 증가로 악화 전망
 - 2023년 실업률은 2022년 대비 1.1%p 상승한 4.7%에서 2023년에는 4.9%로 더 악화되나, 이후 2025년에 소폭 하락(4.7%)하며 장기적으로는 4.5%로 전망
 - (이자율) 정책금리(현재* 4.50~4.75%)는 2022년 4분기 3.6%에서 2023년 말에 5.1%로 상승하며 2023년 3분기까지 유지될 전망
 - * CBO 보고서상의 현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1일 개최 FOMC에서 결정한 정책금리 목표 범위(4.25~4.50% → 4.50~4.75%)가 미반영된 수치

표 3-I-5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2	2023	2024	2025	2026~2027	2028~2033
	실적	전망				
GDP(명목)	25,016	26,238	27,266	28,610	-	-
실질성장률 ¹⁾	2.1	0.3	1.8	2.7	2.4	1.8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 ¹⁾	8.0	4.8	3.0	2.2	2.1	2.3
실업률 ²⁾	3.6	4.7	4.9	4.7	4.5	4.5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연평균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p. 6 (Table 1-1); p. 35 (Tabl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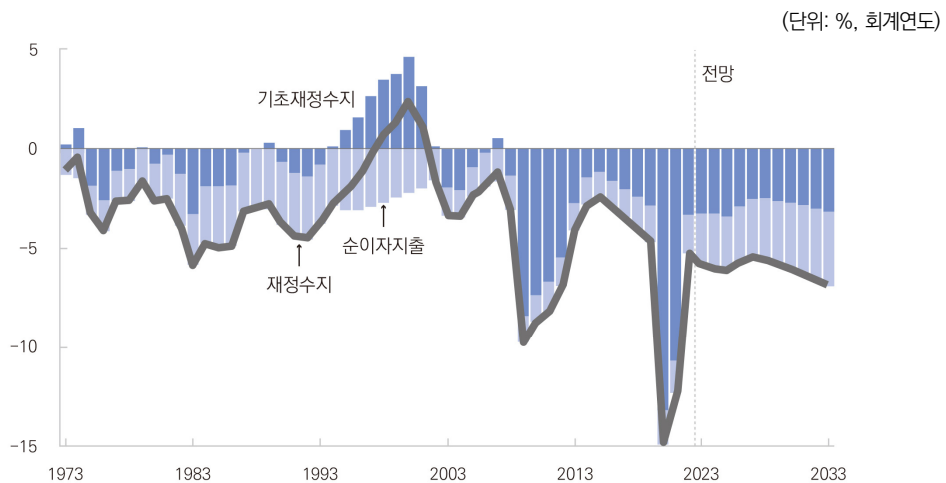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2033 예산 수정 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3 to 2033) 보고서¹⁵²⁾ 발표(2023. 5. 12.)¹⁵³⁾

152)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1974년에 제정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P.L. 93-344)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3. 3. 30.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153) CBO, "An Update to the The Budget Outlook: 2023 to 2033," 2023. 5. 12., <https://www.cbo.gov/publication/59096>, 검색일자: 2023. 8. 9.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올해(2023년) 2월 전망 대비 1,300억달러 상향 조정된 1조 5천억달러(GDP 대비 5.8%) 전망¹⁵⁴⁾
 - * 2월 전망 대비 증가한 재정적자는 바이든 정부에서 계획한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정 및 3월에 발생한 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조치에 주로 기인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년간(2023~2024년) 5%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4 회계연도에 6.2%까지 상승하며, 장기적으로는 6.1% 전망

그림 3-I-2 미국 재정적자·기초재정수지·순이자지출 추이 및 전망



자료: CBO, "An Update to the The Budget Outlook: 2023 to 2033," 2023. 5. 12., p. 5 [Figure 1]

- (수입) 2023회계연도 연방수입은 2월 전망 대비 30억달러 상향 조정된 4조 8,150억 달러 전망(GDP 대비 18.4%) 전망
 - 향후 10년(2024~2033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수입 비중은 18.0%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17.4%)
 - 2025년 이후의 연방수입의 증가세는 「2017 세금감면법」(P.L. 115-97)의 많은 조항들이 2025년에 만료되면서 기존체제로 복귀함에 따른 증가가 주요 요인¹⁵⁵⁾
- (지출) 2023회계연도 연방지출은 2월 전망 대비 1,330억달러 증가한 6조 3,540억 달러 전망(GDP 대비 24.2%)

154) 향후 10년(2024~2033) GDP 대비 연평균 누적 재정적자는 6.1% 전망(지난 50년간(1973~2022) 연평균은 3.6%)

155) 수입 전망은 2월 전망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2월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해당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3월호에서 발췌

- 향후 10년간 연평균 GDP 대비 지출 비중은 약 24.1%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21.0%)
- 연방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발발 이래 2022년 감소를 제외하고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21년을 기점으로 2024년까지 감소세 전망
- 총 연방지출은 2023~2033회계연도 동안 3조 5천억달러(연평균 4.5%) 증가하며, 증가분의 50% 이상이 사회보장 지출 및 메디케어 지출로 구성
- (채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채무¹⁵⁶⁾는 2월 전망 대비 510억달러 상향 조정된 25조 7,670억달러(GDP 대비 98.2%)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는 2033년에 118.9%로 상승하면서 2023년 대비 20%p 확대 전망

표 3-I-6 CBO 미국 예산 전망 비교(2월 vs 5월)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월	3,421	4,047	4,897	4,812	4,838	4,966	5,310	5,655	...	6,838	7,098
	5월				4,815	4,848	4,974	5,317	5,658	...	6,841	7,102
지출	2월	6,550	6,822	6,273	6,221	6,415	6,719	7,026	7,361	...	9,317	9,948
	5월				6,354	6,418	6,735	7,035	7,367	...	9,338	9,955
재정 적자	2월	3,129	2,775	1,376	1,410	1,576	1,752	1,716	1,706	...	2,480	2,851
	5월				1,539	1,571	1,761	1,718	1,709	...	2,496	2,852
연방 채무 ¹⁾	2월	21,017	22,284	24,252	25,716	27,370	29,214	30,927	32,645	...	43,482	46,445
	5월				25,767	27,388	29,246	31,054	32,866	...	43,861	46,709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2월	16.3	18.1	19.6	18.3	17.7	17.4	17.7	18.1	...	18.1	18.1
	5월				18.4	17.8	17.4	17.8	18.1	...	18.1	18.1
지출	2월	31.2	30.5	25.1	23.7	23.5	23.5	23.5	23.6	...	24.6	25.3
	5월				24.2	23.5	23.5	23.5	23.6	...	24.7	25.3
재정 적자	2월	14.9	12.4	5.5	5.4	5.8	6.1	5.7	5.5	...	6.5	7.3
	5월				5.8	5.8	6.2	5.7	5.5	...	6.6	7.3
연방 채무 ¹⁾	2월	100.1	99.6	96.9	98.0	100.4	102.1	103.3	104.5	...	114.8	118.2
	5월				98.2	100.4	102.2	103.7	105.2	...	115.8	118.9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CBO, "An Update to the The Budget Outlook: 2023 to 2033," 2023. 5. 12., p. 2 (Table 1)

156)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나. 결산

-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2022회계연도¹⁵⁷⁾ 발생주의 결산 보고서¹⁵⁸⁾ 발표(2023. 2. 16.)¹⁵⁹⁾
 - (연방 비용: 발생주의)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총 비용(gross cost)은 7조 4,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
 - 2022회계연도 순 비용¹⁶⁰⁾(net cost)은 전년 대비 23.8%(1.75조달러) 증가한 9조 968억달러
 - * 순 비용을 구성하는 지출 비중은 보건부(21%), 보건복지부(18%), 국방부(16%), 사회보장국(14%), 재무부(6%), 교육부(6%), 이자지출(6%) 순으로 나타남¹⁶¹⁾
 - 2022회계연도 순 운영비용¹⁶²⁾(net operating cost)은 전년 대비 34.8%(1.08조 달러) 증가한 4조 1,709억달러
 - 2022회계연도 정부 세금 및 기타 수입은 전년(4조 2,559억달러) 대비 15.7% 증가한 4조 9,259억달러
 - (재정수지: 현금주의)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50.4%(1.4조 달러) 감소한 1조 3,755억달러
 - 2022회계연도의 순 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는 약 2.8조달러 차이를 보임¹⁶³⁾

157) 2021년 10월~2022년 9월

158) FY 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59) 미 재무부, "FY 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https://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검색일자: 2023. 3. 6.

160) 총 비용(gross cost)에서 재화와 용역으로 인한 수입(earned revenues, 예: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premiums), 국립공원 입장료(national park entry fees), 우정국 서비스 비용(postal service fees) 등)을 차감하고, 손실 또는 이득(gains or losses, 예: 이자율, 물가인상 등)을 조정(adjust)한 결과 값을 순 비용(net cost)으로 정의함 (미 재무부, "FY 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p. 19 <Table 3>)

161) 즉, 6개의 연방정부 기관 및 이자지출이 전체 순 비용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연방정부 기관은 약 13%를 차지

162) 순 운영비용은 순 비용에서 정부 세금 및 기타 수입(other unearned revenues) 등을 차감한 수치

163) 순 운영비용은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관련 비용(federal employee & veteran benefits liabilities)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주의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표 3-I-7 순 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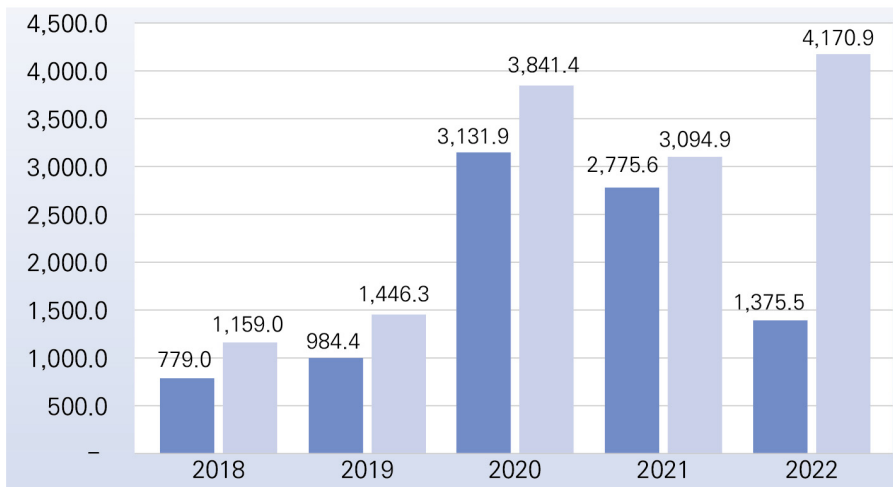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1	2022
순 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발생주의) ①	3,094.9	4,170.9
미지급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혜택 등 ②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767.5	2,629.0 ¹⁾
이연세 등으로 인한 선수금 ③ (Advances from Others and Deferred Revenue)	27.8	45.2
선불금 등 선수금 ④ (Advances and Pre-payments)	-150.7	71.3
순 미수세입 ⑤ (Taxes Receivable, net)	-68.0	65.5
시차 및 신용금융 개혁 비용 ⑥ (Timing Differences - Credit Reform Costs)	-75.1	-58.5
기타 ⑦ (Other, Net)	-182.2	42.9
소계(순차감) ⑧ = ② + ... + ⑦ (Subtotal - Net difference)	319.3	2,795.4
재정적자(budget deficit/현금주의) ⑨ = ① - ⑧	2,775.6	1,375.5

주: 2021년 대비 수치 변화는 비용/부채 추정 가정 변화에 주로 기인
 자료: 미 재무부, "FY 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p. 18 (Table 2)

그림 3-I-3 미국 재정적자(현금주의)와 순 운영비용(발생주의) 추이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주: 짙은 파란색은 재정적자(현금주의), 연한 파란색은 순 운영비용(발생주의)
 자료: 미 재무부, "FY 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p. 17 [Chart 1]

- (자산)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소유 자산(2022. 9. 30. 기준)은 전년 대비 1.4%(688억달러) 증가한 4조 9,624억달러
 - 자산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순 대출금¹⁶⁴(1.4조달러), 순 유형 자산¹⁶⁵(1.2조달러), 현금 및 화폐성자산¹⁶⁶(8,778억달러)과 순 재고자산(4,069억달러) 등이 3/4 이상의 비중을 차지
- (부채) 2022회계연도 부채는 전년 대비 12.2%(4조 2,446억달러) 증가한 39조 223억달러
 - 부채는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¹⁶⁷) 및 미지급 이자를 합한 24.3조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등 12.8조달러, 기타 1.9조달러로 구성
 - * 연방채무(held by the public)는 전년 대비 8.9%(2.0조달러) 증가한 24.3조달러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회계연도 상반기(2022. 10. 1.~2023. 3. 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2023. 4. 10.)¹⁶⁸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상반기에 집계된 총 누적 재정적자는 1조 880억달러로, 전년 동기(6,680억달러) 대비 62.9%(4,200억달러) 증가
 - 2022회계연도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직전의 두 회계연도(2019, 2020)*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회계연도 상반기에 재차 반등
 - * (2019회계연도) 6,910억달러, (2020회계연도) 7,430억달러
- (세입) 전년 동기(약 2조 1,220억달러) 대비 3.4%(730억달러) 감소한 총 약 2조 490억달러
 - 세입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급여세 (payroll taxes)를 합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30억달러) 감소한 약 1조 7,900억달러

164) Loans Receivable, Net

165) net PPE(Property, Plant, Equipment)

166) 현금/화폐성자산: Cash & Other Monetary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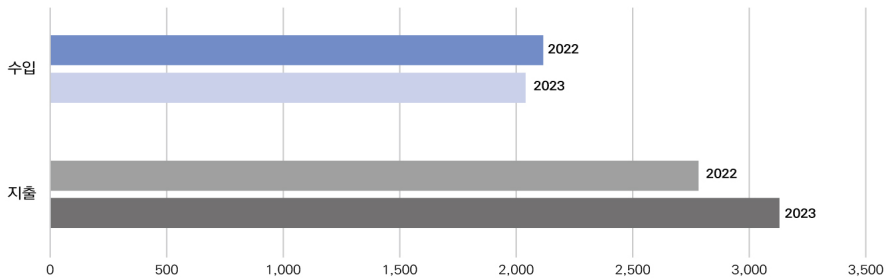
167) 'public'은 개인, 기업, 주 및 지방정부, 연준(FRB), 외국 정부 및 비정부부문(outside the federal government) 기관을 뜻하는 개념

168)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3," 2023. 4. 10., <https://www.cbo.gov/system/files/2023-04/58995-MBR.pdf>, 검색일자: 2023. 8. 7.

- * 사회보험급여세는 9% 증가하였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환급(tax refunds)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6%(680억달러)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입 감소
-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3%(130억달러) 증가한 1,400억달러
- 기타 주요 수입 중 관세수입은 15%(70억달러) 감소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로 부터 전출된 잉여금¹⁶⁹⁾ 수입은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610억달러(전년 동기) → 10억달러 이하로 감소

그림 3-I-4 미국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의 상반기 결산 추이 비교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주: 기간(주말 등) 일정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3," 2023. 4. 10., p. 2 [Figure 1]

- (세출) 전년 동기(약 2조 7,900억달러) 대비 12.4%(3,460억달러) 증가한 총 약 3조 1,360억달러이며, 주요 지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10%), 메디케어(14%), 메디케이드(8%) 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며, 3개 분야를 모두 합한 증가율은 11%로 집계
 - 사회보장 지출은 수혜자와 생계비(cost of living) 조정에 따른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610억달러) 증가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90억달러), 8%(220억달러) 증가
 - * 메디케어 지출 증가는 지급률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며, 메디케이드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입법¹⁷⁰⁾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대상 자격을 확대한 규정에 기인하여 증가

169) 「FAST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P.L. 114-94)은 연방준비제도(FRB)의 잉여금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재무부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구 및 기업 지원 지출)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¹⁷¹), 중소기업청, 공중보건·긴급사회복지자금(PHSSEF¹⁷²) 지출 사업은 모두 감소
 -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지출 규모는 확대 아동세액공제(expanded child tax credit) 만료 등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43%(860억달러) 감소한 1,160억달러 집계
 - 중소기업청 지출의 경우, 재난 대출 및 오락·유흥시설(entertainment venues) 폐쇄에 대한 보조금 등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94%(170억달러) 감소 10억달러 집계
 - 공중보건·긴급사회복지자금은 대유행 관련(코로나19 테스트, 코로나19 추적, 백신 개발 및 구매 등) 지출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2%(420억달러) 감소한 170억달러 집계
- (교육부 지출) 학자금 대출금 지급 유예 연장으로 인한 관련 지출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약 75%(530억달러) 증가한 1,230억달러 집계
- (연방예금보험공사¹⁷³) 관련 지출) 지난 3월에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¹⁷⁴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90억달러 증가

표 3-I-8 미국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의 상반기 결산 추이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2회계연도 상반기 (A)	2023회계연도 상반기 ¹⁾ (B)	2023회계연도 상반기 ²⁾ (C)	증감 (C - A)	증감율 (C - A)/A
수입	2,122	2,049	2,049	-73	-3.4
지출	2,790	3,147	3,136	346	12.4
적자	668	1,099	1,088	420	62.9

주: 1)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2)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을 조정한 경우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3," 2023. 4. 10., p. 1 (Table 1)

170)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171) Refundable Tax Credits는 recovery rebates(재난지원금)를 포함하여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s(의료보험 관련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교육세액공제)등을 포함

172) PHSSEF: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Emergency Fund

173)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74)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참조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재정정책

1) 국가부채 상한선

-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Janet L. Yellen), 국가채무 상한선 도달에 디폴트 우려 및 의회에 대책 촉구(2023. 1. 13.)¹⁷⁵⁾
 - 옐런 장관은 2023년 1월 19일에 국가채무가 법정 상한선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의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신
 - 의회는 2021년 12월 16일 정부의 법정 채무한도를 31조 3,810억달러로 합의 하는 법안(P.L. 117-73)을 승인하여 채무한도를 증액하였음
 - 이에 재무부는 두 가지 특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보유현금과 특별조치로 6월 초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별조치는 ① 퇴직 공무원 및 장애인 연기금¹⁷⁶⁾ 및 우정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¹⁷⁷⁾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거나(redeem) 새로운 투자를 유예하는 방식, ② 정부채 권투자기금(G Fund)의 일부에 대한 재투자를 유예하는 방식을 포함
 - 옐런 장관은 정부의 채무불이행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가 적시에 채무한도를 증액하거나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
 -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미국 경제, 미국인의 생계, 국제 금융 안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강조
 - 2011년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역사상 유일한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의 실질적인 피해를 언급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무조건적인¹⁷⁸⁾ 채무한도 증액을 촉구하고 있으나,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대폭적인 지출삭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여야가 대치¹⁷⁹⁾

175) 미 재무부,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Sends Letter to Congressional Leadership on the Debt Limit," Press Release, January 13,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188>, 검색일자: 2023. 1. 19.

176)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177) Postal Service Retiree Health Benefits Fund

178) 미 백악관,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January 17, 2023," 2023. 1. 1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3/01/17/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january-17-2023/>, 검색일자: 2023. 1. 19.

- 미국 의회,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 가결: 채무한도 유예 적용 (2023. 6. 3.)¹⁸⁰⁾
 - 이 법의 제출에 앞서 5월 27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채무한도 적용에 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¹⁸¹⁾, ¹⁸²⁾
 - 성명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들은 유지 하되 일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
 -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현재의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 1월 2일에 유예기간 중 발생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채무한도를 인상하도록 규정
 - 2021년 12월 기준 현재의 법정 채무한도는 31조 3,850억달러로 규정됨
 - 올해 1월부터 재무부는 채무 수준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시행해 옴
 - 지난 40년간 미국 의회는 48번의 법안 통과를 통해 법정 채무한도를 인상하거나, 채무한도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옴¹⁸³⁾
 - 2024년 1월과 2025년 1월에 연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¹⁸⁴⁾이 유효한 경우, 2024회계연도와 2025회계연도의 지출상한은 2023회계연도의 기초예산(base funding) 보다 1% 낮은 수준으로 적용될 것임
 - 2024회계연도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재량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규정된 상한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만큼 자동적으로 강제삭감(sequestration)¹⁸⁵⁾이 이루어지도록 법

179) NBC News, "House Republicans gear up for a debt ceiling fight with the White House and Senate Democrats," January 17, 2023,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debt-ceiling-deadline-will-republicans-pass-rcna65710>, 검색일자: 2023. 1. 19.

180) 미국 의회, "H.R.3746 -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Public Law No. 118-5), 118th Congress (2023-2024)," 2023. 6. 3.,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3746/text>, 검색일자: 2023. 6. 26.

181) 미 백악관, "Statement from President Joe Biden on Bipartisan Budget Agreement in Principle," 2023. 5. 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5/27/statement-from-president-joe-biden-on-bipartisan-budget-agreement-in-principle/>, 검색일자: 2023. 5. 29.

182) 미국의 채무한도 상한선 도달로 인한 재무부의 특별조치 시행 및 디폴트 우려에 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1월호 참조

183) 미국 의회조사처(CRS), "The Debt Limit Since 2011," 2022. 12. 2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389>, 검색일자: 2023. 6. 26.

184) 미국의 재량지출은 회계연도마다 12개의 정규세출 법안을 입법하여 법제화되는데, 회계연도가 시작한 이후(10월 1일)에도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속결의안이 임시 예산안으로 적용됨

185) 강제삭감 조치가 발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일부 정부 사업 예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일정률(uniform rate)로 적용하여(최대 4%) 상한을 초과한 만큼 예산을 삭감한다. 삭감해야 하는 예산의 절반은 비대상 국방예산 계정의(non-exempt

적으로 규정

-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에 1조 5,900억달러의 상한 규정(국방분야 8,863억 달러, 비국방분야 7,037억달러)
- 2025회계연도 재량지출에 1조 6,059억달러의 상한 규정(국방분야 8,952억달러, 비국방분야 7,107억달러)
- CBO의 전망에 따르면 재량지출 한도의 설정으로 2024회계연도의 재량지출은 1조 7,953억달러로 추정되며, 2025회계연도의 재량지출은 1조 8,197억달러로 추정됨¹⁸⁶⁾
- 2026~29회계연도의 재량지출 한도는 의회의 예산 입법 절차를 통해 적용되도록 규정
 - 2026회계연도 재량지출에 1조 6,220억달러의 상한 규정
 - 2027회계연도 재량지출에 1조 6382억달러의 상한 규정
 - 2028회계연도 재량지출에 1조 6546억달러의 상한 규정
 - 2029회계연도 재량지출에 1조 6711억달러의 상한 규정
- 지출한도 설정 외에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지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조항들 포함
 -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 빈곤가구 일시보조 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을 비롯한 재정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 범위 조정
 - 코로나19 기간 동안 입법된 일부 지원 사업들의 미집행 예산(unobligated funds) 일부를 철회하여(rescind) 국세청으로 환원
- CBO의 전망에 따르면 2033회계연도 말 기준 연방채무는 기존 대비¹⁸⁷⁾ 1조 5,28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24~2033회계연도 기간 누적 재정적자는 기존 대비 1조 5,23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defense accounts) 사업에서, 나머지 절반은 비대상 비국방 계정(non-exempt non-defense accounts) 예산지출을 대상으로 삭감한다(강제삭감 조치의 구체적 절차 및 규정에 관해서는 2 U.S. Code § 903 및 § 906 참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chapter-20/subchapter-1>, 검색일자: 2023. 6. 28.).

186) 일부 예산의 경우 긴급 수요(emergency requirement)에 해당하거나 해외비상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에 할당된 경우 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량지출 한도보다 재량지출액 전망이 더 높게 추산될 수 있음
187) 「2023 재정책임법」 입법 이전 2023. 5. CBO 예산 전망 대비 재정적자의 변화 비교

표 3-I-9 「2023 재정책임법(FRA 2023)」이 미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2024~2033회계연도)

(단위: 십억달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4~2033
총지출	6,418	6,735	7,035	7,367	7,854	7,997	8,494	8,898	9,338	9,955	80,091
의무지출	3,828	4,023	4,205	4,400	4,738	4,760	5,120	5,386	5,675	6,141	48,277
재량지출	1,845	1,939	1,995	2,055	2,112	2,153	2,209	2,260	2,313	2,373	21,555
순이자	745	773	835	912	1,003	1,084	1,165	1,252	1,350	1,440	10,559
재정적자	-1,571	-1,761	-1,718	-1,709	-1,934	-1,855	-2,126	-2,291	-2,496	-2,852	-20,314
연방채무	27,388	29,246	31,054	32,866	34,895	36,830	39,015	41,347	43,861	46,709	
2023. 5. CBO 전망											
「FRA」 적용 이후 CBO 전망											
총지출	6,348	6,623	6,903	7,223	7,697	7,833	8,321	8,716	9,147	9,755	78,566
의무지출	3,824	4,022	4,205	4,400	4,738	4,760	5,120	5,386	5,675	6,141	48,272
재량지출	1,781	1,833	1,870	1,921	1,971	2,008	2,061	2,108	2,157	2,213	19,923
순이자	744	769	828	901	988	1,065	1,140	1,223	1,315	1,400	10,371
재정적자	-1,501	-1,649	-1,586	-1,565	-1,778	-1,691	-1,953	-2,110	-2,306	-2,652	-18,791
연방채무	27,314	29,060	30,736	32,403	34,277	36,047	38,059	40,210	42,533	45,181	
재정적자 감소분	70	112	132	144	156	164	173	182	191	200	1,523
연방채무 감소분	74	186	318	463	618	783	955	1,137	1,328	1,528	

주: 1. 재정적자 = 총수입 - 총지출

2. 연방채무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함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How 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 Affects CBO's Projections of Federal Debt," 2023. 6., p. 2 (Table 1); p. 3 (Table 2), <https://www.cbo.gov/file-download/download/private/166712>, 검색일자: 2023. 6. 26.

2) 2023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 발표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2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장기 재정 전망 발표(2022. 12. 16.)¹⁸⁸⁾
 - (제도 개요) 미국의 공적연금은 노령·유족·장애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¹⁸⁹⁾의 기금으로 운용됨
 - 기금의 주요 재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세(payroll tax)이며 보험료율은 소득의 12.4%¹⁹⁰⁾
 - 2021년 말 기준 OASDI 기금의 보유고 잔액은 2조 8,520억달러이며, 2021년 총수입은 1조 883억달러, 총지출은 1조 1,446억달러¹⁹¹⁾
 - (재정 전망) CBO는 예정된 급여계획(scheduled benefits)하에서 OASDI 기금은 2033년 고갈되며, 이후에는 예정된 급여를 적시에 전액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공적연금의 향후 75년 동안 재정수지 적자(actuarial deficit)¹⁹²⁾는 GDP의 1.7%이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4.9%에 해당
 - 이는 연방정부가 근로소득세율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4.9%p 증가시킬 경우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
 - (시나리오) CBO는 지급 가능한 급여수준(payable benefits)을 적용할 경우 2034년 공적연금의 급여는 예정된 급여보다 23% 작고, 2096년에는 35% 작을 것으로 전망
 - 2033년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현행 급여계획에 따라 지출이 발생하며, 고갈 이후에는 연간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간지출을 정하는 시나리오 설정
 - 2096년 이후에는 예정된 급여계획(scheduled benefits)과 지급 가능한 급여

188) 미국 의회예산처(CBO), "CBO's 2022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2022. 12. 16., <https://www.cbo.gov/publication/58564>, 검색일자: 2023. 1. 17.

189)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성격을 가졌으며, 퇴직자 및 사망한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과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자료: 신화연 외,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2.)

190)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 부담, 자영업자는 본인 전액부담

191) OASDI 신탁위원회, "The 202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2022. 6. 2., <https://www.ssa.gov/oact/tr/2022/tr2022.pdf>, 검색일자: 2023. 1. 18.

192) OASDI 기금의 재정수지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계리적 수지(actuarial balance)가 사용되었음. (계리적 수지) = (기금 적립금 +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 -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수준(payable benefits)의 차이가 일정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이사회, 2023년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및 공적 건강보험(medicare) 연간보고서 발표(2023. 3. 31.)¹⁹³⁾, ¹⁹⁴⁾, ¹⁹⁵⁾
 - 미국의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의 신탁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매년 의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금 현황과 전망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에 대해 제언
 - 미국의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장애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적연금 신탁이사회는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책을 제안하는 서한을 의회에 발신
 - * 이는 미국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과 장애보험(DI) 기금을 결합하였다고 가정하고,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으로 통칭하여 가상으로 결합된 기금의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해 표현한 것임¹⁹⁶⁾
 - 신탁이사회는 연간보고서에서 1) 즉각적이고도 영구적으로 OASDI 보험료율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 대비 3.44%p 증가시키거나(현행 12.40% → 15.84%), 2) 현행 지급되는 수혜분의 21.3%를 감소시키거나, 3) 두 방안의 조합 중 선택할 것을 제시
 - 미국 공적연금의 노령·유족보험(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75년간 OASI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¹⁹⁷⁾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taxable payroll)의 3.62%

193) 미국 공적연금 신탁위원회, "The 202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2023/tr2023.pdf>, 검색일자: 2023. 4. 24.

194) 미국 연방 의료보험 신탁위원회, "The 202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23. 3. 31., <https://www.cms.gov/oact/tr/2023>, 검색일자: 2023. 4. 24.

195)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3 Annual Report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SUM/tr23summary.pdf>, 검색일자: 2023. 4. 24.

196) 미국 공적연금과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과 장애보험(DI) 기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된 기금임

197) 미국의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기금의 재정수지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계리적 수지(actuarial balance)가 사용되었으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taxable payroll) 대비 비율로 나타냄. 연도별 계리적 수지의 평균으로 기금의 재정수지를 표현함. (계리적 수지) = (기금 적립금 +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가) -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가)

- OASI 기금 고갈 시 연금의 급여액은 현재 대비 77%로 전망되며, 2097년에는 현재 대비 71% 급여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공적건강보험의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 기금은 2031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75년간 HI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0.62%
 - HI 기금 고갈 시 보험금은 현재 대비 89% 급여 가능하며, 2097년에는 현재 대비 96% 급여 가능

표 3-I-10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기금 현황 및 장기 전망

(단위: 억달러)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령·유족·장애보험 (OASDI)	OASDI		병원보험 (HI)	추가 의료보험 (SMI)
			노령·유족보험 (OAS)	장애보험 (DI)		
현황	수혜범위		은퇴자	장애인	입원환자	외래환자
	기금 적립금(2022년 말)	28,299	27,119	1,180	1,966	2,126
	2022년 기금수입	12,218	10,567	1,651	3,966	5,919
	2022년 기금지출	12,440	10,975	1,465	3,427	5,624
	2022년 기금 적립금 변화분	-221	-407	186	539	295
전망	기금 고갈 시점	2034년	2033년		2031년	
	최초 적자 발생연도	2021년	2021년		2025년	
	2023~2097년 재정수지 적자(%)	-3.61	-3.62	0.01	-0.62	
	예정된 수혜 비율(%)					
	기금 고갈 시점	80	77		89	
	2097년	74	71	100	96	

주: 1. 장애보험(DI) 기금은 2097년까지 연간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추가의료보험(SMI) 기금은 정부 부담 보험료가 연간 지출 전망에 맞추어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재정 전망 논의에서 제외됨

자료: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3 Annual Report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SUM/tr23summary.pdf>, 검색 일자: 2023. 4. 24.

〈참고〉 미국의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제도

- 미국의 공적연금은 노령·유족보험(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과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DI)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기금을 노령·유족·장애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로 통칭
 - OASDI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성격을 가졌으며, OASI는 퇴직자 및 사망한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에게, DI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¹⁾
 - (OASI 요율) 고용주: 급여의 5.3%, 피고용인: 급여의 5.3%
 - (DI 요율) 고용주: 급여의 0.9%, 피고용인: 급여의 0.9%
- 미국의 공적건강보험(medicare)는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과 추가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로 구성되어 있음
 - 메디케어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문 A는 입원환자를 위한 보험으로 HI 기금으로 운용되고, 부문 B는 외래환자를 위한 보험으로 SMI 기금으로 운용되며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가입할 수 있음²⁾
 - (HI 요율) 고용주: 급여의 1.45%, 피고용인: 급여의 1.45%
 - SMI의 경우 정부 부담금이 수입을 주로 차지하며 연간 지출 전망에 맞춰 정부 기여 보험료가 상승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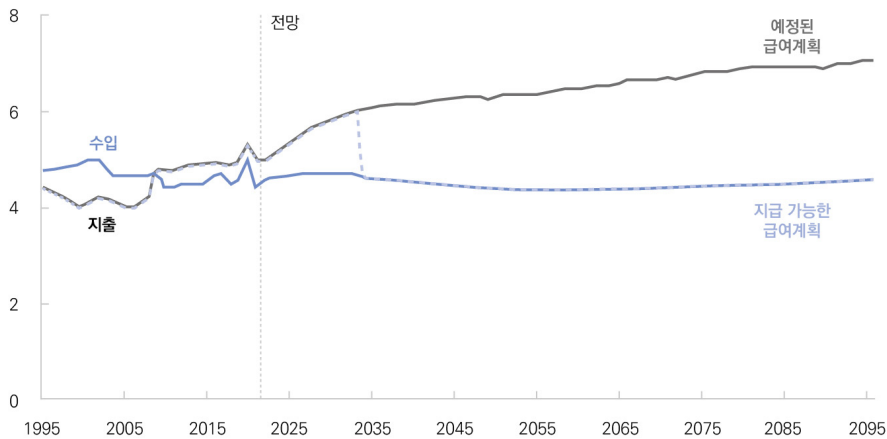
주: 1) 신화연·최기홍·김종훈·신승희,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2.

2) 김평식, 「미국 건강보험 관련 쟁점 및 연구」,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9. 10.

자료: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3 Annual Report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SUM/tr23summary.pdf>, 검색일자: 2023. 4. 24.

그림 3-I-5 CBO의 미국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공적연금의 지출과 수입 전망을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냄

2. 예정된 급여계획(Outlays with Scheduled Benefits)은 현행 급여계획하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지금 가능한 급여수준(Outlays with Payable Benefits)은 2033년 기금 고갈 이후 기금의 연간 수입과 연간 지출이 일치하도록 급여를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3. 2096년 지금 가능한 급여수준하에서 기금지출은 GDP의 4.6%로 전망되며, 현행 급여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2096년 기금지출은 GDP의 7.0% 수준으로 전망됨

자료: CBO, “CBO’s 2022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2022. 12. 16., p. 9 Social Security Outlays and Revenues, With Scheduled and Payable Benefits

3) 페이고 최종 보고서 발표

-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2 페이고(PAYGO) 최종 보고서 발표(2023.1.)¹⁹⁸⁾
 - (배경) OMB는 2010년에 영구법으로 전환된 「2010 페이고법」에 근거하여 의회 회기 종료일 이후 14일 안에 페이고 연례 보고서 발표¹⁹⁹⁾
 -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117대 의회(2021~2022년) 2회기(2nd session)에서 발생한 페이고 원칙에 적용되는 법을 대상으로 함
 - (「페이코법」 적용 여부) 117대 의회 2회기에 「페이코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PAYGO legislation)은 총 55개이며, 이 중 50만달러 이상 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는 법률은 15개로 집계²⁰⁰⁾
 - (「페이코법」 적용 제외 법률) 15개의 페이고 적용 법률 중 7개의 법률은 해당 법률 조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페이고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전면 배제: 4개 법률, 부분 배제 3개 법률)이 포함됨에 따라 페이고 비용 합산 규모 점검표에서 제외
 - (주요 페이고 법률)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법」²⁰¹⁾,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법」²⁰²⁾, 2022 우크라이나 추경예산²⁰³⁾, 2023 우크라이나 추경예산²⁰⁴⁾ 등
 - (최종 결과) 「페이코법」에 따라 117대 2회기의 페이고 비용을 분석²⁰⁵⁾한 결과, 「페이코법」에 적용되는 강제삭감(Potential PAYGO sequestration)²⁰⁶⁾은 ‘불필요(not required)’로 확정
 - 즉, 2022년 의회에서 통과(12. 28.)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법」의 Division O, Section 1001(d)(1) 조항에 근거하여 2023년에 반영되는 페이고 적자분

198) OMB, “2022 Statutory Pay-As-You-Go Act Annual Report,” 2023. 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1/annualpaygoreport2022.pdf>, 검색일자: 2023. 2. 13.

199) Public Law 111-139, 124 Stat. 8, 2 U.S.C. § 934

200) 나머지 40개의 법률은 50만달러 미만의 미미한 영향(negligible budgetary effects)의 법률들로 구성

201)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 (P.L. 117-103)

202)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P.L. 117-328)

203) 「Additional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2」 (P.L. 117-128)

204)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3」 (P.L. 117-180)

205) 비용의 총 합계는 5년 주기와 10년 주기로 나누어 계산되고 있음

206) (강제삭감) 「페이코법」은 페이고 원칙에 적용되는 법안들의 재정상의 효과가 재정적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대통령의 강제삭감 명령을 통해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윤성주·구윤모, 「미국 재정건전화 이행수단 「강제삭감(Sequestration)」(GAO, CRS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 2.)

을 2025년에 반영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페이코법」에 따른 2023년 강제삭감 규모는 '0'으로 설정(207). 208)

〈참고〉 2022 페이코 보고서 주요 내용(예시)

〈2023년 페이코 적자분 2025년에 반영〉

Section 1001(d)(1) of division O of Public Law 117-328, the Consolidated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23, states, …… **중략** …… the debit for the budget year on the 5-year scorecard, if any, and the 10-year scorecard, if any, **shall be deducted from such scorecards in 2023 and added to such scorecards in 2025.** Accordingly, both the 5- and 10-year scorecards deduct the debit from 2023 and add that debit to 2025.

4) SVB 파산사태 대책 발표

■ 미국 재무부 포함 기관합동,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 파산에 대한 대책 공동 발표 (2023. 3. 12.)²⁰⁹⁾

- 공동성명서에서 최근의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 열린 재무부 장관은 모든 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fully protect) 방식으로^{210). 211)}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힘
 - 은행의 주주들과 일부 무담보 채권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표명
 - 은행 파산과 관련한 손실을 납세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힘
 - SVB(3. 10. 파산)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은행(3. 12. 파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파산 절차 진행

207) 추가적으로 2024년의 적자분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법」의 Division O, Section 1001(d)(2) 조항에 근거하여 118대 의회 1회기 말에 2025년분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208) 2022년의 경우에도 「페이코법」에 따른 강제삭감 규모가 「Protecting Medicare and American Farmers from Sequester Cuts Act」(P.L. 117-71), Sec. 7에 근거하여 적자분(강제삭감 대상 규모)이 2023년에 반영 되도록 규정

209)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예금보험공사, “Joint Statement by Treasury, Federal Reserve, and FDIC,” 2023. 3. 1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30312b.htm>, 검색일자: 2023. 3. 25.

210) 원칙적으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25만달러(자료: *The Economist*, “Central Banks Face an Excruciating Trade-off,” March 22, 2023,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3/22/central-banks-face-an-excruciating-trade-off>), 검색일자: 2023. 3. 25.

211)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라 경제나 금융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 상황 시에는 강화된 예금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자료: 한국은행, 「Yellen 재무장관 미 은행협회 컨퍼런스 주요 발언 내용」, 2023. 3. 21., <http://www.bok.or.kr/portal/singl/office/view.do?nttId=10076203&menuNo=200798&pageIndex=1>, 검색일자: 2023. 3. 26.

〈참고〉 SVB 파산 사태 진행 과정

- SVB는 1983년 이래 40여년간 실리콘밸리 소재의 테크 및 헬스케어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영업하였으며, 미국에서 16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었음
- SVB 파산 사태의 최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음
 - 3월 8일, SVB는 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가능증권(210억달러) 매각 및 보통주(17억 5천달러), 의무전환우선주(5천달러) 발행을 발표
 - * 매도가능증권의 세후 손실액은 18억달러로 추정됨
 - 3월 9일, SVB의 모회사 SVB Financial Group의 주가는 60% 이상 하락
 - 3월 10일,뱅크런 발생: SVB 고객들은 하루 동안 420억달러의 예금인출을 시도하였으며 당국은 SVB의 파산 선언
 - 3월 13일, 예금보험공사(FDIC)의 관리하에서 3월 13일부터 예금인출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FDIC의 관리하에 SVB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파산 절차 진행
 - 3월 26일, FDIC는 First Citizens Banc Shares, Inc(FCB)과 SVB의 모든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¹⁾
 - FCB는 SVB가 보유한 72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165억달러 할인)
 - SVB의 총자산 규모는 약 1,670억달러이며 총 예금 규모는 약 1,190억달러로 발표
 - FCB가 인수한 자산 외에 900억달러 규모의 증권과 기타 자산은 FDIC의 관리하에 처분 예정임을 발표
-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Aaron Klein은 SVB의 파산은 연준이 은행 감독과 규제에 실패한 결과이며 연준이 놓친 네 가지 시그널이 있었다고 분석²⁾
 - 1) SVB의 자산은 지난 4년간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 2)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uninsured) 예금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음
 - SVB는 은행 대출의 97%가량이 FDIC의 예금 보험한도를 넘는 예금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예금은 뱅크런에 취약함
 - 3) 2019~2021년 동안 SVB는 1000억달러 규모가 넘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저리에 매입하였으며, 이자율이 상승 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헷징(hedging) 수단이 없었음
 - 4) 연방주택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 FHLB)에 대한 현금 대출 비율이 높았음
 - SVB는 현금이 필요해지자 FHLB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며, 20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음
 - FHLB는 최종 대부자 다음(lender of next to last resort)이라고 불리우며, 원칙적으로 은행 파산 시 FHLB의 손실 발생
 - SVB은행의 주 고객 기반이 VC(Venture Capital)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러한 징후들을 연준이 철저히 검토해야 했었다고 분석
 - 연준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저자는 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연준의 은행 감독과 운영 절차(governance)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자료: 1. Silicon Valley Bank 홈페이지, "SVB Facts," <https://www.svb.com/newsroom/facts-at-a-glance>, 검색일자: 2023. 3. 25.

2. J.P.Morgan, "SVB: Addressing Questions Including What to Do with SIVB Shares Post the Sell-Off and Industry Read-Through," 2023. 3. 10.

3. *The Economist*, "How Deep is the Rot in America's Banking Industry?," March 16, 2023, <https://www.brookings.edu/opinions/svbs-collapse-exposes-the-feds-massive-failure-to-see-the-banks-warning-signs/>, 검색일자: 2023. 3. 31.

4. KB증권, 「SVB의 핵심은 은행 위기가 아닌 금리 리스크와 장부가 평가」, 2023. 3. 13.

1) FDIC, "First-Citizens Bank & Trust Company, Raleigh, NC, to Assume All Deposits and Loans of Silicon Valley Bridge Bank, N.A., From the FDIC," Press Release, March 26, 2023, <https://www.fdic.gov/news/press-releases/2023/pr23023.html>, 검색일자: 2023. 3. 29.

2) Brookings Institution, "SVB's collapse exposes the Fed's massive failure to see the bank's warning signs," 2023. 3. 1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svbs-collapse-exposes-the-feds-massive-failure-to-see-the-banks-warning-signs/>, 검색일자: 2023. 3. 25.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 BTFP)을 신설하여 은행을 포함한 예금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지원²¹²⁾, ²¹³⁾
 - 은행 등 예금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공채 등 일정 담보²¹⁴⁾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par value)를 기준²¹⁵⁾으로 OIS 금리(+10bp)를 적용하여 최대 1년간 대출 실행
 - 해당 프로그램의 신설로 국채 등 우량 담보에 대한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어, 은행들이 우량 담보를 비상시에 빠르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 방지
 - 해당 긴급 대출프로그램은 향후 1년간(2024. 3. 11.까지) 시행
-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방 은행들의 예금 유출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파악하며, 두 은행의 파산 직후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은행 파산 사태가 확산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 ²¹⁶⁾
 - 국제 금융위기 당시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최근의 은행 파산 사태는 금융위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
 - 은행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이 현재 은행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응하기에 적절한지 재점검할 계획
 - 추가적인 은행 위기 시 동일하게 25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포괄적인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추가적으로 발언²¹⁷⁾
- 추경호 부총리는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SVB 등 사태가 불거졌으며, 국제 금융 불안

212) 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Board announces it will make available additional funding to eligible depository institutions to help assure banks have the ability to meet the needs of all their depositors," Press Release, March 12,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30312a.htm>, 검색일자: 2023. 3. 25.

213) 미 연방준비제도, "Bank Term Funding Program," 2023. 3. 1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files/monetary20230312a1.pdf>, 검색일자: 2023. 3. 25.

214) 자격이 되는 담보조건은 공개시장조작에서 연준이 매입할 수 있는 모든 담보증권이 대상이 되며, 국채(U.S. Treasury), 지방채(Municipal securities), 정부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agency guaranteed) 등이 포함됨

215) 전통적으로 연준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할 때 시행하는 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lending)의 경우 담보 평가 시 헤어컷(haircut)이 적용되어 담보물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치를 평가 받음

216) 미 재무부,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at the American Bankers Association's Washington DC Summit," Press Release, March 21,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354>, 검색일자: 2023. 3. 25.

217) Bloomberg, "Yellen Says US Not Considering 'Blanket' Bank Deposit Insurance," March 23, 20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3-22/yellen-to-stress-no-protections-for-bank-owners-and-bondholders#xj4y7vzkg>, 검색일자: 2023. 3. 26.

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나, 저금리 기간 누적된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²¹⁸⁾

- 이번 사태가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국내 취약부문의 잠재 위험이 국제 금융 불안과 맞물릴 가능성을 예의주시

5) 기타

■ 미국 교육부, 학자금 대출 탕감 및 상환 완화 정책안 현황 발표(2023. 1. 10.)²¹⁹⁾,²²⁰⁾

- (배경) 백악관은 지난해(2022년) 8~9월에 걸쳐 학자금 대출 상환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정책 준비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 절차는 2022년 12월까지 유예²²¹⁾
- (정책 진행 상황) 올해(2023년) 1월부터 재개 예정이었던 연방 학자금 대출금 상환 절차는 공화당 주도²²²⁾하에 제기되고 있는 학자금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간 동안 재차 연기
 -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인해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이 침해되고, 주의 세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
 - 즉,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최대 2만달러) 정책에 대한 소송²²³⁾에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함에 따라 학자금 상환 재개일도 연기된 상태
- (정책 주요 내용)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 및 현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218)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3. 3. 24., https://www.moef.go.kr/nw/news/detailNesDtaView.do;jsessionid=wdAbVsdPOeUu80FYaVgMJhjN.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450&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3. 3. 25.

219) 미 교육부, "New Proposed Regulations Would Transform Income-Driven Repayment by Cutting Undergraduate Loan Payments in Half and Preventing Unpaid Interest Accumulation," Press Release, January 10, 2023,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new-proposed-regulations-would-transform-income-driven-repayment-cutting-undergraduate-loan-payments-half-and-preventing-unpaid-interest-accumulation>, 검색일자: 2023. 1. 10.

220) CRFB, "Proposed Student Loan Rule Is Costly and Flawed," Press Release, January 10, 2023, <https://www.crfb.org/press-releases/proposed-student-loan-rule-costly-and-flawed>, 검색일자: 2023. 1. 10.

221) 학자금 상환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유예/유예 연장을 거듭

222) 6개 주(네브래스카,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주)가 소송에 참가(관련 링크: <https://www.cbsnews.com/news/student-loan-forgiveness-blocked-by-eighth-court-of-appeals/>)

223) 텍사스 연방지법은 행정부가 의회의 영역을 초월한 탕감 정책을 시행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연방 제8항소법원은 해당 정책에 시행 보류 조치 판결

상환(IDR or REPAYE²²⁴) 정책 수정²²⁵, ²²⁶)

- 이와 함께 현재 최대 10%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상환금 상환율 (cap payment)을 5%로 축소
- (재정 영향) CBO는 학자금 채무 탕감 정책에 의해 향후 10년간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4,000억달러로 전망하였으며, 초당파 비영리 재정전문기관인 책임연방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비용²²⁷은 향후 10년간 900억~1,900억달러로 전망²²⁸)
 - CBO는 향후 정책 방향이 진행되는 바에 따라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상환 정책 (IDR)에 따른 재정소요 비용 발표 예정²²⁹)
 - (향후 계획 및 전망) 교육부는 대출 탕감에 대한 법원 소송이 해결된 이후 60일 이내 상환 절차가 재개될 것이며, 6월 30일까지도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9월 1일(60일 이후)부터 재개할 계획 발표(2022. 11. 22.)²³⁰)
 - 한편, 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학자금 채무 탕감 정책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올해 2월 심리 개시 예정

■ 미국 백악관, 보건 관련 장소에서의 백신 의무화 철회 법안(H.R. 497: Freedom for Health Care Workers Act)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표(2023. 1. 30.)²³¹)

- (배경)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관련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

224) REPAYE: Revised Earn As You Earn(= Income-Driven Payment)

225) 연소득 개인 3만 600달러(현재 2만 400달러) 미만과 4인 가구 6만 2,400달러(현재 4만 1,600달러) 미만의 경우 월별 상환금 면제

226) 미 교육부, "Fact Sheet: Transforming Income-Driven Repayment," 2023. 1. 10., <https://www2.ed.gov/policy/highered/reg/hearulemaking/2021/idrfactsheetfin.pdf>, 검색일자: 2023. 1. 25.

227) 채무상환 방식 개정: 900억~1,900억달러/상환 유보(~2022. 12. 31.): 약 200억달러

228) 백악관이 발표한 학자금 채무 완화 정책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재정동향」 2022년 9월호 참조

229) CBO, "Costs of Suspending Student Loan Payments and Canceling Debt," 2022. 9. 26., <https://www.cbo.gov/publication/58494>, 검색일자: 2023. 1. 25.

230) 미 교육부, "Biden-Harris Administration Continues Fight for Student Debt Relief for Millions of Borrowers, Extends Student Loan Repayment Pause," Press Release, November 22, 2022,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continues-fight-student-debt-relief-millions-borrowers-extends-student-loan-repayment-pause>, 검색일자: 2023. 1. 20.

231) OMB,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2023. 1. 3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1/SAP-H.R.-497.pdf>, 검색일자: 2023. 2. 16.

-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2021년 11월 5일 개시)을 폐지하는 법안 하원 통과
- (정부 입장) 백악관은 행정정책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발표

■ 미국 의회 하원, 팬데믹 종료 법안(H.R. 382: Pandemic is Over Act) 가결(2023. 1. 31.)²³²⁾

- (배경) 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월 31일에 선포하였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종결(법안 통과 즉시 종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으로 이송 완료²³³⁾

*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질병 대응을 위한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폭넓게 부여되며, 「공중보건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효력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도 가능²³⁴⁾

- 이 법안은 현재 상원(보건·노동·교육 상임위원회 소관) 심리 진행 중
- (진행 상황) 바이든 정부는 행정정책성명서(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SAP)²³⁵⁾를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5월 11일에 종료할 것으로 발표
 - 한편, 팬데믹 종료 법안과는 별도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²³⁶⁾ 종료 결의안(H.J. Res.7)도 하원을 통과한 상태

232) congress.gov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382/all-actions?overview=closed#tabs>

233)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Declarations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https://aspr.hhs.gov/legal/PHE/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3. 2. 21.

234)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 Public Health Emergency Declaration," <https://aspr.hhs.gov/legal/PHE/Pages/Public-Health-Emergency-Declaration.aspx>, 검색일자: 2023. 2. 21.

235) OMB,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2023. 1. 3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1/SAP-H.R.-382-H.J.-Res.-7.pdf>, 검색일자: 2023. 2. 16.

236) 국가 비상사태는 국내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해외 이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고, 효력 기간은 1년이며 대통령이 이를 중지하거나 의회의 결의안 의결로 취소 가능(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20. 3. 13. 첫 선포)

나. 통화정책

1) 베이지북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2022년 12월) 발표(2023. 1. 18.)²³⁷⁾,²³⁸⁾
 - (경제활동) 미국 전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지난 달(2022년 11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응답자들은 향후 몇 달간 성장세가 약할 것으로(little growth) 전망
 - 소비지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판매가 강하게 증가
 - 높은 물가상승률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특히 중·저소득 소비자들에게서 두드러짐
 - 여행부문 응답자들은 연휴기간 여행으로 인해 완만 혹은 강하게 활동이 증가했다고 답변
 - 제조활동은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 공급망 교란은 완화되었다고 보고
 -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판매 및 건설 감소에 기인
 - 비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음
 - 은행부문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높아진 차입비용으로 인해 상업대출도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농업부문은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좋아졌으며, 에너지부문 활동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 (고용) 고용은 지속적으로 완만에서 보통(modest to moderate)²³⁹⁾ 수준의 속도로 증가
 - 일부 지역은 노동 가용성(labor availability)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기업

237)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 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이번 보고서는 2022. 11. 24.~2023. 1. 9. 데이터 반영

238) 미 연방준비제도, "Beige Book - January 18,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301.htm>, 검색 일자: 2023. 1. 19.

239) '보통의(moderate)'가 '완만한(modest)'보다 더 강한 수준을 의미함(자료: WSJ,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oderate' and 'modest' growth in the Fed's beige book? Which is better?," January 19, 2016, <https://www.wsj.com/articles/whats-the-difference-between-moderate-and-modest-growth-in-the-feds-beige-book-which-is-better-1453217728>, 검색일자: 2023. 1. 19.)

들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호소

-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자들을 해고하기보다 필요시 자연 감원(attrition)을 통해 인원을 줄일 계획
- 노동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음을 보고
-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유치 및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복지를 증대
- (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가(selling price)는 완만(modest)하거나 보통(moderate)의 속도로 상승
 - 많은 지역의 제조업자들은 운송비와 재화가격(철강 및 목재 포함)이 하락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는 투입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
 - 많은 소매업자들은 비용 상승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물가 민감도가 더 높음을 시사
 - 몇몇 소매업자들은 더 많은 판매 증대와 재고처리를 위해 1년 전보다 더 많은 할인과 프로모션을 진행
 - 종합적으로 응답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완화(moderate)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 발표(2023. 3. 8.)^{240, 241)}

- (경제활동) 2023년 초 경제활동은 약간(slightly)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향후 몇 달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변
 - 12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지난 발표 이후 경제활동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나머지 6개 지역은 완만한(modest) 속도로 성장
 - 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소매판매가 보통(moderate) 내지 강하게 성장
 - 몇몇 지역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자들의 재량소득과 구매력을 감

240)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이번 보고서는 2023. 1. 9.~2023. 2. 26. 데이터 반영

241) 미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3. 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308.pdf, 검색일자: 2023. 3. 13.

소시켰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용카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행과 관광 활동은 상당히 강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음
- 제조업 활동은 위축기간을 지나 안정화되었으며, 공급망 교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자동차 판매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재고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됨²⁴²⁾
- 주택시장은 예외적으로 낮은 재고량과 함께 침체 상태가 유지됨
 - 동부 해안의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계절적 정상치를 넘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약간의 증가가 나타남
-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산업용은 약간 증가하고 사무실용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임
- 대출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신용기준이 엄격해졌고 연체율은 소폭 상승(edged up)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하게(solid) 유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타이트한(tight) 상태라고 보고
 - 고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완만에서 보통의(modest to moderate) 속도로 증가
 - 노동 가용성(labor availability)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요구하는 기술이나 경험을 갖춘 구직자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몇몇 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childcare)이 부족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 임금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임금 상승이 내년에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물가 상승이 완화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물가 상승이 향후 한 해 동안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몇몇 지역에서 화물운송과 해상운송 비용이 다소 경감되었으나, 에너지와 원자재를 포함한 투입 비용이 증가

242)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의 재고 투자가 늘어나 판매가 용이해졌다는 의미로 사용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가는 보통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몇몇 지역은 증가세가 주춤해졌다고(deceleration) 보고
 - 몇몇 지역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포함세이거나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임차료는 안정적이거나 증가세를 보임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 발표(2023. 4. 19.)^{243), 244)}

- (경제활동)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최근 몇 주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됨
 - 9개의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약간(slightly) 변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3개의 지역에서는 완만하게(modest) 성장한 것으로 보고됨
 - 완만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소비지출은 포함세이거나 소폭 하락세를 보임
 - 자동차 판매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몇몇 곳에서는 판매 증가
 - 해당 기간 동안 여행과 관광 산업은 호전됨
 - 공급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제조활동은 포함세이거나 하락세를 보임
 - 주거용 부동산 판매와 새로운 건설 활동은 약해지고, 비주거용 건설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대출 규모와 수요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경우에 감소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보고됨
 - 농업부문은 대부분 변화가 없었으며, 에너지시장은 약세를 보인다고 보고됨
- (노동시장) 고용률 증가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지난 서베이 기간 보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보고됨
 - 소수의 기업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주로 대규모 기업에 해당함
 - 다른 기업들은 자연적 감축(natural attrition)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

243)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 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이번 보고서는 2023. 2. 27.~2023. 4. 10. 데이터 반영.

244) 미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4. 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419.pdf, 검색일자: 2023. 4. 24.

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원만을 고용

- 몇몇 지역에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유지율 또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됨
- 임금 수준은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물가) 전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물가는 보통 수준으로(moderately)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약해졌다고 나타남
 - 비노동 투입요소(nonlabor inputs)의 가격은 완만 내지 급격(modest-to-sharp)하게 감소하였으며, 수송비용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보고됨
 - 완제품의 생산자 가격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약간 감소
 - 높은 수준의 수요, 재고량, 노동비용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은 변동이 없으나,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5. 31.)^{245), 246)}

- (경제활동) 4월에서 5월 초순 사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하지 않음
 - 4개의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6개의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2개의 지역에서는 보통(moderate) 수준의 감소가 발생
 - 응답자들의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는 약간 악화되었으나, 응답자들은 여전히 향후 경제활동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지출은 안정적이거나 높았으며, 레저 및 관광 산업에서의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종합적으로 교육 및 헬스케어 기관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보임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은 보합세이거나 상승하였으며, 공급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소되는 양상을 보임

245)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이번 보고서는 2023. 4. 11.~2023. 5. 22. 데이터 반영

246)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5.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531.pdf, 검색일자: 2023. 6. 26.

- 적은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부문의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임
- 낮아진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문 활동은 보험세에서 하락세를 보임
- 대부분 지역의 금융부문에서 안정적이거나 약간 긴축된 양상이 나타남
-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와 관련한 혜택의 종료로 저소득 및 중위소득 가구들의 예산 제약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중됨
- (노동시장)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지난 서베이 기간 동안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
 -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다양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도를 갖춘 노동자 구인난이 존재한다고 보고됨
 - 한편, 노동시장은 일부 진정된 양상을 보이며, 건설, 운수, 금융부문에서 고용이 용이해졌다고 보고됨
 - 서베이 응답자들 중 다수가 해당 기업의 충원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수요의 약화 및 경제 전망 불확실성의 확대를 이유로 고용을 중단하거나 현원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
 - 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하였음
- (물가상승률) 물가는 서베이 기간 동안 보통 수준으로(moderately) 상승하였으나, 많은 지역에서 증가세는 약해진 것으로 보고됨
 - 소비자물가는 견고한 수요와 비용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보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더 커짐
 - 전반적으로 비노동 투입요소 가격은 증가하였으나, 많은 응답자가 비용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운송 및 원자재를 비롯한 특정 투입요소의 가격은 하락하였다고 보고
 -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서베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과 주택임대료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 기간 동안에는 약간 상승

2) 정책금리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2023. 2. 1.)²⁴⁷⁾
 -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 → 4.5~4.75%로 0.25%p 인상
 - (경제 동향) 소비와 지출은 보통의(modest) 성장을 보이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다소 완화되었으나(eased somewhat) 여전히 높은 상태로 평가
 - (물가상승률) 물가 상승 위험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에서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 (대차대조표) 국채(Treasury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MBS)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자산 보유를 이전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나갈 예정
 - 파월 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²⁴⁸⁾에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국가채무 한도도달 시 연준의 역할은 재무부의 재정적 대리인(fiscal agent)임을 강조
 - 현재 물가상승률은 장기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나, 장기 기대 물가상승률은 잘 안착된(well-anchored) 상태라 평가
 -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감소하는 과정(disinflationary process)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재화부문은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주거부문의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증가했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거부문의 물가상승률은 감소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

247)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Press Release, February 1,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201a1.pdf>, 검색일자: 2023. 2. 17.

248)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3. 2. 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0201.pdf>, 검색일자: 2023. 2. 17.

표 3-I-11 미국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PCE 물가	6.3	6.3	6.1	5.5	5.0
재화	8.6	8.1	7.2	6.1	4.6
휘발유	27.6	20.2	20.1	13.4	1.4
자동차·부품	9.6	9.1	6.6	4.0	1.0
서비스	5.1	5.4	5.5	5.2	5.2
외식·숙박	7.2	7.1	7.7	7.2	6.9
주거서비스	7.6	7.9	7.8	7.9	8.4
운송서비스	11.2	16.4	16.6	12.0	13.2
식품 및 에너지 제외 PCE 물가	4.9	5.2	5.1	4.7	4.4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December 2022," Press Release, January 27, 2023, <https://www.bea.gov/news/2023/personal-income-and-outlays-december-2022>, 검색일자: 2023. 2. 20.
 2. 한국은행(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23. 2., p. 4

- 현재까지 정책기조는 충분히 제한적(restrictive)이지 않으며, 적절히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발언
- 국가채무 한도도달 문제에 대한 질문에²⁴⁹⁾ 의회가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 외의 방법은 매우 위험하며 적기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연준이 경제를 보호할 것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답변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2023. 3. 22.)^{250), 251)}
 -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4.75%에서 4.75~5%로 0.25%p 인상
 - (경제 동향) 소비와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이며, 실업률은 낮고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음

249)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기일을 넘길 경우, 연준은 재정적 대리인으로서 재무부의 지시대로 지출을 이행할 것인지 혹은 법적 제약에 대해 스스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250)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Press Release, March 22,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322a1.pdf>, 검색일자: 2023. 3. 26.

251)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3. 3. 22.,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0322.pdf>, 검색일자: 2023. 3. 26.

-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견재하고 회복력이 좋으나, 최근의 은행 파산 사태는 신용시장의 경색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은 과하게 높은(too high) 상태이며, 노동시장은 과하게 타이트한(too tight) 상태라고 평가^{252), 253)}

표 3-I-12 미국 2022년 1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PCE 물가	6.3	6.1	5.6	5.3	5.4
재화	8.0	7.3	6.3	5.1	4.7
서비스	5.4	5.5	5.3	5.4	5.7
식품 및 에너지 제외 PCE 물가	5.2	5.3	5.0	4.9	4.9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January 2023," Press Release, February 24, 2023, (Table 11),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2/pi0123.pdf>, 검색일자: 2023. 3. 26.

- (정책 가이드스) 2%의 물가상승률로 회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정적 이자율 인상(firming)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²⁵⁴⁾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은행 파산 사태의 여파를 측정하고 통화정책의 대응을 결정하기는 이른 단계이며, 더 이상 지속적인(ongoing) 이자율 인상을 예측하지 않는다고 밝힘
- 함께 발표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0.4%, 물가상승률은 3.3%,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5.1%로 전망²⁵⁵⁾

252) 미국의 2023년 2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전월(3.4%) 대비 소폭 상승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The Employment Situation - February 2023," 2023. 3. 10.,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isit_03102023.pdf, 검색일자: 2023. 3. 26.)

253) 2023년 1월 구인-이직 통계(JOLTS)에 따르면, 구직자 수 대비 일자리 비율은 (1,082만 4천명) ÷ (569만 4천명) = 1.9로 집계됨(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News Release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 January 2023," 2023. 3. 8.,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jolts_03082023.pdf, 검색일자: 2023. 3. 26.)

254)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ongoing) 이자율 인상'이라는 표현 대신, '안정적 이자율 인상(policy firming)'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의 은행 파산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힘

255)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3. 2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ptabl20230322.pdf>, 검색일자: 2023. 3. 26.

- (경제성장률) FOMC 위원들이 전망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의 중간값은 0.4%로 장기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은 경기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전망
- (물가상승률) FOMC 위원들이 전망한 올해 PCE 물가상승률의 중간값은 3.3%이며, 2024년은 2.5%, 2025년은 2.1%로 물가상승률이 2%로 회귀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기준금리) 현 경제 전망하에서, FOMC 위원들이 전망한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5.1%이며, 2024년 말에는 4.3%, 2025년 말에는 3.1%로 발표

표 3-I-13 미국 2023년 3월 FOMC 경제 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3년	2024년	2025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0.4	1.2	1.9	1.8
- 12월 전망치	0.5	1.6	1.8	1.8
실업률	4.5	4.6	4.6	4.0
- 12월 전망치	4.6	4.6	4.5	4.0
PCE 물가상승률	3.3	2.5	2.1	2.0
- 12월 전망치	3.1	2.5	2.1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3.6	2.6	2.1	
- 12월 전망치	3.5	2.5	2.1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 4분기 수치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은 해당 연도 4분기의 실업률을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3. 22., p. 2 (Table 1)

- 미국의 은행시스템은 견고하고 탄력적이거나,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더 긴축되면서 경제활동, 고용,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불확실
-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정책 결정) 장기 물가상승률 2%와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 25bp 인상
 - 향후 물가상승률이 2%로 회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누적적인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시사,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표 3-I-14 미국 2023년 4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PCE 물가	5.3	5.4	5.1	4.2	4.4
재화	5.1	4.7	3.6	1.6	2.1
서비스	5.4	5.7	5.8	5.5	5.5
식품 및 에너지 제외 PCE 물가	4.6	4.7	4.7	4.6	4.7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April 2023," 2023. 5. 26., p. 12 (Table 11),
<https://www.bea.gov/news/2023/personal-income-and-outlays-april-2023>, 검색일자: 2023. 5. 28.

- 파월 의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debt ceiling)는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연준이 채무불이행의 잠재적인 여파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예단해 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파월 의장은 부채 한도 문제는 재정정책적 사안이며, 의회와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표명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5~5.25% 유지 (2023. 6. 14.)²⁵⁸⁾

-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5.25%로 유지

25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Press Release, June 14,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614a1.pdf>, 검색일자: 2023. 6. 26.

- (경제 동향) 경제활동은 완만한(modest) 속도로 확장
- (고용시장) 최근 몇 개월간 고용은 탄탄하며(robust),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표 3-I-15 미국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PCE 물가	5.3	5.4	5.1	4.2	4.4
재화	5.1	4.7	3.6	1.6	2.1
서비스	5.4	5.7	5.8	5.5	5.5
식품 및 에너지 제외 PCE 물가	4.6	4.7	4.7	4.6	4.7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April 2023," 2023. 5. 26., p. 12 (Table 11),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5/pi0423.pdf>, 검색일자: 2023. 6. 26.

- 물가상승률 목표를 고정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더 긴축되면서 경제, 고용,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정도는 불확실함
 - 장기적으로는 최대 고용과 2%의 물가상승률 유지가 목표
 - 국채(Treasury securities)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비롯한 자산은 기존의 계획대로 축소해 나갈 예정
- 2%의 물가상승률로 회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강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누적, 통화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시사,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것임
- 함께 발표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1.0%, 물가상승률은 3.2%, 올해 말 적정 기준 금리는 5.6%로 전망

표 3-I-16 미국 2023년 6월 FOMC 경제 전망 요약(SEP)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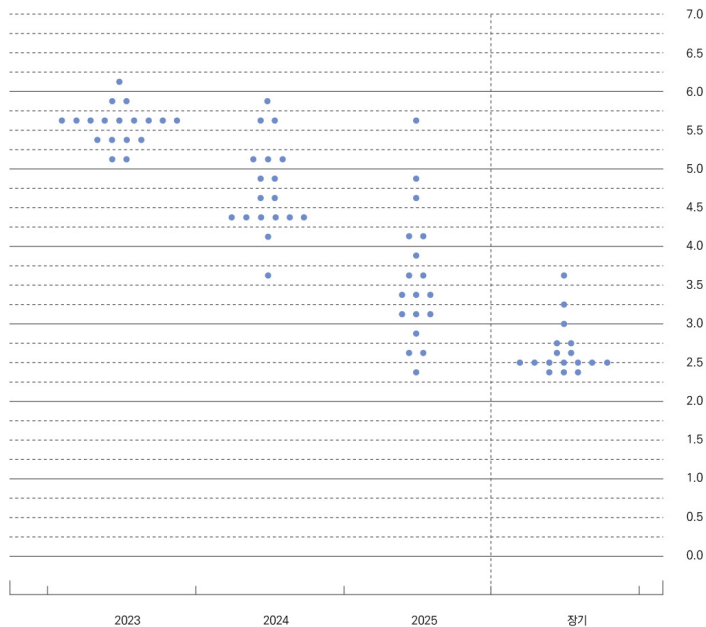
전망치(중간값)	2023년	2024년	2025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1.0	1.1	1.8	1.8
- 3월 전망치	0.4	1.2	1.9	1.8
실업률	4.1	4.5	4.5	4.0
- 3월 전망치	4.5	4.6	4.6	4.0
PCE 물가상승률	3.2	2.5	2.1	2.0
- 3월 전망치	3.3	2.5	2.1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3.9	2.6	2.2	
- 3월 전망치	3.6	2.6	2.1	
기준금리 전망	5.6	4.6	3.4	2.5
- 3월 전망치	5.1	4.3	3.1	2.5

-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의 4분기 수치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은 해당 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
- 4.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6. 14., p. 2 (Table 1)

그림 3-I-7 미국 2023년 6월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단위: %)



주: 각 점은 각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목표 기준금리의 중간점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6. 14., p. 4 [Figure 2]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성장률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2년 4분기 GDP(속보) 발표(2023. 1. 26.)²⁵⁹⁾
 - 2022년 4분기 실질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은 2.9%를 기록하여 전 분기(3.2%)에 비해 하락
 -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실질 성장률은 1.0%로, 2021년 4분기(전년 동기) 대비 실질 성장률(5.7%)에 비해 대폭 하락
 - 2022년 연간 실질 성장률은 2.1%로 전년(5.9%)에 비해 성장세 둔화²⁶⁰⁾
 - 개인소비 증가율은 전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2.3% → 2.1%), 성장기여도가 (1.42%p) 가장 큰 부문으로 나타남
 - 재화 소비 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0.4% → 1.1%), 서비스 소비 증가율이 하락(3.7% → 2.6%)
 - 민간투자 증가율은 4분기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9.6% → 1.4%), 고정투자의 감소세는 더 확대(-3.5% → -6.7%)
 - 주택 투자 성장률은 전 분기와 비슷한 -26.7%로 나타났으며, 비주택 투자 성장세는 크게 둔화(6.2% → 0.7%)
 -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27%p이며, 재고증감의 기여도가 1.46%p로 크게 나타남
 - 수출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14.6% → -1.3%) 수입의 감소세가 약화되어 (-7.3% → -4.6%)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대폭 하락(2.86%p → 0.56%p)
 -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었으며(1.65%p → -0.15%p), 수입의 성장기여도도 하락(1.21%p → 0.71%p)
 - 정부지출 중 연방지출의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3.7% → 6.2%), 주 및

259)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2 (Advance Estimate)," 2023. 1. 16., <https://www.bea.gov/news/2023/gross-domestic-product-fourth-quarter-and-year-2022-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3. 2. 15.

260) 2022년 연간 명목 GDP 성장률은 9.2%이며, 연간 명목 GDP는 25조 4,613억달러

지방정부 지출의 증가율은 하락(3.7% → 2.3%)하여 정부지출 증가율은 보합세(3.7% → 3.7%)

-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64%p로 개인소비 다음으로 성장기여도가 큰 부문으로 나타남

표 3-I-17 미국 2022년 경제성장률

(단위: %)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연간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2021년	2022년
GDP(실질)	6.3	7.0	2.7	7.0	-1.6	-0.6	3.2	2.9	-1.6	-0.6	3.2	2.9	5.9	2.1
개인소비	10.8	12.1	3.0	3.1	1.3	2.0	2.3	2.1	1.3	2.0	2.3	2.1	8.3	2.8
재화	25.3	11.6	-7.9	2.3	-0.1	-2.6	-0.4	1.1	-0.1	-2.6	-0.4	1.1	12.2	-0.4
서비스	4.0	12.3	9.2	3.5	2.1	4.6	3.7	2.6	2.1	4.6	3.7	2.6	6.3	4.5
민간투자	-5.4	0.9	10.4	32.0	5.4	-14.1	-9.6	1.4	5.4	-14.1	-9.6	1.4	9.0	3.8
고정투자	9.7	5.8	-1.1	0.6	4.8	-5.0	-3.5	-6.7	4.8	-5.0	-3.5	-6.7	7.4	-0.3
비주택	8.9	9.9	0.6	1.1	7.9	0.1	6.2	0.7	7.9	0.1	6.2	0.7	6.4	3.6
주택	11.6	-4.9	-5.8	-1.1	-3.1	-17.8	-27.1	-26.7	-3.1	-17.8	-27.1	-26.7	10.7	-10.7
재고증감	-	-	-	-	-	-	-	-	-	-	-	-	-	-
순수출	-	-	-	-	-	-	-	-	-	-	-	-	-	-
수출	0.4	4.9	-1.1	23.5	-4.6	13.8	14.6	-1.3	-4.6	13.8	14.6	-1.3	6.1	7.2
수입	7.6	7.9	6.6	18.6	18.4	2.2	-7.3	-4.6	18.4	2.2	-7.3	-4.6	14.1	8.1
정부지출	6.5	-3.0	-0.2	-1.0	-2.3	-1.6	3.7	3.7	-2.3	-1.6	3.7	3.7	0.6	-0.6
연방	17.3	-6.9	-7.2	0.0	-5.3	-3.4	3.7	6.2	-5.3	-3.4	3.7	6.2	2.3	-2.5
주/지방	0.1	-0.4	4.5	-1.6	-0.4	-0.6	3.7	2.3	-0.4	-0.6	3.7	2.3	-0.5	0.6
GDP(명목)	11.7	13.8	9.0	14.3	6.6	8.5	7.7	6.5	6.6	8.5	7.7	6.5	10.7	9.2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 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냄

2.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2 (Advance Estimate) Full Release & Tables," 2023. 1. 26., p. 8 (Table 1)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도 1분기 GDP(속보) 발표(2023. 4. 27.)²⁶¹⁾
 - 전기 대비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1%(연율 기준)를 기록하여 전 분기(2.6%)에 비해 하락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6%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3.7%)에 비해 하락
 - 전기 대비 2023년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5.1%이며, 명목 GDP 규모는 26조 4,659억달러(계절 조정된 연율 기준)로 집계됨
 - GDP 성장률에는 개인소비, 수출, 정부지출, 비주거 고정투자의 증가가 반영되었으며, 재고투자 및 주거부문 고정투자의 감소에 의해 상쇄됨
 - 개인소비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며(1.0% → 3.7%), 개인소비의 성장기여도 또한 증가(0.70%p → 2.48%p)
 - 수출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3.7% → 4.8%), 수출의 성장기여도 또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됨(-0.44%p → 0.54%p)
 - 수입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5.5% → 2.9%), 수입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0.86%p → -0.43%p)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며(3.8% → 4.7%),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 또한 소폭 증가(0.65%p → 0.81%p)
 - 재고투자 감소에 따라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가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1.47%p → -2.26%p)
 - 주거부문 고정투자의 증가율은 전 분기 -25.1%에 이어 -4.2%로 나타나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주거부문 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전 분기에 이어 음의 성장기여도를 보임(-1.20%p → -0.17%p)

261) 미국 상무국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3 (Advanced Estimate)," 2023. 4. 27.,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4/gdp1q23_adv.pdf, 검색일자: 2023. 5. 1.

표 3-I-18 미국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단위: %)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Q1	Q2	Q3	Q4	Q1	Q2	Q3	Q4	Q1
GDP(실질)	2.1	6.3	7.0	2.7	7.0	-1.6	-0.6	3.2	2.6	1.1
개인소비	2.7	10.8	12.1	3.0	3.1	1.3	2.0	2.3	1.0	3.7
재화	-0.5	25.3	11.6	-7.9	2.3	-0.1	-2.6	-0.4	-0.1	6.5
서비스	4.5	4.0	12.3	9.2	3.5	2.1	4.6	3.7	1.6	2.3
민간투자	4.0	-5.4	0.9	10.4	32.0	5.4	-14.1	-9.6	4.5	-12.5
고정투자	-0.2	9.7	5.8	-1.1	0.6	4.8	-5.0	-3.5	-3.8	-0.4
비주택	3.9	8.9	9.9	0.6	1.1	7.9	0.1	6.2	4.0	0.7
주택	-10.6	11.6	-4.9	-5.8	-1.1	-3.1	-17.8	-27.1	-25.1	-4.2
재고증감	-	-	-	-	-	-	-	-	-	-
순수출	-	-	-	-	-	-	-	-	-	-
수출	7.1	0.4	4.9	-1.1	23.5	-4.6	13.8	14.6	-3.7	4.8
수입	8.1	7.6	7.9	6.6	18.6	18.4	2.2	-7.3	-5.5	2.9
정부지출	-0.6	6.5	-3.0	-0.2	-1.0	-2.3	-1.6	3.7	3.8	4.7
연방	-2.5	17.3	-6.9	-7.2	0.0	-5.3	-3.4	3.7	5.8	7.8
주/지방	0.7	0.1	-0.4	4.5	-1.6	-0.4	-0.6	3.7	2.6	2.9
GDP(명목)	9.2	11.7	13.8	9.0	14.3	6.6	8.5	7.7	6.6	5.1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 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냄

2.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3 (Advance Estimate) Full Release & Tables," 2023. 4. 27., p. 7 (Table 1)

나. 노동시장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1월 고용통계 발표(2023. 2. 3.)²⁶²⁾

- 2023년 1월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5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²⁶³⁾, 경제 활동참가율은 62.4%로 나타남
 - 2022년 초 이후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12월(62.3%)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팬데믹 이전 수치(2020년 2월 63.3%)보다 낮게 나타남

26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Th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2023. 2. 3.,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isit_02032023.pdf, 검색일자: 2023. 2. 20.

263) 미 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January Jobs Report," 2023. 2. 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2/03/remarks-by-president-biden-on-the-january-jobs-report-2/>, 검색일자: 2023. 2. 20.

표 3-I-19 미국 2023년 1월 고용통계

(단위: 천명)

	2022년 1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생산가능인구 ¹⁾	263,202	264,708	264,844	265,962	2,760
경제활동인구	163,633	164,527	164,966	165,832	2,199
경제활동참가율(%)	62.2	62.2	62.3	62.4	0.2%p
취업자 수	157,122	158,527	159,244	160,138	3,016
인구 대비 취업률(%) ²⁾	59.7	59.9	60.1	60.2	0.5%p
실업자 수	6,511	6,000	5,722	5,694	-817
실업률(%)	4.0	3.6	3.5	3.4	-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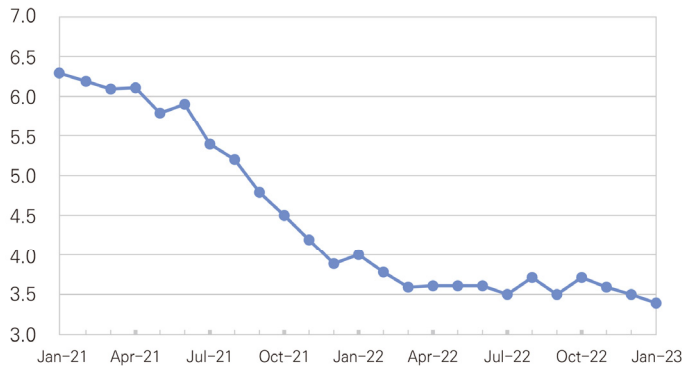
주: 1) 인구 대비 취업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
 2) 생산가능인구는 비기관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로, 기관(감옥, 노인보호소 등)에서 생활하지 않고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 16살 이상의 사람을 지칭

1. 월별 실업률은 계절 조정된 수치로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Th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2023. 2. 3., <Summary table A>

그림 3-I-8 미국 실업률(2021년 1월~2023년 1월)

(단위: %)



주: 월별 실업률은 계절 조정된 수치로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Th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2023. 2. 3., [Chart 1]

- 2022년 12월 구인·이직 통계(JOLTS)에 의하면²⁶⁴⁾, 구직자 수 대비 일자리 비율은 1.9로 집계됨²⁶⁵⁾

264)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 December 2022," 2023. 2. 1.,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jolts_02012023.pdf, 검색일자: 2023. 2. 22.

265) 해당 수치는 파월 의장이 2월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치이며(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3. 2. 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

- 2022년 12월 기준, 새로운 구인공고(job openings) 건수는 1,101만건이며, 새로운 고용 건수는 617만건, 퇴직 건수는 589만건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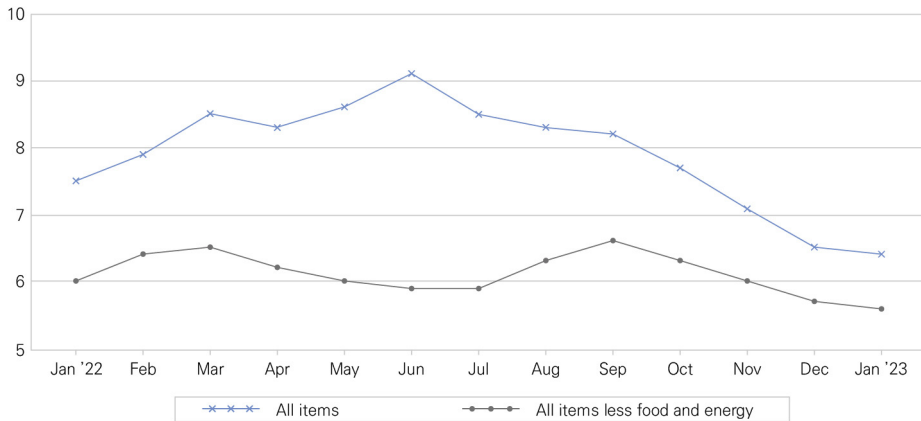
* 구인 건수: 1069만건(2022. 9.) → 1,051만건(2022. 10.) → 1,044만건(2022. 11.)

다. 물가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2023. 2. 14.)²⁶⁶⁾
 - 미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 조정) 0.5%이며,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
 -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 조정) 0.4%이며, 전년 동월 대비 5.6%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 포함)은 최근 12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

그림 3-I-9 미국 CPI 상승률(2022년 1월~2023년 1월)

(단위: %)



- 주: 1.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로 계절 조정되지 않은 수치임
 2. All items는 CPI 상승률을 의미하며, All itmes less food and energy는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을 의미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anuary 2023," 2023. 2. 14., p. 2 [Chart 2]

acenter/files/FOMCpresconf20230201.pdf, 검색일자: 2023. 2. 17.),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노동 지표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강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266)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anuary 2023," 2023. 2. 14.,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cpi_02142023.pdf, 검색일자: 2023. 2. 20.

- 구성항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주거부문의 물가 상승이 1월 CPI 상승률의 절반 가까이 기여하여 CPI 상승률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 휘발유, 천연가스가 기여도에서 그 뒤를 따름
 - 주거부문의 경우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0.8% → 0.7%) 가중치가 가장 높아 주거부문의 상승이 오름세에 가장 크게 기여
 - 식료품(0.4% → 0.5%), 자동차 연료(-6.9% → 2.3%), 가스(3.5% → 6.7%) 등의 부문은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CPI 상승 견인

표 3-I-20 미국 2023년 1월 CPI 상승률

(단위: %)

	가중치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1월
CPI	100.0	0.2	0.1	0.5	6.4
식료품	13.5	0.6	0.4	0.5	10.1
에너지	6.9	-1.4	-3.1	2.0	8.7
에너지상품	3.5	-2.1	-7.2	1.9	2.8
연료유	0.2	1.7	-16.6	-1.2	27.7
자동차 연료	3.3	-2.2	-6.9	2.3	1.9
에너지 서비스	3.4	-0.6	1.9	2.1	15.6
전력	2.5	0.5	1.3	0.5	11.9
가스	0.9	-3.4	3.5	6.7	26.7
식료품·에너지 제외	79.5	0.3	0.4	0.4	5.6
상품	21.4	-0.2	-0.1	0.1	1.4
서비스	58.2	0.5	0.6	0.5	7.2
주거	34.4	0.6	0.8	0.7	7.9
의료	6.7	-0.5	0.3	-0.7	3.0
교통	5.8	0.3	0.6	0.9	14.6

주: 1.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계절 조정된 변화율이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계절 조정되지 않음

2. 가중치(relative importance)는 2022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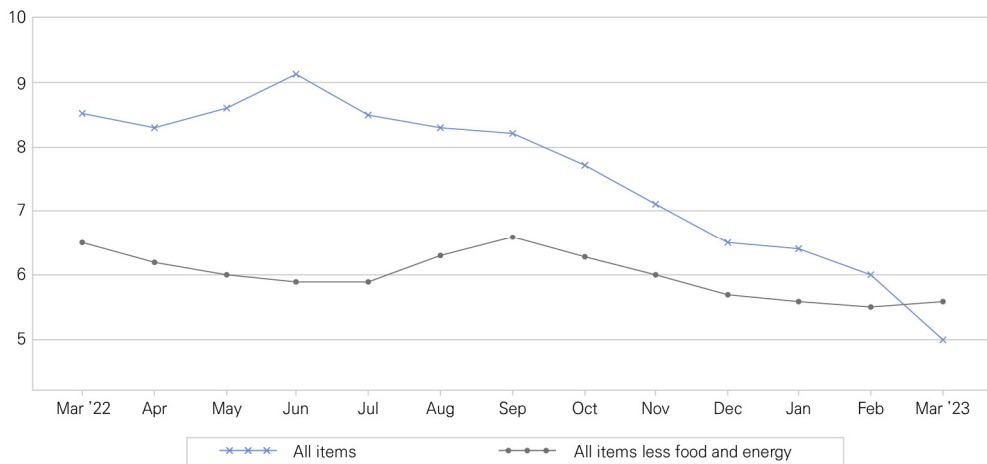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anuary 2023," 2023. 2. 14., <Table 1>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2023. 4. 12.)²⁶⁷⁾

-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계절 조정)이며, 전년 동월 대비 5.0%를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5.0%)은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²⁶⁸⁾
 -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 조정) 0.4%이며, 전년 동월 대비 5.6% 기록
- 가중치가 높은 주거부문의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물가의 하락을 상쇄
 - 주거부문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에너지부문은 전월 대비 3.5% 감소

그림 3-I-10 미국 CPI 상승률(2022년 3월~2023년 3월)

(단위: %)



- 주: 1.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을 의미하며, 계절 조정되지 않은 수치로 나타냄
2. All items는 CPI 상승률을 의미하며,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는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을 의미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March 2023," 2023. 4. 12., p. 2 [Chart 2],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cpi_04122023.pdf, 검색일자: 2023. 4. 24.

267)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March 2023," 2023. 4. 12.,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cpi_04122023.pdf, 검색일자: 2023. 4. 24.

268)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해당 수치에 관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고 발표(자료: 미 백악관, "Statement from President Joe Biden on the March Consumer Price Index," 2023. 4. 1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12/statement-from-president-joe-biden-on-the-march-consumer-price-index/>, 검색일자: 2023. 4. 24.)

표 3-I-21 미국 2023년 3월 CPI 상승률

(단위: %)

	가중치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3월
CPI	100.0	0.5	0.4	0.1	5.0
식료품	13.5	0.5	0.4	0.0	8.5
가정식	8.7	0.4	0.3	-0.3	8.4
외식	4.8	0.6	0.6	0.6	8.8
에너지	7.0	2.0	-0.6	-3.5	-6.4
에너지상품	3.6	1.9	0.5	-4.6	-17.0
연료유	0.1	-1.2	-7.9	-4.0	-14.2
자동차 연료	3.4	2.3	0.9	-4.7	-17.3
에너지 서비스	3.4	2.1	-1.7	-2.3	9.2
전력	2.6	0.5	0.5	-0.7	10.2
가스	0.8	6.7	-8.0	-7.1	5.5
식료품·에너지 제외	79.5	0.4	0.5	0.4	5.6
상품	21.3	0.1	0.0	0.2	1.5
서비스	58.2	0.5	0.6	0.4	7.1
주거	34.5	0.7	0.8	0.6	8.2
의료	6.5	-0.7	-0.74	-0.5	1.0
교통	5.8	0.9	1.1	1.4	13.9

주: 1. 전월 대비 상승률은 계절 조정(외식과 연료유 제외)한 수치임

2. 가중치는 2023년 2월 기준임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March 2023," 2023. 4. 12., <Table 1>,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cpi_04122023.pdf, 검색일자: 2023. 4. 24.

II 일본²⁶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회계연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표 3-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1. 18.	일본은행, 금융정책 운영방침 발표
2023. 1. 19.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3. 1. 23.	일본 재무성,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2023. 1. 24.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발표
2023. 2. 3.	일본 내각부, 「일본경제 2022~2023」 발표
2023. 2. 21.	일본 재무성, 2023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
2023. 3. 7.	일본 재무성, 2022회계연도 3분기 예산사용현황 발표
2023. 3. 9.	일본 내각부, 2022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3. 3. 28.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
2023. 4. 21.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3. 4. 28.	일본은행, 금융정책 운영방침 발표
2023. 5. 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3. 6. 8.	일본 내각부, 2023년 1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3. 6. 16.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각의 결정

2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은 선임연구원(jeunlee@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일본 재무성,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2023. 1. 23.)^{270), 271)}
 - 재무성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114조 3,812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3%)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²⁷²⁾
 - (세출) 일반세출은 72조 7,317억엔 규모이며,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조 3,992억엔, 국채비 25조 2,503억엔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14조 3,812억엔 규모
 -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69조 4,400억엔, 기타 수입은 9조 3,182억엔 규모이며, 공채금은 35조 6,230억엔 규모
 - 공채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조 3,030억엔 감소(-3.5%)
 -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역사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일본이 직면한 많은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재정건전화를 이행해 나가면서 풍요로운 일본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
 - 대내외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수요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²⁷³⁾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와 일체적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 및 세제 개정이 착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책임 있는 경제 및 재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달

270)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政府案」,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fy2023.html#R5kokkai, 검색일자: 2023. 1. 25.

271) 재무성, 「第211回国会における鈴木財務大臣の財政演説」,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statement/fiscal_policy_speech/20230123.html, 검색일자: 2023. 1. 25.

272)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2월호 및 원문 참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2월호, 2022. 12. 29., pp. 28~31.,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28>, 검색일자: 2023. 1. 26.)

273)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2022년 12월 2일 국회 통과 확정되었으며 총 28조 9,222억엔 규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2월호 및 원문 참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2월호, 2022. 12. 29., p. 2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28>, 검색일자: 2023. 1. 26.)

성을 위해 세출·세입 양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2023. 3. 28.)²⁷⁴⁾

- 일본 재무성이 지난 1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114조 3,812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3%) 규모의 예산안²⁷⁵⁾이 정부안대로 성립
 - (기본방침) 2023년 예산은 고물가를 극복하면서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함
 - (세출) 일반세출 72조 7,317억엔(전년 당초 예산 대비 +8.0%),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조 3,992억엔(전년 당초 예산 대비 +3.3%), 국채비 25조 2,503억엔(전년 당초 예산 대비 +3.7%)
 -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69조 4,400억엔(전년 당초 예산 대비 +6.4%), 기타 수입 9조 3,182억엔(전년 당초 예산 대비 +71.4%), 공채금 35조 6,230억엔(전년 당초 예산 대비 -3.5%)
- 기시다 총리는 2023회계연도 예산은 새로운 자본주의²⁷⁶⁾의 실현, 어린이·육아지원 강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²⁷⁷⁾
 -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인적 투자 시행,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탈탄소 양립 도모를 위해 GX 관련 관민투자 추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식량안전보장 강화,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추진 등
 - (어린이·육아지원 강화) 출산육아 일시금을 50만엔으로 인상, 임신부·육아 가

274) 일본 재무성, <https://www.bb.mof.go.jp/hdocs/bxss010br5.html>, 검색일자: 2023. 3. 28.

27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3.) 「주요국 예산안 - 일본」을 참조(<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79>, 검색일자: 2023. 3. 28.)

276) ① 성장전략, ② 분배전략, ③ 포용적 사회 실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은 과학기술혁신,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등 지방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경제안보정책이 있으며, 분배전략으로는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 인적 투자 강화, 차세대 중산층의 유지가 있고,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 및 여성 참여 증대, 고독·고립 대책,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음

277) 일본 총리실,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328kaiken.html, 검색일자: 2023. 3. 29.

- 정에 합계 10만엔 상당의 경제지원 패키지 유지, 4월 1일 ‘어린이 가정청’ 창설 등
-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2023년도부터 5년간 총 43조엔 규모의 방위예산을 확보하여 안보를 강화하고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도 국민의 생명 및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

나. 결산

- 일본 재무성, 2022회계연도 3분기²⁷⁸⁾ 예산사용현황²⁷⁹⁾ 발표(2023. 3. 7.)²⁸⁰⁾
 - 2022회계연도 3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57조 1,754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6조 9,329억엔으로 세입액이 세출액을 30조 2,425억엔 초과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9조 2,195억엔 대비 3분기 수입 비율은 41.0%로 전년 동기 대비 10.3%p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잉여금 수입 감소에 기인
 -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16.6%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소에 기인
 - 2022회계연도 3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2.8%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5%를 기록

278) 일본의 2022회계연도는 2022. 4. 1.~2023. 3. 31.로, 2022회계연도 3분기는 2022. 9. 1.~2022. 12. 31.을 의미

279) 예산사용현황(予算使用の状況)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 각 부처 등이 매월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 상황과 소관·조직·항별 지출 상황 및 특별회계 등의 수지 상황에 관해 보고한 내용을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

280)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2/04_3gai.html, 검색일자: 2023. 3. 9.

표 3-II-2 일본의 2022회계연도 3분기 예산사용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예산액 (A)	1,392,195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 ¹⁾ (D)	1,616,468	세입 예산액 (A)	4,525,290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 ¹⁾ (D)	4,542,878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571,754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69,329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031,770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981,109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 (B/A)	41.0% (51.3%)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 대비 지출 비율 (E/D)	16.6% (16.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 (B/A)	22.8% (22.6%)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 대비 지출 비율 (E/D)	21.5% (19.1%)
3분기 누계(C)	796,898	3분기 누계(F)	875,793	3분기 누계(C)	3,562,148	3분기 누계(F)	3,572,24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57.2% (65.1%)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 대비 비율(F/D)	54.1% (52.7%)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78.7% (76.7%)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 대비 비율(F/D)	78.6% (77.7%)

주: 1)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3. 7.

02 주요 정책 및 이슈

다. 경제 및 재정 전망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1. 19.)²⁸¹⁾

- (경제) 2023년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경제성장 둔화에 의한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으나 코로나19 및 공급 제약의 영향 완화로 경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잠재성장률은 디지털화 및 인적 자본 투자의 진전에 의한 생산성 상승과 설비 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 스톡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이며,

281)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1月)」, 2023. 1. 19.,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1b.pdf>, 검색일자: 2023. 1. 19.

정부의 각종 정책과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3%대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후, 정부 정책에 의한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되어 2023년 1.6~1.8%를 기록할 전망
 - 이후 거시적 수급 격차 개선, 높은 중장기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정부 정책에 의한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 감소 등으로 물가지수 상승 폭이 완만하게 확대되어 2024년 물가상승률이 1.8~1.9%에 이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우크라이나 정세, 원자재 가격, 대내외 감염병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경제 전망은 2022~2023년은 하방위험이 우세하나 2024년은 대체로 상·하방 위험이 균형을 이룰 전망이며, 물가 전망은 상방위험이 우세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5. 1.)²⁸²⁾

- (경제) 2023회계연도 중반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경제성장 둔화에 기인하여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으나 보복 소비 수요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단 전망 기간 후반에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물가) 2023회계연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상승 폭이 축소되어 1.7~2.0%를 기록할 전망
 - 이후 거시적 수급 격차 개선,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에 기인하여 중장기 예상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 폭이 다시 완만하게 확대되어 2024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8~2.1%를 기록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우크라이나 정세,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282)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4月)」, 2023. 5. 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4b.pdf>, 검색일자: 2023. 5. 19.

- (경제) 2023회계연도는 하방위험이 우세하나 이후에는 대체로 상·하방 위험이 균형을 이룰 전망
- (물가) 2023회계연도는 상방위험이 우세하나 2025회계연도에는 하방위험이 우세할 전망
- (2023년 1월 전망과 비교) 2022~2023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은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23~2024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임금 인상 등에 기인하여 상향 조정

표 3-II-3 일본의 2022~2025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2회계연도	1.2~1.2 <1.2>	3.0¹⁾
2023년 1월 전망	1.9~2.0 <1.9>	3.0~3.0 <3.0>
2023회계연도	1.1~1.5 <1.4>	1.7~2.0 <1.8>
2023년 1월 전망	1.5~1.9 <1.7>	1.6~1.8 <1.6>
2024회계연도	1.0~1.3 <1.2>	1.8~2.1 <2.0>
2023년 1월 전망	0.9~1.3 <1.1>	1.8~1.9 <1.8>
2025회계연도	1.0~1.1 <1.0>	1.6~1.9 <1.6>

주: 1) 20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적치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4月)」, 2023. 5. 1., p.10 일부 발췌,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4b.pdf>, 검색일자: 2023. 5. 19.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발표(2023. 1. 24.)²⁸³⁾, ²⁸⁴⁾

- (시나리오별 가정) 2023년까지의 경제 동향은 내각부 수정 경제 전망을 토대로, 2024년 이후는 과거 실적 및 현재 경제 동향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GDP 및 물가 등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²⁸⁵⁾
- (경제 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2024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모두 1.1%로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민간 제휴 투자 촉진으로 생산성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하여,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 명목 GDP 성장률은 3.2%로 전망
- (재정 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2024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1.3%, 채무잔고는 215.3%로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경제대책의 효과 등으로 인한 민간수요 확대, 세출 증가 둔화 등으로 2024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1.0%, 채무잔고는 210.7%로 전망
- (중장기 경제 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명목 및 실질 GDP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0%대 중반을 유지할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203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6%, 명목 GDP 성장률은 3.1%로 전망
- (중장기 재정 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0.9% 수준으로 전망 기간 동안 적자 폭이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후반에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세출효율화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 -0.2%, 2026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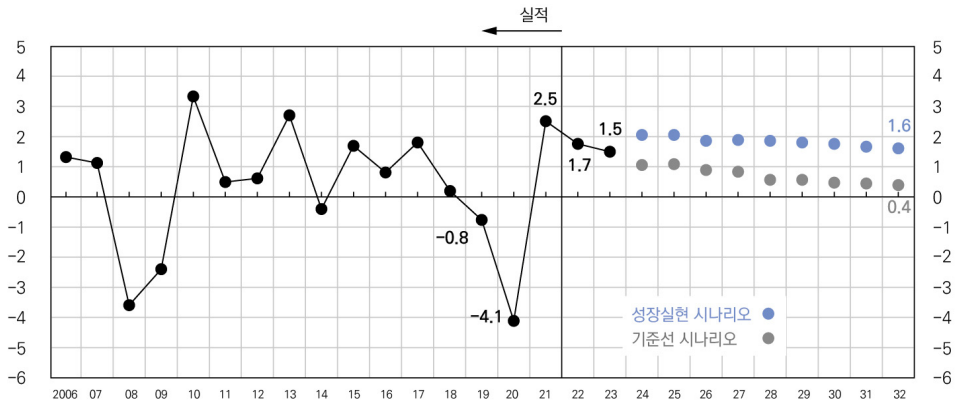
283)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 1月 24日 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1. 24.,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284) 이 전망의 목적은 경제 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는 것

285) • (기준선 시나리오)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유지됨을 가정(향후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 약 0.6% 가정 등)
 • (성장실현 시나리오)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 재생 목표를 과거 실적 수준으로 실현하는 경우(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기 이전 실제 경험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속도로 증가 등을 가정(현재 약 0.5% 수준에서 약 1.4%까지 상승)

그림 3-II-1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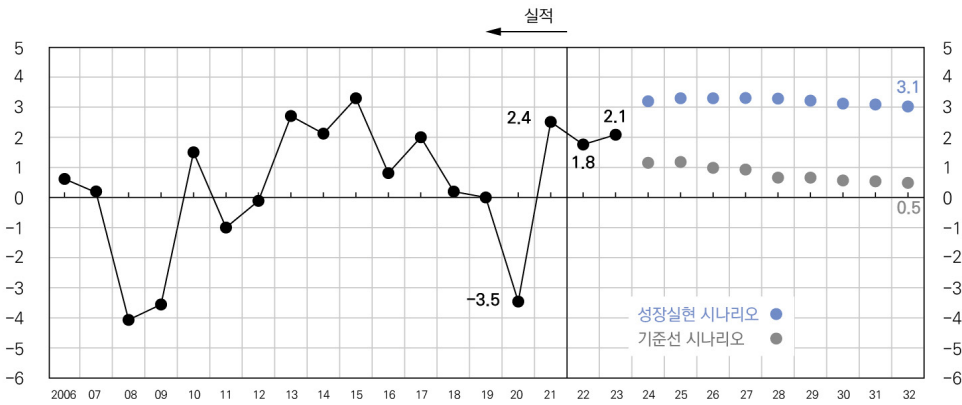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 1月 24日 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1. 24., pp. 4~5,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그림 3-II-2 일본의 명목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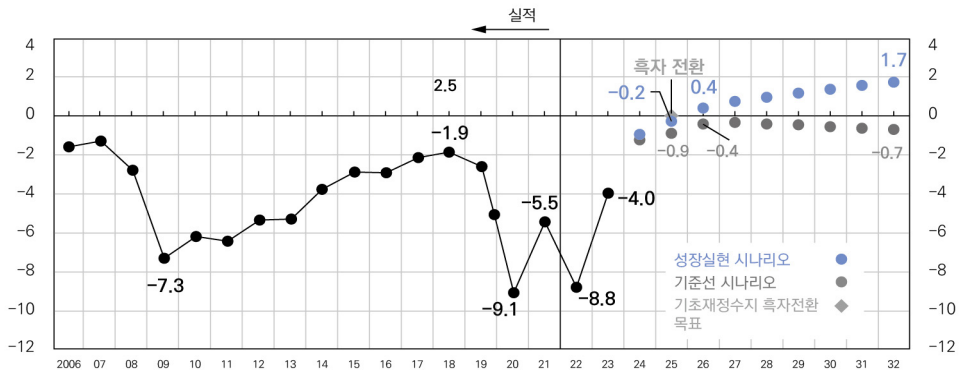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 1月 24日 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1. 24., pp. 4~5,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그림 3-II-3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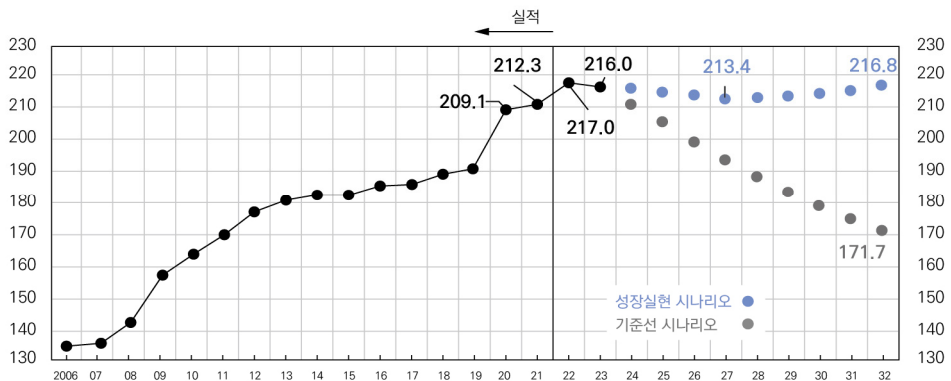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 1月 24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1. 24., p. 6,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그림 3-II-4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단위: %)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 1月 24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1. 24., p. 6,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5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3. 1. 26.

■ 일본 재무성, 2023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2023. 2. 21.)^{286), 287)}

- 2023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2년 47.5%(실적 전망치)보다 0.7%p

286)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2023. 2. 2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20230221.html>, 검색일자: 2023. 2. 21.

287)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text{국민소득}}$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 + \text{재정적자}}{\text{국민소득}}$

감소한 46.8%로 전망

-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²⁸⁸⁾를 더한 ‘잠재 국민부담률’은 2022년 61.1%(실적 전망치)보다 7.2%p 감소한 53.9%로 전망
-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0년 기준 일본은 47.9%, 미국은 32.3%, 영국은 46.0%이며, 독일은 54.0%, 스웨덴은 54.5%, 프랑스는 69.9%로 나타남²⁸⁹⁾

표 3-II-4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일본 (2023년)	일본 (2020년)	미국 (2020년)	영국 (2020년)	독일 (2020년)	스웨덴 (2020년)	프랑스 (2020년)
사회보장부담률	18.7	19.8	8.5	11.7	23.7	5.1	24.9
조세부담률	28.1	28.2	23.8	34.3	30.3	49.5	45.0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7.1	15.0	18.5	17.4	5.7	4.1	13.2
국민부담률	46.8	47.9	32.3	46.0	54.0	54.5	69.9
(GDP 대비)	(34.5)	(33.5)	(26.1)	(34.7)	(40.7)	(36.7)	(47.7)
잠재 국민부담률	53.9	62.9	50.8	63.4	59.7	58.6	83.0
(GDP 대비)	(39.7)	(43.9)	(41.1)	(47.8)	(66.4)	(39.5)	(56.7)

주: 1. 일본(2023년)은 전망치, 일본(2020년)은 실적치. 그 외 국가들은 2020년 잠정치

2.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기준. 단 일본은 사회보장기금,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신탁기금을 제외

원출처: 수치는 일본의 경우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자료 등,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Revenue Statistics*, OECD Economic Outlook(2022. 11.) 자료를 사용

자료: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 2023. 2. 2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302b.pdf>, 검색일자: 2023. 2. 21.

288)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자료: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3. 2. 2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302a.pdf>, 검색일자: 2023. 2. 21.

289)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2020년 20.0%, 2021년 22.1%이며, 국민부담률(GDP 대비)의 경우 2020년 27.7%, 2021년 29.9%. 자료: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_cd=1122, 검색일자: 2022. 2. 21.

나. 경제 및 재정 정책

■ 일본 내각부, 「일본경제 2022~2023」 발표(2023. 2. 3.)²⁹⁰⁾

- (개요) 일본 내각부는 매년 「일본경제」 시리즈를 공표하여 일본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 이번 보고서에서 2022년 일본 경제 동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물가 상승 시기에서 가계·기업의 동향 및 과제를 분석
- (일본 경제 동향) 세계적인 물가 상승 및 엔저에 기인하여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교역조건 개선, 서비스 수출 확대, 기업 환경 정비, 성장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등이 필요
 - 2022년은 민간수요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있었으나 세계적인 물가 상승 및 엔저에 기인하여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전환 등 교역조건 개선, 서비스 수출 확대가 필요
 - 물가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내 수급 및 임금에 의한 상승 압력은 한정적으로, 임금 인상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기업이 적절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
 - 2023년 세계 경제 감속 우려로 내수 진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통한 해외수요 확대가 중요
- (개인소비 회복을 위한 과제) 식품·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중점적 지원, 구조적인 임금 인상 환경 구축, 사회 전체의 노동 생산성 강화가 중요
 -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 증가가 관건
 - 2010년대 이후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임금 인상 환경 구축, 고령자 취업 촉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290) 일본 내각부, 「日本經濟 2022 - 2023 一物価上昇下の本格的な成長に向けて一」, 2023. 2. 3, <https://www5.cao.go.jp/keizai3/2022/0203nk/keizai2022-2023.pdf.html>, 검색일자: 2023. 2. 9.

- 2022년에는 고용 환경이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만큼 노동 이동이 활발하지 않아 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인재 배치를 위한 재교육(reskilling) 강화,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등이 필요
- (기업부문 동향 및 수출 확대) 설비투자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로 기업의 기대 성장률 향상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수출 확대를 위해 성장세가 큰 중소기업 지원,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지원체제 정비가 중요
- 2022년은 제조업 중심의 수익 회복 지속 및 엔저로 인한 수익 증가로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로, 정부 투자를 시작으로 기업의 기대 성장률을 높여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
- 무역수지 안정화를 위해 녹색 전환(GX) 촉진 등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구조로 전환할 필요
- 수출금액이 대·중견기업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수출의 성장 속도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인적 지원,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지원체제 정비가 중요

■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²⁹¹⁾ 각의 결정(2023. 6. 16.)²⁹²⁾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구조적인 변화 및 과제 극복을 위해, 30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기업부문에 대한 투자욕증가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 창조를 목표로 함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빠른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개혁방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 등을 제시하면서, 정책 수행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방침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침을 제시

291)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은 총리가 의장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매년 6월경 각의 결정되며,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함께 경제, 재정, 행정, 개혁의 중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 본 방침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제도 개혁을 진행(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honebuto-index.html>, 검색일자: 2023. 6. 19.)

292)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3 加速する新しい資本主義~未来への投資の拡大と構造的賃上げの実現~」, 2023. 6. 16.,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3/2023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6. 19.

- ‘새로운 자본주의’의 빠른 실현
 -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구조적 임금 인상 실현, 인적 투자 강화, 두터운 중산층 형성
 - 투자 확대 및 경제·사회 개혁 실행
 - 민관(官民) 제휴에 의한 국내 투자 확대, 공급망 강화
 - GX(Green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 실현 가속
 - 스타트업 육성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 임팩트 투자²⁹³⁾ 촉진
 - 민관(官民) 연계를 통한 과학 기술·혁신 추진
 - 국제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인바운드 전략 전개
 -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
 - 여성 활약, 공생·공조 사회 만들기,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²⁹⁴⁾, 고독·고립 대책 등을 통한 포용적인 사회 실현
 - 지역 및 중소기업 활성화
-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 외교·안전보장 강화, 경제 안전보장정책 추진, 에너지 안전보장 강화, 식품 안전보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성장 추진, 대외경제 제휴 촉진,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투자 촉진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
 - 방재·감재·국토강인화²⁹⁵⁾,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
 - 국민생활 안전·안심을 위한 정책 추진
-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 중장기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재정 운영

293) 임팩트 투자란 재무 수익과 함께 긍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적 및 환경적 임팩트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는 투자 행위를 의미(자료: 일본 GSG 국내자문위원회 홈페이지, <https://impactinvestment.jp/impact-investing/about.html>, 검색일자: 2023. 6. 23.)

294) 일본 후생노동성 버블 붕괴 후 1990~2000년대 고용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구직활동을 실시해 현재도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취업빙하기 세대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안내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hushoku_hyogaki_shien/, 검색일자: 2023. 6. 23.)

295) 국토강인화란 지진 및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강한 나라·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의미(자료: 내각관방, 「すすめよう災害に強い国づくり」, 2022. 1.,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oujinka/pdf/susumeyou_pamphlet_r401.pdf, 검색일자: 2023. 6. 26.)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세출 구조를 평시로 조정
- 재정정책은 주로 잠재성장률 상승과 사회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며, 민간수요를 촉진하여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투자를 추진, 철저한 와이즈 스펀딩²⁹⁶⁾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재정 개혁 추진
-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²⁹⁷⁾를 위한 노력을 지속
- 다년도 계획적인 투자의 재원을 일체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세입을 다년도로 조정
-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 책정을 위해 디지털 시대의 행정·재정 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등을 검토
- 세출 전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성과 지향 지출을 위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EBPM²⁹⁸⁾)을 통한 대응 등을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실현, 신약 개발 역량 강화, 확실한 의료 DX의 실현
 - 차기 진료수가 등 개정과 관련하여 물가 급등, 임금 상승, 지원 수단이 감소 등의 상황에서 인재 확보 필요성, 환자·이용자·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필요한 대응 실시
-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제사회를 위한 사회자본 정비
- 국가 및 지방의 새로운 역할 분담
- 양질의 공교육 지원 등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교육·연구 활동의 추진
- 202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침
 -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경제구조 강화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경제 회복 및

296) 세출 재검토를 통해 정책 효과가 낮은 세출을 철저히 삭감하고 정책 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자료: 일본 내각부 「ワイズスポンディングの徹底に向けたEBPMの強化 ~ 政策効果を高め、予算の質を向上させる取組~, 2020. 7. 8.,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0/0708/shiryo_03-2.pdf, 검색일자: 2023. 6. 26.)

297) 일본은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 2018」을 통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기존 2020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 현재까지 재정건전화 목표가 유지되고 있음 (자료: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8について」, 2018. 6. 1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18/2018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6. 1.)

298)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은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

- 2024년도 예산에서는 본 방침,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²⁹⁹⁾, 2021년 기본 방침을 기반으로 경제·재정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나 중요한 정책에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 구조적 임금 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빠른 실현, 방위력 강화를 비롯한 대외 환경 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탄력 있는 예산을 편성
- 증거기반 정책 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단년도 예산주의 폐해 시정에 힘쓰고 중장기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재정 운영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추진

다. 금융정책

- 일본은행, 금융정책 운영방침 발표(2023. 1. 18.)³⁰⁰⁾,³⁰¹⁾
 - 일본은행은 1월 17~18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향후 금융정책 운영에 관한 방침을 결정
 - 3월에 개최할 다음 금융정책결정 회의까지 기존 금융시장 조절방침과 자산 매입 방침을 유지

299) 2022년 6월 7일 각의 결정되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중장기 경제·재정 운용 및 2023년 예산과 관련한 내용 수록.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및 원문 참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7.,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10>, 검색일자: 2023. 2. 1.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について』, 2022. 6. 17.,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2/2022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6. 27.

300)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3. 1. 18., https://www.boj.or.jp/mopo/mpmdec/mpr_2023/k230118a.pdf, 검색일자: 2023. 1. 18.

301) 금융정책 운영의 기본방침은 금융정책결정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회의에서 금융 및 경제 정세에 관한 검토 실시와 동시에 금융시장 조절방침과 당면의 금융정책 운영방침을 결정하여 결정 내용을 일본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금융시장 조절방침에 따라 일본은행은 매일 금융조절 금액 및 방법을 결정하여 자금의 공급과 흡수를 실시함(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outline/index.htm>, 검색일자: 2023. 1. 19.)

- (금융시장 조절방침) 3월에 개최할 다음 금융정책결정 회의까지 기존 장·단기 금리 수준과 장·단기 금리 운용을 유지
 - (장단기 금리) 단기 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 대상 -0.1% 금리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0% 정도로 유지되도록 운용
 - *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0.427%(1. 24. 기준)³⁰²⁾
 - (금리 운용)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을 기존 $\pm 0.5\%$ 로 유지
- (자산 매입방침) ETF 및 J-REIT³⁰³⁾ 자산은 각각 연간 약 12조엔, 약 1,800억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CP 등 사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대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입
 - 이후 CP 등 사채 매입 잔고를 코로나19 감염병 확대 전과 비슷한 수준(CP 등 약 2조엔, 사채 등 약 3조엔)으로 서서히 조정할 예정이며, 매입 잔고의 조정은 회사채 발행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
 - * 현재 일본은행의 CP 등 잔고는 2.7조엔, 사채 잔고는 8.2조엔(1. 20. 기준)³⁰⁴⁾
- ‘대출 증대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³⁰⁵⁾의 대출 실행 기한 1년 연장, ‘기후변화 대응 운영’³⁰⁶⁾의 대상 확대, ‘공통 담보 자금 공급 운영’³⁰⁷⁾ 확충을 결정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장·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양적·질적금융

302) 재무성, 「国債金利情報(令和5年 1月 24日)」, <https://www.mof.go.jp/>, 검색일자: 2023. 1. 25.

303) J-REIT는 많은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으로 오피스빌딩, 상업시설,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임대 수입이나 매매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법률상 투자신탁의 일종.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REIT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일본에서는 앞에서 J를 붙인 J-REIT라고 지칭. J-REIT는 투자신탁의 일종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01년 9월에 처음 상장(자료: 사단법인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 <https://www.toushin.or.jp/rei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23. 1. 26.)

304) 일본은행, 「営業毎旬報告(令和5年 1月 20日 現在)」, <https://www.boj.or.jp/statistics/boj/other/acmai/release/2023/ac230120.htm>, 검색일자: 2023. 1. 26.

305) 2012년 12월 도입.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행동과 기업 및 가계의 긍정적인 자금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대출 잔고를 늘리는 금융기관에 요청에 따라 증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까지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 공급(자료: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term_cond/yoryo80.htm, 검색일자: 2023. 1. 19.)

306)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담보를 담보로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투융자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자금 공급 운영(자료: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pe_x/index.htm, 검색일자: 2023. 1. 19.)

307) 일본은행이 차입된 담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자금 공급 운영(자료: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pe_a/index.htm, 검색일자: 2023. 1. 19.)

완화를 지속

- 본원통화(monetary base)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확대 방침을 지속
-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시하며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논의

■ 일본은행, 금융정책 운영방침 발표(2023. 4. 28.)³⁰⁸⁾

- 일본은행은 4월 27~28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향후 금융정책 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
- 6월에 개최할 다음 금융정책결정 회의까지 기존 금융시장 조절방침과 자산 매입 방침을 유지
 - (금융시장 조절방침) 6월에 개최할 다음 금융정책결정 회의까지 기존 장·단기 금리 수준과 장·단기 금리 운용을 유지
 - (장단기 금리) 단기 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 대상 -0.1% 금리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0% 정도로 유지되도록 운용
 - *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0.432%(5. 26. 기준)³⁰⁹⁾
 - (금리 운용)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을 기존 $\pm 0.5\%$ 로 유지
 - (자산 매입방침) ETF 및 J-REIT 자산은 각각 연간 약 12조엔, 약 1,800억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CP 등은 약 2조엔의 잔고를 유지
 - 회사채 등은 코로나19 확대 전과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엔으로 매입 잔고를 서서히 조정하고, 매입 잔고의 조정은 회사채 발행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
 - * 현재 일본은행의 CP 등 잔고는 2.5조엔, 사채 잔고는 7.9조엔(5. 20. 기준)³¹⁰⁾
-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본은행은 2%의

308)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3. 4. 28,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3/k230428a.pdf, 검색일자: 2023. 5. 19.

309) 일본 재무성, 「国債金利情報(令和5年 5月 23日)」, <https://www.mof.go.jp/>, 검색일자: 2023. 5. 30.

310) 일본은행, 「営業毎旬報告(令和5年 5月 20日 現在)」, <https://www.boj.or.jp/statistics/boj/other/acmai/release/2023/ac230520.htm>, 검색일자: 2023. 5. 23.

-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장·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양적·질적금융 완화를 지속
- 본원통화(monetary base)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확대 방침을 지속
 -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논의
-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1990년대 후반 이후 25년간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시행하였던 다양한 금융완화책이 일본 경제·물가·금융 등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 다방면의 검토를 시행할 예정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성장률 동향

- 일본 내각부, 2022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3. 3. 9.)³¹¹⁾
 - (4분기) 2022년 4분기 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0.0%(연율 0.1%), 명목 GDP 성장률은 1.2%(연율 4.7%)로 집계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3%p로 5분기 만에 음의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4%p로 2분기 만에 양의 기여도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0.6% 감소하여 6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은 0.0% 감소하여 6분기 연속 감소, 민간기업설비는 0.5% 감소하여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5%p로, 전 분기 대비 0.6%p 감소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여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

311) 일본 내각부, 「2022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3. 9.,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2/qe224_2/pdf/gaiyou2242.pdf, 검색일자: 2023. 3. 16.

냈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19 백신 비용 등 증가에 기인

-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여행(방일 외국인의 국내 소비 등)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1.5% 증가, 재화·서비스 수입은 광고 서비스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4% 감소
- (연간)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0%, 명목 GDP 성장률은 1.3%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2021년 실질 GDP 성장률 2.1%, 명목 GDP 성장률 1.9%)
 -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내외수요 기여도는 내수 1.6%p, 외수 -0.6%p를 나타냈으며, 명목 GDP 성장률에 대한 내외수요 기여도는 내수 4.6%p, 외수 -3.4%p
 - GDP 디플레이터는 0.2%로 전년 대비 0.4%p 증가

표 3-II-5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 조정) 추이

(단위: %, %p)

구분	2021	2022				2022 ¹⁾
	Q4	Q1	Q2	Q3	Q4	Q4
실질 GDP	1.1	-0.5	1.2	-0.3	0.0	0.1
국내수요	1.1	0.0	1.0	0.3	-0.3	-1.3
민간수요	2.0	0.1	1.1	0.4	-0.6	-2.3
민간최종소비지출	3.0	-0.9	1.6	0.0	0.3	1.3
민간주택	-1.3	-1.7	-1.9	-0.4	-0.0	-0.0
민간기업설비	0.6	-0.3	2.1	1.5	-0.5	-2.0
민간재고변동	(-0.1)	(0.7)	(-0.3)	(0.1)	(-0.5)	-
공적수요	-1.5	-0.3	0.7	0.1	0.3	1.3
정부최종소비지출	-1.0	0.5	0.8	0.1	0.3	1.0
공적고정자본형성	-3.2	-3.2	0.6	0.7	-0.3	-1.2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0)	(-0.5)	(0.1)	(-0.6)	(0.4)	-
재화·서비스 수출	0.4	1.1	1.5	2.5	1.5	6.0
재화·서비스 수입	0.3	3.8	0.9	5.5	-0.4	-1.6
명목 GDP	0.7	0.2	1.0	-0.8	1.2	4.7
GDP 디플레이터	-0.4	0.7	-0.1	-0.5	1.1	-

주: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 = 재화·서비스 수출 - 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일본 내각부, 「2022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3. 9.,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표 3-II-6 일본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20	2021	2022
실질 GDP	-4.3	2.1	1.0
국내수요	-3.4	1.1	1.6
민간수요	-5.5	0.7	2.3
민간최종소비지출	-4.7	0.4	2.1
민간주택	-7.9	-1.1	-4.6
민간기업설비	-4.9	0.8	1.8
민간재고변동	(-0.5)	(0.2)	(0.5)
공적수요	2.6	2.3	-0.3
정부최종소비지출	2.4	3.5	1.5
공적고정자본형성	3.4	-1.9	-7.0
공적재고변동	(-0.0)	(-0.0)	(-0.0)
재화·서비스 순수출 ¹⁾	(-0.8)	(1.0)	(-0.6)
재화·서비스 수출	-11.6	11.7	4.9
재화·서비스 수입	-6.8	5.0	7.9
명목 GDP	-3.4	1.9	1.3
GDP 디플레이터	0.9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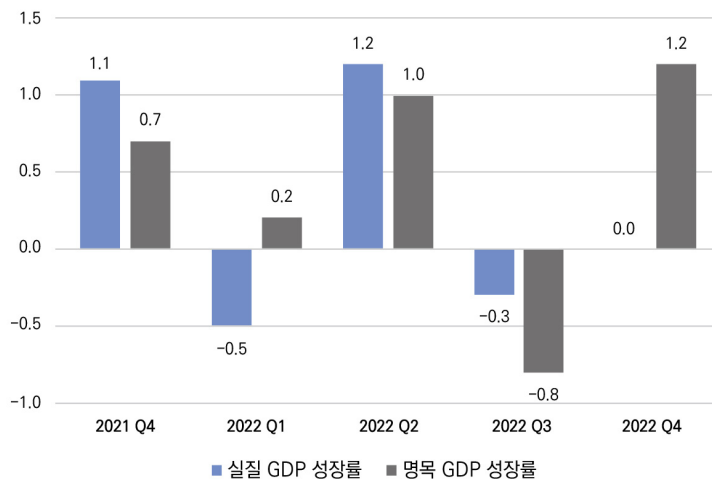
주: 1) 재화·서비스 순수출 = 재화·서비스 수출 - 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일본 내각부, 「2022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3. 9., p. 9〈표 4-1〉 및 p. 10〈표 4-2〉 재구성

그림 3-II-5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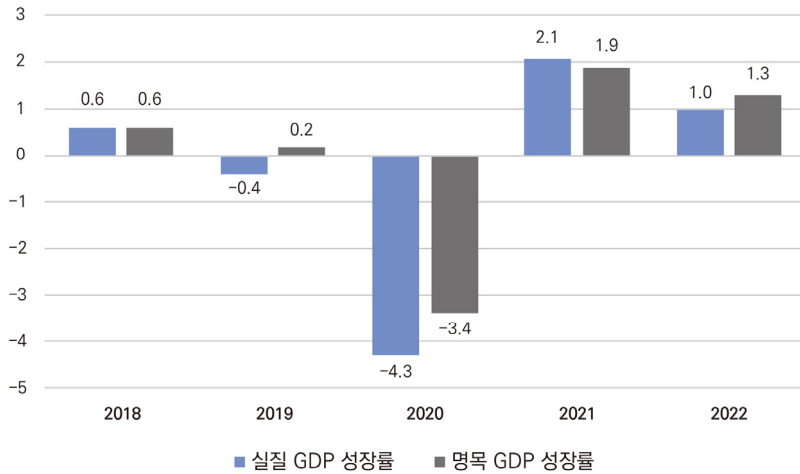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2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3. 9., p. 5〈표 3-1〉 및 p. 7〈표 3-3〉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3-II-6 일본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2년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3. 9., p. 9〈표 4-1〉 및 p. 10〈표 4-2〉를 바탕으로 작성

■ 일본 내각부, 2023년 1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3. 6. 8.)³¹²⁾

- 전 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연율 2.7%)로 3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연율 8.3%)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냄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1.0%p로 2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3%p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여 2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자동차, 외식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0.5% 증가하였으며, 민간주택 및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각각 -0.1%, 1.4%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전 분기 대비 0.8%p 증가한 0.4%p로,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 폭이 확대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

312) 일본 내각부, 「2023년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6. 8.,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3/qe231_2/pdf/gaiyou2312.pdf, 검색일자: 2023. 6. 20.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여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1%를 나타냈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1.5% 증가하여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반도체 제조장치, 자동차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의약품 등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2.3% 감소

표 3-II-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22				2023	2023 ¹⁾
	Q1	Q2	Q3	Q4	Q1	Q1
실질 GDP	-0.7	1.4	-0.4	0.1	0.7	2.7
국내수요	-0.2	1.3	0.3	-0.3	1.0	4.0
민간수요	-0.2	1.5	0.3	-0.5	1.2	4.9
민간최종소비지출	-1.1	1.7	0.1	0.2	0.5	2.1
민간주택	-1.8	-1.8	-0.5	0.1	-0.1	-0.3
민간기업설비	-0.3	2.2	1.5	-0.6	1.4	5.6
민간재고변동	(0.5)	(-0.1)	(-0.0)	(-0.4)	(0.4)	-
공적수요	-0.2	0.7	0.0	0.3	0.3	1.4
정부최종소비지출	0.7	0.7	0.0	0.2	0.1	0.5
공적고정자본형성	-3.8	0.7	0.9	0.0	1.5	6.3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5)	(0.1)	(-0.6)	(0.4)	(-0.3)	-
재화·서비스 수출	1.2	1.5	2.5	2.0	-4.2	-15.9
재화·서비스 수입	3.7	1.0	5.6	-0.0	-2.3	-8.9
명목 GDP	0.1	1.2	-0.9	1.2	2.0	8.3
GDP 디플레이터	0.8	-0.1	-0.5	1.1	1.3	-

주: 1) 연율 환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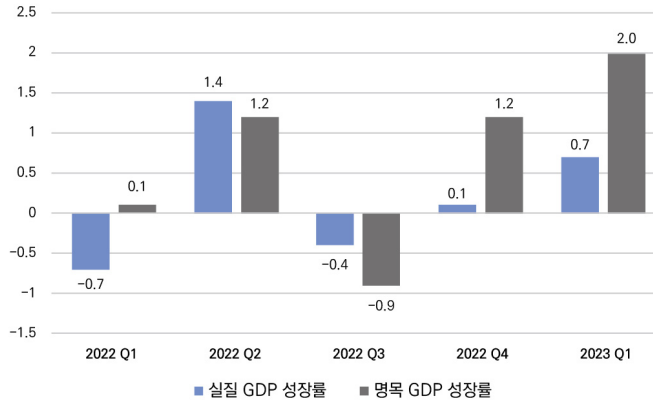
2) 재화·서비스 순수출 = 재화·서비스 수출 - 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일본 내각부, 「2023年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6. 8.,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그림 3-II-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3년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6. 8., p. 5 <표 3-1> 및 p. 7 <표 3-3>을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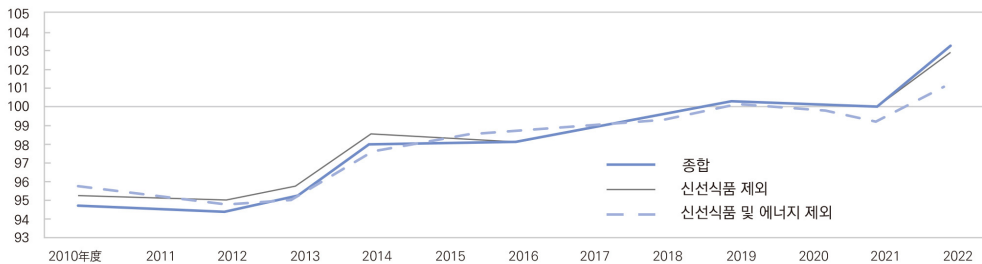
나. 물가

■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2회계연도³¹³⁾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3. 4. 21.)³¹⁴⁾

- 2022회계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2% 상승한 103.2를 기록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3.0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하였고,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4로 전년 대비 2.2% 상승

그림 3-II-8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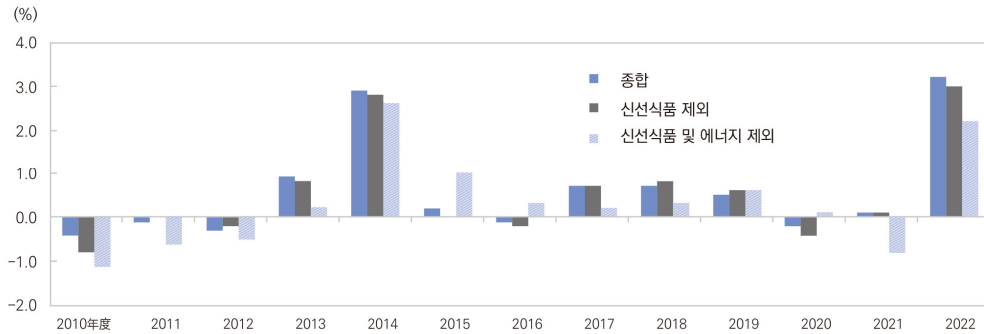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全国・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2023. 4. 21., p. 4 [그림 7]

313) 일본의 2022회계연도는 2022. 4. 1.~2023. 3. 31.

314)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全国・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2023. 4. 21., <https://www.stat.go.jp/data/cpi/sokuhou/nendo/pdf/zen-nd.pdf#page=4>, 검색일자: 2023. 4. 21.

그림 3-II-9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대비)

(단위: %)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全国・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2023. 4. 21., p. 4 [그림 8]

표 3-II-8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 = 100, %)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합	지수	94.7	94.6	94.4	95.2	98.0	98.2	98.2	98.9	99.6	100.1	99.9	100.0	103.2
	전년 대비 상승률 (%)	-0.4	-0.1	-0.3	0.9	2.9	0.2	-0.1	0.7	0.7	0.5	-0.2	0.1	3.2
신선식품 제외	지수	95.3	95.2	95.0	95.8	98.5	98.5	98.2	98.9	99.7	100.3	99.9	99.9	103.0
	전년 대비 상승률 (%)	-0.8	0.0	-0.2	0.8	2.8	0.0	-0.2	0.7	0.8	0.6	-0.4	0.1	3.0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95.8	95.2	94.8	95.0	97.5	98.4	98.8	99.0	99.3	100.0	100.0	99.2	101.4
	전년 대비 상승률 (%)	-1.1	-0.6	-0.5	0.2	2.6	1.0	0.3	0.2	0.3	0.6	0.1	-0.8	2.2

주: 통계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지수의 기준 연도인 2020년은 역년 기준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全国・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2023. 4. 21., p. 4 (표 7)

III 독일³¹⁵⁾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회계연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표 3-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1. 12.	독일 연방 재무부, 2022회계연도 잠정결산 발표
2023. 1. 25.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연간 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3)』 발표
2023. 3. 2.	독일 연방 하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법안 승인
2023. 4. 5.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3년 봄 공동 경제 전망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 발표
2023. 4. 19.	독일 연방 내각, 「건축물에너지법」 개정안에 합의
2023. 3. 30.	독일 연방 및 주정부, 난방유, 목재 펠릿 등 기타 에너지원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에 합의
2023. 4. 22.	독일 내무부, 연방 및 지방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
2023. 3. 29.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공공채무 잠정실적 발표
2023. 4. 5.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
2023. 5. 11.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4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
2023. 4. 26.	독일 연방 내각, 2023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채택
2023. 4. 26.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봄 경제 전망 발표
2023. 5. 2.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제27차 회의 개최
2023. 5. 17.	독일 연방정부, 초등학교 종일 교육·돌봄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시작
2023. 6. 16.	독일 연방 의회, 장기요양보험 개혁을 위한 법률 승인
2023. 6. 14.	독일 연방 내각, 국가 안보 전략(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채택

자료: 저자 작성

3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혜란 선임연구원(hrhan@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독일 연방 재무부, ‘2024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수치’ 미발표³¹⁶⁾
 - 독일은 통상 매년 3월 중순까지 연방 내각에서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수치(Eckwerte)³¹⁷⁾를 확정함
 -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정 내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독일 내각의 기본 수치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결국 기본 수치 발표 없이 연방 내각에서 2024년 예산안을 채택 (2023. 7. 5.)³¹⁸⁾함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4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³¹⁹⁾ 결과 발표(2023. 5. 11.)³²⁰⁾
 - 이번 세수추계는 2023년 연방정부 봄 경제 전망의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계
 -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추계 가정(-0.4%) 대비 개선된 0.4%를 가정
 - 단채 임금협약 결과와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명목 임금 증가율은 직전 추계 대비 상향 조정된 반면, 명목 주택 건설투자는 직전 추계 대비 둔화 될 것으로 가정

316) Reuters, “German minister delays 2024 budget plans as coalition squabbles,” 2023. 3. 10.,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minister-delays-2024-budget-plans-coalition-squabbles-media-2023-03-09/>, 검색일자: 2023. 3. 27.

ZDF, “Lindner verschiebt Haushalts-Vorlage,” 2023. 3. 10., <https://www.zdf.de/nachrichten/politik/finanzminister-lindner-haushalt-2024-100.html>, 검색일자: 2023. 3. 27.

317) 세출, 세입, 차입액 규모 등 포함

318)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재정동향」 2023년 7월호를 참조 바람

319) 독일은 연 2회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함.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중앙은행, 거시경제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함

320)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Müssen uns den haushaltspolitischen Realitäten stellen,” 보도자료, 2023. 5. 1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5/2023-05-11-ergebnisse-der-164-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3. 5. 16.

독일 연방정부, “Finanzminister Lindner zur Steuerschätzung,” 2023. 5. 1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euerschaetzung-lindner-2023-2189462>, 검색일자: 2023. 5. 16.

- 최근 세법 변화 등을 고려한 세수추계 결과, 총세입은 2023년에 9,206억유로, 2024년에 9,622억유로로 직전 추계(2022년 10월) 대비 각각 168억유로, 308억유로 하향 조정됨
 - 직전 추계 대비 세입 규모는 연 평균 약 30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주로 2022년 연간 세법과 「인플레이션 보상법」³²¹⁾의 영향에 기인
 - 세법 변경으로 인한 전망 기간 내 세입 변화 규모는 연간 약 340억유로 수준
 -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전망 기간 동안 직전 추계 대비 연간 약 40억유로의 추가 수입이 예상
 - 직전 추계 대비 연도별 세입 규모는 감소하나 2025년에 처음으로 세입이 1조 유로를 초과할 전망

표 3-III-2 독일의 제164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방 정부	금액	337.2	359.9	377.3	394.6	409.1	421.3
	전년 대비 증감률	8.0	6.7	4.8	4.6	3.7	3.0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9.8	-13.0	-15.4	-15.0	-17.0
주 정부	금액	384.5	380.7	398.2	417.2	431.8	445.8
	전년 대비 증감률	8.3	-1.0	4.6	4.8	3.5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6.6	-13.7	-13.8	-14.5	-16.1
지방 자치 단체	금액	135.4	139.1	144.4	152.9	159.8	165.0
	전년 대비 증감률	7.3	2.8	3.8	5.9	4.5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7	-3.4	-3.4	-2.8	-3.3
EU	금액	38.6	40.8	42.2	44.5	45.6	46.3
	전년 대비 증감률	-2.5	5.5	3.6	5.5	2.4	1.5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4	-0.7	0.0	0.0	0.1
총 세수	금액	895.7	920.6	962.2	1,099.3	1,046.2	1,078.5
	전년 대비 증감률	7.5	2.8	4.5	4.9	3.7	3.1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16.8	-30.8	-32.5	-32.3	-36.3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4.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3. 5. 1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4-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5, 검색일자: 2023. 5. 16.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4.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2," 2023. 5. 1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4-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3. 5. 16.

321) 독일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통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기본 공제액 및 자녀 공제액 인상 등을 추진함

-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출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설정할 것이며, 매년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과 공급 측면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

나. 결산

■ 독일 연방 재무부, 2022회계연도 잠정결산 발표(2023. 1. 12.)³²²⁾

- (수입) 신규 차입을 제외한 연방정부 수입은 목표 대비 90억유로 높은 3,659억 유로를 기록
 - 2022회계연도 조세수입은 목표 대비 87억유로 높은 3,372억유로를 기록
- (지출) 2022회계연도의 총지출은 계획 대비 145억유로 낮은 4,813억유로를 기록
- (신규 차입) 따라서 실제 신규 차입이 계획보다 적게 소요되어 2022회계연도의 신규 차입은 계획 대비 235억유로 낮은 1,154억유로를 기록
 - 2022회계연도의 신규 차입 규모는 이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서 크게 감소
- (자본지출) 2022회계연도의 자본지출은 462억유로로, 2020년(503억유로)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
 - 자본지출의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89.7%로, 전년 대비 12.5%p 상승
- (평가)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연방정부가 추진한 종합적 지원 조치의 효과가 이번 결산에서 나타났다고 평가
 - 정부 지원 조치의 영향은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기여
 - 또한 이전 연도에 비해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상당히 감소해 2022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필요한 규모와 조화를 이루는 데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다만 이는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이 정규 절차에 비해 늦어졌던 영향도 반영된 것임

322)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23,5 Mrd. Euro weniger Schulden als geplant.“, 2023. 1.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1/2023-01-12-vorlaeufiger-haushaltsabschluss-2022.html>, 검색일자: 2023. 1. 17.

표 3-III-3 독일의 2022회계연도 잠정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2022(목표) (A)	2022(잠정결산) (B)	차이 (B) - (A)
총지출	557.1	495.8	481.3	-14.5
총수입	557.1	495.8	481.3	-14.5
조세수입	313.5	328.4	337.2	+8.7
세외수입	28.2	28.4	28.7	+0.3
신규차입	215.4	138.9	115.4	-23.5
비고: 투자	45.8	51.5	46.2	-5.3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23,5 Mrd. Euro weniger Schulden als geplant.“, 2023. 1.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1/2023-01-12-vorlaufiger-haushaltsabschluss-2022.html>, 검색일자: 2023. 1. 17.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주요 경제·재정 전망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연간 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3)』³²³⁾ 발표(2023. 1. 25.)³²⁴⁾
 - (경제 전망)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0.2%, 2024년에 1.8%로 전망
 - (GDP) 이번 보고서의 2023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0.2%로, 지난해 가을의 전망치(-0.4%)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세계 경제의 성장 약세, 높은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9%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6.0%로 다소 하락할 전망
 - (고용)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늘어난 약 4,570만명, 실업률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5.4%로 전망

323) 『연간 경제보고서』는 매년 1월에 발표되며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 우선순위와 경제 전망을 제시함

324) 독일 연방 내각, "Robust durch die Krise - Wohlstand erneuern," 2023. 1. 2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jahreswirtschaftsbericht-2023-2160264>, 검색일자: 2023. 2. 6.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3 - Wohlstand erneuern“,” 보도자료, 2023. 1. 2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1/20230125-jahreswirtschaftsbericht-2023-wohlstand-erneuern.html>, 검색일자: 2023. 2. 6.

표 3-III-4 2023년 독일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2	2023	2024
GDP(가격 조정)	1.9	0.2	1.8
취업자 수	1.3	0.3	0.2
실업률	5.3	5.4	5.2
소비자물가지수	7.9	6.0	2.8

자료: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3 – Wohlstand erneuern“,” 보도자료, 2023. 1. 2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1/20230125-jahreswirtschaftsbericht-2023-wohlstand-erneuern.html>, 검색일자: 2023. 2. 6.

- (재정 전망)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는 연방예산의 부채규정 기준 한도³²⁵⁾를 다시 준수할 예정
 - 2023년 연방예산의 신규 차입 규모는 456억유로로, 전년(1,154억유로) 대비 축소될 전망
 - 2023년 연방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를 제공(기후 보호, 인프라 현대화, 교육 개선 등)
 - 미래에 대한 투자, 위기 대응, 국방 강화 등을 위해 기후변화기금, 경제안정화 기금과 같은 특별기금 자금을 활용
- (주요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연간 경제보고서』에서 2023년 주요 경제·재정정책 이슈를 제시
 - (에너지 공급 보장 및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공급 문제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등)
 - (혁신적 공급정책 수립) 투자 유치와 산업·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 공급정책에 초점을 두고 세계 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산업용 전기요금 정비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철폐, 숙련 근로자 유치·육성 등 추진
 - (전략적 자주권 강화, 무역정책 재정비 등) 양자 간 EU 무역 협정의 신속한 비준 및 추가 협상 추진, 원자재 공급원 다양화, 유럽 내부 시장 강화, 기술·디지털

325)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

탈·에너지 정책의 자주권 강화 등

- (사회적 결속 강화)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장, 보육 및 교육의 질 개선과 아동·가족 정책 강화, 사회·생태적 주택 건설 촉진 및 기후 친화적 임대주택 지원, 현안 과제와 연계된 지역 발전 정책 등
- 이 외에도 공공투자를 통한 현대화 및 재정 안정성 보장, 기후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개발 등 추진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3년 봄 공동 경제 전망(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³²⁶⁾ 발표(2023. 4. 5.)³²⁷⁾

- (경제성장률)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그룹의 2023년 봄 공동 경제 전망에 따르면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2023년에 0.3%, 2024년에 1.5% 증가할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가을 전망 대비 0.7%p 상향 조정,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4%p 하향 조정됨
 - 공급 병목현상 완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제조업부문이 향후 경제 활동 증가에 기여하고 실질임금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민간 소비도 향후 경제 확장에 기여할 전망
 - 반면 건설부문의 생산은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해 둔화 예상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9%에서 2023년에 6.0%로 서서히 하락하고, 2024년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2.4%로 더욱 하락할 전망

326)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 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 전망에 지침을 제공

327) Gemeinschaftsdiagnose,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 Gemeinschaftsdiagnose #1-2023*, 2023. 4.,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4/GD_1_2023.pdf, 검색일자: 2023. 4. 11.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2023. 4. 5.,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3/04/05/gemeinschaftsdiagnose-fruehjahr-2023-inflation-im-kern-hoch-angebotskraefte-jetzt-staerken/>, 검색일자: 2023. 4. 11.

Gemeinschaftsdiagnose,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보도자료, 2023. 4. 5.,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4/iwh-press-release_2023-08_Gemeinschaftsdiagnose_1-23_de.pdf, 검색일자: 2023. 4. 11.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2023. 4. 5., <https://www.ifo.de/fakten/2023-04-05/gemeinschaftsdiagnose-fruehjahr-2023-inflation-im-kern-hoch>, 검색일자: 2023. 4. 11.

- 당분간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정부 지원 조치 및 높은 임금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충분한 하락에는 시간이 걸리며, 내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완화될 전망
- (노동시장) 우크라이나 난민의 취업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업자 수는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내년에 다시 감소할 전망
 - 취업자 수는 2022년 4,560만명에서 2023년에 4,59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재정수지) 재정정책이 당분간 확장적으로 유지되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만 감소한 2.2%로 예상
 - 내년에 재정정책이 보다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0.9%로 하락할 전망
- (경상수지) 지난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GDP 대비 경상수지가 2024년에 6.0%로 다시 상승할 전망
 -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악화되었던 교역 조건은 2024년 말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위험 요인) 국제 금융부문의 혼란,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가계 반응의 불확실성, 동계 천연가스 수급 등을 경제 전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
- (정책 제언) 독일의 생산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변화, 에너지 전환 관련 공급 측면의 개혁이 필요

표 3-III-5 2023년 봄 공동 경제 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3.7	2.6	1.8	0.3	1.5
취업자 수(천명)	44,915	44,980	45,570	45,900	45,963
실업률	5.9	5.7	5.3	5.4	5.3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3.1	6.9	6.0	2.4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147.6	-134.3	-101.3	-90.8	-39.9
(GDP 대비 %)	-4.3	-3.7	-2.6	-2.2	-0.9
경상수지(십억유로)	238.7	265.0	145.1	232.2	257.5
(GDP 대비 %)	7.0	7.4	3.8	5.7	6.0

자료: Gemeinschaftsdiagnose,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보도자료, 2023. 4. 5.,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4/iwh-press-release_2023-08_Gemeinschaftsdiagnose_1-23_de.pdf, 검색일자: 2023. 4. 11.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0.4%, 2024년에 1.6%로 전망
 - 정부 지원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이 초반에는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올해 후반에는 민간소비 모멘텀이 회복될 전망
 - 건설 및 금융 비용의 증가로 전망 기간 동안 건설투자는 둔화되지만 세계 경제 회복과 수출 증가로 설비투자는 상당히 증가할 전망
- (물가) 지난해 6.9%였던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5.9%, 2024년에 2.7%로 예상
- (노동시장) 높은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은 올해와 내년에 증가할 전망

나. 재정 건전화

■ 독일 연방 내각, 2023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채택(2023. 4. 26.)³²⁹⁾

- (개요)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는 안정성장협약³³⁰⁾에 따라 재무부가 일반정부 재정 전망과 독일 재정정책의 목표, 주요 재정정책 조치 등을 설명하는 문서로, 독일 연방 내각이 이를 채택한 후 EU 집행위원회와 EU 경제재무장관 이사회에 제출함
 - 이번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 전망은 연방정부의 『2023년 연간 경제보고서』(2023. 1. 25.), 세수추계(2022. 10. 25. 기준) 업데이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함
- (경제 전망)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0.2%, 2024년에 1.8%로 전망
 -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0.9%로 가정
 - 2023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6.0%로 예상되고 노동시장의 호조세는 계속될 전망

329)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Die Bundesregierung setzt auf Haushalt skonsolidierung,” 보도자료, 2023. 4.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4/2023-04-26-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3.html>, 검색일자: 2023. 4. 27.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2023,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3.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3. 4. 27.

330) Stability and Growth Pact

표 3-III-7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 성장률	1.8	0.2	1.8	0.9	0.9	0.9
실업률	2.8	2.8	2.7	3.1	3.3	3.5
취업자 수	1.3	0.3	0.2	-0.2	-0.2	-0.2
GDP 디플레이터	5.5	5.9	2.7	2.0	2.0	2.0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4., p. 53 (Table 9); p. 54 (Table 10); (Table 11)

- (재정 전망)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에 4.25%로 전년보다 상승하고 2024년에 1.75%로 하락 후, 2026년까지 0.75%로 점차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3.25%에서 2026년에 0.75%로 점차 개선되어 독일의 중기재정목표(MTO)인 0.5%에 근접해 갈 전망
 - GDP 대비 부채는 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영향으로 인해 2023년 67.75%로 전년 대비 상승 후, 2026년까지 65.5%로 감소할 전망

표 3-III-8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수입	47.1	45.75	46.00	46.5	46.75
총지출	49.7	50.00	47.75	47.25	47.25
일반정부 재정수지	-2.6	-4.25	-1.75	-0.75	-0.7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1.8	-3.25	-1.50	-0.75	-0.75
일반정부 부채	66.3	67.75	66.5	66.25	65.50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4., p. 41 (Table 5); p. 43 (Table 8); p. 55 (Table 13)

- (재정정책 방향) 독일은 추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안정지향적(stability-oriented) 재정정책이 필요
 - 독일은 위기 기간의 단기 안정화 조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경제·재정정책, 재정의 회복력과 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효율적, 미래지향적, 능동적 방식의 재정정책을 추진
 - 위기 상황의 불확실성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추가 물가 상승 압

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이며 표적화(targeted)된 정책을 설계

- 총공급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공적인 공급정책이 필요하며, 민간투자 활성화
화를 위한 자금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
- 재정 회복력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 이후의 재정 정상화를 추진

■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³³¹⁾, 제27차 회의 개최(2023. 5. 2.)³³²⁾

○ (주요 논의)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EU 규정에 따른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 준수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 위원회³³³⁾ 업무 관련 주요 이슈 보고서를 채택함

- 재정 안정화 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공공 예산은 계속해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필요한 안정화 조치 이후에는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다시 강화해야 함

- 2023년 경제 상황이 지난 가을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비용 증가와 높은 물가상승률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선순위 설정과 새로운 정책 대응 여력 창출을 통해서 독일이 물가안정하에 성장을 추구하고 자금 조달 격차(financing gap)를 줄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재정정책이 필요

-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독일이 EU 규정의 요건(예: 구조적 재정적자를 매년 0.5%p씩 감축)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

- 한시적 위기 대응 조치의 영향으로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4.25%를 기록할 전망이고 향후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공공예산에 미치는

331) 독일의 재정 안정화 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주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해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해 필요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332) 독일 연방 재무부, “27.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2. Mai 2023,” 보도자료, 2023. 5.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5/2023-05-02-stabilitaetsrat-27-sitzung.html>, 검색일자: 2023. 5. 16.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 20. Stellungnahme des Beirats 05/2023,” 2023. 5. 2., https://www.stabilitaetsrat.de/DE/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20230502_27.Sitzung/Sitzung20230502_node.html, 검색일자: 2023. 5. 16.

333) 평가 위원회는 지방 당국의 긴급한 재정위기를 조사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하기 위해 안정화 위원회에 의해 구성됨

- 결과는 더욱 개선될 수 있음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는 3.25%로 예상되며 2026년에 0.75%로 개선될 전망
 - 독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26년에 65.5%로 감소할 전망
- 또한 긴급 재정위기에 대비한 예산 감시의 일환으로 개정된 주요 이슈 보고서를 채택
- 평가 위원회 업무의 기초가 되는 이슈 보고서는 「안정화 위원회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주정부에서 부채 제한 규정 시행(2020년), 「안정화 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업데이트됨
- (자문위원회³³⁴)의 평가) 자문위원회는 안정화 위원회의 일부 재정 전망이 불안정하고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 재정적자 비율이 2023년에는 경제안정화기금의 자금 지출 감소로 더 낮아질 수 있으나 2026년에는 안정화 위원회의 전망치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연방 및 주정부가 긴급대출을 사용하고 독일 연방군 특별기금을 추가로 차입하면 상당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특별기금 활용 시 독일 기본법의 부채 규정³³⁵)은 준수하더라도 EU의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다. 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³³⁶)

- 독일 연방정부, '49유로 티켓' 시행에 따라 주정부에 연간 15억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2023. 2. 1.)³³⁷)

334) 자문위원회는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 위원회를 지원하여 의견 및 권고를 제시

335) 일부 특별기금의 지출은 기본법 부채 규정의 순차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336) 독일 정부는 2022년에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2023』, 2023. 등을 참조 바람

337) 독일 연방 내각, "Bund finanziert Deutschlandticket mit 1,5 Milliarden Euro," 2023. 2. 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gionalisierungsgesetz-deutschlandticket-2161096>, 검색일자: 2023. 2. 6.

- (제도 개요) 연방정부는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9유로 티켓³³⁸⁾에 이어 2023년부터 '49유로 티켓(Deutschlandticket)'을 도입하기로 결정
 - (목적)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
 - (내용) 통상 소요되는 교통비보다 적은 월 49유로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제도
 - 다만 2024년 이후의 티켓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주정부는 자체 비용으로 추가 할인 제공 가능
 - (기간) 2023년 5월부터 시행
- (자금 지원) 제도 운영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연간 15억 유로를 지원
 - 수입 감소로 운송회사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균등하게 부담
 -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총 45억유로를 지원

■ 독일 연방 및 주정부, 난방유, 목재 펠릿 등 기타 에너지원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에 합의 (2023. 3. 30.)³³⁹⁾

- (지원 배경) 독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에너지 가격 상한제³⁴⁰⁾를 운영 중이며, 가스 및 지역난방 이외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독일 연방 내각 홈페이지, "So soll das Deutschlandticket funktionieren," 2023. 1. 3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utschlandticket-2134074>, 검색일자: 2023. 2. 6.

338) 2022년 6~8월에 월 9유로로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제도를 운영

339)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Härtefallhilfen für Privathaushalte kommen - Bund stellt 1,8 Mrd. Euro bereit - Bund und Länder einigen sich auf Verwaltungsvereinbarungen," 2023. 3. 30.,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3/20230330-haerterfallhilfen-fur-privathaushalte-kommen.html>, 검색일자: 2023. 4. 11.

340)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2023년 1월부터 소급)까지 가계 및 기업이 사용하는 일정 기준 이내의 에너지 소비량에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 참조

- (지원 내용) 연방정부는 난방유, 목재 펠릿 등을 이용해 난방하는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연방정부-주정부 간 행정 협정에 합의
 - (지원 조건) 해당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2022년 청구서(2022년 1월 1일~12월 1일 기간)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
 - (지원 금액) 2022년 추가 에너지 비용(2021년 기준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의 80%를 환급하여 가구당 최대 2,000유로를 지급
 - (기준가격(안)) 에너지원별 기준가격³⁴¹⁾은 난방유 71센트/리터, LPG 57센트/리터, 목재 펠릿 24센트/kg, 장작 85유로/입방미터, 석탄 36센트/kg 등임
- (지원 규모) 연방정부가 경제안정화기금을 통해 최대 18억유로의 자금을 지원

라. 기후변화 대응

- 독일 연방하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법안 승인(2023. 3. 2.)³⁴²⁾
 - (주요 경과) EU가 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 제정을 추진 중
 - 2023년 3월 2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이 승인됨(추후 연방상원의 승인 필요)
 - 2023년 3월 7일, 환경부가 부담금 세율과 자금 지급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제시
 - (주요 내용)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자금을 공공 폐기물 처리 당국에 지급
 - (부담금 부과) 휴대용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필터가 포함된 담배, 물티슈,

341) 연방 및 주정부가 결정

342) 독일 연방정부, "Gegen die Vermüllung mit Plastik," 2023. 3. 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einwegkunststoff-fondsgesetz-2139250>, 검색일자: 2023. 3. 27.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Bundesumweltministerium legt Vorschlag für Abgaben auf Produkte aus Einwegplastik vor," 2023. 3. 7., <https://www.bmu.de/pressemitteilung/bundesumweltministerium-legt-vorschlag-fuer-abgaben-auf-produkte-aus-einwegplastik-vor>, 검색일자: 2023. 3. 27.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Referenten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Abgabesätze und das Punktesystem des Einwegkunststofffonds," 2023. 3. 7., <https://www.bmu.de/gesetz/referentenentwurf-einer-verordnung-ueber-die-abgabesaetze-und-das-punktesystem-des-einwegkunststofffonds>, 검색일자: 2023. 3. 27.

풍선,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 금액은 기준 법령³⁴³⁾에 근거해 제품의 유형과 수량에 따라 결정
- (자금 지급) 기금에서 관련 공공부문에 자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 기준 법령에서 자금 지급을 위한 기준 점수 체계(청소, 수거, 폐기, 인식 제고 조치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를 규정
- (운영 시기) 2024년 1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고 2025년부터 자금을 지급
- (기금 관리) 연방 환경청이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음
 - 기금의 연간 수입은 최대 4억 5천만유로로 추산

■ 독일 연방 내각, 「건축물에너지법」 개정안에 합의(2023. 4. 19.)³⁴⁴⁾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난방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건축물에너지법」 개정안에 합의
- (개정안) 2024년부터 건물에 신규 난방시스템 설치 시 최소 65%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기존 난방시스템(가동 후 30년 미만)의 경우 즉각적 교체 의무는 없지만 수리 불가능한 고장으로 교체 필요시 3년의 전환 기간을 적용
 - 80세 이상 고령의 소유주, 저소득 가구(소득 및 건물 가치 대비 투자 비용 등 고려) 등은 적용 면제
- (자금 지원) 기후 친화적인 난방시스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기금에서 보조금을 제공
 - (기본 보조금) 기존의 ‘에너지 효율적 건물에 대한 연방 지원 자금’ 제도를 바

343) 예: 1kg당 물티슈는 0.06유로, 담배 필터는 8.945유로, 음료컵은 1.231유로 등

344)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Novelle des Gebäudeenergiegesetzes – Umstieg auf Heizen mit Erneuerbaren eingeleitet,” 2023. 4. 1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4/20230419-bundeskabinett-beschliesst-novelle-des-gebaeudeenergiegesetzes.html>, 검색일자: 2023. 4. 24.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Bundesregierung einigt sich auf neues Förderkonzept für erneuerbares Heizen,” 2023. 4. 1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4/20230419-bundesregierung-einigt-sich-auf-neues-foerderkonzept-fuer-erneuerbares-heizen.html>, 검색일자: 2023. 4. 24.

탕으로 주택 소유자의 주거용 건물 내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을 기후 친화적 난방시스템으로 교체 시 30%의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지속가능한 난방시스템으로 빠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도 지급
 -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구형 난방시스템을 교체할 의무가 없으나 교체한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가 난방시스템을 교체한 경우 등에 최대 2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
 - 난방시스템 교체 의무가 있고 기한 전에 난방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더 높은 재생 에너지 비율의 난방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10%의 추가 보조금 지원
 - 30년 미만의 난방시스템에 수리 불가능한 고장이 있는 경우, 1년 내에 65% 비율을 준수해 난방시스템을 교체하면 1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
- (기타) 보조금 외에도 난방시스템 교체 시 저리 대출, 조세 감면 등의 혜택 제공

마. 기타 정책

1) 노동·복지

- 독일 노동사회부, 2023년 연금 가치 조정안 발표(2023. 3. 20.)³⁴⁵⁾
 - 독일 노동사회부는 2023년 7월 1일자로 독일의 연금이 서독지역에서 4.39%, 동독 지역에서 5.86% 인상³⁴⁶⁾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기준 연금액³⁴⁷⁾이 서독지역은 36.02유로에서 37.60유로로, 동독지역은 35.52유로에서 37.60유로로 상승
 - 다만 상승률은 2022년(서독지역 5.35%, 동독지역 6.12%)보다 다소 감소
 - 2023년에 소득대체율은 기준치인 48%를 약간 상회

345) 독일 노동사회부, "Renten steigen zum 1. Juli im Westen um 4,39 Prozent, im Osten um 5,86 Prozent," 2023. 3. 20.,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3/renten-steigen-zum-ersten-juli.html>, 검색일자: 2023. 3. 27.

독일 연방 내각, "Die Renten steigen," 2023. 3.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ntenerhoehung-ost-west-angleichung-2172482>, 검색일자: 2023. 3. 27.

346) 임금상승률, 연금기여율, 지속가능성 요소 등을 반영

347) 평균소득자가 1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

- 2023년에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연금 가치가 동일해짐에 따라 당초 계획한 목표³⁴⁸⁾보다 1년 앞당겨 연금가치액 균등화를 달성

■ 독일 내무부, 연방 및 지방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2023. 4. 22.)³⁴⁹⁾

- (주요 경과) 연방정부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사용자단체연합(VK A350)을 주축으로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4차 단체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
 - 지난 3월에 공공서비스노조(ver.di), 철도교통노조(EVG) 등이 충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철도, 공항 등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바 있음
- (협상 결과³⁵¹⁾) 근로자에게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금 인상 기준에도 합의
 - (임금 인상) 2024년 3월 1일부터 월 급여를 200유로 정액 인상하고 5.5%의 급여 인상을 추가 적용(최소 340유로/월 인상 보장)
 - (물가 상승 보전) 총 3,000유로의 물가 상승 보전금을 내년 2월까지 분할 지급
 - 2023년 6월에 1,240유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월 220유로(비과세)를 지급
- (예상 비용) 연방정부 단체 협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 단체 협약의 비용(24개월)은 약 14억 3천만유로로 추산
 - 동일한 내용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경우 연방정부의 비용은 약 49억 5천만 유로로 예상

■ 독일 연방정부, 초등학교 종일 교육·돌봄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시작(2023. 5. 17.)³⁵²⁾

348) 과거 다른 체계로 운영되었던 동독과 서독의 연금체계가 통일 이후 통합됨에 따라 연금가치액 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7월까지 연금가치액 균등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349) 독일 내무부, "Tarifabschluss für die mehr als 2,5 Millionen Beschäftigten von Bund und Kommunen," 2023. 4. 22.,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3/04/tarifverhandlungen.html;jsessionid=3E5E6C4352F38713B157DBDECFB2679D.1_cid373, 검색일자: 2023. 4. 24.

350) 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ände

351) 2023년 임금 단체교섭 결과는 연방정부 근로자(약 13만 4천명)와 VKA 산하 지방자치단체 근로자(240만명 이상)에게 적용

352)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Investitionsprogramm Ganztagsausbau startet," 2023. 5. 17., <https://www.familie.de/pressenotizen/2023/05/17/investitionsprogramm-ganztagsausbau-startet>

- (배경) 독일 정부는 일·가정 양립 향상, 여성 고용 확대, 교육 격차 축소 등을 위해 초등학교 종일 교육·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법적 근거) 「2021년 초등학교 종일 돌봄 지원법」
 - (지원 내용) 2026/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적용하고 2029/30학년도까지 1~4학년 학생으로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자금 지원)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등의 추가 조치에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제공
 - (규모)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약 30억유로의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
 - (용도) 초등학교 종일 교육·돌봄에 필요한 건물 및 토지 취득, 신축, 개조, 보수, 종일 교육·돌봄 서비스에 재원 사용
- 독일 연방 의회, 장기요양보험 개혁을 위한 법률 승인(2023. 6. 16.)³⁵³⁾
- (개요) 독일 연방 하원은 5월 26일, 상원은 6월 16일에 법정 장기요양보험 개혁을 위한 법률(Pflegeunterstützungs und entlastungsgesetz)을 승인함
 - (주요 내용) 1단계로 2023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여 2024년 1월부터 성과를 개선하고, 2단계로 2025년 1월부터 급여 혜택을 상향 조정
 - (재정 안정화) 일반 보험료율을 2023년 7월부터 0.35%p 인상해 연간 약 66억 유로의 추가 수입을 확보
 - (자녀 수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화) 2023년 7월부터 무자녀 가입자(4.0%)와 자녀가 1명인 가입자(3.4%) 간 보험료율 차이를 기존 0.35%p에서 0.6%p로 확대
 - 또한 자녀 1인당 추가 0.25%p의 보험료율 감면을 적용(최대 5자녀)
 - (지원 강화) 재가 급여 인상, 물가 변동을 반영한 급여 조정, 친족 간병 지원 확대 등
 - 2024년 1월부터 재가 돌봄 강화를 위해 재가 현금급여와 외래 현물급여를

//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investitionsprogramm-ganztagsausbau-startet-225514, 검색일자: 2023. 5. 22.

353) 독일 연방정부, "Mehr Leistungen und stabile Finanzen," 2023. 6.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esetz-pflegereform-2183432>, 검색일자: 2023. 6. 20.

독일 연방 보건부, "Reform der Pflegeversicherung: mehr Leistungen für stationäre und ambulante Pflege," 2023. 5. 26.,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presse/pressemitteilungen/pflegereform-beschluss-bundestag-26-05-23.html>, 검색일자: 2023. 6. 20.

5% 인상

- 2025년 1월과 2028년 1월에 현금 및 현물 급여를 물가에 따라 정기 조정
- 2024년 1월부터 돌봄 대상 1인당 매년 최대 10일(근무일 기준)까지 친족 간병 지원금³⁵⁴ 청구 가능
- 2025년 7월, 기존에 지원 한도가 분리되었던 단기 시설보호와 가족 간병 대체 지원³⁵⁵을 연간 통합된 한도(최대 3,539유로)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
- 이 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수급자 비용 부담 완화, 전문 간병인 근로 조건 개선, 디지털화를 통한 요양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

■ 독일 연방 통계청, 최저임금 인상(2022년 10월 1일자) 관련 통계 발표(2023. 6. 1.)³⁵⁶

- (배경) 독일 정부는 2022년 10월 1일자로 법정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였음

표 3-III-9 독일 최저임금 추이

(단위: 시간당 유로)

구분	2015. 1. 1.	2017. 1. 1.	2019. 1. 1.	2020. 1. 1.	2021. 1. 1.	2021. 1. 1.	2022. 1. 1.	2022. 1. 1.	2022. 1. 1.
최저임금	8.50	8.84	9.19	9.35	9.50	9.60	9.82	10.45	12.00

자료: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Mindestlohngesetz," 2022. 9. 30., <https://www.bmas.de/DE/Arbeit/Arbeitsrecht/Mindestlohn/mindestlohngesetz.html>, 검색일자: 2023. 6. 23.

- (주요 결과) 독일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함에 따라 약 580만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음
 -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14.8%가 12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들이 최저임금의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 약 9.6% 증가
 - 남성보다 여성, 서독보다 동독, 특정 산업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음

354) 무급 단기 돌봄 휴가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금

355) 간병을 담당했던 가족이 일시적으로 간병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

356) 독일 연방 통계청, "5,8 Millionen Jobs von Erhöhung des Mindestlohns auf 12 Euro betroffen," 보도 자료, 2023. 6. 1.,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6/PD23_211_62.html, 검색일자: 2023. 6. 23.

일자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여성은 약 18%, 남성은 약 12%, 동독은 약 18%, 서독은 약 14%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음
 - 또한 접객업부문은 약 48%, 농림·어업 부문은 약 41%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음
- EU 지침은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60% 수준³⁵⁷⁾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의 현 최저임금은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의 56.4% 수준에 해당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기준(12.76유로 이하)을 하회하는 일자리 수가 2022년 10월에 610만개(15%)로, 2022년 4월(750만개, 19%) 대비 150만개 감소

2) 국방·안보

■ 독일 연방정부,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발표(2023. 1. 25., 2. 7.)³⁵⁸⁾

- 올라프 솔츠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2(Leopard 2 A6) 전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1차로 14대의 레오파드2 전차를 제공하며 훈련, 물류, 탄약,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지원도 포함
 - 레오파드2 전차를 보유한 유럽 협력 국가들이 해당 전차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이전하는 방식도 허용
-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독일 군수업체에 최대 178대의 레오파드1 A5 전차의 수출을 허가
 - 실제 인도되는 전차의 수량은 수리 작업에 따라 결정될 예정
 - 훈련, 자금 조달, 수리 등은 유럽 협력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

357) Kaitz Index 기준

358) 독일 연방 내각, "Deutschland liefert Kampfpanzer Leopard," 2023. 1. 2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utschland-liefert-kampfpanzer-leopard-2160262>, 검색일자: 2023. 2. 6.
독일 국방부, "Bundesregierung erteilt Ausfuhrgenehmigung für Leopard 1 A5 Panzer," 2023. 2. 7., <https://www.bmvg.de/de/presse/ausfuhrgenehmigung-leopard-1-a5-panzer-5579916>, 검색일자: 2023. 2. 20.

- 독일 연방 내각, 국가 안보전략(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채택(2023. 6. 14.)³⁵⁹⁾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변화된 안보 환경하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보전략’을 채택함
 - (안보 환경 변화)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국제 질서 다변화, 테러·극단주의·사이버 공격 등 경제·사회에 대한 위협,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 위기, 기후변화 위험 등에 직면
 -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
 - (통합 안보정책)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분야를 넘어 모든 정책 분야를 통합하는 ‘통합 안보정책’을 구축할 것이며 강한 방어력, 회복 탄력성, 지속가능성을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제시
 - (강한 방어력) 국가 및 동맹국 보호, 재난 예방 및 구호 개선, 유럽 평화 프로젝트 강화, 국제 위기에 개입, 글로벌 군비 통제체계 개발 등을 통해 평화와 자유를 수호
 - 다년도 기간 동안 GDP의 평균 2%를 국방비에 배정할 예정이며 초기에 일부 지출은 연방군 특별기금을 활용
 - (회복 탄력성) 민주주의 수호,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 확보,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경제·금융 회복 탄력성 및 원자재 안보 제고, 기술 혁신 보호,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회복력을 강화
 -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세계적 유행병 예방 등이 중요

3) 문화

- 독일 연방정부, 18세 청년 대상 문화 바우처(KulturPass) 지원 개시(2023. 6. 14.)³⁶⁰⁾

359) 독일 연방정부, “Integrierte Sicherheit für Deutschland,” 2023. 6.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nationale-sicherheitsstrategie-2195890>, 검색일자: 2023. 6. 26.

독일 연방정부, *Wehrhaft. Resilient. Nachhaltig. Integrierte Sicherheit für Deutschland – 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2023. 6., <https://www.nationalesicherheitsstrategie.de/Sicherheitsstrategie-DE.pdf>, 검색일자: 2023. 6. 26.

360) 독일 연방정부, “Der KulturPass ist da! Ab heute in den App-Stores,” 보도자료, 2023. 6.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r-kulturpass-ist-da-ab-heute-in-den-app-stores>

- (목적)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을 장려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문화 예술 업계를 지원
- (지원 내용) 독일 정부가 2023년 6월 14일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화 바우처 (KulturPass) 사업을 개시
 - (지원 대상) 2023년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청년(약 75만명)
 - (지원 금액) 1인당 200유로 지원
 -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 1억유로의 예산을 제공
 - (운영 방식) 지원 대상자는 KulturPass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등록 업체의 영화, 공연, 박물관 등의 티켓, 도서, 음반, 악기 등을 이용 가능
 - 현재 6,300개 이상 업체, 170만개 이상 상품이 등록(2023. 6. 21. 기준)되어 있으며, 등록 업체는 지역 업체로 제한(대형 유통 플랫폼, 온라인 판매 기업은 등록 불가)
- 이번 시범사업 성공 시, 향후 16~17세 청소년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통계

-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GDP 성장률(1차 추계) 발표(2023. 1. 13.)³⁶¹⁾
 - (GDP) 독일의 2022년 GDP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0.7% 높은 수준을 기록
 - 2022년 독일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병목 현상,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추격 효과(catch-up effect)와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의 영향으로 성장

-2196316, 검색일자: 2023. 6. 26.

독일 연방정부, "Der KulturPass ist da!," 2023. 6.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ulturpass-2142398>, 검색일자: 2023. 6. 26.

361)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1.9% in 2022," 2023. 1. 13.,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20_811.html, 검색일자: 2023. 1. 18.

- 코로나19 제한 해제 후의 추격 효과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된 기타 서비스(+6.3%),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4.0%)과 같은 일부 서비스부문에 특히 강한 증가세가 나타남
 - 건설업은 자재 및 숙련 노동 부족, 높은 비용, 금융 여건 악화로 총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2.3%)했고, 제조업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공급망 단절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이 미미(+0.2%)
- 가계 최종소비지출의 증가가 2022년 독일 경제의 성장을 주도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4.6%,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1.1% 전년 대비 증가
 - 건설의 총고정자본형성은 1.6% 하락했고 기계·장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2.5% 증가

표 3-III-10 독일의 GDP 성장률(가격 조정)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가계 최종소비지출	1.6	-5.7	0.4	4.6
정부 최종소비지출	2.6	4.0	3.8	1.1
총고정자본형성	1.9	-2.3	1.2	0.2
건설	1.0	3.9	0.0	-1.6
기계장비	1.0	-11.0	3.5	2.5
기타	6.1	-3.3	1.0	2.1
수출	1.3	-9.3	9.7	3.2
수입	2.9	-8.5	9.0	6.7
총부가가치	0.8	-3.9	2.7	1.8
제조업	-1.3	-8.1	5.1	0.2
건설	-3.6	2.0	-1.4	-2.3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	3.4	-7.5	2.8	4.0
정보·통신	3.9	0.1	3.6	3.6
사업서비스	0.1	-5.0	4.4	2.6
공공서비스·교육·보건	1.5	-1.1	2.0	2.5
기타 서비스	1.8	-11.6	0.4	6.3
GDP	1.1	-3.7	2.6	1.9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1.9% in 2022," 2023. 1. 13.,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20_811.html, 검색일자: 2023. 1. 18.

- (노동시장) 2022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4,560만명을 기록
- (일반정부 재정) 2022년 말 기준,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 규모는 전년 대비 330억유로 감소한 1,016억유로를 기록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은 2.6%로, 직전 2개년 대비 현저히 감소
 -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종료로 예산이 절감되었으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정부 지원 조치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

표 3-III-11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일반정부 재정수지 규모	53.2	-147.6	-134.3	-101.6
GDP 대비 비율	1.5	-4.3	-3.7	-2.6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1.9% in 2022," 2023. 1. 13.,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20_811.html, 검색일자: 2023. 1. 18.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3. 5. 25.)³⁶²⁾
 -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 독일의 전 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은 -0.3%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직전 분기 대비 가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1.2%, 4.9% 감소한 반면, 총고정 자본형성은 3.0% 증가
 - 전 분기 대비 식음료, 의류 및 신발, 가구 등의 소비가 감소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폐지 및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신차 구입도 감소
 - 전 분기 대비 건설투자는 3.9%, 설비투자는 3.2% 증가
 - 플라스틱, 금속 가공제품 무역 등의 수출 증가, 광물 연료, 화학 제품 등의 수입 감소로 대외 무역도 성장에 기여
 - 전 분기 대비 부문별 총부가가치는 건설업이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6.1% 증가, 제조업은 3월 부진에도 불구하고 2.0% 증가했으나 서비스부문 성장은 약세

362)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3," 보도자료, 2023. 5.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5/PD23_203_811.html, 검색일자: 2023. 6. 15.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의 가격 조정 GDP 성장률은 -0.2%,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³⁶³⁾ 성장률은 -0.5%를 기록
- 전년 대비 최종소비지출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설비부문 총고정자본형성과 대외 무역은 경제 생산에 긍정적으로 기여
 - 물가 상승 부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가계소비 지출이 감소했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 종료에 반영되어 정부소비 지출도 감소
 - 건설투자는 감소했으나 설비투자는 증가해 총고정자본형성이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 자동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총부가가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은 3분기 연속 큰 감소세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소폭 감소

표 3-III-12 독일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직전 분기 대비	-1.5	1.9	0.8	0.0	1.0	-0.1	0.5	-0.5	-0.3
전년 동기 대비	-2.3	10.6	1.8	1.2	4.1	1.7	1.3	0.2	-0.2

주: 1.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계절 및 달력효과 조정 값
 2.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값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3," 2023. 5.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5/PD23_203_811.html, 검색일자: 2023. 6. 15.

■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2023. 1. 17.)³⁶⁴⁾

- (연간) 전년 대비 2022년 독일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9%를 기록
 - 이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

363) 해당 자료는 계절 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364) 독일 연방 통계청, "Inflation rate at +7.9% in 2022," 2023. 1. 17.,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22_611.html, 검색일자: 2023. 1. 18.

- 9유로 티켓³⁶⁵⁾, 연료비 보조금, 재생에너지 부담금(EEG) 폐지, 가스 및 지역 난방에 대한 VAT 감면, 12월 가스 및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조치를 통해 물가 상승세가 일부 완화
- 전년 대비 2022년 에너지 가격은 34.7%, 식료품 가격은 13.4% 상승했으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4.0%로, 전체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

표 3-III-13 독일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연도	CPI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에너지 (가계 에너지 및 연료)
2022	7.9	4.0	13.4	4.9	34.7
2021	3.1	2.3	3.2	2.3	10.4
2020	0.5	0.9	2.4	1.1	-4.8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Consumer price index - special breakdown,"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Prices/Consumer-Price-Index/Tables/Consumer-prices-special.html#242202>, 검색일자: 2023. 1. 18.

- (월간)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전월 대비 0.8% 하락
 - 주로 정부가 시행한 12월 가스 및 난방비 지원 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둔화되어 12월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11월(10.0%)에 비해 하락

표 3-III-14 독일의 월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단위: 지수, %)

연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2015 = 100)	전년 동기 대비 변화 (%)	전월 대비 변화 (%)
2022	12월	120.6	8.6	-0.8
	11월	121.6	10.0	-0.5
2021	12월	111.1	5.3	0.5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Verbraucherpreisindex,"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result&code=61111-0002&deep=true#abreadcrumb>, 검색일자: 2023.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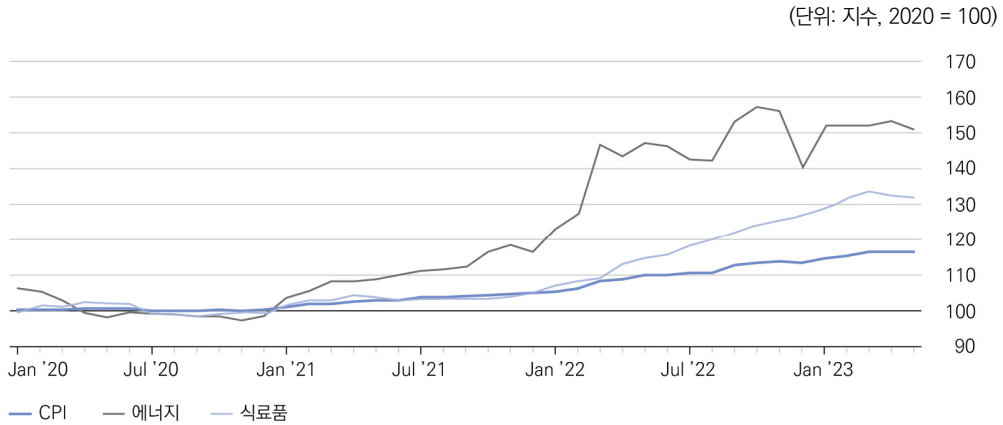
365) 월간 9유로에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2022년 6-8월 시행)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2023. 6. 13.)³⁶⁶⁾
 - (전년 동월 대비) 독일의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해 3월과 4월에 비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023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6%로, 지난 4월(+6.8%)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의 기저 효과가 주된 요인이며 전기, 가스 가격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지원 조치도 에너지 가격 상승 둔화에 기여
 - 2023년 5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상승해 전월(+17.2%)에 비해 상승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장 큰 물가 상승 동인임
 - 주로 유제품(+28.2%), 빵 및 곡류(+19.3%), 수산물(+19.0%) 등의 가격이 전년 대비 인상된 반면 버터 가격 하락에 따라 식용유 가격은 7.1% 하락
 - 2023년 5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5.4%를 기록
 - 2022년 12월(+5.2%)에는 상승률이 5%를 상회했고 4월과 3월에 각각 5.8% 증가율을 기록
 - 2023년 5월, 상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는 4.5% 상승
 - 서비스 물가의 경우 난방비를 제외한 순 임대료가 가격 인상 둔화의 주요 요인이며 ‘독일 티켓³⁶⁷⁾’ 도입도 가격 상승 둔화에 기여
 - (전월 대비) 2023년 5월 독일의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를 기록
 -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난방유(-9.3%), 자동차 연료(-2.6%) 가격 하락에 힘입어 에너지 가격도 1.4% 하락
 - ‘독일 티켓’ 도입으로 전월 대비 대중교통 요금이 하락한 반면, 패키지 여행(+2.6%)과 숙박(+1.9%) 가격은 인상

366) 독일 연방 통계청, “Inflationsrate im Mai 2023 bei +6,1 %,” 보도자료, 2023. 6. 13.,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6/PD23_224_611.html, 검색일자: 2023. 6. 15.

367) Deutschlandtickets: 49유로의 정액 요금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

그림 3-III-1 독일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Inflationsrate im Mai 2023 bei +6,1 %," 2023. 6. 13.,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6/PD23_224_611.html, 검색일자: 2023. 6. 15.

나. 재정통계

-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2023. 2. 24.)³⁶⁸⁾
 - (재정수지) 독일의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대비 329억유로 감소한 1,013억유로를 기록(잠정치 기준)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이 감소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인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 재정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은 2.6%로, 유럽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기준(3%)을 충족
 -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67억유로 감소한 1,292억유로를 기록하였고,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부문은 각각 124억유로, 88억유로, 67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
 - (수입) 2022년 일반정부 수입은 1조 8,208억유로로, 전년 대비 6.4%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2022년 조세수입은 8.0% 증가

368) 독일 연방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deficit of 101.3 billion euros in 2022," 보도자료, 2023. 2. 24.,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2/PE23_071_813.html, 검색일자: 2023. 3. 27.

- 전년 대비 법인세는 11.1%, 소득세는 6.4%, 부가가치세는 10.8% 증가
- (지출) 2022년 일반정부 지출은 1조 9,221억유로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의 영향을 받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종료로 반영해 보조금 지출은 34.8% 감소
 - 반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경상이전 지출은 25.4% 증가했고, 에너지 공급 보장을 위한 조치(LNG 터미널 건설, 에너지 회사 지원 등)의 영향으로 자본이전도 34.2% 증가
 - 국제 협력 관련 서비스 지출은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37.2% 증가했고 이가지출 역시 25.8%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남

표 3-III-15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잠정치)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일반정부 순융자(+)/순차입(-)	53.2	-147.6	-134.3	-101.3
일반정부 수입	1,615.8	1,569.1	1,711.7	1,820.8
일반정부 지출	1,562.6	1,716.6	1,846.0	1,922.1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National accounts – Revenue, expenditure, net lending/net borrowing of general government: Germany, years," <https://www-genesis.destatis.de/>, 검색일자: 2023. 3. 27.

■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공공채무 잠정실적 발표(2023. 3. 29.)³⁶⁹⁾

- 2022년 말, 독일의 공공채무는 2조 3,673억유로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잠정치 기준)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461억유로), 직전 분기 대비 1.8%(419억유로) 증가한 수치임
 - 전년에 비해 2022년 부문별 채무 규모는 연방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증가한 반면 주정부와 사회보험부문에서는 감소

369) 독일 연방 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steigen Ende 2022 auf neuen Höchststand von rund 2,37 Billionen Euro," 2023. 3. 29.,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3/PD_23_122_713.html, 검색일자: 2023. 4. 11.

- 2022년 말, 연방정부 채무는 1조 6,204억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6% (719억유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서 기인
- 거의 모든 주(Saxony-Anhalt주 제외)에서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주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5.0%(317억유로) 감소한 6,068억유로를 기록
- 기초자치단체 채무는 전년 대비 4.4%(60억유로) 증가한 1,401억유로, 사회보험부문의 채무는 전년 대비 800만유로 감소한 3,600만유로로 나타남

표 3-III-16 독일의 2022년 공공채무(잠정치)

(단위: 백만유로)

시점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	합계
2019. 12. 31.	1,189,121	579,136	130,787	124	1,899,168
2020. 12. 31.	1,403,417	635,832	132,496	54	2,171,798
2021. 12. 31.	1,548,469	638,250	133,152	41	2,319,911
2022. 12. 31.	1,620,357	606,750	140,107	36	2,367,251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Finanzen und Steuern- Vorläufiger Schuldenstand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 4. Vierteljahr 2022," 2023. 3. 29.,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Finanzen/Schulden-Finanzvermoegen/Publikationen/Downloads-Schulden/vorl-schulden-oeffentlicher-haushalte-2140520223244.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3. 4. 11.

■ 독일 연방 통계청, 2022년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2023. 4. 5.)³⁷⁰⁾

- (지출) 2022년 공공부문 총예산 지출은 1조 8,754억유로로, 전년 대비 6.4% 증가
 - 에너지 위기 관련 지출이 급증했고 연방정부의 이자지출도 174억유로 수준으로 크게 증가
 - 2021년에 정점을 기록했던 연방정부 교부금 및 보조금은 2022년에 17.6% 감소
- (수입) 2022년 공공부문 총예산 수입은 1조 7,483억유로로, 전년 대비 7.3% 증가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조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7.1% 증가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370) 독일 연방 통계청, "127,3 Milliarden Euro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Jahr 2022," 2023. 4. 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4/PD23_135_711.html, 검색일자: 2023. 4. 11.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가 수입 증가에 기여
- (재정수지) 2022년 공공부문 총예산의 재정적자 규모는 1,273억유로로, 2021년 대비 60억유로, 2020년 대비 630억유로 감소³⁷¹⁾
 - 독일 공공부문 총예산의 재정적자는 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에서 기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반영된 것임
 - 2022년 연방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6,089억유로, 수입은 9.2% 증가한 4,638억유로로 나타나 1,451억유로의 재정적자가 발생
 - 반면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부문은 각각 105억유로, 26억유로, 47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

표 3-III-17 독일의 공공부문 총예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	합계
지출					
2022년	608.9	522.3	325.8	804.4	1,875.4
2021년	560.5	507.2	303.4	779.7	1,762.4
2020년	511.7	487.2	293.2	748.6	1,678.6
수입					
2022년	463.8	532.9	328.4	809.0	1,748.3
2021년	424.7	510.8	308.0	774.2	1,629.3
2020년	381.8	453.8	295.2	720.7	1,489.4
재정수지					
2022년	-145.1	10.5	2.6	4.7	-127.3
2021년	-135.8	3.5	4.6	-5.5	-133.2
2020년	-129.9	-33.5	2.0	-27.9	-189.2

주: 2022년은 잠정치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127,3 Milliarden Euro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Jahr 2022," 2023. 4. 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4/PD23_135_711.html, 검색일자: 2023. 4. 11.

37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전인 2019년에는 452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

IV 프랑스³⁷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3-I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 12. 31.	프랑스 의회, 「2023년 예산법」 및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 최종 승인
2023. 1. 10.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연금개혁안 발표
2023. 1. 23.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 제출
2023. 2. 7.	프랑스 예산국, 2022년 예산집행 결과 발표
2023. 3. 20.	프랑스 의회, 연금개혁안 최종 채택
2023. 3. 28.	프랑스 통계청(INSEE), 2022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
2023. 4. 13.	프랑스 재무부, 『2022년 결산보고서』 발표
2023. 4. 26.	프랑스 재무부, 2023~2027 안정화 프로그램 발표
2023. 4. 26.	프랑스 재무부, 2023년 국가개혁프로그램 발표
2023. 4. 26.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네 가지 정책 우선순위 발표
2023. 5. 16.	프랑스 재무부, 녹색산업법안(Projet de loi industrie verte) 발표
2023. 5. 24.	프랑스 회계감사원, 사회보장 부문 운영 상황 보고서 발표
2023. 6. 7.	프랑스 노동부, 완전고용을 위한 조치 발표

3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인 선임연구원(leejungin@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2023년 예산법」(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³⁷³⁾(2022. 12. 31.) 및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³⁷⁴⁾(2022. 12. 24.) 최종 승인 및 공포
 - 2022년 9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법」안³⁷⁵⁾을 의회가 채택(2022. 12. 17.)³⁷⁶⁾하고, 프랑스 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2023년 예산법」으로 제정(2022. 12. 29.)
 - 「2023년 예산법」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은 -5.0%로 예산법안 전망과 동일

표 3-IV-2 「2023년 예산법」의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실적)	2022 (실적 전망)	2023 (기존 예산 법안 전망)	2023 (「예산법」 전망)
구조적 재정수지(Solde structurel(1))	-5.1	-4.2	-4.0	-4.0
경기변동치(Solde conjoncturel(2)) ¹⁾	-1.4	-0.6	-0.8	-0.8
특별조치(Mesures exceptionnelles(3)) ²⁾	-0.1	-0.1	-0.2	-0.2
재정수지(Solde effectif(1 + 2 + 3))	-6.5	-5.0	-5.0	-5.0

주: 1) 경기변동으로 인한 GDP 조정분

2)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으로 구조적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

자료: 「2023년 프랑스 예산법」(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 2022. 12. 31.

373)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 (1),” 2022. 12. 3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845631>, 검색일자: 2023. 1. 12.

374)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1),” 2021. 12. 23.,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6791754?in_it=true&page=1&query=financement+de+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3&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3. 1. 12.

375) 프랑스의 「2023년 예산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및 「2023 주요국 예산안 - 프랑스」 참조

376) 프랑스 예산국, “Adoption en lecture définitive du PLF 2022 par l'Assemblée nationale,” 2021. 12. 15.,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112> 검색일자: 2022. 1. 17.

- 2022년 9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³⁷⁷⁾을 의회가 채택하고(2022. 12. 2.)³⁷⁸⁾,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으로 제정(2022. 12. 24.)

표 3-IV-3 「2023년 예산법」의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기존 예산 법안 전망)	2023 (「예산법」 전망)
건강보험(Maladie)	-6.5	-7.1
산재보험(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2.2	2.2
노령보험기금(Vieillesse)	-3.5	-3.6
가족수당기금(Famille)	1.3	1.3
자율연대기금(Autonomie)	-1.2	-1.2
전체 사회보장 부문(Toutes branches)	-7.6	-8.4
노령연대 포함 사회보장 부문(Toutes branches y compris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6.8	-7.1

자료: 「2023년 프랑스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2. 12. 24.

나. 추경

- 관련 내용 없음

다. 결산

- 프랑스 예산국, 2022년 예산집행 결과 발표(2023. 2. 7.)³⁷⁹⁾

377) 프랑스의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및 「2023 주요국 예산안 - 프랑스」 참조

378) 프랑스 의회,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et adoption du texte en lecture définitive,” 2022.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3-rejet-d-une-motion-de-censure-et-adoption-du-texte-en-lecture-definitive>, 검색일자: 2023. 1. 12.

379)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2,” 2023. 2. 7.,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19403>, 검색일자: 2023. 2. 16.

- (재정수지) 2022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515억유로로, 2021년 1,707억유로 대비 192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2022년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4,457억유로로, 2021년 4,267억유로 대비 190억유로 증가
 -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증가
- (재정수입) 2022년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3,472억유로로, 2021년 3,170억유로에 비해 302억유로 증가
 - 경제활동 회복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증가

표 3-IV-4 프랑스 2022년 예산집행 결과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1년 대비 2022년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172,678	-171,518	-158,195	-
재정지출(Dépenses)	455,368	496,472	512,935	3.3%
재정수입(Recettes)	282,690	324,954	354,740	9.2%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5,421	786	6,726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178,099	-170,732	-151,469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2, 2023. 2. 7.,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19403>, 검색일자: 2023. 2. 16.

표 3-IV-5 프랑스 2022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	2022	2021년 대비 2022년
총재정지출(Dépenses(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469,472	512,935	3.3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26,732	445,672	4.4
정부 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94	1,048	5.4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134,716	138,18	3.0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64,806	80,402	24.1
채무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38,496	51,538	33.9

표 3-IV-5 의 계속

구분	2021	2022	2021년 대비 2022년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16,093	17,024	5.8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168,645	154,136	-8.6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2,982	2,706	-9.3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739	67,263	4.4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371	43,034	-0.8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6,368	24,230	-8.1
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avec fonds de concours))	324,954	354,740	9.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738	323,284	9.3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78,654	88,988	13.1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46,315	62,130	34.1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18,329	17,992	-1.8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95,539	100,823	5.5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56,901	53,351	-6.2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1,257	23,949	12.7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¹⁾	7,960	7,508	-5.7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2," 2023. 2. 7.

그림 3-IV-1 프랑스 월별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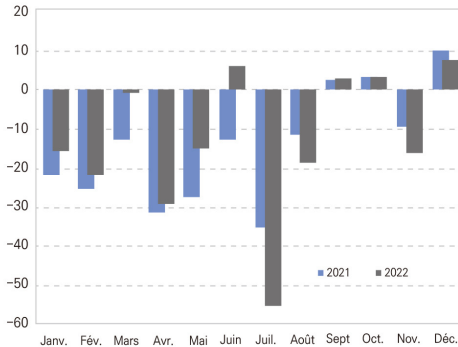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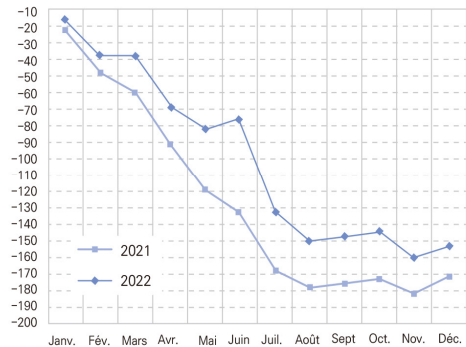


그림 3-IV-2 프랑스 누적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2," 2023. 2. 7.

■ 프랑스 재무부, 『2022년 결산보고서』(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2: PLR 2022) 발표(2023. 4. 13.)³⁸⁰⁾

- 프랑스는 2022년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경기 회복을 지속
 - 2020년 급격한 경기침체 이후 2021년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공급 측면의 긴장 및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조치가 점진적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매력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 2022년 재정적자는 2022년 본예산 전망 대비 24억유로 개선, 2021년 결산 대비 193억유로 개선된 1,515억유로
 -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4.7%로 2020년 -9.0%, 2021년 -6.5%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개선
 - 2022년 재정지출은 본예산 전망 대비 439억유로 높은 5,054억유로
 -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가계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지원 조치 시행
 - 2022년 재정수입은 본예산 전망 대비 395억유로 높은 3,472억유로
 - 경기회복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수입 증가가 에너지제품소비세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TICPE) 등 기타 세수 감소보다 크게 나타남
 -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111.6%로, 2021년 112.9% 대비 다소 감소

380)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et d'approbation des Comptes de l'État pour 2022*, 2023. 4. 13.,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ojet-de-loi-de-reglement-du-budget-et-dapprobation-des-comptes-de-letat-0>, 검색일자: 2023. 4. 24.

표 3-IV-6 프랑스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정부(Ensemble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2.3	-3.1	-9.0	-6.5	-4.7
중앙정부(État)	-2.8	-3.5	-7.8	-5.7	-5.6
중앙행정기관(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0.1	-0.1	0.9	-0.1	0.5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0.1	0.0	-0.1	0.0	0.0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0.5	0.6	-2.0	-0.7	0.3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2*, 2023. 4. 13., p. 13.

표 3-IV-7 프랑스 중앙정부 2022년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A)	2022 본예산 (B)	2022 수정 예산(C)	2022 결산(D)	D - A	D - B	D - C
재정지출(Dépenses BG + PSR)	488.5	461.5	514.8	505.4	16.9	43.9	-9.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7	287.6	315.8	323.3	27.5	35.7	7.5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1.3	20.2	24.7	23.9	2.7	3.8	-0.8
특별회계(Solde comptes spéciaux)	0.8	-0.1	3.0	6.7	5.9	6.8	3.7
부속예산(Solde budget annexes)	0.0	0.0	0.3	0.0	0.0	0.0	-0.3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0.7	-153.8	-171.0	-151.4	19.3	2.4	19.5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2*, 2023. 4. 13., p. 14.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지원 조치

- 고등교육연구부(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연구 기반 창업 지원을 위한 계획 발표(2023. 1. 9.)³⁸¹⁾, 382)
 - 과학 연구 분야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100개의 유니콘기업과 500개의 연구기반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지원
 - 프랑스 2030 계획 및 「연구프로그래밍법」(Loi de Programmation de la Recherche: LPR)의 일환으로 5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대학 내 연구구조 강화를 위한 25개 대학혁신센터(pôles universitaires d'innovation: PUI) 설립에 1억 6,000만유로 지원
 - 딥테크(deep tech)³⁸³⁾ 부문 개발 계획에 6,500만유로 지원
 - 연구 프로젝트 구조화 및 상업화를 위해 2억 7,500만유로 지원
-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지열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 발표(2023. 2. 2.)³⁸⁴⁾, 385)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의 탈탄소화 및 높은 수입 의존도 해결을 위해 재생가능한 열원인 지열에너지의 활용 확대 목표
 - 지열에너지는 현재 프랑스 전체 열 소비량의 1%에 불과

381)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France 2030 : le Gouvernement investit 500 millions d'euros supplémentaires pour faire émerger davantage de start-up issues de la recherche," 2023. 1. 9., <https://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r/france-2030-le-gouvernement-investit-500-millions-d-euros-supplementaires-pour-faire-emerger-88843>, 검색일자: 2023. 1. 19.

382) 프랑스 재무부, "France 2030 : 500 millions d'euros pour donner un élan aux start-up issues de la recherche," 2023. 1. 10., <https://www.economie.gouv.fr/france-2030-500-millions-deuros-pour-donner-un-elan-aux-start-issues-de-la-recherche>, 검색일자: 2023. 1. 19.

383)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 기술을 집약한 고기술 기반 기업

384) 프랑스 정부, "Accélérer la géothermie en France," 2023. 2. 2.,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accelerer-la-geothermie-en-france>, 검색일자: 2023. 2. 20.

385) 프랑스 에너지전환부(minist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Géothermie : un plan d'action pour accélérer," 2023. 2. 2.,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02.02.2023_DP_Geothermie.pdf, 검색일자: 2023. 2. 20.

- 15~20년 안에 지열 생산 확대를 통해 가스 소비를 연간 100테라와트시 (TWh)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지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산업체계를 조직화하고 생산 및 탐사 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
 - 지열에너지 관련 교육 과정 확대
 - 프로젝트 및 지열에너지 사용자에게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규제 간소화
 - 2030년까지 심부 지열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를 40% 확대 목표
 - 2025년까지 개인 주택 지열 히트 펌프 설치 두 배 확대 목표
 - 노후된 열 보일러를 교체하고 지열 히트 펌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5,000유로 지원
- 프랑스 재무부, 농촌 지역 상점 설립을 위한 지원 제도 발표(2023. 2. 23.)^{386), 387)}
-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코뮌(commune)³⁸⁸⁾ 중 62%에 해당하는 2만 1,000개의 지역에 상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상점의 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매력도가 더 악화
 -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방치된 건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
 - 농촌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상점 설립에 2023~2024년 1,200만유로를 지원할 계획
 - 프로젝트당 최대 8만유로를 지원해 다양한 농촌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
 - 상점 복구 비용을 5만유로 한도 내에서 50% 지원

386) 프랑스 재무부, "Commerce rural : lancement d'un programme de reconquête," 2023. 2. 23., <https://www.economie.gouv.fr/commerce-rural-programme-reconqu%C3%A4te>, 검색일자: 2023. 3. 13.

387) 프랑스 중소기업, 통상, 수공업 및 관광부(Ministère déléguée chargé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u Commerce, de l'Artisanat et du Tourisme), "CAHIER DES CHARGES DISPOSITIF D'ACCOMPAGNEMENT A L'INSTALLATION DE COMMERCES EN MILIEU RURAL," 2023. 2. 23., <https://agence-cohesion-territoires.gouv.fr/sites/default/files/2023-02/Cahier%20des%20charges%20-%20accompagnement%20commerces%20en%20milieu%20rural%20VF.pdf?v=1677174267>, 검색일자: 2023. 3. 13.

388) 프랑스의 지방행정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

- 상업 공간의 조성 및 전문 장비 구매에 2만유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프로젝트의 경우 2만 5,000유로의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
 - 푸드트럭 등 이동상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만유로 한도 내에서 전체 비용의 50% 지원
 -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
-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네 가지 정책 우선순위 발표(2023. 4. 26.)³⁸⁹⁾, ³⁹⁰⁾
- 완전고용 달성 및 재산업화를 위해 노력
 -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근무조건, 고령층 고용 등에 대한 협약 구축 추진
 -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ntribu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완전 폐지를 통해 세부담 완화
 - 수소 및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산업 전략을 검증해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가계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속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철도부문에 1,000억유로를 투자해 약 10개 대도시에 지역 급행 철도 서비스 구축
 -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3년 가을에 시작할 예정
 -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지속
 - 건물의 에너지 혁신 및 농업 부문 지원 조치 지속 계획
 - 공공서비스 강화

389) 프랑스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26 avril 2023," 2023. 4. 27.,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du-26-04-2023#6cef98d8-1a2a-4489-ace2-e1ec25ba9827-1>, 검색일자: 2023. 5. 8.

390) 프랑스 정부, "Les priorités du Gouvernement pour une France plus indépendante et plus juste," 2023. 5. 2.,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s-priorites-du-gouvernement-pour-une-france-plus-independante-et-plus-juste>, 검색일자: 2023. 5. 8.

- 교사의 단기간 부재에도 대체 교사를 배치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는 교원 협약 (pacte enseignants) 시행
- 3세 미만 아동 돌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정의 및 질서 강화
 -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 자원을 확대하고, 프랑스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통제 강화
 - 사이버 폭력, 아동에 대한 성인 콘텐츠 노출, 온라인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공간 보호 법안 제출 예정

■ 프랑스 노동부, 완전고용을 위한 조치 발표(2023. 6. 7.)^{391), 392), 393)}

-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7.1%로 낮은 편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청년 및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맞춤형 지원, 장애인 고용 개선,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 지원
 - 적극적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³⁹⁴⁾ 수급자를 포함해 모든 구직자를 프랑스 노동센터(France Travail)에 등록해 관리
 - 장애인 고용 지원 개선
 -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근로자(Reconnaissance de la qualité de travailleur handicapé:

391) 프랑스 노동부(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Objectif plein emploi |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2023. 6. 7., <https://travail-emploi.gouv.fr/actualites/presse/dossiers-de-presse/article/objectif-plein-emploi-presentation-du-projet-de-loi>, 검색일자: 2023. 6. 15.

392)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2023. 6. 7., <https://www.vie-publique.fr/loi/289715-projet-de-loi-plein-emploi-france-travail-rsa-handicapes>, 검색일자: 2023. 6. 15.

393) 프랑스 법률사이트,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MTRD2313163L)," 2023. 6. 7.,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47650123/>, 검색일자: 2023. 6. 15.

394) 실업수당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수입 부족분을 보장하는 제도

RQTH)에 대한 지원 절차 간소화 및 고용 지원

- 자녀를 둔 부모의 취업 보장을 위해 보육 시스템 강화
 -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강화
 - 인구 1만 명 이상 도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나. 연금개혁

■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연금개혁안 발표(2023. 1. 10.)^{395), 396)} 및 사회보장 부문 수정에 산법안 제출(2023. 1. 23.)^{397), 398)}

- 연금개혁안은 제도의 균형을 맞추고 공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퇴직 연령을 높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하고자 함
 - 정년을 2023년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해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
 - 이에 따라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 64세가 됨
 -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김
 - 조기에 입사하여 장기 근속한 경우 44년 근무 이후 조기 연금 수령 가능
 -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현 62세 정년이 유지되며,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55세에 퇴직 가능
 - 기여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저연금 수령액을 최저임금 85%인 1,200유로로 약

395) 프랑스 정부, "Projet pour l'avenir du système de retraites : ce qu'il faut retenir," 2023. 1. 10.,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projet-pour-lavenir-du-systeme-de-retraites-ce-quil-faut-retenir>, 검색일자: 2023. 1. 12.

396)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Réforme des retraites : les annonces de la Première ministre," 2023. 1. 10.,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7798-reforme-des-retraites-les-annonces-de-la-premiere-ministre-e-borne>, 검색일자: 2023. 1. 25.

397) 프랑스 정부, "La réforme des retraites présentée en Conseil des ministres," 2023. 1. 23.,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a-reforme-des-retraites-presentee-en-conseil-des-ministres>, 검색일자: 2023. 1. 25.

398)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1. 24., <https://www.vie-publique.fr/loi/287916-reforme-des-retraites-2023-projet-de-loi-plfss-rectificatif>, 검색일자: 2023. 1. 25.

100유로 인상

- 수도권교통공사(RATP), 전기-가스공사(IEG), 공증인 및 관련 직원(CRPCEN), 프랑스 중앙은행,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E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의 신규 직원들에 대한 특별제도(régimes spéciaux)가 폐지되고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로 편입
-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연금지출의 약 180억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
-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RSS 2023) 의회 제출 (2023. 1. 23.)
- 해당 법안은 3월 채택을 위해 2월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

표 3-IV-8 「2023년 예산법」의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 (수정예산 법안 전망)	2023 (「예산법」 전망)
건강보험(Maladie)	-7.1	-7.2
산재보험(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2.2	2.2
노령보험기금(Vieillesse)	-3.6	-3.9
가족수당기금(Famille)	1.3	1.3
자율연대기금(Autonomie)	-1.2	-1.3
전체 사회보장 부문(Toutes branches)	-8.4	-8.8
노령연대 포함 사회보장 부문(Toutes branches y compris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7.1	-7.5

자료: 「2023년 프랑스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LOI n° 2022-1616 du 23 décembre 202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1. 23.

- 한편,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 반대 대규모 시위 및 총파업 진행³⁹⁹⁾
 - 1월 19일 프랑스 주요 노조가 연합전선을 구축해 교통,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파업 진행

399)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정세, 「프랑스 국내 정세 동향(연금개혁 관련 총파업 등)」, 2023. 1. 20.,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4/view.do?seq=1329115&page=1, 검색일자: 2023. 1. 25.

- 전국적으로 최소 200여개의 시위가 개최돼 110여만명이 참여(주최 측 추산 200만명)

■ 프랑스 의회, 연금개혁안 최종 채택(2023. 3. 20.)⁴⁰⁰⁾

- 2023년 1월 23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제출한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RSS 2023)이 3월 20일 의회에서 최종 채택
 -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골자로 함⁴⁰¹⁾
 - 또한,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고 최저 연금 수령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 수준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
 - 3월 15일, 양원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최종적으로 연금개혁법안 최종안에 합의⁴⁰²⁾
 - 정부 초안 기준 2024년 300명 이상 사업체 대상이었던 ‘시니어지수⁴⁰³⁾’ 공제 의무 적용 시기를 양원합동위원회 최종안에서 2023년 11월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체, 2024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체로 수정
 - 3월 16일, 상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⁴⁰⁴⁾
 - 3월 16일 하원 표결 전, 하원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항* 발동⁴⁰⁵⁾

400)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2. 20., <https://www.vie-publique.fr/loi/287916-reforme-des-retraites-2023-projet-de-loi-plfss-rectificatif>, 검색일자: 2023. 3. 21.

401)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재정동향」 2023년 1월호, pp. 35~3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71>

402)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3. 1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dossiers/plfss_pour_2023, 검색일자: 2023. 3. 21.

403) 각 기업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404) 프랑스 상원, “Réforme des retraites(PLFRSS pour 2023),” 2023. 3. 16., http://www.senat.fr/espace_presse/actualites/202301/reforme_des_retraites_plfss_pour_2023.html, 검색일자: 2023. 3. 21.

405) 프랑스 의회, “Texte sur lequel le Gouvernement a engagé sa responsabil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49, alinéa 3, de la Constitution,” 2023. 3. 16.,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tat/16/pdf/950-texte-49-3.pdf>, 검색일자: 2023. 3. 21.

- *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정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 정부 불신임안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⁴⁰⁶⁾
- 자유·무소속·해외영토 그룹(Libertés, Indépendants, Outre-mer et Territoires: LIOT)과 신민중생태사회연합(Nouvelle Union populaire écologique et sociale: NUPES)이 3월 17일 함께 제출한 불신임안⁴⁰⁷⁾에 대한 3월 20일 표결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부결⁴⁰⁸⁾
 - *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선 하원 573석 중 과반인 28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해당 불신임안은 찬성 278표로 부결
-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N)의 불신임안⁴⁰⁹⁾ 또한 찬성 94표로 부결⁴¹⁰⁾
 -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연금개혁안을 담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은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3월 20일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⁴¹¹⁾
 - 3월 21일부터 헌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최종 검토 진행⁴¹²⁾
- 한편,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노조 및 시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3월 15일까지 8번에 걸친 반대시위가 진행⁴¹³⁾

406)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2022. 10. 5.

407)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présentée par M. Bertrand PANCHER et 90 de ses collègues," 2023. 3. 17.,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tatic/16/motions_censure/20230317-Motion-Censure-LIOT.pdf, 검색일자: 2023. 3. 21.

408) 프랑스 의회, "Analyse du scrutin n° 1240 Première séance du 20/03/2023," 2023. 3. 20.,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1240](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1240), 검색일자: 2023. 3. 21.

409)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présentée par Mme Marine LE PEN et 87 de ses collègues," 2023. 3. 17.,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tatic/16/motions_censure/20230317-Motion-Censure-RN.pdf, 검색일자: 2023. 3. 21.

410) 프랑스 의회, "Analyse du scrutin n° 1241 Première séance du 20/03/2023," 2023. 3. 20.,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1241](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1241), 검색일자: 2023. 3. 21.

411) 프랑스 의회, "Réforme des retraites(PLFRSS pour 2023) : rejet de deux motions de censure et adoption du texte(lecture CMP)," 2023. 3. 20.,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reforme-des-retraites-plfrss-pour-2023-rejet-de-deux-motions-de-censure-et-adoption-du-texte-lecture-cmp>, 검색일자: 2023. 3. 21.

412)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3-849DC," 2023. 3. 21.,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s/affaires-instances?id=32246>, 검색일자: 2023. 3. 27.

- 하원 표결 없이 입법 진행을 결정한 이후 국민 반감이 더욱 커져 3월 23일 9차 반대시위는 프랑스 전역 250여개 지역에서 내무부 추산 108만명, 노조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고, 이후에도 반대시위 및 총파업이 지속될 전망⁴¹⁴⁾
 - 시위 양상이 폭력적으로 격화되고, 총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됨

■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2023. 4. 14.)⁴¹⁵⁾ 및 법률 공포(2023. 4. 15.)⁴¹⁶⁾

- 헌법위원회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의 연금개혁안을 담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의 핵심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발표
 - ‘시니어지수’ 신설 등 일부 조항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PLFSS)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결정을 받고 수정예산법에서 삭제됨
 - 야당이 발의한 연금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부의 건에 대해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결정⁴¹⁷⁾
- 합헌 결정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에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며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이 공식 공포되어 9월부터 시행될 예정

413) *Le monde*, “Grève du 15 mars : 480 000 manifestants en France selon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1,7 million selon la CGT,” 2023. 3. 15., https://www.lemonde.fr/politique/live/2023/03/15 greve-du-15-mars-en-direct-accord-sur-le-projet-de-reforme-des-retraites-en-commission-mixte-paritaire-m-acron-recoit-borne-et-les-ministres-concernes-ce-soir_6165525_823448.html, 검색일자: 2023. 3. 21.

414) *Le monde*, “Manifestations du 23 mars : retour au calme après une soirée émaillée d’incendies et de heurts à Paris,” 2023. 3. 24., https://www.lemonde.fr/politique/live/2023/03/24/manifestations-du-23-mars-en-direct-retour-au-calme-apres-une-soiree-emailee-d-incendies-et-de-heurts-a-paris_6166641_823448.html, 검색일자: 2023. 3. 27.

415) 프랑스 헌법위원회,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4. 14.,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actualites/loi-de-financement-rectificative-de-la-securite-sociale-pour-2023>, 검색일자: 2023. 4. 24.

416)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1),” 2023. 4. 1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7445077>, 검색일자: 2023. 4. 24.

417)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 sur les retraites : le Conseil constitutionnel rejette une première proposition de loi,” 2023. 4. 14.,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8693-referendum-dinitiative-partagee-rip-sur-les-retraites>, 검색일자: 2023. 4. 24.

다. 안정화 프로그램

- 프랑스 재무부, 2023~2027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발표 (2023. 4. 26.)⁴¹⁸⁾
 - (경제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지속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023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비의 증가로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항공부문 등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부문의 점진적 회복이 성장에 기여할 전망
 - 이후에도 가계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2025, 2026년에 각 1.7%, 2027년 1.8%를 기록할 전망

표 3-IV-9 2022~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제성장률	2.6	1.0	1.6	1.7	1.7	1.8
가계소비	2.7	0.2	1.9	1.9	1.9	1.9
일반정부소비	2.7	1.3	0.9	1.3	1.4	1.3
수입	9.1	3.1	3.0	3.5	3.3	3.3
수출	7.1	3.5	3.6	3.9	3.9	3.9
총고정자본형성	2.3	2.1	0.9	1.8	1.1	1.3
GDP디플레이터	3.0	5.4	2.7	1.8	1.6	1.6

자료: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4. 26., p. 17 (Table 1)

- (재정 전망) 2023~2027년 재정을 정상화하고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함
 -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우 낮게 유지해 2027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53.5%까지 낮아질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3~2027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2027년 3% 이하로 안정화될 전망

418) 프랑스 재무부, *Programme de stabilité(PSATB) 2023-2027*, 2023. 4. 26.,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ogramme-de-stabilite-psatb-2023-2027>, 검색일자: 2023. 5. 2.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20년 11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09.6%, 2027년 108.3%로 감소할 전망

표 3-IV-10 2019~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3.1	-9.0	-6.5	-4.7	-4.9	-4.4	-3.7	-3.2	-2.7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53.8	60.5	58.4	57.5	56.0	55.1	54.6	54.0	53.5
재정지출 증가율	1.9	6.8	2.6	-1.3	-1.1	0.0	0.7	0.5	0.7
총조세부담률	43.8	44.3	44.3	45.3	44.3	44.1	44.4	44.4	44.4
GDP 대비 공공부채	97.4	114.6	112.9	111.6	109.6	109.5	109.4	109.2	108.3

자료: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4. 26., p. 34 (Table 5)

- (재정정책) 프랑스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통제 노력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예외적인 지출의 증가에도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출 증가 억제에 노력
 - 지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
- (재정지속가능성) 수십 년 동안 고령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만 지난 10년간 고령인구(55~64세)의 고용률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연금개혁으로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타남
- (주요 과제)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 및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며, 이후 다음의 주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환경을 더욱 존중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 촉진을 위한 노력 지속
 - 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실업보험 개혁, 교육 훈련 강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고용 상황 개선
 - 친환경부문 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
 - 교육 및 보전에 대한 투자와 개혁을 통해 평등한 사회 구축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3~2027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발표(2023. 4. 26.)⁴¹⁹⁾
 -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2023~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달성 가능한 수준이나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 평가
 - 2023년 물가안정은 정부의 전망보다 더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 전망
 - 2025~2027년 경제성장 전망 또한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고 평가
 - 경제성장 전망이 추세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 전망보다 높게 설정됨
 - 2023~2027년 재정 전망은 다소 높게 설정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
 - 경제성장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할 수 있음
 - 재정안정을 위해 더 큰 지출 통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라. 기타 정책 및 보고서

- 프랑스 재무부, 녹색산업 법안(Projet de loi industrie verte) 발표(2023. 5. 16.)^{420), 421), 422)}
 - 해당 법안은 프랑스의 녹색경제 전환 및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 프랑스의 산업단지 설립 촉진 및 가속화 지원
 - 현재 평균 17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을 9개월로 단축

419)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X PRÉVISIONS MACROÉCONOMIQUES ASSOCIÉES AU PROGRAMME DE STABILITÉ POUR LES ANNÉES 2023 À 2027," 2023. 4. 26., <https://www.hcfc.fr/liste-avis/avis-ndeg2023-6-programme-de-stabilite-2023-2027>, 검색일자: 2023. 5. 23.

420)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industrie verte : découvrir les 15 mesures," 2023. 5. 16., <https://www.economie.gouv.fr/industrie-verte-presentation-projet-loi>, 검색일자: 2023. 5. 22.

421)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relatif à l'industrie verte," 2023. 5. 16., <https://www.vie-publique.fr/loi/289323-industrie-verte-decarbonation-projet-de-loi>, 검색일자: 2023. 5. 22.

422) 프랑스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16 mai 2023," 2023. 5. 16.,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du-16-05-2023#5202e239-8ccb-477e-b880-4da78eb1f0b4-0>, 검색일자: 2023. 5. 22.

- 생태학적 전환에 기여하는 주요 프로젝트 진행 절차 간소화
 -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
 - 녹색산업 자금 조달 지원
 - 태양열 패널, 풍력발전, 전기배터리, 열 펌프, 그린수소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40% 세액 공제 지원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매년 23억유로 이상을 지원할 계획
 - 친환경 기업 장려
 -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공공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 녹색산업 직무교육 강화
 -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선에 7억유로 지원
 - 공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5,000명의 추가 공학 학위 취득자 배출을 목표로 학생 확대 모집
- 프랑스 공공부문 혁신 및 공무원(ministè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s), 공무원 연봉 인상을 위한 조치 발표(2023. 6. 13.)⁴²³⁾
- 공무원 임금 향상과 재정적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봉 인상 조치 시행을 발표
 - 공무원의 역량과 공로를 고려해 연봉 조정이 이뤄짐
 - 공무원 고정 임금 2.5% 인상
 - 임금 3,250유로 미만인 공무원에게 최대 800유로의 구매력 보너스 지급 예정
 - 출장 관련 수당 재조정

423) 프랑스 정부, “Des mesures importantes de revalorisation des salaires pour les agents publics,” 2023. 6. 13.,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des-mesures-importantes-de-revalorisation-des-salaires-pour-les-agents-publics>, 검색일자: 2023. 6. 21.

- 공무원 임금 인상 조치 예산은 2023년 약 35억유로, 2024년 약 60억유로로 편성
- 프랑스 재무부, 2023년 국가개혁프로그램(Programme National de Réforme 2023) 발표 (2023. 4. 26.)⁴²⁴⁾
 - 국가개혁프로그램은 프랑스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 전략을 제시
 - 환경 위기 대응
 - 생산 및 소비 방식이 환경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함
 - 산업부문 탄소중립, 수소 개발, 탄소 포집 등에 대한 투자 지속
 - 건물의 에너지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 완전고용 달성 및 미래 역량 강화
 -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보험 개혁을 통해 취업 장려
 -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대
 - 에너지, 경제, 디지털 경쟁력 강화
 - 탄소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 원자력산업 강화를 위해 원자로 연장 및 신규 원자로의 설립,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및 폐기물을 적게 생성하는 원자로 개발 투자
 -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지속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기회 평등을 위한 투자와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개혁을 통해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대응
 - 학교 교육 인프라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 국가 보건 시스템 개선과 의료서비스 혁신 지원

424) 프랑스 재무부, *Programme National de Réforme 2023*, 2023. 4. 26.,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3/05/15/presentation-du-programme-national-de-reforme-2023>, 검색일자: 2023. 5. 23.

- 프랑스 회계감사원, 사회보장 부문 운영 상황 보고서 발표(2023. 5. 24.)⁴²⁵⁾
 -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재정수지는 196억유로(GDP 대비 0.7%) 적자 기록
 - 재정수입은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22.8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인해 예상보다 21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감소로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는 82억유로로 감소할 전망
 - 하지만 2024년 건강보험 및 연금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해 재정적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보장 부문의 구조적 개혁이 요구됨
 - 신규 재정지출은 지속가능한 재정 회복을 목표로 하는 다년간의 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이뤄져야 함
 -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노인복지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한 규제 기구를 운영해야 함
 -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화 및 자동화 조치를 확대해야 함

표 3-IV-11 프랑스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년 결산 (A)	2022년 「사회 보장 부문 예산법」 (B)	2022년 결산 (C)	C - A	C - B
건강보험(CNAM Maladie)	-28.7	-19.1	-21.0	7.7	-1.9
산재보험(CNAM AT-MP)	1.3	1.4	1.7	0.4	0.3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2.2	1.9	1.9	-0.3	0.0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2.7	-1.9	-3.8	-1.1	-1.9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0.2	-1.1	0.2	0.0	1.3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	-27.7	-19.7	-21.0	6.7	-1.3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5	-1.7	1.3	2.8	3.0
사회보장 부문(RG + FSV)	-29.3	-21.4	-19.6	9.7	1.8

주: 모든 수치는 부문별 재정수지를 의미

자료: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3*, 2023. 5. 24., p. 37 (Table 1)425)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3*, 2023. 5. 24.,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securite-sociale-2023>, 검색일자: 2023. 6. 15.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3. 1. 31.)⁴²⁶⁾

- 2022년 4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3분기 0.2% 대비 다소 둔화된 0.1%
 - 가계소비가 2022년 3분기 0.5%에서 4분기 -0.9%로 급격히 감소했고,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국내수요의 기여도는 -0.2%p로 나타남
 - 총고정자본형성은 3분기 2.3%에서 4분기 0.8%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 수입(3분기 3.9% → 4분기 -1.9%)이 수출(3분기 0.8% → 4분기 -0.3%)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대외무역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5%p로 지난 분기 -1.0%p보다 상승

표 3-IV-12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2 Q1	2022 Q2	2022 Q3	2022 Q4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0.2	0.5	0.2	0.1	6.8	2.6
가계소비	-1.0	0.5	0.5	-0.9	5.2	2.7
정부소비	0.2	0.0	0.2	0.2	6.4	2.4
총고정자본형성 ²⁾	0.4	0.3	2.3	0.8	11.4	2.4
수출	1.7	1.0	0.8	-0.3	8.6	6.8
수입	1.3	1.5	3.9	-1.9	7.8	8.6
GDP 기여도 (%)						
국내수요 ³⁾	-0.4	0.3	0.9	-0.2	7.0	2.7
재고투자	0.1	0.3	0.3	-0.2	-0.3	0.5
대외무역	0.1	-0.2	-1.0	0.5	0.1	-0.7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slowed down in Q4 2022(+0.1% after +0.2%). On average in 2022, it increased by 2.6%," 2023. 1. 21.

426) 프랑스 통계청, "GDP slowed down in Q4 2022(+0.1% after +0.2%). On average in 2022, it increased by 2.6%," 2023. 1. 2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795633>, 검색일자: 2023. 2. 15.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3. 4. 28.)⁴²⁷⁾

- 2023년 1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2%로 완만하게 성장
 - 가계소비가 전 분기 -1.0%에서 0.0%로 증가해 국내수요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또한 -0.4%p에서 -0.1%p로 다소 개선
 -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여 대외무역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전 분기 0.2%p에서 0.6%p로 증가

표 3-IV-13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2 Q2	2022 Q3	2022 Q4	2023 Q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0.5	0.1	0.0	0.2	2.6	0.4
가계소비		0.4	0.4	-1.0	0.0	2.7	-0.5
정부소비		-0.1	0.2	0.5	-0.1	2.6	0.4
총고정자본형성 ²⁾		0.2	2.0	0.0	-0.2	2.2	0.9
수출		1.2	0.9	0.9	1.1	7.2	2.6
수입		1.3	3.8	0.1	-0.6	9.4	1.6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3	0.8	-0.4	-0.1	2.7	0.1
	재고투자	0.3	0.3	0.2	-0.3	0.6	0.1
	대외무역	-0.1	-1.0	0.2	0.6	-0.8	0.2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moderately in Q1 2023(+0.2%)," 2023. 4. 28.

2) 실업률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4분기 실업률 발표(2023. 2. 14.)⁴²⁸⁾

- 2022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2%로 전 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함
 - 2022년 4분기 실업률은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1.0%p 감소한 수치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427)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moderately in Q1 2023(+0.2%)," 2023. 4. 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615290>, 검색일자: 2023. 5. 8.

428)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2%," 2023. 2. 14.,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800807>, 검색일자: 2023. 2. 15.

- 15~24세 실업률은 16.9%로 전 분기 대비 1.0%p 하락
- 25~49세 실업률은 6.5%, 50세 이상 실업률은 5.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고용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68.3%

표 3-IV-14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증감(%p)		2022년 4분기 실업자 수(천명)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3	7.2	-0.1	-0.3	2,195
15~24세	17.9	16.9	-1.0	0.4	564
25~49세	6.5	6.5	0.0	-0.3	1,151
50세 이상	5.1	5.0	-0.1	-0.7	480
남성	7.5	7.4	-0.1	-0.2	1,157
15~24세	19.5	18.6	-0.9	1.3	335
25~49세	6.5	6.5	0.0	-0.2	591
50세 이상	5.0	4.8	-0.2	-1.1	231
여성	7.1	6.9	-0.2	-0.4	1,039
15~24세	16.1	14.8	-1.3	-0.7	229
25~49세	6.4	6.5	0.1	-0.4	560
50세 이상	5.3	5.2	-0.1	-0.2	250
장기실업률	1.9	1.9	0.0	-0.3	580
고용률	68.3	68.3	0.0	0.5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2%," 2023. 2. 14.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1분기 실업률 발표(2023. 5. 17.)⁴²⁹⁾

- 프랑스의 2023년 1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1%로 전 분기와 동일하고,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함
 - 15~24세 실업률은 16.6%로 전 분기 대비 0.2%p 하락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3%p 낮은 6.4%, 50세 이상 실업률은 5.2%로 전 분기에 비해 0.1%p 상승
 - 고용률은 전 분기보다 0.3%p 상승한 68.6%를 기록

429) 프랑스 통계청, "In Q1 2023, the unemployment rate was stable at 7.1%", 2023.5.17.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622067>, 검색일자: 2023. 5. 22.

표 3-IV-15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증감(%p)		2023년 1분기 실업자 수(천명)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1	7.1	0.0	-0.3	2,186
15~24세	16.8	16.6	-0.2	-0.1	554
25~49세	6.5	6.4	-0.1	-0.3	1,129
50세 이상	5.0	5.2	0.2	-0.3	503
남성	7.4	7.4	0.0	0.0	1,170
15~24세	18.5	17.8	-0.7	0.3	321
25~49세	6.5	6.4	-0.1	-0.2	583
50세 이상	4.9	5.4	0.5	0.0	265
여성	6.9	6.8	-0.1	-0.5	1,016
15~24세	14.8	15.2	0.4	-0.7	233
25~49세	6.5	6.3	-0.2	-0.5	546
50세 이상	5.2	4.9	-0.3	-0.7	238
장기실업률	1.9	1.8	-0.1	-0.4	569
고용률	68.3	68.6	0.3	0.6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1 2023, the unemployment rate was stable at 7.1%," 2023. 5. 17.

나. 재정 통계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2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 (2023. 3. 28.)⁴³⁰⁾

- 2022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6.5%에서 1.8%p 감소한 4.7%(1,249억유로)
 - 재정지출보다 재정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감소
- 2022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조 5,362억유로이며,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1년 59.1%에서 2022년 58.1%로 감소함
 -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
- 2022년 재정수입은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7.3% 증가한 1조 4,114억유로이며,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1년 52.6%에서 2022년 53.4%로 증가

430) 프랑스 통계청, "INFORMATIONS RAPIDES No.75," 2023. 3. 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233185>, 검색일자: 2023. 4. 5.

- 2022년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부채는 111.6%로 전년 대비 1.3%p 감소

표 3-IV-16 프랑스 일반정부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재정수지(Déficit public)	-3.1	-9.0	-6.5	-4.7
재정지출(Dépenses publiques)	55.4	61.3	59.1	58.1
재정수입(Recettes publiques)	52.3	52.4	52.6	53.4
일반정부 총부채(Dette publique(brute))	97.4	114.6	112.9	111.6
일반정부 순부채(Dette publique nette) ¹⁾	88.9	101.2	100.3	101.0
조세부담률(Prélèvements obligatoires) ²⁾	43.8	44.3	44.3	45.3

주: 1)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

2)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괄하는 과세 부담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o.75," 2023. 3. 28.

표 3-IV-17 프랑스 일반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항목별 내용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2022	증감률(%)
재정지출(Total des dépenses)	1,477.7	1,536.2	4.0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452.9	475.3	5.0
-중간 소비(dont conso. intermédiaires)	126.2	134.5	6.6
-인건비(dont rémunérations)	314.1	327.7	4.3
채무비용(Intérêts)	38.1	53.2	39.7
사회보장수당(Prestations sociales)	673.1	680.6	1.1
이전지출과 보조금(Autres transferts et subventions)	220.5	223.8	1.5
비금융 자산 취득(Acquisition nette d'actifs non financiers)	93.2	103.3	10.9
재정수입(Total des recettes)	1,315.7	1,411.4	7.3
판매 및 기타 수입(Ventes et autres recettes)	95.3	101.9	7.0
부동산수입(Revenus de la propriété)	14.9	15.9	6.8
조세수입(Impôts)	757.5	817.0	7.9
- 재산세(dont impôts courants sur le revenu et le patrimoine)	323.2	357.1	10.5
- 제품생산세(dont impôts sur les produits et la production)	415.6	441.4	6.2
사회보장부담금(Cotisations sociales effectives)	374.6	398.7	6.5
기타 수입(Autres recettes)	80.9	82.4	1.8
총재정수지(Besoin de financement)	-162.0	-124.9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o.75," 2023. 3. 28.

■ 프랑스 예산국, 2023년 1분기 예산집행 결과 발표(2023. 5. 3.)⁴³¹⁾

- (재정수지) 2023년 1분기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547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3억 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23년 1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1,005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63억유로 증가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확대
- (재정수입) 2023년 1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726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9억유로 감소
 - 경제활동 회복으로 법인세가 증가했지만 관세 수입 등 기타 세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

표 3-IV-18 프랑스 2023년 1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48,857	-27,808	-42,477	-
재정지출(Dépenses)	112,231	107,763	115,944	7.6%
재정수입(Recettes)	63,375	79,955	73,467	-8.1%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11,214	-10,526	-12,247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9,620	-11,154	-12,465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3," 2023. 5. 3.

43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3," 2023. 5. 3.,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0853>, 검색일자: 2023. 5. 8.

표 3-IV-19 프랑스 2023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	2023	증감률(%)
총재정지출(Dépenses(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107,763	115,944	7.6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92,890	100,485	8.2
정부 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13	1,077	6.3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34,450	35,772	3.8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16,486	16,583	0.6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2,165	5,928	173.8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4,405	5,106	15.9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3,131	35,713	4.6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241	307	27.5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14,873	15,459	3.9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8,316	8,962	7.8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6,557	6,498	-0.9
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avec fonds de concours))	79,955	73,467	-8.1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69,907	70,725	1.2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17,439	17,795	2.0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11,109	12,528	12.8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4,331	4,055	-6.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26,068	26,063	0.1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10,991	10,283	-6.4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9,336	1,922	-79.4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¹⁾	711	820	15.3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3," 2023. 5. 3.

V

영국⁴³²⁾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24회계연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표 3-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1. 3.	영국 노동·연금부, 2023-24회계연도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금 계획 발표
2023. 1. 9.	영국 재무부, 기업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 제도 발표
2023. 1. 31.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발표
2023. 2. 7.	영국 감사원(NAO), 에너지 요금 지원 관련 보고서 Energy bills support 발표
2023. 2. 21.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의회 제출
2023. 3. 15.	영국 재무부, '2022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에 대한 정부 대응 발표
2023. 3. 15.	영국 재무부, 2023 봄 예산안(Spring Budget 2023) 발표
2023. 3. 30. 2023. 4. 5.	영국 노동·연금부, 국가연금 연령 검토 보고서(State Pension Age Review) 발표
2023. 3. 30.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에너지 혁명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
2023. 3. 31.	영국 최저임금위원회(LPC), 최저임금 인상 발표
2023. 4. 6.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연구·혁신 부문 지원 프로그램 'Pioneer' 발표
2023. 5. 9.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1차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Primary care recovery plan) 발표
2023. 5. 18.	영국 재무부, 2023-24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3. 5. 19.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10억파운드 규모의 반도체부문 지원 전략(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발표
2023. 5. 22.	영국 재무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명과학 패키지('Life Sci for Growth' package) 발표
2023. 5. 22.	영국 재무부, 내셔널 웨스트민스터(NatWest) 은행의 정부 지분 중 12억 6,000만 파운드 상당의 지분 매각 발표
2023. 6. 8.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요금 지원 현황 발표
2023. 6. 13.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경제성장 및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계획 발표
2023. 6. 22.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상(4.5% → 5.0%) 결정

4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은숙 선임연구원(kesdww@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 영국 재무부, 2023 봄 예산안(Spring Budget 2023) 발표(2023. 3. 15.)⁴³³⁾⁴³⁴⁾
 -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 2024년 1.8%, 2025년 2.5%로 전망
 - 도매 가스 가격 및 금리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0.2%로, 2022년 11월 전망(-1.4%) 대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에너지 및 기타 거래 가능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하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24년 1.8%, 2025년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가) 2022년 10월 11.1%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6.1%에서 2024년 0.9%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의 빠른 하락으로 인해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1%로, 2022년 11월 전망(7.4%) 대비 1.2%p 하향 조정
 - 에너지 및 교역품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0.9%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6년 중반까지 0%대에서 움직이다가 목표치인 2%로 회귀
 - (노동시장) 경제성장률이 약해짐에 따라 실업률은 2023년 4.1%에서 2024년 4.4%로 상승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돼 2027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

433)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3>, 검색일자: 2023. 3. 16.

HM Treasury, "Chancellor unveils a Budget for growth,"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unveils-a-budget-for-growth>, 검색일자: 2023. 3. 1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 3. 15.,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3/>, 검색일자: 2023. 3. 16.

434) 2022년 9월 감세조치를 포함한 '2022년 성장계획' 발표 후 금융시장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철회하고 통상 가을에 예정된 예산안 발표를 2023년 봄으로 연기한 바 있음

- 단기적으로 실질 GDP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4년 실업률은 4.4%(약 150만명)로, 2022년 11월 전망(4.9%) 대비 하향 조정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은 2022년 4분기 60.8%에서 2024년 2분기 60.0%로 하락한 후 2027년 4분기까지 60.4%로 회복될 전망

표 3-V-2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 성장률	7.6	4.0	-0.2	1.8	2.5	2.1	1.9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6	9.1	6.1	0.9	0.1	0.5	1.6
실업률(LFS)	4.5	3.7	4.1	4.4	4.3	4.2	4.1
고용률(4분기 기준)	60.6	60.8	60.2	60.1	60.2	60.3	60.4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 3., p. 29 (Table 1.4) 발췌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 3., p. 42 [Chart 2.14]의 데이터

○ 재정 전망

- (수입)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20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58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이후 강력한 반등을 이어가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수입이 증가하여, 2021-22회계연도와 전망 기간 사이에 GDP 대비 수입이 2.5%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1,72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1,89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지출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21회계연도에 53.0%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1-22회계연도에 44.5%로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지원 조치,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2022-23회계연도에는 다시 46.8%, 2023-24회계연도에는 4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이 종료되고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3-24회계연도에 5.1%, 2024-25회계연도에 3.2%로 하락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6-27회계연도에 94.8%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3-24회계연도에 103.1%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전망

표 3-V-3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¹⁾	917.7	1,020	1,058	1,104	1,137	1,184	1,230
(GDP 대비 %)(a)	(39.3)	(40.7)	(41.1)	(41.4)	(41.2)	(41.5)	(41.7)
총관리지출(TME) ¹⁾	1,040	1,172	1,189	1,189	1,214	1,247	1,280
(GDP 대비 %)(b)	(44.5)	(46.8)	(46.2)	(44.6)	(44.0)	(43.8)	(43.4)
공공부문 경상지출(c)	40.0	42.2	41.0	39.6	39.1	39.2	38.9
공공부문 순투자(d)	2.1	2.3	2.9	2.7	2.5	2.3	2.1
감가상각(e)	2.4	2.3	2.3	2.3	2.3	2.4	2.4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 - a)	5.2	6.1	5.1	3.2	2.8	2.2	1.7
경기조정 순차입	6.1	6.8	4.5	2.4	2.4	2.1	1.7
경상예산 적자(c + e - a)	3.1	3.7	23	0.5	0.3	0.0	-0.4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²⁾	83.9	88.9	92.4	93.7	94.6	94.8	94.6
공공부문 순채무 ²⁾	96.9	100.6	103.1	102.4	99.1	97.6	96.9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3월 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 3., p. 148 (Table A.5); p. 152 (Table A.9) 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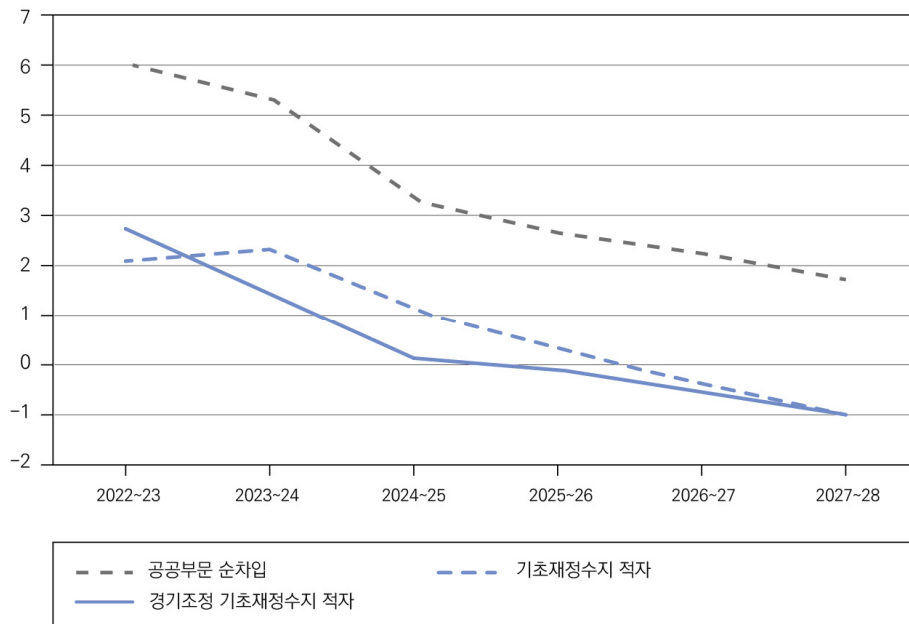
- (재정기조) 단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자 감소에 집중하면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2%)를 지원하는 등 균형적 기조를 보임
 - 정부는 최근 가계 및 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는데, 경제

가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은 종료될 예정

- 정부는 그간의 적극적인(generous) 재정지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재정 비용을 낮추고 중기적으로 채무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
- 경기순환의 영향을 제거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중기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경기 부양책이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있음을 시현

그림 3-V-1 재정기조

(단위: GDP 대비 %)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 3., p. 14 [Chart 1.2]

- (정책 방향)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 즉 물가상승률 반감(halving inflation), 경제 성장(growing the economy), 국가채무 감축 이행(getting debt falling)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 (물가상승률 반감) 에너지 요금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 연장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

- (경제성장) 고용, 교육, 기업, 지역 균형 발전의 4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계획
 - (고용) 장애인과 장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비경제활동의 원인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 해결에 힘쓰며, 3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연 38주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 시행
 - (교육) 선호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영국 경제를 고속련, 고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투자
 - (기업)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⁴³⁵의 한시적 도입으로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R&D 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
 - (지역 균형 발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 전역의 12개 성장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재집중 투자지역 프로그램(refocused Investment Zone programme)’ 등을 시행
- (국가채무 감축) 설정한 재정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음에 따라,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지출하고 효율적인 절감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관리하고 주요 공공 서비스 및 정부 우선순위에 지출을 집중
 - (채무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 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2027-28회계연도)까지 감축(fiscal mandate)
 - (재정수지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전망 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에 3% 초과 금지(supplementary target)
 - (복지지출 상한)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이내로 관리⁴³⁶
 - (재정 목표 성과 분석)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은 각각 65억파운드, 392억 파운드의 마진으로 충족될 것으로 분석되나, 복지지출 상한은 41억파운드가 초과되면서 미충족될 것으로 전망

435) 공장과 기계 투자 시 첫 해에 100%의 자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50%의 공제 혜택 적용(2023. 4. 1.~2026. 3. 31. 적용)

436) 복지지출 상한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에서 재설정되었고, 이는 2022년 1월 10일 하원에서 승인. 이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재정 중립적인 분류 변경(fiscally neutral classification changes)’에 맞게 조정(<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852/>, 검색일자: 2023. 3. 27.)

표 3-V-4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

(단위: %, 십억파운드)

구분	평가	GDP 대비 비율(%)		규모(십억파운드)	
		전망	마진	전망	마진
2027-28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전년 대비 변화	충족	-0.2	0.2	-	6.5
2027-28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차입	충족	1.7	1.3	49.3	39.2
2024-25회계연도 복지지출 상한	미충족	-	-	150.6	-4.1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 3., p. 127 (Table 5.1) 발췌

■ 영국 재무부, 2023-24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⁴³⁷⁾ 발표(2023. 5. 18.)⁴³⁸⁾

- 2023-24회계연도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약 9,736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208억파운드 증가
 - 부처별 지출한도(DEL)⁴³⁹⁾는 약 4,807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⁴⁴⁰⁾은 약 3,99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91억파운드, 72억파운드 증가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⁴⁴¹⁾은 약 938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45억파운드 증가
- 2023-24회계연도 총 순현금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은 약 8,207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623억파운드 증가

437)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법률로 지출 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세출예산안

438) HM Treasury, "Main Supply Estimates 2023 to 24," Corporate report, 2023. 5. 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in-supply-estimates-2023-to-24>, 검색일자: 2023. 5. 19.

439) Department Expenditure Limit: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440)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 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41)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표 3-V-5 2023-24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1-22 실적치	2022-23 잠정치	2023-24 계획
부처별 지출한도(DEL) (a)	465,685	471,622	480,719
자원 DEL	382,500	374,808	381,413
자본 DEL	83,185	96,815	99,307
연간관리지출(AME) (b)	458,843	391,917	399,130
자원 AME	443,039	354,204	306,130
자본 AME	15,805	37,714	92,999
총순예산(a + b) (Total Net Budget)	924,529	863,540	879,849
총 비예산 지출 (c) (Total Non-Budget Expenditure)	87,543	89,311	93,781
총지출(a + b + c) (Total Resource and Capture in Estimates)	1,012,072	952,851	973,629
현금주의 조정 (d) (Resource to cash adjustment)	-329,826	-194,515	-152,957
총 순현금소요액(a + b + c + d) (Total Net Requirement)	682,246	758,336	820,672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3-24 – Main Supply Estimates*, 2023. 5., p. 4 (Table 1); p. 20 (Table 2)

나. 추가경정 예산

-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⁴⁴²⁾ 의회 제출(2023. 2. 21.)⁴⁴³⁾

442) 본세출예산안에서 확정된 지출 권한을 수정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상 매년 2월에 제출되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인 3월에 승인. 촉박하고 긴급한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 추가경정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과 구분

443) HM Treasury, "Supplementary Estimates 2022-23," Corporate report, 2023. 2.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22-23>, 검색일자: 2023. 2. 22.
UK Parliament, "Revised Government spending plans for 2022/23," Research Briefing, 2023. 3. 1.,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730/>, 검색일자: 2023. 3. 14.

-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은 현재 계획(특별 추가경정 예산) 대비 약 20억파운드 감소한 9,664억파운드로 수정
 - 부처별 지출한도(DEL)⁴⁴⁴는 4,712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⁴⁴⁵은 4,059억 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각각 197억파운드, -259억파운드 조정
 - 보건·사회복지부에 대한 추가 자금,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생활비 압력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
 - 총 비예산 지출⁴⁴⁶은 893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42억파운드 증액
 - 총 순현금소요액⁴⁴⁷은 7,646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245억파운드 감액

표 3-V-6 2022-23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2-23 현재 계획 ¹⁾ (a)	2022-23 조정 규모 (b)	2022-23 수정 계획 (a) + (b)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451,446	19,744	471,190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431,836	-25,919	405,917
총순예산(Total Net Budget)	883,282	-6,175	877,107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85,124	4,188	89,311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968,406	-1,987	966,419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79,306	-22,510	-201,816
총 순현금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789,100	-24,497	764,603

주: 1) 특별 추가경정예산(2022. 10.) 기준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 Supply Estimates*, 2023. 2. 21., p. 4 (Table 1)

444)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445) 사회보장 지출, 세액공제 등 주요 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46)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447)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노동·보건·복지 정책

- 영국 노동·연금부, 2023-24회계연도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금 계획 발표(2023. 1. 3.)⁴⁴⁸⁾
 - (배경) 정부는 지난 가을 보고서에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 패키지를 계획
 - 이에 노동·연금부는 2023-24회계연도 생활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발표
 - (내용) 소득에 따른 적격 대상에게 최소 900파운드, 최대 1,350파운드 지급
 - 2023-24회계연도 동안 총 900파운드의 생활비 보조금이 3번에 나누어 지급 되고, 해당자에 한해 장애수당 150파운드와 연금수당 300파운드는 별도로 지급
 - 생활비 보조금 대상은 800만가구 이상, 장애수당 대상자는 600만명 이상, 연금수당 대상자는 8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⁴⁴⁹⁾
 - (일정) 생활비 보조금은 올해 봄, 가을, 그리고 내년 봄에, 장애수당은 여름에, 연금수당은 겨울에 지급

표 3-V-7 2023-24회계연도 생활비 보조금 지급 일정

(단위: 파운드)

구분	금액	지급기간
1차 생활비 보조금(First Cost of Living Payment)	301	2023년 봄
장애수당(Disability Payment)	150	2023년 여름
2차 생활비 보조금(Second Cost of Living Payment)	300	2023년 가을
연금수당(Pensioner Payment)	300	2023/4 겨울
3차 생활비 보조금(Third Cost of Living Payment)	299	2024년 봄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Millions of low-income households to get new Cost of Living Payments from Spring 2023," 2023. 1. 3.

448)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Millions of low-income households to get new Cost of Living Payments from Spring 2023," Press Release, 2023. 1.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of-low-income-households-to-get-new-cost-of-living-payments-from-spring-2023>, 검색일자: 2023. 1. 17.

449) 영국 통계청의 2022년 3월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영국의 총가구는 약 2,808만가구, 총인구는 약 6,636만명으로 추정(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Dataset Families and household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datasets/familiesandhouseholds>, 검색일자: 2023. 1. 26.)

- 영국 최저임금위원회(LPC), 최저임금⁴⁵⁰ 인상 발표(2023. 3. 31.)⁴⁵¹
 - 23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생활임금은 10.42파운드로 전년 대비 9.7% 인상, 21~22세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은 10.18파운드로 전년 대비 10.9% 인상
 - 견습생⁴⁵²의 최저임금은 5.28파운드로 전년 대비 9.7% 인상
 -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 내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중위소득 3분의 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목표⁴⁵³에 따른 것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1,600파운드 이상 증가하고, 2백만명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표 3-V-8 2023년 영국의 최저임금

(단위: 파운드, %)

구분		2022-23회계연도	2023-24회계연도	증가율(%)
법정생활임금	23세 이상	9.50	10.42	9.7
	21~22세	9.18	10.18	10.9
법정최저임금	18~20세	6.83	7.49	9.7
	16~17세	4.81	5.28	9.7
견습생(Apprentice) 최저임금	16~18세	4.81	5.28	9.7
	19세 이상 1년 차			

자료: Low Pay Commission, "Largest ever cash increase in the National Living Wage to boost pay for millions," Press Release, 2023. 3. 31.; 영국 정부 통합 홈페이지, "Become an apprentice," <https://www.gov.uk/become-apprentice/pay-and-conditions>, 검색일자: 2023. 4. 5.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1차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Primary care recovery plan) 발표 (2023. 5. 9.)⁴⁵⁴

450) 영국의 최저임금은 연령구간과 견습생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법정생활임금은 23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23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

451) Low Pay Commission, "Largest ever cash increase in the National Living Wage to boost pay for," Press Release, 2023. 3. 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rgest-ever-cash-increase-in-the-national-living-wage-to-boost-pay-for-millions>, 검색일자: 2023. 4. 4.

452) 특정 직업의 기술(skill)과 지식을 얻기 위해 근로와 학습을 결합한 형태의 유급 일자리

453)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

454)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Primary care recovery plan: Health and Social Care Secretary statement," 2023. 5. 9.,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health-and-social-care-secretary-statement-on-the-primary-care-recovery-plan>, 검색일자: 2023. 5. 16.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and NHS England, "Delivery plan for recovering access to primary care," 2023. 5.

-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 국가의료서비스(NHS) 대기 문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 정부는 12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일반진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기자 명단 및 대기 시간을 줄이며, 수요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
 - 1차 의료서비스 네트워크(PCNs)에 대한 신기술 지원, 전화 통신 디지털화, 치료 내비게이션⁴⁵⁵⁾ 교육 및 혁신 등, 일반진료 접근성 현대화에 2억 4,000만파운드 이상을 투자
 - 향후 2년 동안 6억 4,500만파운드를 투자하여 지역사회 약국 서비스를 확대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대 6억 4,500만파운드 지원
 - 3억 8,500만파운드를 투자하여 2024년 3월까지 2만 6,0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
- 영국 재무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명과학 패키지('Life Sci for Growth' package) 발표 (2023. 5. 22.)⁴⁵⁶⁾
 - 정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제조, 기술 및 인프라에 6억 5,000만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
 - 생명과학 회사의 규제 환경과 상업적 임상시험 개선(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규제 부담 축소 등)을 위해 1억 2,100만파운드 지원
 - 미래 보건 관련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 혁신부문에 최대 4,800만 파운드 투자
 - 인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발견을 지원하는 생물학적 데이터 은행의 기능 개선을 위해 1억 5,400만파운드 지원
 - 최대 2억 5,000만파운드를 지원하여 유망한 과학과 기술회사에 투자하도록 연금제도에 인센티브를 제공
 -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이번 패키지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455) care navigation: 1차 진료 환자와 보호자(carer)가 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을 최대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

456) HM Treasury, "Chancellor reveals life sciences growth package to fire up economy," 2023. 5. 25.,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reveals-life-sciences-growth-package-to-fire-up-economy>, 검색일자: 2023. 5. 26.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

- 또한 생명과학부문은 28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고, 매년 영국에 940억 파운드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나. 산업·에너지·연구 정책

■ 영국 재무부, 기업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 제도 발표(2023. 1. 9.)⁴⁵⁷⁾

- (목적) 에너지시장의 심한 가격 변동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에게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하여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
- (내용) 적절한 영국 기업 및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높은 에너지 요금에 할인을 적용
 - 면허가 있는 에너지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적격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자의 경우, 가스요금은 최대 6.97파운드/MWh, 전기요금은 최대 19.61파운드/MWh 할인
 -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에너지 및 무역집약도가 높은 부문(주로 제조업) 기업에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
 - 가스요금은 최대 40파운드/MWh, 전기요금은 89.1파운드/MWh 할인
- (지원 규모) 2023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총지원 규모는 55억 파운드
 - 최근 도매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지원 규모 축소
 - 2022년 11월 발표된 가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동안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자를 위한 지원 규모는 180억 파운드

■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에너지 혁명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2023. 3. 30.)⁴⁵⁸⁾

-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에

457) HM Treasury, "The government unveils new "Energy Bills Discount Scheme" for businesses," 2023. 1.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unveils-new-energy-bills-discount-scheme-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3. 1. 17.

458)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Shapps sets out plans to drive multi billion pound investment in energy revolution," Press Release, 2023. 3. 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shapps-sets-out-plans-to-drive-multi-billion-pound-investment-in-energy-revolution>, 검색일자: 2023. 4. 4.

- 너지 도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국과 전 세계적으로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
- 이에 수십 년 동안 값비싼 외국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했던 영국은 저렴하고 깨끗한 국내생산 전력을 확대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 (주요 정책) 탄소 포집·저장·활용과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재생 가능 전력, 투자 유치 프로세스 개혁,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과 관련해 투자를 계획
 - 탄소 포집·저장·활용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포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2개의 추가적인 미래 클러스터 선정을 위한 라운드를 시작
 - 관련 계획은 200억파운드 규모의 CCUS⁴⁵⁹⁾ 기금에 기반
 -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 6천만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유식 해상풍력⁴⁶⁰⁾산업 투자를 시작
 - 2억 500만파운드의 예산이 지원되는 재생 가능 전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영국의 세계 선도 계획(UK's world-leading scheme) 5차 라운드를 시작
 - 투자 유치 프로세스를 개혁하여 태양광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함해 더 많은 에너지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 효율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 비용을 절감
 - ECO+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주택 30만채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
 -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인프라 강화에 3억 8천만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
 - 영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 성장 부문 등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인 영국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에 100억파운드의 추가 역량 부여
 - (투자 규모) 2010년부터 영국은 정부 자금, 민간투자, 소비자 부과금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에 1,980억파운드를 투자하였는데, 향후 에너지 혁명에 약 1,000억

459)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arbon)를 포집(Capture)해 활용(Utilization)하거나 저장(Storage)하는 기술을 통칭

460)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달리, 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하는 방식

파운드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연구·혁신 부문 지원 프로그램 ‘Pioneer’ 발표(2023. 4. 6.)⁴⁶¹⁾
 - (배경)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의 ‘Horizon Europe’⁴⁶²⁾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준비하였으나 가입이 지연
 - 가입이 지연되면서 연구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 일정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구자들에게 신뢰와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으로 ‘Pioneer’ 프로그램을 마련
 - (주요 내용) Pioneer 프로그램은 인재·연구 발굴(Pioneer Talent), 비즈니스 주도 혁신(Pioneer Innovation), 국제 협력(Pioneer Global), R&D 인프라(Pioneer Infrastructure)의 4개 부문에 약 146억파운드를 지원
 - (인재·연구 발굴) 인재는 R&D 시스템의 기반으로, 정부는 2027-28회계연도까지 20억파운드를 지원
 - 물리학에서 예술 및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연구자 주도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 리더십 교육 및 부문 간 네트워킹, 연구 상업화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
 - (비즈니스 주도 혁신) 2027-28회계연도까지 35억파운드를 투자하여 국제적인 과학 협력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규제 및 정책 생태계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
 - 국내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연구, 기업, 제3섹터 및 기타 주요 파트너를 통합하여 영국 혁신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
 - (국제 협력) 2027-28회계연도까지 38억파운드를 지원하여 광범위한 글로벌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넘어 국제적 협력을 심화하고 확장
 - 환경 복원, 전염병 극복, 자원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

461)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UK publishes prospectus for opportunities beyond Horizon Europe,” Press Release, 2023. 4.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publishes-prospectus-for-opportunities-beyond-horizon-europe>, 검색일자: 2023. 4. 17.

462) Horizon Europe(2021~2027): EU의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사업으로, 7년간 955억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EU 비회원국은 준회원국 가입 요청과 EU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

- (R&D 인프라) 2027-28회계연도까지 17억파운드를 투입하여 공공부문 연구 기관, 대학, 연구소, 연구조직 등의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 자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원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10억파운드 규모의 반도체부문 지원 전략(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발표(2023. 5. 19.)⁴⁶³⁾
 - 반도체부문 성장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억파운드를 투자하여 인프라에 대한 업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계획
 -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부문에서 영국의 우위를 확보하고 다음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동안 최대 10억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 (국내 반도체부문 성장) 반도체 자문 패널 구성, 연구·개발, 인프라 접근성 개선, 인재 유치·양성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부문 성장을 지원
 - (공급망 중단 위험 완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세계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내 조치나 국제 협력을 통해 반도체 관련 주요 부문에서 회복력을 구축
 - (국가 안보 보호) 민감한 반도체 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안과 성장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
-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요금 지원 현황 발표(2023. 6. 8.)⁴⁶⁴⁾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부는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가스, 전기) 요금 지원으로 약 393억파운드를 지출(가계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역대 최대)
 - 에너지 가격 보증제⁴⁶⁵⁾에 210억파운드,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⁴⁶⁶⁾에 120억

463)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New £1 billion strategy for UK's semiconductor sector," Press Release, 2023. 5. 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1-billion-strategy-for-uks-semiconductor-sector>, 검색일자: 2023. 5. 23.

464)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40 billion spent protecting families and businesses from energy costs," 2023. 6. 8., <https://www.gov.uk/government/news/40bn-spent-protecting-families-and-businesses-from-energy-costs>, 검색일자: 2023. 6. 21.

465) Energy Price Guarantee: 가정용 에너지 연간 요금에 상한(2022년 10월~2023년 3월: 2,500파운드, 2023년 4월~2024년 4월: 3,000파운드)을 설정하고, 에너지 단위당 요금과 기본요금을 조정하여 에너지 연간 요금이

파운드, 에너지 요금 규제 계획⁴⁶⁷)에 55억파운드 지출

-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가계의 연간 에너지 요금은 약 4,300파운드로 예상되나, 정부는 예상 요금의 절반 정도를 지원
- 에너지 요금 지원은 에너지 생산자 초과 이익(energy producers' excess profits)에 대한 세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 202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약 260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경제성장 및 창조산업⁴⁶⁸) 육성을 위한 신규 계획 발표 (2023. 6. 13.)⁴⁶⁹

- (목표) 2030년까지 창조산업의 총부가가치를 500억파운드 성장시키고, 고도로 숙련되고 생산적이며 포용적인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창조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창조산업의 생산량은 1.5배 이상 성장하여, 2021년 총부가가치⁴⁷⁰)는 1,080억파운드를 기록하였고, 일자리는 200만개 이상 존재
- (재정지원) '2023 창조산업 성장 모멘트'(2023 Creative Industries Growth Moment)의 일환으로 창조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7,700만파운드를 지원
 - 신규 클러스터(최소 6개)의 R&D 지원을 위해 5,000만파운드를 투자하고,

상한을 넘지 않게 하는 제도

466) Energy Bills Support Scheme: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400파운드 보조

467) Energy Bill Relief Scheme: 기업 및 기타 조직 등을 포함해 비가정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직 에너지 요금을 경감

468) Creative Industries: 창의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유형의 산출물뿐 아니라 콘텐츠, 경제가치 등을 포함한 무형의 지식과 예술 서비스를 포함

469)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mbitious plans to grow the economy and boost creative industries," Press Release, 2023. 6.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ambitious-plans-to-grow-the-economy-and-boost-creative-industries>, 검색일자: 2023. 6. 21.

470) 영국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2010년) 1조 4,528억파운드, (2014년) 1조 6,611억파운드, (2019년) 2조 2억 파운드, (2021년) 2조 337억파운드(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economy/grossvalueaddedgva/timeseries/abml/pn2>, 검색일자: 2023. 6. 26.)

- 창조성장 프로그램⁴⁷¹) 예산을 1,090억파운드 증액하여 다른 6개 지역의 기업을 지원
- 영국 게임 기금(UK Games Fund)과 풀뿌리 라이브 음악 지원(Supporting Grassroots Live Music)에 각각 500억파운드 지원
 - (기타) 업계와 정부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으로, 양자 간 파트너십은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를 통해 조정될 예정

다. 통화정책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상(4.5% → 5.0%) 결정(2023. 6. 22.)⁴⁷²
 - (경제 현황 논의) 금리 인상 결정에 앞서 세계 경제 및 영국 경제 전반을 논의
 - (국제경제) 1분기 세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였으나, 2분기 성장률은 5월 회의⁴⁷³) 대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최근 세계 금융부문의 심각한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
 - 중국의 성장 모멘텀은 2분기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중국 무역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수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로지역과 미국에서 계속 하락⁴⁷⁴)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
 - (통화·금융) 금융부문 스트레스⁴⁷⁵)와 관련된 하방위험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으로 단기 및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영국에서 두드러짐
 - (수요·생산량)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1분기에 0.1%(통계청 추정치)를 기록하였고, 2분기에는 0.25%로 전망

471) Create Growth Programme: 맨체스터, 웨스트미들랜즈주 등에 기업 및 투자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런던 외부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확장과 금융 접근을 지원해 주는 사업

472)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5% - June 2023," 2023. 6. 22.,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3/june-2023>, 검색일자: 2023. 6. 23.

473) 5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완만한 성장(moderate pace)을 예상

474) 유로지역 HICP 물가상승률: (4월) 7.0% → (5월) 6.1%,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4월) 4.9% → (5월) 4.0%

475)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측정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 가계지출은 매우 약하기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증가하고 있고, 분기별 소매 판매량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
- (공급·물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7%,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4%로, 5월 회의 예상보다 각각 0.3%p, 0.5%p 상승
 - 5월 회의 이후의 물가 상승세는 근원재화⁴⁷⁶⁾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차량 및 레저 상품의 물가에서 강세를 보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연중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금리 인상 결정)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2023년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5.0%로 0.5%p 인상하기로 결정
 -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7명은 5.0%로 인상, 2명은 기존 4.5% 유지 의견 제시
 -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0.1%에서 0.25%로 인상된 이후, 이번 6월까지 13회 연속 인상

표 3-V-9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1		2022							2023			
	12. 16	2. 3	3. 17	5. 5	6. 16	8. 4	9. 22	11. 3	12. 15	2. 2	3. 23	5. 11	6. 22
금리	0.25	0.50	0.75	1.00	1.25	1.75	2.25	3.00	3.50	4.00	4.25	4.50	5.00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3. 6. 22.

라. 기타 정책

- 영국 재무부, 내셔널 웨스트민스터(NatWest) 은행의 정부 지분 중 12억 6,000만파운드 상당의 지분 매각 발표(2023. 5. 22.)⁴⁷⁷⁾

476) core goods: 이상기후, 석유파동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재화

477) HM Treasury, "Government sells £1.26 billion of NatWest shares reducing stake to 38.6%," 2023. 5.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sells-126-billion-of-natwest-shares-reducing-stake-to-386>, 검색일자: 2023. 5. 23.

- 정부 지분 매각은 자사주 매입(directed buyback)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지분율은 41.4%에서 38.6%로 감소할 예정
 -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및 경제 안정과 보호를 위해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동 은행 지분의 84%를 보유
 -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를 통해 적격성이 인정되고 시장 상황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 정부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였고, 2022년 정부 지분율은 41.4%까지 감소
 - 2023년 3월 봄 예산안을 통해 2025-26회계연도까지 이 은행의 완전한 민영화 목표

03 주요 보고서

-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발표(2023. 1. 31.)⁴⁷⁸⁾
 - (배경) 예산책임청은 매년 경제·재정 전망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책임청이 수행한 경제·재정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분석
 - 이번 보고서는 2021년 3월 수행한 2021-22회계연도(2021. 4.~2022. 3.) 경제·재정 전망과 실적치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경제 전망 평가
 - (물가상승률) 2021-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의 경우, 2010년에 예산책임청이 경제·재정 전망을 시작한 이래 전망치와 실적치 간 가장 큰 오차 발생(〈그림 3-V-2〉 참조)
 - 2021-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 전망치(1.7%)의 두 배가 넘는 4.0%를 기록하여 2.3%p의 오차 발생
 - 큰 폭의 오차는 예상치 못한 선진국의 강한 수요 회복, 신흥국의 공급·물류의

478)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2023. 1. 31., <https://obr.uk/fer/forecast-evaluation-report-january-2023/>, 검색일자: 2023.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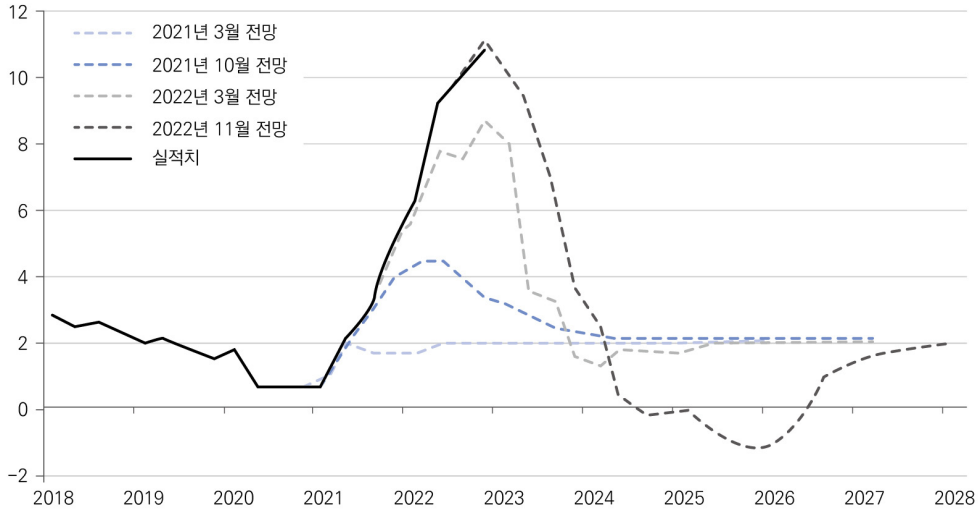
병목 현상 지속,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팬데믹 여파로 인해 예상보다 더 경직적이었던 노동시장 등에 기인

- (실질 GDP)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수준은 2022년 1분기까지 2021년 3월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2021-22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을 3.2%p 과소 예측(〈그림 3-V-3〉 참조)
 - 이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경제 반등이 강하지 않았으나, 이후 공중보건 제한이 해제되면서 더 강하게 반등했음을 시사
 - 전망 오차 3.2%p를 분해해 보면, 강력한 소비성장이 2.7%p, 기업투자가 -0.1%p, 민간주택 투자가 0.5%p, 정부지출이 -0.5%p, 순수출이 1.3%p, 기타 요인이 -0.8%p를 설명
- (노동시장) 팬데믹 이후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⁴⁷⁹⁾ 종료로 인해 2021~22회계연도 실업률이 4.8%에서 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적치는 4.2%를 기록
 - 이는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및 기타 팬데믹 관련 기업 지원이 예상보다 성공적이었음을 의미
 -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는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10만명 이상 높은 57만 5,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질병의 장기화 및 조기퇴직 증가를 포함해 다양한 요인에 기인

479) job retention scheme(CJRS or 'furlough scheme'):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노동자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2020년 3월 말 도입되어 2021년 9월 30일 종료,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ould-be-covered-by-the-coronavirus-job-retention-scheme#check-if-youre-eligible>, 검색일자: 2023.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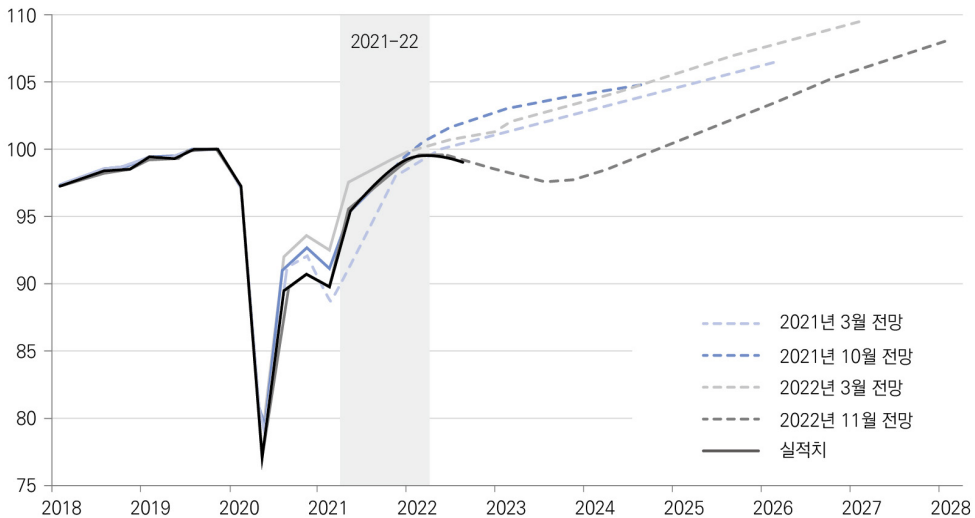
그림 3-V-2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물가상승률 전망과 실적치

(단위: %)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2023. 1., p. 4 [Chart 1.1]

그림 3-V-3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실질 GDP 전망과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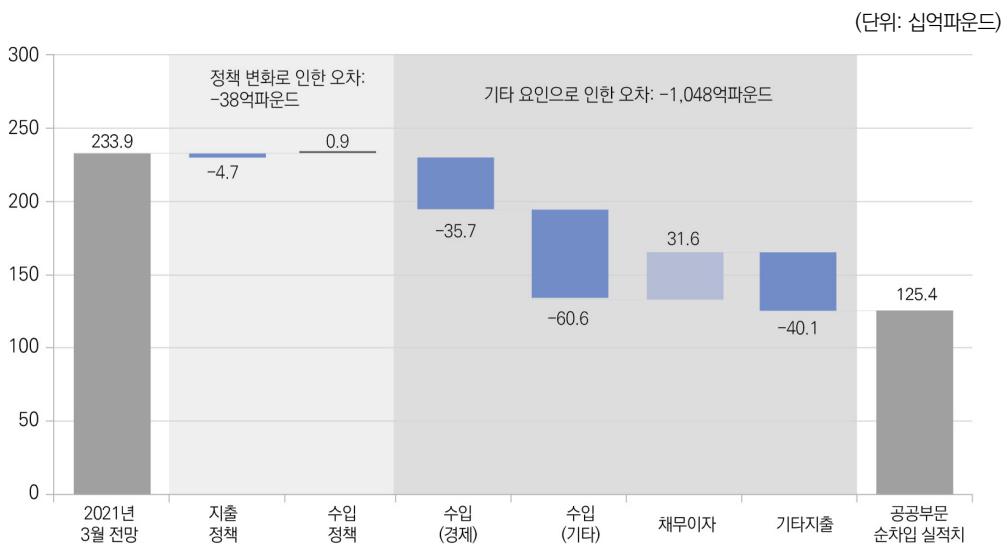
주: Q4 2019 = 100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2023. 1., p. 5 [Chart 1.2]

○ 재정 전망 평가

- (순차입) 2021-22회계연도 순차입은 실적치 대비 1,086억파운드(46.4%) 과대 전망되었는데, 오차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그림 3-V-4> 참조)
 - 2021년 3월 전망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해 순차입 38억파운드 과대 전망
 - 경제적 요인(경제 전망)으로 인해 수입 357억파운드 과소 전망(특히 노동 소득과 개인소비)
 - 경제적 요인 이외 요인(분류체계 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 606억파운드 과소 전망
 - 채무이자 지출의 과소 예측(316억파운드)과 기타 지출의 과대 예측(401억파운드)이 상쇄되어 순차입 85억파운드 과대 전망
- (순채무) 2021-22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10%p 과대 전망
 - 전망 오차를 살펴보면, GDP 대비 1.5%p는 채무 초기 값을 과대 예측한 데 기인하고, 3.7%p는 예상 보다 낮은 채무 축적, 나머지는 예상보다 높았던 GDP가 원인

그림 3-V-4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순차입 전망과 실적치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2023. 1., p. 7 [Chart 1.4]

- 영국 감사원(NAO), 에너지 요금 지원 관련 보고서 Energy bills support 발표(2023. 2. 7.)⁴⁸⁰⁾
 - (지원 정책) 에너지 요금 증가로 인한 영향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가격 보증제(EPG), 에너지 비용 구제 계획(EBRS), 대체 연료 보조금(AFP), 비가정용 대체 연료 보조금(ND AFP),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EBSS) 등을 시행
 - (에너지 가격 보증제, Energy Price Guarantee) 가정용 에너지 평균 요금에 상한을 설정(2022년 10월~2023년 3월: 2,500파운드, 2023년 4월~2024년 4월: 3,000파운드)
 - (에너지 비용 구제 계획, Energy Bill Relief Scheme) 기업, 비영리 자원(voluntary) 조직, 공공부문 조직 등을 포함해 비가정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직에 대해 에너지 요금을 경감(2022년 10월~2023년 3월)
 - (대체 연료 보조금, Alternative Fuel Payment) 액화가스 등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200파운드 보조(일회성 지원)
 - (비가정용 대체 연료 보조금, Non-Domestic Alternative Fuel Payment) 액화가스 등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비가정용 에너지 소비자에게 150파운드 보조(일회성 지원)
 -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 Energy Bills Support Scheme)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400파운드 보조(2022년 10월~, 6개월 분할)
 - 북아일랜드의 경우,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와 대체 연료 보조금 제도를 결합하여 600파운드 보조
 - (지원 비용·편익) 2022-23회계연도 동절기부터 시행한 에너지 요금 지원 비용은 현재 690억파운드로 추정
 -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거나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사용량을 줄이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요금 증가가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편익이 발생되나 정확한 추정은 어려움
 - (정책 시행·관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⁴⁸¹⁾는 대부분의 가정과 기업이 이번 겨울

480) National audit Office, "Energy bills support," Press Release, 2023. 2. 7., <https://www.nao.org.uk/press-releases/energy-bills-support-schemes/>, 검색일자: 2023. 2. 15.

481) 리시 수낙 총리는 지난 2월 7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Industrial Strategy)를 해체하고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를 신설. 따라서 현재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가 주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정책을 시행

- 정책의 신속한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과 기업에게 보편적 지원(universal support)이 제공되었으나, 이는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가정과 기업에게도 지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위험을 유발
- 또한 신속한 시행으로 인해 오지급 등의 오류 가능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
- (결론)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시행한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정부는 향후 선별적 지원(targeting support)을 고려하고 있음
 - 선별적 지원 시, 차등 지원 자격을 결정하고 부정수급 시도를 식별하는 등 재무 통제 접근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고, 오지급 등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재무부, 『2022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⁴⁸²⁾에 대한 정부 대응 발표(2023. 3. 15.)⁴⁸³⁾

- (개요) 2022년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했던 공공재정에 대한 주요 위험 요인 분석과 관련해 지속가능하고 미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설명
- (지속가능한 재정전략) 정부는 공공재정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
 - (우선순위)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반감, 채무 감축을 우선순위로 설정
 - 경제성장은 정부의 채무 감축 목표를 지원하고, 기업, 교육, 고용, 지역 균형 발전의 4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 계획은 경제성장을 지원
 - 위 4개의 축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면서 경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
 - (재정준칙) 전망 기간 5년 차까지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의 GDP 대비

482) 2022년 7월에 예산책임청(OBR)은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공공재정의 세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지정학적 긴장 고조,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 재정 압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7월호 참조)

483) HM Treasury, "Government response to the 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response-to-the-2022-fiscal-risks-and-sustainability-report>, 검색일자: 2023. 3. 16.

비율 감소, 순차입의 GDP 대비 비율 3% 미만 달성

- (재정위험 관리) 정부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⁴⁸⁴를 모델로, 식별(identify), 공개(disclose), 완화(mitigate), 대비(provision), 수용(accommodate)의 5단계에 따라 재정위험을 관리
 - (식별) 위험의 원인, 재정 노출 규모, 구체화 가능성을 식별
 - (공개)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대중에게 재정위험을 공개
 - (완화) 다른 정책 목표를 저해하지 않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 (대비) 완화할 수는 없지만 규모와 시기가 비교적 확실한 위험에 대비
 - (수용) 사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는 규모나 시기가 너무 불확실한 위험을 수용
- (주요 재정위험 대응) 예산책임청은 2022년 보고서에서 공공재정의 세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 재정 압력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
 -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국의 영향력 증가와 국제적 공세가 2020년대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이 될 수 있고, 러시아는 영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
 -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영국의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9억파운드의 국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
 - 장기적으로는 재정 및 경제 상황이 허용하는 한 GDP 대비 2.5%를 국방에 투자하며, 이 추가적인 국방지출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어 전망 기간 내 채무가 여전히 감소하도록 보장
 -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부담이 물가 상승 압력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484) IMF, *Analyzing and managing fiscal risks - best practices*, 2016.

분배되도록 노력

-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를 위해 에너지 가격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2,500파운드 한도에서 에너지 요금을 지불(2023년 7월까지 연장 시행)
 - 2023-24회계연도 동안 가장 취약한 수백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보조금(Cost of Living Payment)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 에너지 요금 할인제도(Energy Bill Discount Scheme)를 통해 기업의 높은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 주고, 특히 에너지 사용 및 무역집약도가 높은 부문의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의 할인을 제공
 - 에너지 지원 계획의 재정비용 중 일부는 원유 및 가스 생산자와 에너지업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쇄
 -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미래에 투자(원자력 발전소 Sizewell C에 7억파운드 투자, 원전 개발기구 Great British Nuclear 출범 등)
- (장기 재정 압력)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공공지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과세기반에 위협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비
-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상 문제나 육아 관련 장벽을 제거하여 노동시장의 비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공급을 늘려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을 관리
 - 현재 ‘국가연금 연령 검토(Review of the State Pension age)’를 통해 기존 연금 연령 타임테이블이 적절한지 검토 중
 -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는 연료세 수입의 감소를 의미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차소비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정책을 계속 검토 중

■ 영국 노동·연금부, 국가연금 연령 검토 보고서(State Pension Age Review) 발표

(2023. 3. 30., 2023. 4. 5.)⁴⁸⁵⁾

- (배경) 노동·연금부 장관은 「연금법(2014)(Pension Act 2014)」 27조에 따라 연금개시 연령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
 - 첫 검토는 2017년 7월 시행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검토
- (개요) 이 보고서는 기대수명 증가가 국가연금 지출과 생산가능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과 적절한 시기 등을 분석
-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지난 세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 속도는 둔화
 - (예측) 1951년생 기준,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76.1세, 80.7세
 - 2020년생 기준으로는 각각 87.3세, 90.2세, 2070년생 기준으로는 각각 92.5세, 94.6세
 - (영향) 기대수명 증가와 합계출산율⁴⁸⁶⁾ 감소의 결과, 2070년까지 연금 수급자는 500만명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1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예산책임청(OBR)은 2022년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⁴⁸⁷⁾에서 국가연금 관련 지출⁴⁸⁸⁾이 2021~22회계연도에 GDP 대비 4.8%에서 2071~72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8.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⁴⁸⁹⁾
 - 202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 1,000명당 연금 수급자 인구는 280명인데, 이 비율은 203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7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당 연금 수급자 인구는 39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영향 분석)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65세 → 66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약

485)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tate Pension Age Review published," Press Release, 2023. 3. 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te-pension-age-review-published>, 검색일자: 2023. 3. 30.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State Pension age review," 2023. 4.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te-pension-age-review>, 검색일자: 2023. 4. 6.

486) total fertility rate: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487)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2

488) 국가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단일국가연금(single-tier pension), 연금 크레딧, 동절기 연료 지급,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을 포함(연금 수급자 주거급여, 연금 수급자 장애급여는 미포함)

489) 연금개시 연령이 2026~2028년 67세, 2037~2039년 68세, 2071~2073년 69세로 상향 조정됨을 가정

5만 5,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수준이 상승

- 반면,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여 평균 가구소득이 감소하였고, 절대 빈곤율⁴⁹⁰⁾은 연금개시 연령이 65세일 때와 비교해 약 13%p 증가
-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타임테이블 분석)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타임테이블의 적정성을 분석⁴⁹¹⁾한 결과, 정부는 현재 계획을 유지할 방침
 - 분석 결과, 성인 수명(adult life)⁴⁹²⁾ 중 31%를 은퇴 이후 보내는 경우, 연금개시 연령을 66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적정 시기는 2026~2028년으로 분석(<표 3-V-10> 참조)
 - 또한 동일한 가정하에서 연금개시 연령을 67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적정 시기는 2041~2043년으로 분석
 - 정부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26년과 2028년 사이에 66세에서 67세로, 2044년과 2046년 사이에 67세에서 68세로 연금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예정
 - 이번 분석은 팬데믹의 영향이나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포함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에 추가적인 검토를 시행할 계획

표 3-V-10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타임테이블 분석 결과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현행법	2017년 검토에서의 권고	은퇴 이후 성인 수명의 비중(Proportion of adult life in retirement)에 따른 연금개시 연령 조정 적정 시기		
			32%	31%	30%
66세 → 67세	2026~2028년	2026~2028년	2037~2039년	2026~2028년	2023~2025년
67세 → 68세	2044~2046년	2037~2039년	2053~2055년	2041~2043년	2030~2032년
68세 → 69세	-	-	N/A	2058~2060년	2046~2048년
69세 → 70세	-	-	N/A	N/A	2062~2064년

주: N/A는 해당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이 예측기간(2070년) 이후 발생함을 의미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tate Pension age Review 2023*, 2023. 3., p. 23 (Table 4)

490) absolute income poverty: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태

491) 「연금법(2014)」은 정부가 두 개의 독립적인 분석을 위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이에 정부 보험계리국(Government Actuary)과 Baroness Neville-Rolfe에 독립적인 분석 보고서를 의뢰

492) 영국의 성인 기준은 18세 이상

04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 통계

- 영국 통계청,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3. 6. 30.)⁴⁹³⁾
 - 2023년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1%, 명목 GDP는 1.2% 증가
 - 2023년 1분기 GDP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0.5% 낮은 수준을 기록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2023년 1분기 서비스 및 생산부문⁴⁹⁴⁾의 생산량은 모두 0.1% 증가하였고, 건설부문 생산량은 0.4% 증가
 - 생산부문 중 제조업 생산량은 0.6% 증가
 -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1분기 가계소비 기여도는 0.02%p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는 0.44%p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소비(-0.38%p) 감소와 순거래량(net trade) 감소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

표 3-V-11 GDP 성장률 추이(계절 조정)

(단위: %)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2021년	7.6	7.6
2022년	4.1	9.7
2022년 1분기	0.5	2.3
2022년 2분기	0.1	2.0
2022년 3분기	-0.1	1.4
2022년 4분기	0.1	2.0
2023년 1분기	0.1	1.2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UK: January to March 2023," 2023. 6. 30., p. 4 (Table 1)

49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UK: January to March 2023," 2023. 6. 30.,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quarterlynationalaccounts/januarytomarch2023>, 검색일자: 2023.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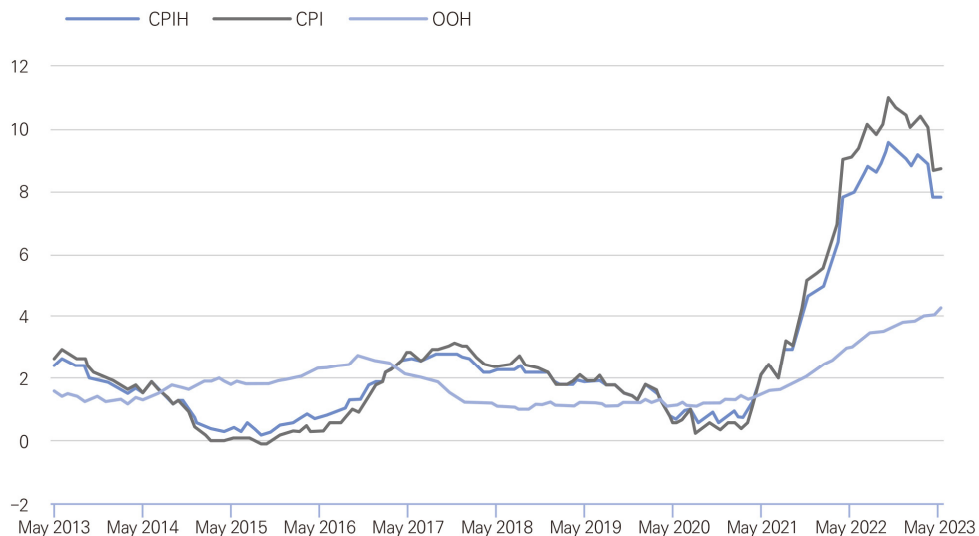
494) 농림수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을 포함

■ 영국 통계청,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2023. 6. 21.)⁴⁹⁵⁾

- 2023년 5월 CPIH⁴⁹⁶⁾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 CPI는 8.7% 상승
 - 전월 대비로는 각각 0.6%, 0.7% 상승
- 항공 여행, 여가 및 문화 상품과 서비스, 중고차의 가격 상승이 CPIH 및 CPI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
 - 반면, 자동차 연료 가격 하락은 CPIH 및 CPI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
-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Core CPIH는 2023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6.5% 증가하였는데, 이는 3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
 - Core CPI는 12개월 동안 7.1% 증가하여 199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그림 3-V-5 물가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주: OOH(owner occupiers' housing costs)는 자가 거주비용 상승률을 의미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3," 2023. 6. 21., p. 4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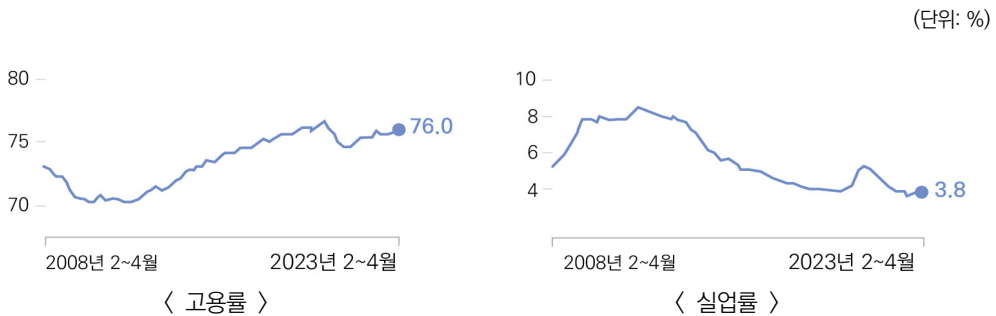
49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3," 2023. 6. 21.,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may2023>, 검색 일자: 2023. 7. 5.

496) 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주민세(Council tax)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소유, 유지, 거주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 영국 통계청,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2023. 6. 13.)⁴⁹⁷⁾

- 2023년 2~4월 고용률은 76.0%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고용률보다 0.2%p 높은 수치
- 2023년 2~4월 실업률은 3.8%를 기록, 이는 이전 3개월에 대한 수치보다 0.1%p 증가한 수치
- 2023년 2~4월 비경제활동률은 21.0%로, 이전 3개월 대비 0.4%p 감소
 -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기타 사유와 가족이나 가정을 돌보고 있는 이들이 비경제활동률 감소를 주도
 - 장기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그림 3-V-6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June 2023," 2023. 6. 13.

나. 재정 통계

■ 영국 통계청, 2023년 5월 공공재정 현황 발표(2023. 6. 21.)⁴⁹⁸⁾

- (재정적자) 2023년 5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7억파운드(125%) 증가한 200억파운드를 기록(1993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

49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June 2023," 2023. 6. 13.,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bulletins/uklabourmarket/june2023>, 검색일자: 2023. 7. 5.

49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y 2023," 2023. 6. 21.,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may2023>, 검색일자: 2023. 7. 5.

- 이는 에너지 지원 정책 및 사회보장급여, 직원급여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
- (채무) 2023년 5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5,672억파운드,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2,986억파운드를 기록
 - GDP 대비 순채무(잠정치)는 각각 100.1%로, 이는 1961년 3월 말 비율이 100%를 넘은 이후 처음으로 100%를 초과한 수치
- (수입·지출) 2023년 5월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713억파운드,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836억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억파운드, 105억파운드 증가
- (순현금소요액) 2023년 5월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Central government net cash requirement)⁴⁹⁹⁾은 전년 동월 대비 55억파운드 증가한 170억파운드를 기록

표 3-V-12 2023년 5월 공공부문 재정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p)

구분	2022년 5월(a)	2023년 5월(b)	b - a
공공부문 순차입	9.4	20.0	10.7
공공부문 순채무	2,402.3	2,567.2	164.9
(GDP 대비 %)	(97.0)	(100.1)	(3.1)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2,071.3	2,298.6	227.3
(GDP 대비 %)	(83.6)	(89.6)	(6.0)
중앙정부 경상수입	69.1	71.3	2.3
중앙정부 경상지출	73.1	83.6	10.5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	11.5	17.0	5.5

주: 1. 순차입과 순채무는 공공부문 은행이 제외된 공공부문 기준

2.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은 UK Asset Resolution Ltd와 Network Rail을 제외한 기준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y 2023," 2023. 6. 21., 저자 재구성

다. 기타 통계

■ 영국 노동·연금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발표(2023. 5. 11.)⁵⁰⁰⁾

499)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의 차이로 정부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금 규모를 의미

50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Benefit fraud and error falling after Government crackdown," Press Release, 2023. 5.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benefit-fraud-and-error-falling-after-government-crackdown>, 검색일자: 2023. 5. 19.

- 팬데믹 이전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fraud and error) 비율이 2%대를 기록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정부 긴급지원으로 인해 수급 프로세스가 간소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
 - 복지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2020년 2.3%에서 2021년 3.9%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4.0%로 최고치를 기록
 - 통합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2020년 9.4%에서 2021년 14.5%, 2022년 14.7%로 증가
- 2022년 노동·연금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퇴치(Fighting Fraud in the Welfare System)’ 계획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
- 2023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3.6%(83억파운드)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0.4%p 감소
 - 통합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12.8%로, 전년 대비 1.9%p 감소
-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새로운 민사 처벌을 도입하여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러 신규 권한을 도입할 계획

표 3-V-13 복지급여 부정수급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복지급여	지출(a)	174.0	177.3	183.7	191.7	211.7	215.8	233.8
	부정수급(b)	3.6	3.8	3.9	4.5	8.2	8.7	8.3
	비율(b/a)	2.1	2.1	2.1	2.3	3.9	4.0	3.6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¹⁾	지출(a)	1.6	3.3	8.1	18.4	38.2	40.4	43.4
	부정수급(b)	0.1	0.3	0.7	1.7	5.5	5.9	5.5
	비율(b/a)	5.6	8.2	8.6	9.4	14.5	14.7	12.8
국가연금 (State Pension)	지출(a)	91.6	93.8	96.8	98.8	101.2	104.5	109.7
	부정수급(b)	0.1	0.1	0.1	0.1	0.1	0.1	0.1
	비율(b/a)	0.1	0.1	0.1	0.1	0.1	0.1	0.1
자립지원급여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²⁾	지출(a)	5.2	8.2	10.6	12.5	13.6	15.1	17.7
	부정수급(b)	0.2	0.3	0.3	0.2	0.2	0.2	0.2
	비율(b/a)	3.1	3.2	3.1	1.5	1.5	1.5	1.1

주: 1) 6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주거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로,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
 2) 장기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급여로, 일을 하고 있거나 저축이 있거나 대부분의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1. 각 연도 3월 말 기준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Financial Year Ending(FYE) 2023 estimates," 2023. 5. 1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fraud-and-error-in-the-benefit-system-financial-year-2022-to-2023-estimates>, 검색일자: 2023. 5. 19., 저자 재구성

주요 자료 출처

- 미국 -

- 미국 관리예산처(OMB), <http://www.whitehouse.gov/omb>
-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igned-legislation>
-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
- 미국 의회예산처(CBO), <https://www.cbo.gov/>
-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appropriations.house.gov>
-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
- 미국 노동부, <https://www.dol.gov>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s://www.bls.gov>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
-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

- 일본 -

-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 일본 수상관방, <https://www.kantei.go.jp/>
- 일본 총무성 통계국, <http://www.stat.go.jp/>
- 일본 은행, <https://www.boj.or.jp/>

- 독일 -

- 독일 연방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
- 독일 연방 의회, <https://www.bundestag.de>
- 독일 연방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

- 독일 연방 보건부,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https://www.bmas.de>
-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https://www.bmuv.de>
- 독일 연방 내무부, <https://www.bmi.bund.de>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https://www.bmfsfj.de>
- 독일 연방 국방부, <https://www.bmvg.de>
-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 <http://www.stabilitaetsrat.de>
- 독일 연방 은행, <http://www.bundesbank.de>
- 독일 연방 통계청, <http://www.bundesregierung.de>

- 프랑스 -

- 프랑스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
-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
- 프랑스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
-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default.asp>
- 프랑스 사회보장서비스포털 <http://www.securite-sociale.fr/>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https://www.hcfp.fr/>
-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

- 영국 -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 재무부(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work-pensions>
 -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 Net Zero),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ergy-security-and-net-zero>
 -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and-social-care>

-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science-innovation-and-technology>
-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low-pay-commission>
-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https://www.nao.org.uk/>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https://obr.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2023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3년 7월 21일 인쇄

2023년 7월 28일 발행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044-865-8115)

I S S N 2093-3541



ISSN 2093-3541

재정 동향

2023 | 상반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